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총서 2023-01

인문정책 거버넌스 구축의 이론적 근거 연구

Researching the Theoretical Basis for Governance of
Academic Policies 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김월희, 도승연, 안재원, 윤 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인문정책 거버넌스 구축의 이론적 근거 연구

Researching the Theoretical Basis for Governance of Academic Policies
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김월희, 도승연, 안재원, 윤비

저 자 김월희, 도승연, 안재원, 윤비

연구수행자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연구협력위원
서울대학교	김월희		
광운대학교		도승연	
서울대학교		안재원	
성균관대학교		윤비	
서울대학교			이강재

이 보고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요약

우리 연구진은 국가가 인문진흥의 책무를 인지하고 이의 명실상부한 실천을 위해서는 인문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인문정책 거버넌스의 이론적 근거를 구축하는 과업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우리 연구진은 국가가 인문진흥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이념적·역사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문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양과 서양 공히 인문·인문학은 제반 삶과 삶, 사회의 기초이자 기본 역할을 담당해왔고, 그들은 고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천하 경영, 국가 통치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인문이 순수 지향형 인문학과 경세를, 또 인문정책 거버넌스가 인문학과 경세를 유기적으로 매개해주는 장(場)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 연구진은 경제·인문·인문학을 인문정책 거버넌스 구축의 이론적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 연구진은 다음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주요 내용, 추진 방법을 제시한 후 우리 연구에 필요한 주요 용어에 대한 전제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우리 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헌법>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점, 우리 연구의 배경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디지털문명으로서의 대전환이 놓여 있다는 점, 선진국형 국가 성장 패러다임으로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점, 개인 삶과 공동체 차원에서의 위기가 심화 일로에 놓여있다는 점의 네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우리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일차적 목적으로, 국가가 인문진흥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이념적·역사적으로 규명하는 것이고, 둘째는 궁극적 목적으로, 일차적 목적을 바탕으로 인문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의 이념적·역사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 연구진은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함에 앞서 반드시 짚어봐야 하는 개념으로는 인문, 인문학, 인문주의, 경세, 경제·인문, 인문정책, 인문정책 거버넌스를 꼽았다. 이들은 본 연구의 기초를 이루는 개념에 해당한다. 인문, 인문학, 인문주의의 개념을 고찰함에 먼저 인문학은 인문과 분명하게 구별된다는 점을 전제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에서 인문학은 곧잘 ‘기본’, ‘기초’, ‘순수’ 등의 어휘와 연계되어 운위되는데, 여기서 인문학이 기본, 기초와 연계됨은 그 본성상 당연한 귀결이지만 순수와 직접적으로 필연적으로 연계된다고 할 수는 없음을 고찰하였다. 인문 개념 고찰의 일환으로 한자권 전근대시기의 문(文), 인문(人文), 문명(文明), 문화(文化)의 개념을 고찰하였고, 서구에서는 고대 그리스, 로마와 르네상스시대의 인문, 인문학, 인문 활동, 인문주의 개념을 다루었다. 뒤이어 전근대시기 한자권의 경세와 경제·인문에 대한 이해와 전통을 살펴보고, 인문정책과 인문정책 거버넌스 개념을 고찰하였다. 특히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왜 사용하고자 하는지에 대하여 거버먼트와 거버넌스 개념 간 비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상의 주요 용어에 대한 전제적 고찰을 통해 우리 연구에

서는 인문을 ‘인간다움 및 그와 연관된 제반 활동의 소산’으로, 인문학을 ‘그러한 인문을 다루는 학문 일반’으로 규정하였고, 인문은 이른바 ‘순수 지향적 인문학’과 경세를 연계해주는 매개자이자 장(場)의 역할을, 인문정책 거버넌스는 인문학과 경세를 연계해주는 매개자이자 장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2장에서는 인문 개념의 재구축 필요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우리 연구진은 이에 대하여, 인문을 둘러싼 외부환경으로서의 문명 차원과 한국사회 차원 및 인문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는 학술생태계의 세 측면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곧 “인문을 둘러싼 문명조건의 근원적 변이”, “선진성을 구현하지 못한 선진국, 한국”, “학문의 위기 확산 및 심화”라는 차원에서 인문 개념의 재구축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인문을 둘러싼 문명조건의 근원적 변이는 다시 “문명조건의 심층적·근본적 변이”, “고전적 인문과 디지털문명 사이의 불화”의 두 항목으로 나누어 다루었다. 문명조건의 심층적·근본적 변이에 대하여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기반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 바이오 대전환, 초(超)연결사회, 다음의 인간(post-humanity), 다음의 사회(post-society) 등의 용어가 지시하고 함축하는 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고전적 인문과 디지털문명 사이의 불화에 대하여는 “시간과 공간, 세계의 확장”과 “지성으로부터 소외의 보편화·일상화”의 두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문명조건의 변이에 인문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동시에 이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순수 지향형 인문 개념 중심의 사고에서의 탈피가 필요함을 환기하였다.

학문의 위기 확산 및 심화는 다시 “한국 인문학의 현주소”, “인문학의 대학에서의 퇴출, 대학의 위기 심화”, “학문의 위기, 인문의 위기, 인간의 위기”의 세 항목으로 나누어 다루었다. 한국 인문학의 현주소에 대해서는, 한국 인문학이 각종 국내외적 과업에 대한 정책 수립과 수행 등의 영역에서 주요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15년 전에 수행한 한국 인문학의 자화상에 대한 성찰의 내용이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이 던져주는 의미, 우리 연구진이 수행한 전문가그룹 인터뷰 답변 중 관련 내용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인문학의 대학에서의 퇴출, 대학의 위기 심화에 대한 고찰에서는 한국사회에서 대학이 해온 고유한 역할과 기능, 즉 사회에 대한 비판과 견제, 사회적 요청에 따른 학문적·실천적 대안의 제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진지하게 되살릴 필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음에도, 대학의 현실은 이러한 필요성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대학에서의 인문학 내지 인문사회계열 관련 학과의 통폐합 가속화”와 “인문학 내지 인문사회계열 관련 학과 입학정원의 꾸준한 감소”, “오늘날 대학은 더는 지식이나 정보가 유통되고 생산되는 주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 “한국 대학이 더는 지식 생태계의 중심도 아니며 지식의 독보적 공급원도, 핵심 소비처도 아님” 등에 대하여 짚어보았다. 학문의 위기, 인문의 위기, 인간의 위기에 대해서는, 학문의 위기는 곧 인문의 위기이고 또한 인간의 위기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선진성을 구현하지 못한 선진국, 한국은 다시 “초갈등사회, 소모사회 한국”, “‘인문복지’의 미비, 높지 않은 인문적 성숙도”, “선도국가, 보편문명국가라고 할 수 없는 한국”의 세 항목으로 나누어 다루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물질적·경제적 차원에서는 선진국에 가입할 만한 조건이 충분했지만, 문화적·정신적 차원에서도 그러한가?”라는 물음을 짚어보았고 이에 대하여 아직은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답변의 근거로는, 한국 인문학을 보면 여전히 국제적 난제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무관심하다는 점, 평화 실현이나 공존공영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고자 한다는 점, 다양성·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문적 차원의 대비가 미흡하다는 점, 국내외적으로 발신하는 원천 지식과 기술도 빈약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리고 그 당연한 귀결로 국제사회에 통용 가능한 보편적 가치, 지식 제공 역량도 미흡하며, 그렇다보니 한글문화의 국제화라든지 국제적 ‘문화리더국가’로서의 비전 제시나 실천이 빈약하게 되었고, 국내적으로는 국가정책 역량이 강하지 못하며, 디지털문명의 본격 전개로 인하여 그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인문복지’도 미흡하게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은 정신적, 문화적으로는 선진국의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선도국가’, ‘보편문명국가’ 단계에 올라서지 못했음을 환기하였다.

3장에서는 인문의 재구성 작업을 ‘기초학술’ 개념의 재정립과 ‘경제적 인문’ 이념의 복원을 토대로 수행하였다. 기초학술 개념의 재정립을 위하여 ‘학술’ 및 ‘학술의 기초’, 그리고 ‘기초학술’ 개념을 검토하였고, 경제적 인문 이념의 복원을 위하여 이론적 근거와 역사적 근거 및 전문가그룹의 관련 견해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근거로 우리 연구진은 학술과 학술 기초, 기초학술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재정립하였다. 먼저 학술은 “학문과 예술, 기술 및 그와 연관된 활동”, “경제 역량 및 경제 활동”, “좋은 삶의 구현 등에 필요한 역량” 등을 가리킨다고 그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학술 기초에 대하여는, 학술에 대한 이러한 개념 재정립 위에서의 기초는 ① 학문과 예술, 기술의 기초, ② 경제의 기초, ③ 살아나기의 기초, ④ 교육의 기초를 가리킨다고 보았다. 그런데 학문, 예술, 기술, 경제, 살아남, 교육은 모두 활동을 기반으로 구비되고 연마되며 발휘된다. 이 점에서 학술의 기초는 역량으로 구성되며 이를 ‘기초역량’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기초학술은 “학문과 예술, 기술 및 그와 연관된 활동”, “경제 역량 및 경제 활동”, “좋은 삶의 구현 등에 필요한 역량” 등을 뜻하는 학술 가운데 “학문과 예술, 기술”, “경제”, “살아남”, “교육”의 기초 역할을 다루는 학술을 가리킨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인간이 자연적인 존재로서 생존하는 데, 또한 문명적인 존재로서 생활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그래서 기초학술은 역사적으로 인류의 문명과 인간의 역사에서 여러 종류의 공동체와 수많은 개인들의 삶의 방식에 자리 잡았고 작동해올 수 있었다.

경제적 인문의 이론적 근거로서는 고대 중국에서는 ‘동태적(動態的) 인문’, ‘동사적 앞’,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의 되먹임구조’라는 전통에 주목하여 고찰하였으며, 서양에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 르네

상스시대의 인문과 인문학에 대한 관념을 살펴보았다. 역사적 근거로는 전근대시기 중국에서는 ‘고대 중국의 학정일체(學政一體) 전통’, ‘역대 중국의 황실 주도 도서 정비와 간행 사업’을, 서구에서는 ‘인문학이 만든 로마 국가와 로마문명’, ‘그리스·로마의 인문진흥과 르네상스시대의 인문부흥’, ‘서구 근대를 빛은 인문학’ 전통에 주목하여 고찰하였다.

4장에서는 전근대시기 한자권과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 르네상스시대, 근대 및 현재 서구의 역사에서 인문이 일국 차원 내지 제국 차원, 나아가 문명 차원에서 세상 경영의 토대이자 원천으로, 또 방법으로 활용된 사례를 추출하여 고찰하였다. 한자권에서는 중국 전국시대의 직하학궁과 조선시대의 규장각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서구에서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르네상스시대의 인문진흥의 사례, 현대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 등을 고찰하였다. 또한 전문가그룹에서 제시한 관련 사례도 정리해두었다.

전근대시기 한자권의 사례로는 중국 전국시대의 직하학궁과 조선의 규장각을 들어 살펴보았다. 직하학궁에 대하여는 설립 목적과 운영 양상과 사적 의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직하학궁은 순수하게 학문의 발전을 위해 설치된 것은 아니라 부국강병이라는 시대적 사명의 달성이 목적이었음을 확인하였고, “분열과 혼란을 종식하고 ‘대일통(大一統)’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전국시대의 시대적 과제에 부합할 수 있는 지적 혁신을 추동하는 데에 제도적 기반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후대의 주요 사조가 직하학궁에서 그 단초가 마련되고 기초가 놓였고, 그 결과 한 제국 초엽 적어도 70년 가까이 제국 최고 통치이념 역할을 담당했던 황로학이 이로부터 빚어졌음을 확인하였다. 곧 직하학궁은 이러한 제국 최고 통치이념이라는 차원에서 구현된 학정일체(學政一體)의 전통이 빚어지는 요람이었다. 다음으로 조선시대의 규장각에 대하여는 ‘설립 목적과 기능’, ‘규장각의 학술 진흥 사업’, ‘규장각의 사적 의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규장각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래 지속되고 있던 동아시아와 유목세계 일대를 무대로 한 국제질서의 재편과 그 흐름 속에서 중국(청) 및 일본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가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정조의 답”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곧 근본 차원에서 변이가 촉발되고 진행되던 국내외 상황에 적극적이고도 타당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업을 규장각을 기반으로 수행했음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조가 ‘정학(正學)’의 이름으로 경학과 성리학의 전적을 정리하고, 이를 군왕의 이름으로 재해석하며 선집을 편찬하고 발간한 것, 한자권의 문화적 근간에 해당하는 바들에 대하여 적지 않은 ‘선집(選集)’을 편찬하여 간행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는 조선이 문화적 강함을 갖추므로써 문화 방면에서 대내외적 자신감을 구비하는 과업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규장각은 정조가 펼친 국가 인문정책 수립과 추진의 총화였다.

서구의 역사에서는 “그리스의 인문진흥”, “로마의 인문진흥”, “르네상스시대의 인문부흥”의 세 항목으로 나누어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스의 인문진흥에서는 “플라톤의 『국가』에 나타난 인문학의 특성”,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정치학』에 나타난 인문학의 특성”,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등을 사례로 제시하였고, 로마의 인문진흥에서는 “로마의 교육과 학술의 초기 모습”, “로마의

인문진흥을 위한 후원”, “로마의 인문학의 성장과 성숙”, “로마의 인문학과 교육”이라는 하위 항목을 마련한 후 관련 사례를 제시하였다. 르네상스시대의 인문부흥에서는 “페트라르카의 인문주의”, “피렌체의 인문진흥”, “근대 자연과학의 발전을 일군 인문학”, “인쇄술출판업과 인문학”, “르네상스 인문학과 종교개혁”, “르네상스시대 동서 인문학의 조우와 만남, 충돌과 융합, 그리고 새로운 시작” 등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또한 현대 독일과 프랑스의 학술 진흥 정책도 살펴보았다. 독일과 프랑스는 영국과 이탈리아와 더불어 유럽 인문학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며, 미국이 세계 학문시장의 중심으로 부상한 이후에도 그 중요성을 여전히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의 인문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적잖은 의미가 있다. 이에 우리 연구진은 “국가 중심의 연구소 조직을 통한 포괄적 인문학 연구 지원”의 사례로 프랑스 CNRS(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를,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집단 연구 사업 지원”의 사례로 독일 학술재단(DFG)의 특별연구센터(Sonderforschungsbereich)를, “연구의 국제적 네트워킹을 목표로 한 중장기 집단 연구 체계 사업 지원”의 사례로 케테-함부르거 콜렉(Käte Hamburger Kolleg)을 살펴보았다.

5장은 결론이다.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우리 연구진은 전근대시기 한자권의 인문과 경제의 개념과 전통에 대한 고찰을 통해, 또 서양의 인문과 인문학, 인문주의 개념과 전통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인문이 본성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 모두에서 천하 경영, 국가 통치와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문명의 요람이자 그것의 기틀을 빚어내는 차원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도 확인하였다. 단지 이념적 차원에서만 이러한 것이 아니라 동양과 서양 모두 실제 역사에서도 그러했음도 확인하였다. 인문을 요체로 하는 인문학이 동양과 서양 모두에서 경제의 근간이자 원천으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인문은 본성적으로 ‘쓸모없음의 쓸모[無用의 用]’, ‘이익 없음의 이익[無益의 益]’ 등의 표현으로 대변되는, 이를테면 ‘순수’만을 지향한다거나 그것만이 인문의 참된 본령이라고 간주함은 비역사적인 판단임을 알 수 있었다. 단적으로 인문은 경제와 순수를 양대 기축으로 삼아왔던 것이며, 이 둘은 서로가 서로에게 되먹임 하는 회로를 구성하며 동전 하나의 양면과도 같은 양태를 이루어왔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문정책 거버넌스 구축의 이론적 근거로 경제형 인문을 제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와 인문정책, 인문이 한 몸처럼 연동되어 있던 역사의 복원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국가가 인문정책을 수립, 집행, 갱신해가야 함은 물질적 차원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이 문화적 차원에서도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와 인문정책, 인문의 결합은 선진국만의 특징이 아니라, 국가가 국가로서의 기본을 수행하고자 하는 한 항상 실현되어 왔다. 우리 연구는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이러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한국이 국가로서 당연히 이행했어야 할 인문정책의 수립과 집행, 갱신과 같은 국가 책무를 그동안 방기해왔음을 환기하였다.

이념적, 역사적 차원 모두에서 인문이 경제와 밀접하게 연동되었음은 경제적 인문이 21세기 한국 상황에서 새롭게 빛어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해준다. 다시 말해 과거로부터 순수한

지향을 지닌 인문만이 존재해왔는데, 이제 선진국 진입이나 디지털문명으로의 대전환 같은 근본적 변이를 겪는 한국사회의 필요에 의해 경세라는 새로운 지향을 기존 인문에 더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곧 동양이나 서양 모두 고대로부터 인문은 순수 지향적 경향성과 경세 지향적 경향성이 늘 함께 있어왔음에도 한국사회에서는 전자만이 참된 인문이라는 관념이 지배적이었을 따름이다. 우리 연구진은 이러한 한쪽에 치우친 인문 개념만을 인문정책과 그 거버넌스의 이론적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 순수 지향적 인문은 ‘입세(入世)’보다는 그 반대쪽에 놓인 ‘출세(出世)’의 경향성이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세 지향적 인문이 인문정책과 그 거버넌스의 이론적 근거가 되어야 하며, 이는 수기와 치인의 되먹임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순수 지향적 인문의 진흥과 생략적으로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순수와 경세를 양 날개로 형성되고 작동되었던 인문의 역사와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동양과 서양의 역사를 통한 경세적 인문의 복원 작업을 토대로 우리 연구진은 다음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전근대시기, 한자권의 경세학(經世學) 전통에서 여실히 확인할 수 있듯이, 또 국가나 제국, 문명을 빚어내고 이를 유지, 갱신하여 갔던 고대 그리스와 로마, 르네상스의 인문진흥 사례 및 근대 서구의 전 지구적 확장 과정에서 분명하게 목도할 수 있듯이, 인문은 국가와 사회의 ‘미래 설계자’이다. 또한 국가와 사회 경영의 기반이자 동반자로서 ‘지속 가능’한 국력 창출의 새로운 원천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여 왔다. 특히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서는 한국의 경우, 인문을 기반으로 우리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구체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실현해야 할 소명이다. 이는 인문이 순수 지향적 인문학만을 고수해서는 안 됨을 밝히 말해준다. 또한 ‘선진국-선진국다움’의 창출과 지속 가능한 갱신을 위해서는 순수 지향적 인문 하나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한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존재하고 구동되기 위해서는 ‘과학흥국’과 ‘인문경국’의 양 날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청에 명실상부하게 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순수 지향형 인문과 경세 지향형 인문의 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우리 연구진은 연구 수행에 참조하기 위하여 전문가그룹 서면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전문가그룹은 인문사회학술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정책연구에 참여했거나 전문학술지 논문 발표 등의 연구 활동을 수행해온 전문가 및 학문후속세대, 언론계의 학술전문기자, 출판계의 학술저서 전문 출판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하였고, ‘시작-도입-전환-핵심-마무리’ 단계에 따라 구성된 9개의 질문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에 응답한 23인의 답변 내용을 분석하여 <부록>으로 달았다.

핵심어 인문, 인문정책, 인문정책 거버넌스, 경세, 경세적 인문, 인문주의, 인문학, 인문사회학술, 기초학술, 인문진흥.

Abstract

This research is to establish humanity policy(人文政策) governance in order for the country to recognize and fulfill its responsibility to promote the humanities. For this, it is essential to provide a theoretical basis for humanity policy governance is essential. Accordingly, our researchers sought to establish a theoretical basis for ideologically and historically identifying that the state has an obligation to promote humanities and to secure a theoretical basis for establishing humanity policy governance. In the process, we found that the humanity(人文) and humanities(人文學) have played a fundamental and basic role in all kinds of knowledge, life, and society in both the East and the West, and that they have been organically combined with 'statecraft(經世)' and national governance(治國) from ancient times to the present. In addition, We confirmed that the humanity can become a place where pure-oriented humanities and statecraft, and humanity policy governance can organically mediate humanity and statecraft. Based on this confirming, we suggest 'humanity of statecraft(經世的 人文)' as a theoretical basis for building humanity policy governance.

For providing this suggestion, our researchers organized as follows. In Chapter 1, We presented the necessity, purpose, main contents, and methodology of the research, and then followed by a preliminary review of the key terms needed for our study. The necessity of our study was examined from four perspectives: it originated from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background of our study lies in the great transition to a digital civilization represent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there is an urgent need to shift to an advanced national growth paradigm; and the crisis in individual lives and communities is on the verge of intensifying. The purpose of our study is twofold. First, the primary purpose is to clarify a theoretical basis for ideologically and historically identifying that the state has an obligation to promote humanity, and secondly, the ultimate purpose is to secure a theoretical basis for establishing humanity policy governance based on the primary purpose. Regarding this, our researchers considered the humanity, humanities, humanism, statecraft, humanities of statecraft, humanity policy, and humanity policy governance as those concepts which must be examined before conducting study in earnest. They correspond to the concepts that form the foundation of this study. Before examining the concepts of humanity, humanities, and humanism, it is firstly premised

that the humanity is clearly distinct from the humanities. In this process, the humanities are often associated with terms such as 'basic', 'foundation', and 'pure' in Korean society. Even though they are naturally associated with basic and foundation, it cannot be said that they are directly and inevitably associated with pure. As part of the examination of the concept of humanities, in the East, we observed the concepts of 'literature(文)', 'humanity', 'civilization(文明)', and 'culture(文化)' were examined in the pre-modern period of Chinese language, in the West, the concepts of humanities, in ancient Greece, Rome, and the Renaissance were examined. It dealt with the humanities, humanities activities, and humanism. Then, we examined the understanding and tradition of statecraft and humanities of statecraft in the pre-modern 'Han Character sphere(漢字圈)', and we examined the concepts of humanity policy and humanity policy governance,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the concepts of government and governance, especially for explaining why we use the concept of governance. Through a preliminary examination of the above key terms, our study defined humanity as 'the ideology of it and its related activities' and humanities as 'the disciplines dealing with such humanities in general'; the humanity plays the role of a mediator and a place for connecting the so-called 'pure-oriented humanity' with the statecraft, and humanity policy governance can play the role of a mediator and a place for connecting the humanities with the statecraft.

Chapter 2 examines the need to reconstruct the concept of humanity. Our approach was divided into three aspects: civilization as the external environment surrounding the humanities, the dimension of Korean society, and the academic ecosystem, which is closely linked to the humanities. We examined the need to reconstruct the concept of the humanities from the perspectives of 'fundamental changes in civilization conditions surrounding the humanities', 'advanced country that have not realized its advancement, Korea', and 'the widening and deepening of the academic crisis.'

The fundamental changes in the conditions of civilization surrounding the humanity was again divided into two sections: 'Deep and fundamental changes in the conditions of civilization' and 'the discord between traditional humanities and digital civilization'. The deep and fundamental changes in the conditions of civilization were examined by focusing on the indications and implications of terms such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igital-bas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biotechnology, digital transformation, energy transformation, bio-transformation, hyper-connected society, post-humanity, and post-society. The discord

between the traditional humanity and digital civilization was examined from two aspects: 'the expansion of time, space, and the world', and 'the generalization and routinization of alienation from the intellect'. In the process, it was brought to light that in order for the humanity to actively cope with these changes in civilizational conditions and at the same time to lead them, it is necessary to break away from the existing pure-oriented humanities concept-centered thinking.

The widening and deepening of the academic crisis was again divided into three sections: 'the current status of the humanities in Korea', 'the withdrawal of humanities from universities and the deepening crisis in universities', and 'the academic crisis, humanity crisis, and the human crisis.' For the current state of the humanities in Korea, we focused on the fact that the Korean humanities are not playing a major role in policy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var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issues, the implications of the fact that the contents of reflection on the self-portrait of the Korean humanities conducted 15 years ago remains still unsolved today, and the contents of the expert group interview responses conducted by our researchers. In considering the withdrawal of the humanities from universities and the deepening crisis of universities, the need to seriously revive their unique roles and functions of universities in Korean society, namely, criticizing and checking society and providing academic and practical alternatives in response to social requests, but the reality of universities is mov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to fully fulfill this need. In the process, we looked at the 'accelerating of consolidation of humanities and humanities-related majors in universities', the 'steady decline in the number of admission for humanities and its related majors', 'universities today no longer serve as the main platform for the distribution and production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and 'Korean universities are no longer the center of the knowledge ecosystem, nor are they the sole source, nor are they key consumer of knowledge.' As for the crisis of academia, the crisis of humanity, and the crisis of human, we focused on the fact that the crisis of academia is a crisis of humanity and a crisis of human.

Korea, a advanced country that has not realized its advancement, was again divided into three sections: 'Korea as a super-conflicted and consumptive society', 'lack of 'humanity welfare' and low humanistic maturity', and 'Korea, which cannot be called a leading and universally civilized country'. In the process, we examined the question of "whether Korea has sufficient conditions to join the developed world on a material and economic level, or whether it is only the case on a cultural and spiritual level?" We were forced to answer that it is not yet possible. The reasons

for these answers were that Korean humanities are still deliberately indifferent to international challenges, unwilling to take responsibility for realization of peace and coexistence, inadequate preparation of the humanities for a diverse and multicultural society, and a lack of original knowledge and technology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s a natural consequence, Korea lacks the capacity to provide universal values and knowledge that can be applie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as a result, the internationalization of Hangeul Culture and the vision and practice of being an international 'cultural leader' have become poor, the national policy capacity is not strong domestically, and the 'humanity welfare', which is increasingly necessary due to the full-scale development of digital civilization, is also insufficient. Based on this, it was recalled that Korea failed to rise to the stage of a 'leading country' and a 'universal civilized country', which are essential requirements for advanced countries in terms of spirit and culture.

In Chapter 3, the reconstruction of the humanity was carried out based on the redefinition of the concept of 'basic academia' and the restoration of the ideology of 'humanity of statecraft'. For the redefinition of the concept of basic academia, the concepts of 'academia', 'academic foundation', and 'basic academia' were reviewed, and for the restoration of the ideology of the humanities of statecraft, the theoretical basis, historical basis, and related views of the expert group were examined.

Based on these considerations, our researchers redefined the concepts of academia, academic foundation, and basic academia as follows. First, we redefined the concept of academia to refer to 'academics, arts, technology, and related activities', 'competencies of statecraft and activities of statecraft' and 'competencies necessary for the realization of a good life'. Regarding the academic foundation, the above redefinition of academia refers to the foundations of ① knowledges, arts, and technology, ② statecraft, ③ living, and ④ education. However, knowledges, arts, technology, statecraft, living, and education are all equipped, honed, and exercised based on activities. In this respect, the basic academia is composed of competencies, which can be named 'basic competencies'. It is stipulated that basic academic disciplines refer to those disciplines that deal with the basic roles of 'knowledges, arts, technology, and related activities', 'competencies of statecraft and activities of statecraft' and 'competencies necessary for the realization of a good life', among other disciplines. This is indispensable for human beings to survive as natural beings and to live as civilized beings. Thus, the basic academia have historically been established and operated in the way of life of many different kinds of communities and nu-

merous individuals in human civilization and human history.

For the theoretical basis of humanities of statecraft, we focused on the traditions of ‘dynamic humanities’, ‘verb-knowledge for life’, and ‘the feedback structure of Self-cultivating(修己) and People-governing(治人)’ in ancient China, and the ideas of humanity and humanities in ancient Greece, Rome, and the Renaissance in the West. In terms of historical evidence, we focused on the traditions of ‘the unity of academia and politics(學政一體) in ancient China’ and ‘imperial-led book maintenance and publishing projects in China throughout history’ in the pre-modern period, and ‘the Roman state and Roman civilization created by the humanities’, ‘the promotion of the humanity in Greece and Rome and the promotion of humanity in the Renaissance’, and ‘the humanities that shaped the modern world in the West..

In Chapter 4, we extracted and observed historical cases of how the humanity were used as a foundation, source, and method for managing the world at the national, imperial, and civilizational levels in the pre-modern Han Character Sphere, ancient Greece and Rome, the Renaissance, and modern Western history. In the Han Character Sphere? we examined the Jikha Academic Palace(稷下學宮) in the Warring States Period and the Gyujianggak(奎章閣) in the Joseon(朝鮮) Dynasty, and in the West, we examined historical cases of humanity promotion in ancient Greece, Rome, and the Renaissance, as well as in modern Germany and France. We summarized relevant cases presented by the expert group. We did provide the summarized opinions presented by the expert group.

As examples of Han Character Sphere in the pre-modern period, we looked at the Jikha Academic Palace of the Warring States Period in China and Gyujianggak in Joseon Dynasty. We focused on the purpose of its establishment, its operation, and its historical significance. Through this, we found that the Jikha Academic Palace was not established simply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s, but to fulfill its mission of strengthening the nation, and that it served as an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driving intellectual innovation to meet the challenges of the Warring States period, which was to ‘end division and chaos and prepare for an era of great unity’. We have seen that the major schools of thought of the later period had their beginnings and foundations laid at the Academic Palace, and as a result, Hwangrohak(黃老學), which served as the supreme governing ideology of the empire for at least the first 70 years of the Han(漢) Dynasty, was born from it. In other words, the Jikha Academic Palace was the cradle of the tradition of academic unity embodied in this supreme governing ideology of the empire. Following this, the

purpose and function of Gyujanggak during the Joseon Dynasty were examined, divided into 'establishment purpose and function', 'academic promotion projects of Gyujanggak', and 'historical significance of Gyujanggak'. Through this, we were able to confirm that Gyujanggak was King of Jeongjo(正祖)'s answer to 'the reorganization of the international order in East Asia and the nomadic world, which had been ongoing since the Imjin-wairan(壬辰倭亂) and the Byeongja Horan(丙子胡亂), and the need to establish new relations with China(清 Qing) and Japan in the midst of this process.' In other words, we were able to confirm that King of Jeongjo used Gyujanggak to actively and appropriately respond to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situations that were changing at a fundamental level. In this process, it was noted that King of Jeongjo had organized the entire history of the Kyunghak(經學, confucian classics studies) and Seonglihak(性理學) in the name of 'orthodox academia(正學)', reinterpreted them in the name of the monarch, compiled and published an anthology, and compiled and published a large number of 'anthologies' on the cultural foundations of Han Characters Sphere. This was part of the task of building up Joseon's cultural strength and internal and external confidence in the field of culture. As such, Gyujanggak was the culmination of King of Jeongjo's efforts to establish and promote a national humanity policy.

In the history of the West, the cases were divided into three sections: the promotion of the humanity in Greece, the promotion of the humanity in Rome, and the revival of the humanity in the Renaissance. In the promotion of the humanity in Greece, we presented examples such as 'observations on humanities in Plato's 『The Republic』', 'arguments on humanities in Aristotle's 『Nicomachean Ethics』, 『Politics』', and 'Library of Alexandria', and in the promotion of humanity in Rome, we prepared sub-sections such as 'early appearance of education and scholarship in Rome', 'financial supporting and granting for the promotion of humanities in Rome', 'growth and maturity of humanities in Rome', and 'humanities and education in Rome', and then presented related cases. For the promotion of humanity in the Renaissance, we presented cases such as 'humanism in Petrarca', 'humanity promotion in Florence', 'humanities in the development of modern natural sciences', 'printing and publishing and the humanities', 'Renaissance humanities and the reformation', and 'encounters, collisions, convergence, and new beginnings of Eastern and Western humanities in the Renaissance', among others. We looked at the academic promotion policies of modern Germany and France. Germany and France, along with the United Kingdom and Italy, are the most important countries in the history of the humanities in Europe, and their importance is still recognized even after the rise

of the United States as the center of the global academic market. It is therefore relevant to examine humanity policy in these countries. We examine the French CNRS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as an example of 'supporting comprehensive humanities research through the organization of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the German DFG's Special Research Centers (Sonderforschungsbereich) as an example of 'supporting collective research projects centered on universities', and the Käte Hamburger Kolleg as an example of 'supporting medium- and long-term collective research system projects aimed at international networking of researchers', among others.

In Chapter 5, to conclude, we have confirmed that the humanity is organically linked to the statecraft and the governance of the state, both in nature and practice, through an examination of the concepts and traditions of humanity and statecraft in the pre-modern Han Character Sphere, and through an examination of the concepts and traditions of the humanity, humanities, and humanism in the West. We have confirmed that they are closely linked to the cradle of civilization and its foundations. This was not only the case on the ideological level, but also in actual history in both the East and the West. We found that the humanities, with the humanity as the core, were utilized as the foundation and source of statecraft development in both the East and the West. Through this, we can see that it is an unhistorical judgment to assume that the humanities are inherently oriented toward 'purity', presented by expressions such as 'use of uselessness' and 'profit of no profit', or that they are the true spirit of the humanities. In short, the humanities have been based on the two pillars of statecraft and purity, and the two constitute a circuit that feeds back on each other, forming two sides of the same coin. In this respect, presenting statecraft-type humanities as a theoretical basis for establishing humanity policy governance is itself a restoration of the history in which the state, humanity policy, and humanity were interlocked like one body. In other words, the need for the state to establish, implement, and renew humanity policies is not only necessary for Korea to become a developed country on the material level, but also to become a developed country on the cultural level. The combination of the state, humanity policy, and humanity is not a characteristic of advanced countries, but has always been realized as long as the state has sought to fulfill its basic functions as a nation. By presenting these examples from the history of Eastern and Western antiquity, our study shows that Korea has been neglecting its responsibilities as a state, such as establishing, implementing, and updating humanity policies.

The fact that the humanity have been closely linked to statecraft at both the ideological and historical levels makes it clear that the humanities of statecraft are not something that needs to be reinvented in the 21st century Korean context. In other words, it is not the result of the approach that only the pure-oriented humanity have existed since the past, and that the new orientation of 'humanities of statecraft' should be added to the existing humanity due to the needs of Korean society, which is undergoing fundamental changes such as entering the advanced nation and transition to a digital civilization. In other words, in both the East and the West, the pure-oriented humanity and the humanities of statecraft have always existed together since ancient times, but in Korean society, the notion that only the former is the true humanities has been dominant. We believe that only this one-sided concept of humanity cannot be used as a theoretical basis for humanity policy and its governance. This is because the pure-oriented humanity is based on the tendency of the opposite, the 'outgoing world' rather than the 'incoming world.' Therefore, the humanities of statecraft should be the theoretical basis for humanity policy and its governance, and this is in line with the history of humanity, which was formed and operated with both the purity and the statecraft wings, in that it is inevitably linked to the promotion of the purity-oriented humanity, as can be seen in the feedback structure of self-cultivating(修己) and people-governing(治人).

On the other hand, based on the reconstruction of humanities of statecraft throughout history in both the East and the West, we have co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The humanity is the 'future architects' of nations and societies, as evidenced in the pre-modern period, in the tradition of statecraft in the Han Character Sphere, in the creation, maintenance, and renewal of nations, empires, and civilizations in ancient Greece and Rome, in the promotion of the humanity in the Renaissance, and in the global expansion of the modern West. As the foundation and companion of national and social management, they have consistently played the role of a new source of 'sustainable' national power generation. Especially for Korea, which has crossed the threshold of the advanced nation, it is the nation's rightful vocation to diagnose our current situation based on the humanity and prepare for the future in detail. This reveals that the humanities should not be limited to purely oriented humanities, and that pure-oriented humanity is absolutely insufficient for the creation and sustainable renewal of 'advanced nationhood'. In order for Korea to exist and operate as a truly advanced country, it must clearly respond to the call of the times that both wings of the 'prospering the country with science and technology(科學興國)' and 'managing the country with humanities(人文經國)' are absolutely necessary, and for this purpose, a

combination of purely oriented humanity and statecraft-oriented humanity is essential.

Meanwhile, our researchers conducted written interviews with a group of experts for reference in conducting this study. The expert group consists of a total of 30 people, including experts who have participated in policy research or conducted research activities such as publishing papers in professional academic journals in relation to the establishment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academic policies, academic successors, academic reporters in the media, and publishers specializing in academic books in the publishing industry. A written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9 questions organized in the 'beginning-introduction-transition-core-finish' stages. The answers of the 23 people who responded were analyzed and included as an 〈Appendix〉.

Keyword_humanity(人文), humanity policy, humanity policy governance,statecraft(經世), humanity of statecraft, humanism, humanities(人文學), humanities social sciences, basic academia, humanity promotion.

목 차

1. 서론	23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4
1.1.1. 연구 필요성	24
1.1.2. 연구 목적	27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9
1.2.1. 연구 내용	29
1.2.2. 연구 추진 방법	30
1.3. 주요 용어 전체적 고찰	30
1.3.1. 인문, 인문학, 인문주의	31
1.3.2. 경제, 경제적 인문	53
1.3.3. 인문정책, 인문정책 거버넌스	55
2. 인문 개념의 재구축 필요성	61
2.1. 인문을 둘러싼 문명조건의 근원적 변이	62
2.1.1. 문명조건의 심층적·근본적 변이	62
2.1.2. 고전적 인문과 디지털문명 사이의 불화	71
2.2. 학문의 위기 확산 및 심화	78
2.2.1. 한국 인문학의 현주소	78
2.2.2. 인문학의 대학에서의 퇴출, 대학의 위기 심화	90
2.2.3. 학문의 위기, 인문의 위기, 인간의 위기	97
2.3. 선진성을 구현하지 못한 선진국, 한국	100
2.3.1. 초갈등사회, 소모사회 한국	101
2.3.2. ‘인문복지’의 미비, 높지 않은 인문적 성숙도	104
2.3.3. 선도국가, 보편문명국가라고 할 수 없는 한국	107

3. 인문정책 수립을 위한 인문의 재구성	113
3.1. '기초학술' 개념의 재정립	114
3.1.1. '학문+활동'으로서의 학술	114
3.1.2. 사람과 사회, 삶과 앎의 기초로서의 '학술 기초'	116
3.1.3. '학술 기초'를 다루는 기초학술	120
3.2. '경제적 인문'의 이념과 전통	127
3.2.1. 이론적 근거	128
3.2.1.1. 동태적(動態的) 인문	128
3.2.1.2. 동사적 앎	132
3.2.1.3.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의 되먹임구조	135
3.2.2. 역사적 근거	138
3.2.2.1. 고대 중국의 학정일체(學政一體) 전통	138
3.2.2.2. 역대 중국의 황실 주도 도서 정비와 간행 사업	141
3.2.2.3. 인문학이 만든 로마 국가와 로마문명	146
3.2.2.4. 그리스·로마의 인문진흥과 르네상스시대의 인문부흥	154
3.2.2.5. 서구 근대를 빛은 인문학	157
3.2.3. 전문가그룹 인터뷰에서 도출한 근거	161
4. 인문정책 사례 고찰	165
4.1. 중국 전국시대의 직하학궁	166
4.1.1. 설립 목적과 운영 양상	166
4.1.2. 사적 의의	168
4.2. 조선시대의 규장각	170
4.2.1. 설립 목적과 기능	170
4.2.2. 학술 진흥 사업	173
4.2.3. 사적 의의	176
4.3.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인문진흥	180
4.3.1. 그리스의 인문진흥	180

4.3.2. 로마의 인문진흥	187
4.3.3. 르네상스시대의 인문부흥	206
4.4. 독일과 프랑스의 인문진흥 정책	217
4.4.1. 서언	217
4.4.2. 국가 중심의 연구소 조직을 통한 포괄적 인문학 연구 지원	
- 사례 : 프랑스 CNRS(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219
4.4.3.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집단 연구 사업 지원	
- 사례 : 독일 학술재단(DFG)의 특별연구센터(Sonderforschungsbereich)	224
4.4.4. 연구의 국제적 네트워킹을 목표로 한 중장기 집단 연구 체계 사업 지원	
- 사례 : 케테-함부르거 콜렉(Käte Hamburger Kolleg)	228
4.5. 전문가그룹 인터뷰에 제시된 사례	232
 5. 결론	 235
참고문헌	243
부록 : 전문가그룹 서면 인터뷰	247

그림 차례

[그림 1] 인문의 역할	59
[그림 2] 인문정책 거버넌스의 역할	59
[그림 3] 일상의 기본값(default)으로서의 세계화	67
[그림 4] 페레이라 신부(Thomas Pereira) 저술 『율려찬요(律呂纂要)』(일부)	220
[그림 5] CNRS 연구소	226
[그림 6] 독일학술재단 특별연구센터 예산 분배 현황	227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1.1. 연구의 필요성
 - 1.1.2. 연구 목적
-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1.2.1. 연구 내용
 - 1.2.2. 연구 추진 방법
- 1.3. 주요 용어 전제적 고찰
 - 1.3.1. 인문, 인문학, 인문주의
 - 1.3.2. 경제, 경제적 인문
 - 1.3.3. 인문정책, 인문정책 거버넌스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1. 연구의 필요성

□ 우리 연구의 필요성은 대한민국 <헌법>으로부터 비롯된다.

○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의 책무 가운데 하나가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실현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은 ‘보편문명국가(Universal Korea)’여야 한다. 그러했을 때 비로소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항구적 실현에 명실상부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보편문명국가로서 존재해야 하며 보편문명국가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국내외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국민의 행복 구현을 국가 책무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구현할 소임을 지닌다.

○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과 “국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서는 인문진흥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 차원에서 인문정책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하는 이유다.

□ 우리 연구의 배경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디지털문명으로의 대전환이 놓여 있다.

○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디지털문명으로의 변이는 전면적이고 복합적이다. 이는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전개되는 4차 산업혁명 자체가 융복합적이고,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 제약과 국가 등의 사회적 분계(分界)를 가로지르며 제반 경계를 해체하는 데서 비롯된 당연한 귀결이다. 따라서 이에 능률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인문사회학술 등 기초학술의 균형 잡힌 발달과 성숙이 요청된다.

○ 이러한 변화는 문명조건 차원에서 일어난 근본적 변이로서 이에 대한 성찰과 평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과학기술의 발전이 어디로 나아가고 그 결과가 무엇으로 귀결될지를 가늠할 수 없게 된다. 이를테면 과학기술은 극도로 발전하지만 인류사회에게는 디스토피아가 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디지털 대전환’·‘바이오 대전환’¹⁾·‘에너지 대

1) 인간 생명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미증유의 대전환을 가리킨다. 생명공학, 뇌과학 등 과학기술의 발달은 삶과 죽음, 인간다움 등을 근원에서부터 다시 성찰하는 현실적 계기로 작동하고 있으며, ‘포스트 휴먼’의 실현 가능성

전환'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성찰과 평가는 그 자체로 미래기획이 된다. 문명조건에 대한 성찰과 평가는 인문사회학술 등 기초학술이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다. 4차 산업혁명이 진척될수록 기초학술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 '디지털 대전환' · '바이오 대전환' · '에너지 대전환'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이 진척될수록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 전개되고 있는 문명조건에 대한 이해력을 유의미한 수준에서 갖추지 못하면 인간다운 삶의 구현 가능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인문기본권'이라는 시민 기본권의 새로운 정립과 강화가 절실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국가사회 차원에서 인문기본권의 정립과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이른바 '디지털 격차', '문화력 격차'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디지털문명의 이점을 일상 차원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인문복지'의 설계와 시행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시민 누구나 디지털 문명-지식기반사회의 본격 전개에 따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차별 없이 문명의 이기를 활용할 수 있는 인문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기존 '개발 성장'형 국가 발전 패러다임의 선진국형 '성숙 성장'형 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함 또한 우리 연구가 필요한 한 이유이다.

○ 지금은 우리나라 국격 제고에 따른 국가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선진국 문턱을 넘어선 단계에서는 개도국에서 중진국에 이르기까지 취했던 모방형 · 추격자형 '개발성장 패러다임'으로는 성장과 발달을 지속해갈 수 없다. 따라서 선진국형의 발전 패러다임인 '성숙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시급하다.

○ 우리나라는 '글로벌 선도국가(global first mover nation)'로 성숙, 도약하지 않으면 다시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가 글로벌 선도국가로 성숙, 도약하는 데는 중장기적 · 주기적 인문정책의 수립과 집행, 갱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經世的) 인문' 이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 지난 세기 70년대 이래 과학은 대한민국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주된 발판이자 동력이었다. "국가의 개발을 통한 성장"이라는 발전 패러다임인 과학입국(科學立國)이 명실상부하게 실현되었고, 우리나라가 2020년대에 들어 선진국 반열에 오름으로써, 또한 'K-반도체' · 'K-배터리' · 'K-방산'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 첨단기술을 보유한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함

도 결코 늦지 않은 속도로 제고되고 있다. 또한 '동물권' · '생물권' 등에서 목도되는 인간 생명에 부여된 특권의 해체 등의 새로운 문명 조류로 인해 촉발된 삶과 생명, 인간 자체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 변이가 야기되고 있다. 바이오 대전환은 이러한 제반 조류를 아울러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에 대하여는 이재영, "바이오 대전환"에 앞장서야 할 이유", 『중앙일보』, 2022.08.17. 참조.

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제는 국가의 개발을 통한 성장이라는 발전 패러다임에서 “국가의 성숙을 통한 성장”이라는 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단계이다. 곧 ‘과학입국 개발 성장’ 발전 패러다임에서 ‘과학흥국(科學興國) 성숙 성장’ 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함으로써 선진국다운 발전을 지속해갈 필요가 있다.

○ 과학입국의 단계에서는 과학기술이라는 한 날개만으로도 입국이라는 과업을 달성이 가능하지만, 과학흥국의 단계에서는 “인문사회학술 등 기초학술을 기반으로 국가를 경영한다”는 인문경국(人文經國) 발전 패러다임과 병행했을 때, 그렇게 “과학흥국-인문경국”의 두 날개를 갖추었을 때만이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 곧 흥국이라는 과업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국가를 ‘흥(興)’하게 한다고 함은 물질적·물리적 부강함뿐 아니라 정신적·문화적 번영을 동시에 구현하고 누림을 뜻하기 때문이다.

□ 개인 삶과 공동체 차원에서의 위기 심화도 우리 연구가 필요한 까닭이다.

○ 현재 한국사회는 심각한 수준의 ‘피로사회’·‘위험사회’·‘소모사회’로 접어들었다. 사회적 양극화의 격화, 사회적 불평등의 고착화, 사회적 안전망의 퇴조, 사회적 갈등의 심화, 계층 이동 탄력성의 저하, 개인주의의 만연 등으로 인하여 개인 삶의 붕괴와 공동체 해체 등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이는 높은 자살률, 낮은 삶의 만족도, 희망 없는 사회로의 전이 가속화²⁾와 같은 사회병리 현상으로 현재화되고 있다.

○ 전 지구 차원에서 전개되는 ‘초연결(hyper-connection)’·‘초지능(hyper-smart)’으로 대변되는 디지털문명으로의 변이는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생명, 감정, 지혜, 자유의사, 자율성 같은 인간다움 내지 인간역량 등이 늦지 않은 속도로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해명되고 있다. 공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공학적으로 재현되고도 있다. 바이오 대전환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인간과 안드로이드 등 비(非)인간의 경계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상자아(virtual persona)에 실존적 비중을 더 크게 두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데서 보이듯이 실제자아(physical persona)와 가상자아 간 경계도 모호해지고 있다. 또한 ‘가족-집’·‘교육-학교’·‘노동-회사(공장)’ 등의 근대적 사회 재생산구조가 근본부터 재편되고 있고, 메타버스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세계(physical world)와 가상세계(virtual world) 간의 경계가 해체되거나 융합되고 있다. 세계

2) 한국사회의 미래 불신 풍조의 확산은 청년세대, 중·장년세대 할 것 없이 심화되고 있다. 청년세대의 미래 불신에 대하여는 박성원 등(2023), “청년세대의 부정적 미래인식과 개선 방안”(『Futures Brief』 제23-05호, 국회미래연구원), 중·장년세대의 미래 불신에 대하여는 이현주 등(2022),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45~64세 집단의 사회적 불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참조.

(global)와 지역(local) 간의 경계 또한 ‘글로컬(global)’이라는 조어가 말해주듯이 해체되거나 융합되고 있다. 이에 인간과 사회에 대한 기존 관념의 조정, 기존 가치와 권위의 재조정, ‘세계[globalism]-국가[nationalism]-개인[liberalism]’ 관계의 재설정 등이 요청되고 있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기존의 이해가 해체되거나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인간과 사회 모두의 차원에서 실존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이다.

○ 역사를 보면 삶의 기초가 없거나 흔들릴 때 어김없이 찾아온 것은 분란이 아니면 전쟁이었다. 이를 막아내기 위한 문명의 제도적인 장치가 인문사회학술 등 기초학술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인문사회학술이 삶과 공동체의 기초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가령 분란과 전쟁을 막아내기 위해서 다름을 인정하자는 공자의 주장³⁾은 하나의 보편적인 형식 원리로 공동체 운영의 기초가 되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크게 차지하고, 더 멀리 확장하려는 욕망의 원심력에 대항하여 내면으로 들어가서 균형과 조화의 리듬을 찾고 지키라는 소크라테스의 요청은 지속 가능한 안정된 삶을 지키는 구심력이라는 점에서 인문이 삶을 위한 기초라는 점에는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 이상은 개인의 삶부터 국가적 일상에 이르기까지 인문을 삶의 터의 현장으로 소환한다. 인문이 역사의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한자권의 경우 춘추전국시대였다. 서양의 경우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로마의 내전 시대였다. 공자가 등장해서 “화이부동(和而不同, 조화를 이루되 뇌화부동 하지 않는다)”을 일갈한 것은 쪼개지고 갈라진 천하를 하나로 묶어내기 위한 인문 활동의 하나였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Gnothi Seauton)”를 외친 것은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Pleonexia)”이 만들어내는 삶의 붕괴와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이든 삶과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오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말로 남고 글로 전해진 것을 읽고 따지는 것이 인문이기 때문이다.

1.1.2. 연구 목적

□ 국가가 인문진흥의 책무를 인지하고, 이의 명실상부한 실천을 위해서는 인문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문정책 거버넌스의 이론적 근거를 구축하는 일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우리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국가가 인문진흥의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이념적·역사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인문진흥 의무를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실

3) 공자는 서로 다름의 조화를 자기 학설의 핵심 중 하나인 예(禮)의 핵심으로 보았다. 관련 전거는 다음과 같다. “예의 쓰임은 조화로움을 귀하게 여긴다. 성왕의 도도 이를 아름답다고 여겼다.(禮之用, 和爲貴. 先王之道, 斯爲美.)”-『논어(論語)』 「학이(學而)」.

현하는 데 필요한 인문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의 이념적·역사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다.

○ 우리 연구진은 인문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무엇보다도 인문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시 말해 인문 개념의 재정립을 바탕으로 인문정책 거버넌스 구축에 필요한 이념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인문정책 거버넌스 구축에 필요한 인문 개념을 재정립함으로써 인문정책 거버넌스 구축에 필요한 이념적 근거 마련 과업을 대신하고자 한다.

○ 국가와 인문진흥의 책무를 연결 짓는 것은 국가와 인문진흥이 한 몸처럼 연동되어 있던 역사의 복원이다. 다시 말해 국가가 인문을 진흥해야 함은 물질적 차원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사회가 문화적 차원에서도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와 인문진흥의 결합은 선진국만의 특징이 아니라, 국가가 국가로서의 기본을 수행하고자 하는 한 항상 실현되어 왔다. 우리 연구는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이러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한국이 국가로서 당연히 이행했어야 할 인문진흥 책무를 그동안 방기해왔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는 인문정책 거버넌스 구축의 역사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 인문정책 거버넌스 구축에 요구되는 이념적·역사적 근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인문정책의 수립과 그 수행의 기반이 되는 인문정책 거버넌스 구축이 왜 필요한지를 다룰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를 명실상부하게 수행하는 것이 우리 연구의 부차적 목표이다. 이 작업은 한편 인문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통하여 어떠한 과업을 달성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다.

- ‘기초지력(基礎智力) 시대’ 전개에 따른 ‘인문기본권’ 실현과 강화의 제도적 토대 구축
- 국가적 당면과업 수행의 인문적 토대 구축
- 중장기적 국가 기획, 정책 지속을 위한 선진적 정치문화 조성의 터전 제공
- ‘소모사회’, ‘피로사회’, ‘위험사회’에서 ‘행복사회’로의 전환 견인
- ‘글로벌 한글문화권’ 창달을 통한 보편문명국가(Universal Korea)의 창출
- 통일한국시대, 동아시아평화시대 구현과 지속 역량 제고
- 다문화·다민족 사회의 연착륙을 위한 사회적 버퍼의 구축
- 글로벌 난제 해결에의 능동적 참여 역량 구비

□ 한편 우리 연구는 국가 차원의 인문정책 거버넌스 구축의 이론적 근거를 구축하기 위한 이론

형 연구이다. 인문정책과 관련한 구체적 정책을 개발하여 제안하는 것은 부차적이다.

1.2. 연구 내용 및 방법

1.2.1. 연구 내용

□ 우리의 연구는 인문정책 거버넌스 구축의 이론적 근거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문 개념의 재정립을 중심으로 수행된다. 인문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의 문제가 인문정책 거버넌스 구축의 핵심 기반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함에 앞서 반드시 짚어봐야 하는 개념으로 인문, 인문학, 인문주의, 경세, 경세적 인문, 인문정책, 인문정책 거버넌스를 꼽고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런 후 인문 개념의 재정립 필요성을 고찰하고 뒤이어 인문 개념의 재정립 작업을 수행한다. 이는 ‘기초학술’과 ‘경세적 인문’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하는 과업을 통하여 수행한다. 그런 다음에 우리 연구에서 제시하는 인문 개념이 동서양의 실제 역사에서 활용된 사례를 제시한 후 이상의 고찰을 토대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 인문 개념의 재정립 필요성에 대하여는 인문을 둘러싼 외부환경으로서의 문명 차원과 한국 사회 차원 및 인문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는 학술생태계의 세 측면으로 나누어 접근한다. 곧 “인문을 둘러싼 문명조건인 근원적 변이”, “선진성을 구현하지 못한 선진국, 한국”, “학문의 위기 확산 및 심화”라는 차원에서 인문 개념의 재구축 필요성을 고찰한다.

□ 인문 개념의 재정립 작업은 ‘기초학술’과 ‘경세적 인문’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과업을 통하여 수행된다. 기초학술 개념의 재정립 작업은 ‘학술’, ‘학술 기초’, ‘기초학술’ 개념의 재정립을 바탕으로 수행한다. 경세적 인문 개념의 재정립은 이념적 차원과 역사적 차원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이념적 차원에서는 ‘동태적 인문’, ‘동사적 앎’, ‘수기와 치기의 되먹임구조’에 대하여 고찰하고, 역사적 차원에서는 ‘고대 중국의 학정일체(學政一體, 학술과 정치의 일체화) 전통’, ‘역대 중국의 황실 주도 도서 정비와 간행 사업’, ‘고대 그리스와 로마 및 근대 서구에서 인문진흥 사례’ 등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그리고 우리 연구진이 수행한 전문가그룹 서면 인터뷰의 답변 가운데 관련 언급 등도 검토한다.

□ 우리 연구진은 국가 차원에서 인문진흥을 수행한 사례의 고찰을 통하여 국가의 인문진흥 책무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이는 그 자체로 우리 연구가 재정립하는 경세적 인문

이념의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한 고찰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연구진은 중국 전국시대의 직하 학궁과 조선의 규장각 및 고대 그리스시대, 로마시대, 르네상스시대를 대상으로 국가 차원에서 수행된 인문정책의 사례를 정리, 분석한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근대 이후의 독일과 프랑스의 인문진흥 정책도 살펴본다. 이는 경제적 인문 이념을 기반으로 국가 사회적 현안 해결 사례에 대한 고찰이기도 하다.

1.2.2. 연구 추진 방법

□ 우리 연구는 이론형 연구로서 문헌연구를 토대로 수행된다.

□ 우리 연구진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문정책 거버넌스 구축의 이론적 근거 연구에 필요한 다증지성의 확보를 위해 전문가그룹 인터뷰와 연구협력위원 자문 등을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 전문가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 인문사회학술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정책 연구에 참여했거나 전문학술지 논문 발표 등의 연구 활동을 수행해온 전문가 및 학문후속세대, 언론계의 학술전문기자, 출판계의 학술저서 전문 출판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그룹 인터뷰를 서면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인문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이론적 근거 구축에 필요한 역사적·이념적 자원을 최대치로 확보한다. 인터뷰 형식은 전문적인 견해의 표출에 상대적으로 친화적인 서면 인터뷰 형식을 취하기로 한다. 인터뷰 문항은 다음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 우리나라에서 인문사회학술이 처한 현실에 대한 진단
- 인문학의 본령에 대한 견해
- 인문사회학술에 대한 국가 지원 필요성에 대한 견해
- 국가사회 경영, 사회문제 해결 등에 필요한 인문사회역량에 대한 견해
- 인문사회학술을 기반으로 국가 또는 문명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수행한 사례 제시
- 인문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한다고 할 때, 그 기본단위에 대한 견해

○ 연구협력위원 자문 : 연구의 전 과정에 걸쳐 연구협력위원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1.3. 주요 용어 전제적 고찰

□ 본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함에 앞서 반드시 짚어봐야 하는 개념으로는 인문, 인문학, 인문

주의, 경제, 경제적 인문, 인문정책, 인문정책 거버넌스를 꼽을 수 있다. 곧 이들은 본 연구의 기축을 이루는 개념에 해당한다.

1.3.1. 인문, 인문학, 인문주의

□ 인문학은 인문과 분명하게 다르다. 물론 공통점도 있다. 그렇다고 그 둘이 같다고 할 수는 없다. AI와 인간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하여 그 둘을 같다고 할 수 없음과 같은 이치다.

○ 인문은 인간의 무늬라는 뜻이다. 여기서 인간은 다른 존재와 확연하게 구분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가리킨다. 곧 인간다움을 갖춘 인간을 뜻한다. 따라서 인문은 인간다움의 무늬이고 그 핵심은 인간다움이다. 인문학은 이러한 인간다움과 그 제반 소산이 공부 대상이자 실천 자체인 학술이다. 물론 현대 한국사회에서는 인문학이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과 같은 분과학문의 하나로 축소되면서, 한국사회에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인문학은 인간다움 전반을 다루지 않고, ‘무용(無用)의 용(用)-쓸모없음의 쓸모’, ‘무익(無益)의 익(益)-이익 없음의 이익’ 등으로 대변되는, 소위 ‘순수학문’에 속한다는 것을 주로 다룬다. 또한 인문학의 핵심인 인간다움의 실천을, 개인 차원이든 사회, 국가 차원이든 간에 인문학의 울타리에서 부차적, 주변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오늘날의 인문학은 인문과 사뭇 다르다.

○ 인간다움에는 순수학문의 공부 대상, 이를테면 권력이나 금력(金力), 장수로 대변되는 세속적 가치와는 거리를 둔 지향도 들어 있지만, 실은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 공학 등 이른바 이과계열의 학문도 엄연히 인간다움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그 소산 또한 인문에 속한다. 인문학이 이러한 인문을 다루는 학술이라면 이런 점에서 인문은 ‘기초학술로서의 인문학’에 가깝거나 일치한다. 인간다움을 다룬다는 것은 인간을 삶과 사회, 자연에 위치시켜 놓고 사유하고 느끼며 상상한다는 것이고, 이는 사람과 사회, 삶과 삶의 기초를 이루기 때문이다.

□ 한국사회에서 인문학은 곧잘 ‘기본’, ‘기초’, ‘순수’ 등의 어휘와 연계되어 운위된다. 인문학은 “언어, 문학, 역사, 철학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라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와는 달리 인간과 삶, 사회의 기초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여겨지고 있고, 여타 학문의 기초라고 여겨지고 있다.⁴⁾ 또한 인문학을 ‘순수학문’과 동의어로 여기거나 그것의 대표로 꼽기도 한다.

4) 이는 우리 연구진이 수행한 전문가그룹 서면 인터뷰 답변 중 “모든 학술 활동, 학문적 노력은 분야를 막론하고 인문학적 차원을 지니고 있게 마련이다. 곧 인문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이자 본령이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우리 개인과 사회의 바탕과 뿌리를 다루는 학문”, “인문사회학술은 모든 학문의 생태계에서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못 존재가 생존하고 그것의 존재 가치를 누리기 위한 기초(물, 공기와 같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 인프라)의 역할을 수행한다.”와 같은 관점에서도 목도된다. -【부록 : 전문가그룹 서면 인터뷰】 중 [질문4], [질문5]의 답변 발췌 참조.

○ 인문학이 인간과 삶, 사회의 본질을 해명하며, 인간사회의 제반 이치와 우주자연의 섭리 탐구를 자신의 본령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기본’이라는 말과 연관 짓는 것은 정당하다.⁵⁾ 또한 이러한 인문학의 연구 성과는 어떠한 자연환경, 문명조건 아래의 인간과 삶, 사회에서든 유효하다는 점에서 ‘기초’라는 말과 연관 짓는 것도 정당하다. 아울러 ‘응용학문(Applied Study)’ 또한 그 소산이 인간과 삶, 사회 속에 놓일 때 비로소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점에서, 인문학을 이들 학문을 포함한 제반 학문의 기초, 곧 기초학술로 범주화하는 것도 정당하다.

○ 문제는 인문학이란 어휘와 곧잘 공기(共起)되는 ‘순수(純粹)’이다. 현전하는 최고의 자전인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대한 청대 단옥재(段玉裁)의 주석을 보면 순수(純)의 순과 수는 각각 “변하지 않는 것”과 “섞이지 않은 것”을 뜻한다.⁶⁾ 곧 순수(純)는 말 그대로 ‘무언가와 섞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순수(純)가 지닌 이러한 뜻만으로는 순수(純)가 기본, 기초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 물론 단옥재의 “섞이지 않으면 전일하고 전일하면 위대하다(不雜則壹, 壹則大)”는 부가적인 해설에 따르면 순수(純)를 기본이나 기초 등과 연계할 수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순수(純)의 파생적 뜻일 따름이다. 게다가 순수(純)와 기본, 기초를 직결하는 것은 현재 한국사회에서의 순수(純)의 용례와 일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문제적이다.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없음”이라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를 보면 순수(純)와 기본, 기초 사이에는 논리적·내용적·실제적 다리가 그 자체로는 놓여 있지 않기 때문이다. 순수(純)의 수(水)를 단옥재처럼 풀지 않고 ‘정수(淨水)’라는 본뜻으로 풀어도 마찬가지이다. 무언가의 정수(淨水)가 그 자체로 기본 내지 기초와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문학과 순수(純)를 아무 매개 없이 직결할 수는 없다. 이는 동양과 서양의 인문 관련 역사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 한자권 전근대시기의 인문 개념 : 문(文), 인문(人文), 문명(文明), 문화(文化)

5) ‘인문학적 역량’이라는 차원에서 인문학은 기본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가령 우리 연구진이 수행한 전문가그룹 서면 인터뷰에서 ‘인문학적 역량’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성숙, 성장하게 하는 힘”, “인간 이해력”, “인간 내면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전체를 볼 수 있는 눈, 의미와 가치를 문제 삼고 탐구하려는 일관된 지성적 태도”, “목적과 방향을 검토하는 지적 태도”, “자기 성찰 능력”, “주체적 의사결정 능력”, “의사소통행위능력”,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 “상호대화, 상호이해, 상호존중 능력”, “협력과 연대, 공감, 현대 역량”, “사회학적 상상력”, “시민성/민주시민 역량”, “문해력”, “비판적 사고력”, “글쓰기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도덕적 판단과 규범 정립 능력”, “신(新)매체 활용 능력”, “문화적 역량/문화력”, “기초지력”, “도덕적 역량” 등이 제시되었다. 이는 제반 학술과 삶의 기본으로 요구되는 역량과 태도, 정신이라는 점에서 인문학과 기본은 매우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답변 부분은 【부록 : 전문가그룹 서면 인터뷰】 중 [질문6]의 답변 발췌 참조.

6) 단옥재, 『설문해자주(說文解字注)』, “순(純)을 가차하여 순(醇)으로 쓴다. 그래서 반고는 ‘변하지 않는 것을 순(醇)’이라고 하고, 섞이지 않는 것을 수(粹)라고 한다’고 하였다. 최근의 『역경』을 해설하면서 ‘섞이지 않는 것을 순(純)’이라고 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수(粹)라고 한다’고 하였는데 그 뜻은 동일하다.(段純爲醇字, 故班固曰, ‘不變曰醇, 不雜曰粹.’ 崔觀說易曰, ‘不雜曰純, 不變曰粹.’ 其意一也.)

○ 인문(人文)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문(文) 개념을 먼저 고찰해야 한다. 인문은 물론이고 인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명, 문화 개념 또한 문(文)을 핵심으로 하여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 문(文) : 문(文)은 무늬, 문양을 뜻한다. 이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 인위적 조치를 가한 소산이다. 또한 그것은 질서와 연관된다. 곧 문(文)은 인위적 활동에 의해 질서화된 것을 가리킨다. 이것이 사회 상태에서 구현된 것이 바로 문물과 제도 일반이다. 달리 말하면 문(文)은 역사의 서술 대상이 되는 제반 인위적 활동과 그 소산이다. 문(文)이 이른 시기부터 ‘예제(禮制)’라는 용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제도 일반을 가리키는 예(禮)와 동의어로 사용된 까닭이다. 격식을 갖춘 절차를 행하는 것이 예인데, 그렇게 행해지는 격식과 절차 자체가 하나의 동적(動的)인 문양으로 인지되었던 것이다. 역대로 유학자들이 공자가 말한 문을 예악제도(禮樂制度)로 이해한⁷⁾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치 차원에서 유가의 이상으로 꼽혀온 예치는 개인 간의 예절을 기반으로 정사를 펼친다는 뜻이 아니라, 성인의 도로 대변되는 왕도정치의 이념이 물화(物化)된 제도, 곧 예제를 기반으로 통치한다는 뜻이었다. 문(文)은 이처럼 자연 상태에 인위적 조치를 가한 것이되, 그것은 질서화되어 있고 때로는 제도화 수준으로 상승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는 개념이었다.

○ 인문 : 인문은 축자적으로는 ‘인간의 무늬’라는 뜻이다. 이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 텍스트는 『역경(易經)』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문을 살펴서 시절의 추이를 관찰하고, 인문을 살펴서 천하를 교화한다.”⁸⁾ 여기서 인문은 천문과 대가 되어 언급되어 있다. 이는 인문을 천문과의 관계 아래서 그 정체를 이해해야 함을 말해준다. 이는 서기전까지의 한자 개념 연진의 총결판인 『설문해자』에서 인(人)의 뜻풀이에 대하여 단옥재가 해설하면서 사람을 하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늘의 핵심으로서 풀이한 것⁹⁾에서도 목도된다. 이를 근거로 하면 인문은 하늘의 질서인 천문을 인간세계에 펼쳐낸 것을 가리킨다. 인간세계의 문을 하늘의 문과 동일하게 빚어낸 것이 인문이라는 뜻이다. 결국 하늘의 문이나 인간의 문이나 근본 차원에서는 동일한 것이 된다. 이는 하늘의 문을 인간세계에 구현한 것을 굳이 인문이라 명명할 이유가 없음을 시사해준다. 문(文) 한 글자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문이라 표현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

7) 주희(朱熹)의 공자 문에 대한 해설이 대표적 예다. 주희는 “문왕이 세상을 떠났으니 문은 나에게 있지 않겠느냐?(文王既沒, 文不在茲乎)”(『논어』「자한(子罕)」)는 공자의 말에 대하여 “도가 드러난 것을 일러 문이라고 하니 대체로 예악 제도를 일컬음이다(道之顯者謂之文, 蓋禮樂制度之謂)”라는 주석을 달았다.

8) 觀乎天文以察時變, 觀乎人文以化成天下. -『역경』 ‘분괘(賁卦)’의 단사(彖辭).

9) 단옥재는 인(人)을 “천지간의 존재하는 것들 중 가장 귀한 것(天地之性最貴者也)”이라는 『설문해자』의 뜻풀이에 대하여 『예기(禮記)』 「예운(禮運)」 편의 “사람은 천지의 마음이다(人者, 天地之心也)”는 구절을 인용하며 부연 설명하였다.

써 문을 빛어낸 주체가 인간임을 밝히 드러낼 수 있게 된다. 또한 인문은 그러한 문(文)이 어디서 구현되고 있는지를 밝히 알려준다. 바로 인간세상이 그것이다. 이로부터 인문은 하늘의 문과 근본 차원에서는 동일하다는 사유가 변주된다. 곧 인문의 실상은 하늘의 문(文)과는 분명하게 구분된다는 사유가 형성된다. 순자(荀子)가 대표적 예로, 그는 인간과 인간세계가 하늘의 문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건 분명하지만, 인문은 인간의 인위적 활동의 소산일 따름이라고 단언한다.

○ 문명 : 문명의 뜻은 ‘중화(中華)’의 뜻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중화의 ‘화(華)’는 ‘꽃’ 또는 ‘빛’이라는 뜻으로 광채가 나는 모습을 형용한다. ‘중(中)’은 하늘 아래 온 천하의 중심을 가리키던 글자이다. 이때 중심은 단순히 지리적인 중심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정치적·문화적일 뿐만 아니라 존재론·우주론적 차원에서도 중심을 가리켰다. 곧 중화는 ‘찬란하게 빛나는 천하의 중심’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찬란하게 빛나는’ 상태를 고대 중국인들은 ‘문명(文明)’이라고도 표현했다. 『역경』에서 건괘(乾卦)를 해설한 대목에는 “용이 나타나 밭에 있으니 천하는 문채가 어리고 밝게 빛난다”는 말이 나온다. 또 『서경(書經)』에는 “(순임금께서는) 생각이 깊고 명철하며 문채가 나고 밝게 빛난다”는 표현이 나온다. 여기서 “문채가 어리고/나고 밝게 빛난다”는 말의 원문은 모두 ‘문명’이다. 후대의 주석가들은 ‘문명’의 ‘문(文)’을 주로 ‘문채(文彩)’라는 뜻으로, ‘명(明)’을 밝게 빛난다는 뜻으로 새겼다. 곧 ‘문명’은, 문채[文]가 아롱지고 그것이 영롱하게 빛나는 상태를 가리켰고, 천하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이상적인 상태가 구현됐음을 지시할 때에 사용되던 표현이었다. 단적으로 ‘하늘의 무늬[天文]’는 곧 ‘하늘의 섭리[天之理]’라는 주희(朱熹)의 언급처럼 단순히 패턴화된 형상을 이루고 있음에 멈춰서는 안 됐고, 그러한 패턴을 자아낸 근저의 원리와 지향하는 가치까지도 표상해야 했다. 인문은 천문이 인간세상에서 재현된 것이므로 문채[文]가 밝게 빛나는[明] 상태를 뜻하는 ‘문명’은 결국 하늘의 섭리가 인간 차원에서 구현된 ‘인간다움’이라는 가치와 원리가 스며든 인문이 밝게 빛나는 상태를 가리켰다. 그리고 그러한 인문이 실제의 층위에서 구현되는 모습은 다름 아닌 예가 온전히 시행되고 있는 상태였다. 그렇게 예는 인간다움의 문채[文]가 밝게 빛나는[明] 상태, 곧 문명한 상태의 표지가 되었다.

○ 문화 : 문화(文化)는 “문치교화(文治教化)”의 준말이다. 문치교화는 “문(文)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가르침으로 만민을 감화하다”는 뜻이다. 문(文)은 앞서 서술했듯이 예악제도를 가리키고 가르침은 공자가 집대성한 성현의 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유의할 바는 문화라는 표현의 방점은 문(文)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다스리다[治]’와 ‘감화하다[化]’라는 동사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곧 문명이 문(文)이 찬란하게 빛나는 ‘상태’ 자체를 가리키는 뜻으로 주로 쓰였다면, 문화

는 그러한 상태를 구현하기 위한 인간다운 ‘활동’을 가리키는 뜻으로 주로 쓰였다는 것이다. 역대로 유학자들이 문치교화를 받은 연후에 비로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간이 야만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연적 활동이 아니라 이러한 인위적 활동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근대시기 한자권에서 이해되어 온 문화는 근대에 들어서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양식이나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표준국어대사전』)와 같은 뜻으로 이해되었다. 야만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곧 문명을 구현하기 위한 활동과 그러한 활동의 소산을 모두 가리키는 말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음이다.

□ 고대 그리스의 ‘인문 활동’

○ ‘인문(humanitas)’이란 인간의 활동을 가리킨다. 하지만 모든 활동을 인문이라 부르지는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듯이 “모든 행위와 선택은 어떤 좋음을 목표로 하는”¹⁰⁾, 인간의 활동 가운데에서 목표로 제시되는 좋음의 제한을 받는 활동이 인문이기 때문이다. 즉 고귀한 것, 진실한 것, 아름다운 것, 유익한 것, 즐거운 것 등을 목표로 하는 활동 일체와 행위 일반이 인문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하게 잘 사는 활동이 인문이다. 이 가운데 어떤 것은 활동 자체가 목적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활동의 결과물이 목적인 것도 있다. 활동 자체이든 혹은 활동의 결과물이든, 이것들은 우연적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오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체득되어 좋은 버릇을 형성된 활동이라는 점에서, 그 활동을 소위 ‘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인문이다. 따라서 인문의 대상으로 포섭되는 활동은 기본적으로 경험, 지식, 기술을 통해서 이해되고 체득되며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이다. 이것들이 행복하게 사는 활동들이며 이것들이 인문이다.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배움의 대상이 되고, 그 배움의 대상이 바로 인문의 대상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여 혼의 이 부분들에 관하여 말해 보기로 하자. 그럼, 영혼이 그것에 의해 긍정하고 부정함으로써 참에 이르는 상태는 수적으로 다섯이 있다고 하자. 이것들은 기예(techne), 학문적 인식(episteme), 실천적 지혜(phronesis), 철학적 지혜(sophia), 직관적 지성(nous)이다. 왜냐하면 추측과 믿음은 우리를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¹¹⁾ 단적으로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즉 잘 살기 위해서는 거짓과 진실을 구분할

10) 『니코마코스 윤리학』 1권 1094 a.

11) 『니코마코스』 제6권, 1139b14-18).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며 움직이는 활동과 행위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이다. 요컨대 그것이 기예인지, 지식인지, 지혜인지, 경험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적어도 인간의 활동과 행위를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고 전수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활동과 행위에 대한 분류와 이해가 기본적으로 요청되기 때문이다. 이 활동 일체가 인문이다.

○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106-43 BCE)가 제시한 개념들, 예를 들면 *natura humana*, *condicio mortalis*(인간 조건), *natura hominis*(인간성), *natura generis humani*(종으로서 인간본성), *mansuetudo*(온건함), *cultus*(수양), *doctrina*(배움), *dignitas*(고귀함), *fides*(신뢰), *pietas*(경건), *honestas*(명예), *iustitia*(정의), *gravitas*(위엄), *virtus*(덕), *integritas*(순결), *lepos*(기지), *facetiae*(유머), *elegantia*(우아), *eruditio*(박식), *urbanitas*(교양), *hilaritas*(명랑), *iocositas*(재치), *festivitas*(유쾌함), *sapientia*(지혜), *moderatio*(절제), *modestia*(겸손), *aequitas*(공정), *comitas*(사회성), *benignitas*(호의), *clementia*(자비), *miser cordia*(측은지심), *benevolentia*(호의), *facilitas*(까탈스럽지 않음), *mollitudo*(유연함), *liberalitas*(통큰), *munificentia*(베풀기를 좋아함) 등의 개념에 포착되는 활동 일반이 인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 개념들은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네 덕목으로 범주화된다. 즉 자기 검증성(*Probitas*), 박애정신(*miser cordia*), 관용정신(*liberalitas*), 마지막으로 교양(*urbanitas*)이 그것들이다. 이것들은 나중에 서양의 ‘인문’ 정신의 근간으로 자리 잡는다. 후대 르네상스시대의 인문학자 로렌조 발라(Lorenzo Valla, 1406-1457년)의 노력으로 다시 살아난다. 발라는 키케로의 시민론에 이성(*ratio*) 혹은 합리성을 추가해 신으로부터 인간 이성 혹은 판단이 독립된 차원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다. 위의 전통적 시민론과 르네상스의 이성과 합리성을 기반으로 발전해온 것이 소위 영국의 신사(*Gentry*)정신, 프랑스 혁명정신, 미국의 독립정신들이다. 이 모두는 인문 활동의 소산들이다.

○ 인문 활동이란 영혼 활동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문헌은 플라톤(Platon, 428?-347?년)의 『국가』 편이다. 플라톤은 국가의 구조를 인간 영혼의 3분 구조의 유비를 이용해서 설명한다. 플라톤에 따르면 국가는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로 구성된다. 이 구성을 그는 인간의 영혼의 삼분(三分) 구조를 이용해서 설명한다. “개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똑같은 종류들을 자신의 (영)혼 안에 지니고 있어서, 나라에 있어서의 그것들과 똑같은 처지로 인해서 나라의 경우와 똑같은 이름들로 불리 자격이 당연히 있다고 우리는 판단할 것세.”¹²⁾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중의 한 가지로는 배우고, 다른 한 가지로는 발끈하며, 셋째 것으로는 음식과 생식 또는 이것들과 동류(同類)인 것들과 관

12) 『국가』 4권 435b-c.

련된 쾌락을 욕구하지. 이런 각각의 행위를 우리가 일단 하기 시작하면, (영)혼 전체로 하게 되지 말아세.”¹³⁾ 플라톤은 이 논의를 더 밀고 나가 마침내 영혼을 삼분하는데, 그는 “(영)혼이 헤아리게 (추론하게) 되는 부분을 혼의 헤아리는(추론적, 이성적: logistikon) 부분이라 부르는 반면, 그것으로써 (영)혼이 사랑하고 배고파하며 목말라하거나 또한 그 밖의 다른 욕구들과 관련해서 흥분 상태에 있게 되는 부분은, 어떤 만족이나 쾌락들과 한편인 것으로서, 비이성적(헤아릴 줄 모르는: alogistikon)이며 욕구적인(epithymetikon) 부분이라 부른다 해도 결코 불합리하지는 않을 걸세. (...) 그러나 걱정(기개: thymos)의 부분이며, (...)”¹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국가는 영혼의 세 부분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이 정치이다. 정치는 따라서 특정의 정치인이 권력을 획득하는 활동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개인의 영혼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활동 자체가 정치이다. 『국가』를 저술하면서 플라톤은 행정 체제와 법률 구조 등의 행정학과 정부 조직론 등을 살피지 않는다. 대신에 그는 인간의 영혼을 깊숙하게 들여다본다. 그 이유는 국가의 존립 목적이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최대한 시민들이 행복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것이 교육이고, 영혼의 갈망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문화이다. 여기에서 플라톤이 『국가』를 통해서 강조하는 정치의 실체가 명료하게 드러난다. 그에게 정치란 다름 아닌 교육과 문화이다. 국가의 활동이 정치이고, 그 정치의 실체가 교육과 문화이다. 그도 그럴 것이, 플라톤이 꿈꾸었던 나라가 “좋은 나라(kallipolis)”, 혹은 “아름다운 나라”였기 때문이다. 좋은 나라로 가는 방법은 물질적 풍요만으로는 부족하다. 교육과 문화가 없는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교육과 문화가 인간의 영혼을 담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인문학이다. 국가의 활동은 인문 활동의 총체적인 모습이고, 인문 활동의 뿌리는 영혼 활동인 것이다.

○ 인문 활동은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진다. 공동체도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성립하는데, 인문 활동도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에 대한 관계 규정의 제약과 지배를 받는 활동이다. 그런데 하나의 공동체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다름 아닌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개인과 공동체간의 관계 규정이 그것이다. 이 규정은 각각 상호 권리-의무 관계로 나누어진다. 이 권리-의무 관계의 강제력의 크기와 강도에 따라 조직체의 성격이 결정된다. 구성원에게 국가와 같이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반면, 그 강제력이 임의 탈퇴 가입할 수 있는 동호회 수준의 공동체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모임들과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규정 개념들(권리와 의무)에 입각해서 행해지는 것들이 인문 활동이다.

13) 『국가』 4권 436a-b.

14) 『국가』 4권 439d-e.

따라서 공동체와 개인과의 관계 규정, 즉 의무-권리에 대한 이해도 인문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다. 예컨대 ‘의무’의 정의, 의무와 공동체의 개념적 연관성, 가족 및 친척 관계, 친구 관계, 개인과 국가 관계¹⁵⁾, 상황 윤리와 의무 관계, 권리 발생의 구성조건으로 법의 탄생, 정의와 불의 개념과 권리 관계 등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통찰, 그리고 반성적인 숙고를 이용해서 행하는 것이 인문 활동이기 때문이다.

○ 인문 활동은 “좋은 나라”의 성립에 요청되는 구성 조건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은 본성상으로 정치적 동물”¹⁶⁾인데, “정치적 공동체”는 이미 공동체를 향한 인간의 본성적인 욕구 속에 그 기초를 가지고 있기¹⁷⁾ 때문이다. 중세의 정치철학 체계를 집대성한 토마스 아퀴나스(Aquinas, 1225-1274년)는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를 인간의 “본유관념”¹⁸⁾으로 파악한다. 이와 같은 서양 고중세의 사유방식은 개인을 정치적 공동체로부터 독립적으로 파악하는 근대적 사유와는 정반대로 정치적 공동체를 인간의 특유한 목적 자체로 이해하는 한에서, 인륜적인 우위뿐만 아니라 존재론적인 우선성까지도 폴리스(polis)에 부여한다. 그리하여 폴리스의 존재론적 우위는 폴리스와 개인과의 관계의 모든 정치적 차원을 특징짓는다. 정치적 공동체는 본성상 개인보다 선차적(先次的)이다.¹⁹⁾ 이 명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상학』에서 전개한 “생성과 존재의 구분”의 이론에 의지한다. 단순한 생존은 “생성”의 영역에 속하는데 “존재”의 영역에서는 이미 극복된 것으로 나타나며, 따라서 이는 모든 “생성”은 오직 “존재”를 위한 “생성”임을 뜻하기 때문이다.²⁰⁾ 따라서 인륜적으로 좋은 삶은 폴리스의 “존재 근거”이며, 폴리스의 “발생 근거”인 단순한 생존보다 우위에 놓이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륜적 삶이라는 폴리스 “존재근거”를 시민의 “외적 목적”으로 설정하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적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인간의 목적규정으로 확정함으로써 폴리스를 개인의 “내적 목적”으로 규정한다. 그렇게 될 때에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은 강제가 아니라 인간적인 “목적의 실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좋은 국가일수록 인문 활동이 꽃피는 공동체이다.

○ 좋은 나라는, 물론 물질적 풍요가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으로 충족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공동체 또한 우정과 사랑, 연대와 박애와 같은 인문 활동을 바탕으로 삼고 있는 공동체이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384-322 BCE)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8권과 9권에 우정

15) [의무론] 1권57장 58장.

16) 『정치학』 1253a2.

17) 『정치학』 1253a28.

18) 『신학대전』 IIa-IIae, quaest. 124, art. 4, ad 3; Ia-IIae, quaest. 92, art. 1.

19) 『정치학』 1253a25.

20) 『형이상학』 9권, 8, 1050a4-9.

론을 상세하게 소개한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사실 국가의 번영도 공동체 구성원의 우정과 사랑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누구도 자신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나 즐거움을 주지 않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 자연 본성이 무엇보다 괴로움을 피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²¹⁾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한에서 친구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좋은 국가는 즐거움을 함께 하는 벗들의 공동체일 때에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다. 망해가는 나라일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로 가득 찬 나라인데, 이에 대한 대안이자 대책으로 제안된 것이 우정론이다. 단순히 친구들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를 살피기 위해서 제시된 논의가 아니다. 공동체 차원에서도 우정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가장 완전한 필리아(philía)는 좋은 사람들 또 덕에 있어서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성립하는 필리아이다. 이들은 서로가 잘 되기를 동등하게 바라는데 그들이 좋은 사람인 한에서 그렇게 바라며 또 그들은 그 자체로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친구를 위해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최고의 친구이다. 이들이 이러한 태도를 갖는 것은 우연적인 것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이유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의 필리아는 그들이 좋은 사람인 한 유지되는 것이니 덕은 지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각자는 또 단적으로도 좋은 사람이고 친구에 대해서도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들은 단적으로도 좋으며 서로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좋은 사람들은 즐거움을 주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단적으로도 즐거우며 서로에게도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다. 좋은 사람들 각각에게 자신의 행위들 또 그와 같은 종류의 행위들은 즐거운 것이며, 그런 종류의 행위들이나 비슷한 종류의 행위들은 좋은 사람에게 속한다.”²²⁾ 좋음은 좋음을 이끌지만, 나쁨은 나쁨을 번성시킨다는 점에서, 좋은 친구는 좋은 사람을, 좋은 사람은 좋은 나라를 만든다. 좋은 사람은 탁월성 혹은 덕성에 입각한 영혼의 활동을 할 줄 아는 사람인데, 덕성을 갖추는 것이 타고난 재능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이론적인 이해와 실천적인 습득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교육이 중요해진다. 이른바 생존에 필요한 기초 교육을 넘어서서 생활을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고등 교육의 중요성이 이와 같은 철학적인 통찰을 통해서 부각되고 이는 현대 대학 교육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다.

○ 인문 활동은 생각의 공간에서 두 종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발견의 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판단의 활동이다. 전자를 “발견의 기술(ars inveninendi)”이라고, 후자를 “판단의 기술(ars iudicandi)”이라고 부른다.

21) 『니코마코스 윤리학』 8권 1157b15-17.

22) 『니코마코스 윤리학』 8권 3장, 1156b7-17.

■ 발견의 기술은 기본적으로 이른바 존재론적으로 “~인가, 아닌가?”, 사실적으로 “일어났는가, 아닌가?”,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가, 아닌가?”의 물음에서 시작하여, 칭명(稱名) 단계인 “~은 무엇인가?”의 물음 형식을 통해서 생각에서 펼쳐진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아가 가치 평가 단계인 “~어떠한가?”의 물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의 기술을 만나게 된다. 법적이든, 윤리적이든, 미학적이든, 인륜 도덕에 해당하는 것이든, 그 어떤 종류의 사건과 사태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하나의 활동이 완료되고 완성된다. 발견의 기술과 판단의 기술은 이렇듯 어떠한 활동이든 본성적으로 동반하고 참여한다. 이런 사유 기제를 통해서 이뤄지는 움직임이 인문 활동이다.

■ 발견과 판단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를 맺고 있다. 단적으로 비판이 없다면, 창조와 혁신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모든 필요는 문제가 있는 곳에서 발생하고, 그 필요가 요구하는 해결책은 문제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이 실은 비판 능력이다. 요컨대 자연과학, 기술공학, 경영학 및 경제학에서 중시하는 “혁신”, “창조” 등의 개념들도 발견의 기술에 수렴되지만, 모든 혁신과 개혁의 시작이 기본적으로 해당 사건과 사안의 구체적인 어떤 필요와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비판적인 판단 능력의 고유한 영역에 속하기도 한다. 이는 생산 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 활동 일반에도 그대로 연장된다. 개인 차원이든 사회 차원이든, 모든 새로운 움과 개혁은 기본적으로 발견과 판단의 기제를 거쳐서 이뤄지는 인문 활동이기 때문이다. 생산 활동이든 사회 활동이든, 인간의 제반 활동은 발견과 판단을 바탕으로 하는 인문 활동의 특정화된 움직임의 구체적인 한 형태이다. 어느 움직임이든 혹은 어느 활동이든, 그것은 창조적인 사유를 선호하지만, 창조라는 사유 활동은 기본적으로 특성상 항상 비판적 사유를 전제로 한다. 변혁이든 개혁이든 혁신이든 창조이든, 모든 새로운 것은 어떤 특정의 사건과 사태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과 통찰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발견과 판단의 이런 성격은 종종 인문 활동의 “비판적인 속성”을 도드라지게 보이도록 만들기도 한다. 인문 활동의 그래서 이런 속성을 인문 활동의 가장 고유한 특성으로 여겨지도록 만들기도 한다. 이런 특성이 때로는 인문학이 국가 활동과 사회 활동을 비판하는 학술로 보이도록 만들기도 한다. 물론 이는 인문학이 국가와 역사의 ‘등대’에 해당하는 학술임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다. 여러 학술 분과들의 고유 기능과 관련해서, 대개는 그것이 생산 활동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기능보다는 창조적인 기능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특히 국가와 사회의 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와 입장을 견지하고 피력해 온 학술이 인문학이기 때문이다. 이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국가적인 필요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발

견의 기술이 작동하고, 그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을 강구하라는 목소리를 대변하는 학술이 인문학이기 때문이다.

■ 인문학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인 문제에 대한 공동체의 ‘등대’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역사에서 자주 목도된다. 이때 소위 “인문의 위기”도 함께 찾아온다. 이 대목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인문의 위기의 본질이 실은 인문 활동의 부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발견의 기술과 판단의 기술이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 즉 필요와 문제가 어디에 있고,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지 못하는, 곧 발견의 기술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그 결과 변혁과 개혁, 혁신과 창조를 위한 판단의 기술도 마찬가지로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데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첫 출발점이 실은 인문 활동의 기본적인 속성에 대한 파악과 이해이다. 발견의 기술은 판단의 기술과 연동하고, 비판은 창조의 모태라는 이해가 바로 그것이다. 이에 대한 역사적인 증인은 서양의 근세 인문 교육이다. 비판적인 사유 능력을 지닌 자율적인 인간의 교육이 서양 근세의 국가들이 계몽 교육의 목표로 내건 인문 교육의 이념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인문 교육의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문 활동의 활성화이다.

□ 인문학

○ 우리 연구에서 인문은 인간다움 자체를 가리키고 이와 연관된 인간 활동의 제반 소산을 가리며, 인문학은 이러한 인문을 다루는 학문과 그와 연동된 활동 일반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순수학문의 시좌에서 인간과 인간다움, 삶의 본질 및 진리, 윤리, 사리(事理) 등을 언어문자 텍스트를 중심으로 다루며 구축된 분과학문으로서의 인문학만을 가리키지 않으며, 그것만이 인문학의 본령이자 참된 인문학이라는 식의 관념과는 무관하다. 순수학문으로서, 분과학문으로서의 인문학은 인문학이 아니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 그것도 인문학의 한 부분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것만이 인문학이라며 고수할 경우 예컨대 동양과 서양의 역사에서 인문학이 일국 차원, 제국 차원, 문명권 차원에서 수행해온 역사가 인문학 바깥에 놓이게 되며, 목하 한창 진행 중인 디지털문명으로의 전이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가지도 이를 선도하지도 못하게 된다.

○ 인문학은 근대 이래로 학술이 분과화하기 이전 거의 모든 학문을 포괄하는 이름이었다. 이런 점에서 전근대시기의 인문학은 기초학술과 그 외연 및 내포가 대등하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학문은 기본적으로 통합적일 수밖에 없었다.²³⁾ 학문이 분과학문화 되려면 이를 필요로

23) 이는 우리 연구진이 수행한 전문가그룹 서면인터뷰의 답변 중 다음 언급에 의해 지지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문

하는 국가적, 문명적 차원의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전근대시기는 그러한 요구가 발생할 만한 생산력 등 문명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인문학이 마치 모든 학문을 다 포괄하는 것처럼 설정하는 것은 비유컨대 인문학에 제국주의적 욕망을 투사한 것이라는 지적은 전근대시기 동양과 서양 모두 인문학이 분과학문으로 나뉘질 사회적 필요가 없었던 역사를 도외시킨 지적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인문학을 특권화해서 인문학은 모든 학문을 포괄한다고 주장하는 건 분명 오류라는 것이다. 인문학은 전근대시기 동서양 공히 모든 학문의 기초이자 기본이었고, 분과학문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학문 자체였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전근대시기 동양과 서양 모두 순수 지향적 인문이나, 경세 지향적 인문이나가 관건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국가와의 관계 설정은 어떠한 지향의 인문학을 하든 어디까지나 하는 사람, 곧 학자의 정신과 태도로부터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순수 지향적 인문학을 하면 국가와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경세 지향적 인문학을 하면 국가의 이해관계, 논리 등에 쉬이 종속된다는 식의 논리는 인문학자 본인의 선택 결과를 순수 지향적이나, 경세 지향적이나 같은 학술 영역으로 부당하게 전가하는 인문정신이 결여된 정신과 태도일 따름이다.

○ 인문학이 현실과 맺는 관계는 기본적으로 양가적이다. 인문학은 현실을 위하여, 달리 말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또 구동된다. 동시에 인문학은 현실을 초극하고자 한다. 현상적으로 존재하고 구현되는 현실의 근저에서 작동되는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이 둘은 결코 상호 독립적이지 않다. 현상적으로 존재하고 구현되는 현실을 탐구하는 것은 그 이면에서 작동되는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현관 역할을 하며, 그러한 진리를 탐구한다고 함은 현실을 위하여 복무한다는 목적 실현에 필수 불가결한 전제가 된다. 따라서 순수 지향적 인문학은 진리 탐구와만 관계하고, 경세 지향적 인문학은 현실 개선하고만 관계한다든지, 전자는 세속 권력이나 세속적 이해관계 등과 무관하고 후자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은 오류에 불과하다. 시대 상황에 따라 순수 지향이 세속 권력, 세속적 이해관계에 충실한 정신이자 태도이게 되기도 하고 역으로 경세 지향이 세속 권력, 세속적 이해관계에 충실한 정신이자 태도이게도 된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시대인가에 따라 순수 지향이 가장 세속 권력, 세속적 이해관계에 비판적이고 비타협적 정신이자 태도이게 되기도 하고 반대로 경세 지향이 가장 그러한 정신이자 태도이게 되기도 한다. 곧 인문학은 어떠한 지향을 취하는지에 따라 현실

학(人文學, humanities)은 인간에 대한 탐구와 그를 기반으로 한 문화적 산물을 망라하는 폭넓은 용어이다. 실존체로서의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연구, 즉물적 존재이자 자연이라는 보다 넓은 차원의 일부로서의 인간에 대한 탐구, 나아가 소위 문화(文化)와 문명(文明)을 만들어 낸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천착, 이 모든 것들이 인문학이라는 대범주에 아울러지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축적되어온 인류의 지식 경험과 사유의 본질적 측면을 넓게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인문학은 인류 사회가 축적해온 지적, 학술적 문화유산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부록 : 전문가그룹 서면 인터뷰】 중 [질문4]의 답변 발췌 부분 참조.

과의 관계가 직접적이고도 필연적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지향을 취하든지 인문학자가 현실에 대하여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 현실과의 관계가 추수적이나, 혹은 비판적이나가 결정되는 것이다.

○ 인문(人文)에 학문을 뜻하는 학(學)을 붙여 만들어진 것이 인문학(人文學)이다. 이 말은 서구 근대에 형성된 개념인 ‘Studia Humanitatis’를 번역하면서 만들어진 말이다. 서양 근대의 철학자들은 세계를 자연과 인간으로 나누고 고유한 학문(Sciences)을 따로따로 두었다. 문학·역사·철학을 보듬어 안는 인문학은 당연히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은 자연과학(Natural Sciences)이라 하였다. 데카르트(René Descartes, 1596-1650년)가 정신을 지배하는 원리와 사물과 자연의 물리적 원리를 구분하면서부터 학문의 구분도 뚜렷해졌다. 그리고 르네상스를 주도한 학자들이 서양의 중세를 지배했던 기독교에 대항하여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를 찾았을 때, 인문학(Studia Humanitatis)이라는 말이 나타났다. 기독교를 떠나 인간을 새롭게 바라보기 위해 인문주의자들은 중세를 거슬러 올라가 고대 그리스·로마의 역사 속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도서관의 한쪽에서 그리스·로마의 고전 텍스트를 꺼내 세상에 새롭게 내놓았다. 더욱이 동로마제국의 멸망 이후 서유럽으로 온 동방의 학자들이 수많은 그리스·로마 고전을 가져와 소개하고, 고대 그리스 문헌들의 이슬람 번역본들이 서구 유럽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새로운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인문주의자들은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새겨져 있던 고대 그리스·로마 문장들이나 아랍어 번역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새롭게 엮어내고, 거기에 담겨 있는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서구의 인문학(Studia Humanitatis)은 인간의 타고난 품성(Humanitas)을 밝게 드러내기 위해, 오래된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의 텍스트를 찾아내 정성껏 다루는 데(Studia)에서 시작되었다. 이렇듯 서양의 인문학은 태생적으로 고전을 다루는 고전학에 다름 아니다.²⁴⁾

○ 인문학은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인간을 기르는 교육이다. 인간을 이해하는 연구이지만, 인간의 활동과 행위를 교육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학술이다. 여기서 ‘학술’ 개념은 다음과 같다. 곧 학문은 지식으로 머물러 있으면 이론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체득을 거치게 되면 기술이 되는데, 이 과정 일체가 학술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건축술은 하나의 기예이고, 그런 한 이성을 따라 무엇인가를 제작할 수 있는 하나의 품성 상태이기 때문에, 또 어떤 기예도 이성을 따라 만들 수 있는 품성 상태가 아닌 것이 없고, 이러한 품성 상태치고 기예 아닌 것이 없기에 기예란 참된 이성을 따라 만들 수 있는 품성 상태

24) 김현(2011), “역사적 상상력으로 재구성한 문명의 기원”(김민정 등, 『문명 안으로』, 파주: 한길사), 19-20쪽에서 발췌.

(hexis meta logou alethous poetike)와 동일한 것이다.”²⁵⁾ 오늘날 공과대학의 건축학과에서 가르치는 건축술의 경우도, 그것이 교육의 대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참된 이성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것이 지속될 수 있는 기술로 체득될 수 있도록 훈련을 거쳐야 한다면, 건축술의 기본 바탕에는 여전히 이성의 활동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하나의 기술로 만드는 체득 과정이 필수적이다. 어떤 하나의 행위나 활동이 교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모방을 통한 전수가 아닌 그 활동 혹은 행위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가 요청된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이와 같은 이해 일반을 제공하고, 서양의 대학 교육은 비록 약간의 변용과 변형은 있지만, 그럼에도 기본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이 혹은 인문학자들이 정리한 인간 행위와 활동에 대한 개념들 위에 정초되어 있다. 특히 국가의 발전과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준 과학과 공학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개념들의 이해로부터 시작했다.

○ 인문학은 “좋은 학술(bonae artes)”이다. 인문학을 학술(ars)로 접근한 사람은 키케로였다. 그는 바로(Varro)의 친구였는데, 바로와 마찬가지로 로마의 학술을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 분류와 학술(techne) 개념을 활용하여 경험적 실천 행위들을 지식화하는 작업, 특히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이론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도했다. 이와 관련해서 키케로는 로마의 학문들이 처음에는 체계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지금은 체계(體系)를 갖춘, 그래서 학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들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네. 예전에는 대개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고 아무런 무질서하게 펼쳐져 있었다네.”²⁶⁾ 키케로가 말하는 학술이 ‘ars’이다. 그에 따르면, ‘ars’란 “어떤 것이 지성으로 접근할 수 있고, 철저한 따짐을 통한 탐구되며, 어떤 하나의 목적에 의해서 묶여지고 어떤 거짓도 포함하고 있지 않을 때, 그것을 학술(학문과 기술)이라 할 수 있다.”²⁷⁾ 키케로는 어떤 논의가 하나의 학술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체계’는 “그런데 만약 명민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실제로 연설을 수행하는 중에 관찰한 경험과 활동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표시를 해 놓았다가, 이를 말로 규정하고, 이어 [유와 종으로] 범주를 선명하게 구분한 다음, 해당 범주[의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²⁸⁾이었다. 음악, 천문학, 기하학, 문법학, 수사학은, 그것들이 다루는 대상에 있어서는 준별(峻別)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들이 학술인 한, 그러니까 이 학술들은 ars의 성립 조건과 분류 방

25)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6권, 1140a6-10.

26) 『연설가에 대하여』 1권 189장.

27) 『연설가에 대하여』 1권 92장.

28) 『연설가에 대하여』 1권 109장.

식에 있어서는 학문 일반이나 철학, 엄밀하게는 형이상학의 심급에서 제공되는 공통의 규정과 분류 원리에 의해서 조직되었다는 것이다. 키케로는 말한다. “그리하여 여기에 어떤 학술 체계가 부여되었다네. 이 학술은 다른 영역으로부터 온 것인데, 철학자들은 이 학문이야말로 전적으로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학술이 느슨하게 풀리고 흩어져 있던 대상들을 하나로 묶었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의 체계로 만들었다네.”²⁹⁾ 지식의 형태로 존재라는 앎들이 삶의 현장에서 실천으로 실행된 것을 그리고 경험이 지식의 형태로 추상화되고 이론화된 것들을 키케로는 “좋은 학술”이라고 불렀다. 여기에서 “좋은”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그 학술들이 잘 사는 것, 즉 삶의 행복과 특히 생활의 풍요로움과 정신의 여유로움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키케로는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철학을 삶의 한 복판으로 끌어내리려고 시도했다. 그에 따르면, “철학(지혜의 사랑, 학문)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이는 피타고라스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물에 대한 실제 지식을 넓혀준 현인(賢人)이기도 한다. (중략) 그러나 학문이 처음 생겨났던 고대로부터 소크라테스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학문은 수(數)와 운동(運動)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만물이 어디에서 기원하는지, 어디로 되돌아가는지 그리고 별자리의 크기와 별자리 사이의 거리와 [별들의] 운행 행로 등 온통 천문(天文)에만 정성을 기울였다. 물론 소크라테스도 [자연학자] 아낙사고라스의 제자인 아르켈라오스의 강의를 들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첫 번째다. 처음으로 학문을 하늘의 세계에서 도시(국가)로 끌어내렸고 또한 집안으로 끌고 들어왔던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삶(vita)에 대해서, 사람 사는 법(mores)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따지고 캐물었다. 다양한 관점에서 따지고 캐묻는 방식과 다루었던 주제들의 폭넓음과 그가 보여주었던 지성의 크기는, 플라톤의 기억과 기록을 통해서 신적 경지의 반열에 올랐다.”³⁰⁾ 이와 같은 사유를 통해서 앎의 세계에서 위엄과 권리를 자랑하던 진리는 “삶의 세계로(ad humanitatem)” 내려온다. 사람의 세계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키케로가 말한 ‘좋은 학술’, 곧 인문학이다.

○ 인문학은 ‘문명학’ 혹은 ‘경세학’이다. 화용론적인 맥락에서 서양의 문명학이라는 개념은 동양의 경세학에 해당한다.

■ 문명이란 자연의 힘이 인간의 생존과 생활을 위해서 변형되고 변용되고 있는 역사적 과정들의 결집체를 말한다. 거칠게 말하면 인간은 생존과 생활을 위해서 자연의 힘을 두 가지

29) 『연설가에 대하여』 1권 188장.

30) 『투스쿨룸 대화』 5권, 10-11장.

방식으로 이용 혹은 접근해 왔다. 한편으로 자연의 힘에 대응하기 위해서 혹은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혹은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방식이 그 하나이다. 다른 한편으로 인간은 자연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연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정리하고 이를 후대에게 교육하고 전하는데, 이와 같은 교육과 학문 활동 일반이 또 다른 하나이다. 이렇게 자연의 힘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문명은 소위 정신적 속성을 강조하는 문화와는 개념적으로 기반하고 있는 토대가 다르다. 물론 문명이 정신을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문명 개념에는 종교나 통치 형식과 같은 이념과 제도의 속성들도 포괄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자연과의 관계 맺음에서 문명은 자신의 기본적인 속성을 획득함은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말한 두 방식을 통해서, 인류는 각각의 시대에 각각의 공간에서 독자적으로 자신들의 생존 방식과 생활 방식에 필요한 도구들과 제도들을 발명-발견하고 그것들을 더욱 세련된 방식으로 발전시켜 왔다.

■ 인문학이라는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 개별 분과로 나뉘어 연구되고 교육되고 있는 인문학의 제반 학술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 혹은 자연 안에서 자연을 인간의 방식으로 끌어들이는 방식들에 대한 해명에 다름이 아니다. 이는 네 과정으로 범주화해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사물과 사태에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개념화하며 이론화하는 과정(conceptualization)이 있고, 이어서 개념화와 이념화의 과정을 맥락화(contextualization)하는 과정이 뒤따르는데, 맥락화 과정에는 제도화와 역사화 과정이 포함된다. 뒤의 두 과정을 바탕으로 개념과 이념들은 물질로 현실화(realization)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하지만 이 현실화 과정에는 만남과 충돌을 통한 융합화와 표준화의 과정(integration and standardization)도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게 된다. 이를테면 자유, 정의, 평등, 공평, 민주, 공동체 등 우리가 문명의 기본 가치들이라고 부르는 개념들도 이와 같은 문명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수입된 것들이다.

○ 한국 인문학은 아직은 번역 인문학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것이 종종 인문학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곤 하는데 그 오해란 이런 것이다.

■ 인문학을 엘리트의 전유물로 보는 인식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 인식은, 외국어로 표현된 혹은 규정된 가치와 개념들을 한국어로 옮겨오고 착생시키는 단계에서 인문학의 개념들과 가치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놓고 다투는 논쟁의 과정은 피할 수가 없는데, 이 과정에서 외국어에 능통한 학자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어서 생겨난 착시일 뿐이다. 단적으로 이는 인문학의 성장과 성숙하는 과정 중에 극히 일부분, 더 정확하게는 아주 이른 단계에서 벌어지는 사태에 대한 인식에 머물러 있을 때 가지게 되는 오해이다. 궁극적으로 개념의 이해에서 멈추

지 않고, 그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실천과 실행을 통해서 완성될 때 한국 인문학은 그 자신의 성장과 성숙의 진정한 결실을 누릴 수 있다. 엘리트의 손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해되고 몸으로 실천되는 과정을 관장하는 것이 인문학이기 때문이다.

■ 이런 관점에서 한국 인문학은 아직은 엘리트 중심의 번역 단계에서 개념들과 가치들을 번역하고 착생시키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것이 인문학은 소수 특권층의 향유물로 보게 만든 한 원인이다. 하지만 인문학이 태동한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문학은 소수의 전문가에서 대중의 바다를 향해서 나갔다. 그 증거들이 서양에서 발전한 기초학술인 수사와 문법학,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인쇄술과 출판업이다. 이 증거들은 인문학의 최종 목적지는 특정 개념에 대한 이해에서 끝나지 않음을 잘 보여주고, 인문학이 개별적인 이해를 넘어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행복에 봉사하는 것을 최종 종점으로 삼는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제도를 통해서 인문학의 존립 근거인 사람들이 “인간답게 잘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국가도 그 자신의 존립 근거로 삼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 인문학은 초등, 중등, 고등의 모든 교육단계에서 교육의 기본을 구성한다. 다만 우리나라는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대학 서열과 특권 구조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거의 그러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적어도 중등교육의 주인공은 인문학이 되어야 한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삶의 기초학술을 연마하고 배우는 단계를 도구 과목으로만 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인문학이 소수의 엘리트에서 다수의 대중에게 나가는 길이기도 하다. 사실 한국 인문학의 하방을 막는 것이 현재의 입시 교육임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현재의 입시 교육이 삶의 기초 교육이 아니라 도구 교육의 심화 과정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실은 인문의 위기, 즉 인문 활동의 위기를 불러온 핵심적인 원인이다. 한국사회의 사정이 이러함에도 인문의 위기에 대한 원인을 인문학의 번역과 착생 과정에서 나타나는 엘리트 중심의 활동에 보는 시각은 이제는 교정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후술할 로마의 인문학이 이에 대한 좋은 참조거리가 될 것이다.

○ 다음은 우리 연구진이 수행한 전문가그룹 서면 인터뷰 답변 가운데 인문학 개념에 대한 언급들을 정리한 내용이다.

■ “인간 자체, 삶과 그 의미를 탐구하는 과정”을 핵심으로 하여 인문학이라는 관념이 제시되었다. “인문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위한 학문으로서, 인간 자체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하는 학문이다. 가령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곧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가?(곧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나)과 세상은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가?(곧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학문이다. 이를 토대로 삶의 의미

(meaning of life)를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문학은 인간과 사회, 우주자연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고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는 데 인문학은 없어서는 안 될 학문적 영역이다.”, “인문학은 전통적으로 인간의 사유와 감정, 욕구, 선택 및 결단 등 인간의 사회생활과 정신 활동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학문이다. 이러한 학문은 인간의 삶의 방법과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사유 방법 등에 관여한다.”, “인문학은 학문으로서 ‘종(種)으로서의 인간’ 또는 ‘인간종(human species)’을 염두에 둔 ‘(個) 인격체(a person)’를 반성적 성찰 대상 또는 보편화(universalizing)적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가운데 그 감각, 지성, 추론, 상상의 정신세계의 구조와 사변적 작동 방식을 핵심으로 하여, 그 통(通) 시간적·역사적 체험, 예술적·문화적 표현, 종교적·미학적 상상 그리고 공(共) 시간적·사회적인 도덕규범의 실험과 기획을 학문적 과제로 한다”와 같은 답변이 그 예다.

■ 인문학을 문사철을 토대로 삼은 학술 일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 관점도 제시되었다. “인문학의 본령은 인문학의 기본 바탕을 이루는 문사철의 튼실한 토양을 바탕으로 한 우주의 못 존재에 대한 가치와 그것들의 관계를 넓고 깊게, 웅숭깊게 탐구하는 것이며, 아울러 이론적 실천과 실천적 이론을 함께 천착하는 것이다.”, “인문학의 학문적 탐구분야로는, 철학(논리학, 비판적·창의적 사고, 변증론 및 의사소통론, 형이상학 및 존재론, 인식론, 윤리학, 가치론 나아가 각종 분과철학들과 각 철학사), 고전학 및 문헌학(전前현대 및 현대의 동·서양 고전들), 문학 및 문예창작학, 역사학, 언어학(자연언어 및 일반언어학), 종교학, 예술학(음악(사)학, 미술(사)학, 영화, 연극 및 무용 소재의 공연예술학 등), 문화연구, 문화기획 등을 들 수 있다.” 등이 그 예이다.

■ 인문학을 기존의 한국사회에서 이해해오던 개념보다 더욱 확장하여 이해해야 한다는 관점도 제시되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답변이 그것이다. “오늘날에는 각종 학문이 분화되고 또 더 정교하게 나뉘거나 어울려 인문학이 간여할 수 있는 대상과 소재도 훨씬 더 다양해졌다. 가령 AI나 XR이라는 영역도 첨단 기술이 가능케 한, 그래서 자연과학이나 공학이 중심이 되는 연구 분야이기도 하지만, 인간 활동 전반의 외연이 확장된 것이기에 인문학 역시도 그 적용 분야를 넓혀가고 있다. 아울러 인간의 의미 내포도 한결 더 분화하여 인간의 정체성 문제는 생식과 성애의 영역에서도 그 논의가 한층 더 복잡해지고 있다. 그만큼 여전히 인문학 역시도 역동적으로 그 탐구 대상을 다각화, 다양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인문학의 본령은 더욱더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인문학을 학문이 아닌 교육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인문학은 학문 연구 단위가 아니라 교육 단위이다. 인문학을 연구 혹은 학술의 집합으로 보는 현재의 관행이

적절한지부터 먼저 묻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인문학은 ‘핵심 공통 역량’의 교육 활동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요컨대 인문학은 ‘학문 연구’ 분류 단위가 아니라 ‘교육’ 단위로 이해되어야 한다.”가 그것이다.

□ 인문주의

○ 인문주의(humanism)는 중세의 신본주의(divinitas)에 맞서 인본주의(humanitas)를 기치로 내건 르네상스 인문학자들의 학술 운동이었다. 이 운동의 특징은 이성과 합리성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이성의 중요성을 명시적으로 표방한 대표적인 인물이 르네상스 인문학자인 로렌조 발라(Lorenzo Valla, 1407-1457년)였다. 그는 『신약성경 주해서(In Annotationes Novi Testamenti)』를 통해서 중세의 신학 전통을 비판했는데, 에라스무스의 *Novum Instrumentum*이 출판될 수 있는 것도 실은 발라의 『라틴어 신약 성경의 해석을 위한 주석서』 덕분이었다. 발라가 이 책을 저술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다. 비잔티움 제국의 몰락(1453년)을 직감한 콘스탄티노플의 추기경 벤티사리온(John Bessarion, 1403-1472년)이 약 800책 분량의 그리스어 필사본을 베니치아로 가지고 들어온 시기는 1427년 이전이다. 이렇게 방대한 양의 필사본이 한꺼번에 서유럽으로 유입된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 가운데에는 『신약성경』 필사본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베네치아에서 대략 1448년 즈음에 어찌 보면 사소한 논쟁이 벌어진다. 논쟁인 즉 히에로니무스(Hieronymus, 347-420년)의 라틴어 번역 성경 *Biblia Sacra Vulgata*의 문장에 나오는 단어 하나를 지우느냐 마느냐를 놓고서 벌인 다툼이었다. 번역 원문에서 문제의 단어를 지워야 한다는 주장과 주어진 전통을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맞선다. 후자의 입장을 고집한 쪽이 가톨릭 사제들이고, 전자를 주장한 이가 로렌조 발라였다. 논쟁은 발라의 승리로 돌아간다. 그리스어 『신약성경』이 그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공방이 격화되자, 발라는 그리스어 필사본을 전거로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랐다는 것이다. 발라는 자신의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당시 그리스어 필사본을 가지고 있었던 벤티사리온 추기경은 입을 굳게 닫아 버린다. 여러 면에서 상황이 불리했음에도 발라는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는다. 다음은 발라가 한 말이다. “도대체 어떤 필사자(筆寫者)가 이성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단 말인가?(an melior ullus auctor est quam ratio?)” 인용은 예수가 하느님의 독생자라 할지라도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는 한, 문법에는 맞는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온 말이다. 이는 또한 전승과 번역 과정에서 잘못된 오류는 인간의 상식과 이성에 의거해서 고칠 수 있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이 선언을 기치로 삼아 발라는 신앙이 아니라 이성의 길을 선택한다. 단적으로 서양 역사에서 신앙과 이성

이 갈라서는 역사적 순간인 셈이다. 이 순간을 상징하는 책이 발라의 『라틴어 신약 성경의 해석을 위한 주석서(Annotationes in Latinam Novi Testamenti interpretationem)』인데, 발라의 이성주의는 이후 넓게는 서양 역사에서 좁게는 문헌학사에서 때 고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1516년에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1469-1536년)가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편집할 때에도 가장 큰 영향을 준 힘이 바로 발라의 이성주의였다. 물론 발라와는 달리 에라스무스는 진리와 신앙은 상호 적대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 관계이고 상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를 방증하는 책이 『신약성경 주해서(In Annotationes Novi Testamenti)』이다. 중세의 상황을 잠시만 생각해 보면, 신앙과 진리의 관계는 종속적이었다. 그러나 에라스무스에 오면 이제 신앙과 이성이 동반자 관계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약성경 주해서(In Annotationes Novi Testamenti)』가 가지는 학술적 가치와 역사적인 의의는 매우 높다. *Novum Instrumentum* 출판 이후, 에라스무스는 수많은 비판에 직면했다. 이 때문에 그는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그의 시도는 역사적 패배로 종결되지 않았다. 앞에서 소개했듯이, 대표적으로 루터(M. Luther, 1483-1546년)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에라스무스의 『신약성경 주해서』를 기초본으로 참조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주지하시다시피 서양 근세가 열리는 전주곡이자, 종교 개혁과 시민 혁명, 나아가 산업 혁명으로 이어지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러한 일련의 역사적 전환의 기저에서 바로 로렌조 발라의 이성주의와 에라스무스의 개혁 정신이 작동하고 있다 하겠다. 어찌 보면 발라의 이성주의는 아주 사소한 표현 하나 때문에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표현 문제가 아니었다. 이 사소한 표현 문제가 성경 해석의 갈래를 나누었고, 이 갈라짐은 중국에는 서양사를 뒤흔들었고 오늘날 현대 사회의 모습을 결정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뿌리는,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의 인문학에서 발견된다. 물론 그리스 인문학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지만, 예컨대 로마 공화국을 위해서 키케로는 혈연 중심의 종족의 국가에서 요청되는 인륜이 아니라 의무와 권리의 계약 조건을 바탕으로 평등하고 동등한 시민들의 언어와 이성에 기반을 둔 의사 소통과 합리적인 이해와 상식을 강조했다. 그는 말한다. “인간 사회와 결합은 다음과 같을 때 가장 잘 이루어지고 유지된다. 즉 어떤 사람이 일과 사람들의 관계망 속에서 하는 역할과 몫에 따라, 즉 그 일과 조직에 참여와 기여를 하는 정도에 따라, [자신이 행한 바에] 대한 좋음(대가와 이익)이 가장 많이 주어질 때이다. 그러나 인간 사회와 공동체의 자연적 본성과 원리 탐구는 더 높은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원칙은 인간이라는 종을 보편적 차원에서 묶는 연대(societate)에서 구별되고, 이 연대라는 사슬

(vinculum)은 이성(ratio)이고 언어(oratio)이기 때문이다. 이성 혹은 합리가 뒷받침하는 언어는 문제끼리를 증명하고 명백하게 하고(docendo), 교육하고(discendo), 의사소통 하며(communicando), 묻고 따지면서 토론하게 하고(disceptando), 판단하게 하여(iudicando) 사람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서로 묶고 연결시키는 바, 이는 자연본성이 인간에게 부여한 바의 어떤 사회성(societas) 때문에 가능하다. 사실 어떤 인간도 들짐승의 본성과 크게 차이나는 않는다. 때때로 말이나 사자도 용기를 가지고 있다고 종종 인정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짐승들이 정의(iustitia), 평등(aequitas), 선(bonitas)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들짐승들은 이성과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굳이 아리스토텔레스나 키케로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인간이라는 종은 외적으로 사회성(societas)이라는 것으로 정의되고, 이 사회성이라는 것을 방법론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이 이성과 언어이다. 이것들의 구체적인 행위들이 토론하고, 증명하고, 설득하고, 따지는 인문학임을 굳이 다시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한 사회를 통합하고 소위 ‘화합’으로 이끄는 것은 다른 아닌 합리를 기반으로 한 토론과 논의가 가능한, 다시 말해 납득할 만한 근거들이 제시되었을 때, 그것들이 유통될 수 있는 의사소통 체계 구축이라는 것이다. 정의(iustitia), 평등(aequitas), 선(bonitas) 등의 개념들도 이 의사소통 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가치와 위상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의사소통 체계를 바탕으로 로마 국가는 시민들의 공동체로 성립할 수 있었다.

○ 인문주의는 시민들의 열린 인식과 개방적인 태도를 중시했다. 이를 위해서 키케로는 시민들이 상식과 양심에 입각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 활동과 언어 활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수사학적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또한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소위 음모론과 진영론을 극복하는 한 방안을 활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키케로가 “양방향으로 말하기(in utramque partem dicere)” 연습이 그것이다. 키케로는 말한다. “그러자 크랏수스가 입을 열었다네. ‘내가 보기에 자네는, 안토니우스여, 연설가를 어떤 기술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 분명하네. 자네가 참으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자신이 없네. 자네는 반박을 할 때에 늘 애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눈에 부시도록 빛나는 방식이네. 이와 관련해서 자네를 능가할 자는 그 어느 누구도 없다네. 사실 이 능력을 연마하는 것이 연설가의 고유한 소임이라 하겠네. 하지만 이를 연마하는 일은 이미 철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 되었다네. 특히 저 철학자들이 애호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았는데, 어떤 주제가 주어지든지 간에 그들은 양방향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해서 논의를 아주 풍부하게 이끌어 가곤 했다네.’”³¹⁾ “철학자들이 애호하는 방

식”은 “어떤 얇이든 그것은 찬성 논증과 반대 논증을 거치는”³²⁾ 말하기 훈련을 말한다. 키케로는 이를 정치가의 덕목으로 강력하게 추천한다. 국가의 지도자는 진영의 지도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공통 지도자로서 배분 정의와 교환 정의의 양쪽의 관점에서 국가의 일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키케로는 양방향으로 바라보고, 양 방향으로 말하는 방식을 연습할 것을 권한다. 어떤 주제이든, 어떤 물음이든, 찬성이든 반대이든, 양 측면에서 검토하고 거기에서 사실과 진실에 가능한 한 가까운 것을 찾아내는 능력은 특히 정치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치의 세계가 사실과 진실에 가까운 것을 놓고 다투는, 즉 필연적인 지식의 강제가 아닌 개연적인 토론을 허용하는 공간인 한, 이 양 방향으로 살펴보는 능력이 정치가의 필수적인 자질임은 당연하다.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개연적이고, 설령 그것들을 지식으로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사태 자체는 지식을 넘어서는 복합적인 우연 조건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말이다. 삶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행동을 개연성에 입각한 타당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접근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키케로가 말하는 “양 방향으로 말하는” 방식은 인식의 개방성을 연습하는 좋은 방도였다. 특히 현실 정치에서 “양 방향으로 말하기”가 중요함은 굳이 다시 강조할 필요는 없다. 정치 세계가 기본적으로 진영 전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편목 인식과 음모론의 유혹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는 현실 정치가들에게 “양 방향 입 머리” 능력은 확실하게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투스가 키케로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이것이었을 것이다. 시민들이 합리적 이성으로 보편의 논리를 연습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제국의 확장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나도 로마 시민이다(Civis Romanus sum)”라고 외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보편의 논리에 기댄 주장이었다.

○ 인문주의(humanism)의 특징은 진리를 향한 용기를 전면에 내세운다는 점에서 발견된다. 호라티우스(Quintus Horatius Flaccus, 65-8년 BCE)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친구에게 “철학(philosophia)”의 공부를 권하기 위해서였다. 호라티우스의 말 중 특히 “지혜를 가져라”에 눈길이 가는데, 시인에게 지혜는 한마디로 세상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서 내면적인 통찰과 성숙을 위해 노력하는 수련(praemeditatio, 修鍊)이었다. 참고로 헬레니즘시대에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은둔 자적하는 현자(sapiens)에 가까운 존재가 되기를 추구하는 것이 유행했다. 이 존재는 세상의 번잡함에 마음을 팔지 않고 자연과 우주와의 은밀한 감응과 조화를 누릴 줄 아는 인간형에 속한다. 하지만 아무나 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현자가 되는 것

31) 키케로, 『연설가에 대하여』 1권 263절.

32) 키케로, 『아카데미카』 2권 60절.

자체가 일종의 도전이다. 이것이 호라티우스가 “용기”(aude)를 강조하는 이유였다. 한데 문제는 정작 기독교가 세속 권력까지 장악하고 나서부터였다. 자연과 우주와의 소통은 이제 특정 훈련과 교육 과정(initio)을 받은 사제 집단만의 고유 권한으로 축소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계시에 의한 은총(gratia)이 아닌 자연본성(natura)에 의한 통찰과 깨달음은 종종 이단 혹은 미신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년)는 『계몽이란 무엇인가』(1784)의 첫 문단에서 시인의 “sapere aude(용맹하게 알고 하라)”를 인용한다. 이는 “용기를 내어 지혜를 가져라”고 칸트 스스로에게 한 소리다. 그가 활동하던 시대는 오랜 세월 동안 세속의 권력을 향유했던 성직자들과 세속의 계몽주의자 사이에 치열한 사상 투쟁이 벌어졌던 시기였기에, 아닌 게 아니라 기독교가 강조하는 “은총(gratia)”이 아닌 “자연본성(natura)”에서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했던 철학자가 칸트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어쩌면 “지혜”가 아닌 “용기”였을 것이다. 지혜의 경우, 자연본성(natura)에서 새로운 길을 찾으려 했던 이가 칸트가 처음은 아니었다. 이 길은 이미 라이프니츠(Gottfried Wilhelm Leibniz, 1646-1716년)나 볼프(Christian Wolff, 1679-1754년), 프랑스의 계몽사상가들이 이미 그 길을 찾아내어 다녔던 곳이기 때문이다.

○ 인문주의는 지성주의를 표방한다. 이는 플라톤 이래로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년)에 이르기까지 서양 지성계를 관통한 전통이었다. 베이컨이 일갈한 “종족의 우상(The idols of the tribe), 동굴의 우상(The idols of the cave), 시장의 우상(The idols of the market), 극장의 우상(The idols of the theater)”과 벌인 전쟁의 최전선에서 일체의 반(反)지성주의와 맞서 싸운 정신이 인문주의였다. 하나의 경험, 하나의 생각, 하나의 믿음, 하나의 목적을 준거 저울로 놓고 모든 것을 달며 재고 계산하며 평가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것이 반지성주의의 특징이다. 특정 경험, 특정 정보, 특정 이념, 특정 이해관계에 얽히거나 사로잡힌 편목의 명령을 따르는 행태 일반이 반지성주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반지성주의에 맞서는 인문주의는 공자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함이 곧 아는 것”³³⁾이라고 말할 때 성립하는 메타 지식(Meta-Knowledge)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특정 사실에 대한 앎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앎 일반에 대한 자기 인식을 추구하는 인문주의 전통은 소크라테스에게서도 확인된다. 앎에 대한 그의 입장으로 알려진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³⁴⁾도 실은 지성이 구체적인 개별 지식에 대해서 메타 층위에서 활동하는 인문주의의 특징이다. 지적 활동에 대한 지성의 비판

33) 知之爲知之，不知爲不知，是知。-『논어』「위정(爲政)」.

34)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 『유명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 2권 32장 : εἰδέναι μὲν μηδὲν πλὴν αὐτὸ τὸ οὔτο εἰδέναι

적인 인식과 자각이 없는 것에 맞서, 지식과 지적 능력을 특정 목적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인식하고 사용하는 행태 일반에 맞서 싸워 온 전통이 인문주의의 역사를 구성한다.

1.3.2. 경세, 경세적 인문

□ 경세

○ ‘경세(經世)’는 축자적으로는 “세상을 경영하다”는 뜻이다. 다만 전근대시기 한자권에서 이 표현은 주로 ‘경세제민(經世濟民)’ 내지 ‘경국제세(經國濟世)’의 축약형이나 ‘경세치용(經世致用)’의 축약형으로 이해되고 사용되어 왔다.

○ ‘경세제민’은 “세상을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하다”는 뜻이고, ‘경국제세’는 “나라를 경영하고 세상을 구제하다”는 뜻으로, 둘 다 ‘경제(經濟)’라고 줄여 쓰기도 한다. ‘경세치용’은 “세상을 경영하여 실용을 일구어내다”는 뜻으로, ‘경세’로 줄여서 이러한 뜻을 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줄이지 않고 씀으로써 이러한 뜻을 명확하게 드러내곤 한다.

○ “세상을 경영하다”는 뜻풀이에서 ‘세상’은 넓게는 구체적으로는 천하(天下)부터 좁게는 국가, 사회를 가리킨다. 후술하겠지만 수기(修己, 자신을 수양하다)와 치인(治人, 세상을 다스리다)의 되먹임구조를 감안하면 세상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 ‘경영하다’는 것에는 ‘구제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령 ‘다다’, ‘다스리다’, ‘운영하다’, ‘통치하다’ 등의 동사로 바꾸어 쓸 수도 있다.

○ 우리 연구에서의 경세는 경세제민 내지 경국제세의 축약형으로서의 경세이다. 곧 “국가사회 내지 천하를 경영하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 경세적 인문

○ 현대 한국사회에서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면, 인문학은 ‘출세(出世, 세간으로부터 벗어나다)’ 지향의 인문학과 ‘입세(入世, 세간에 개입하다)’의 지향으로 나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한국사회는 일제강점기와 분단체제, 군부독재, 족벌언론, 재벌기업체제 등을 경험하면서 출세 지향적, 달리 표현하면 ‘탈정치화’된 인문학만을 인문학의 본령이자 참된 인문학으로 여기는 관점이 넓고도 깊이 자리 잡았다. 흔히 ‘순수 학문’의 이름 아래 분과학문 중 하나라는 외적 형식을 띤 인문학이 바로 그것이다. 그 반대급부로 입세 지향적 인문학에는 세속적 욕망이 개입된, 그렇기에 ‘순수하지 못한’, ‘오염된’ 인문학이라는 인식이 덧씌워졌다.

○ 우리 연구에서의 ‘경세적 인문’은 넓게는 ‘경세제민’ 내지 ‘경국제세’, 좁게는 ‘경세치용’의 구현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거나 그것의 실현에 궁극적 가치와 비중을 부여하는 관점에서 비롯

된 인문학 관점을 가리킨다. 이는 ‘출세 지향의 인문학 대 입세 지향의 인문학’ 같은 지난 시절 한국사회에 켜켜이 깔려 이제는 당연하다고까지 여겨지는 근거 박약한 대립 구도와 무관하다. 후술하겠지만 인문학의 입세 지향과 출세 지향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고 강화해주는 관계이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우월하다거나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 연구에서는 기존의 ‘순수학문으로서의 인문학’은 ‘순수 지향형/지향적 인문학’이라고 칭하고, 경세적 인문을 핵심으로 하는 인문학은 ‘경세 지향형/지향적 인문학’으로 칭하기로 한다.

○ 한자권에서 경세는 기본적으로 유가(儒家)의 주요 이념이고, 유가에서의 경세는 기본적으로 “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로 대변되는 ‘다스려진 상태’를 지향한다. 이는 “지어지선(止於至善, 지극한 선함에 머물다)”³⁵⁾라는 궁극적 지향을 국가사회 차원에서 구현한 것으로, 지극한 선함에 머물기 위해서는, 곧 지극한 선함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간단없는 다스림이 필요하다. 이때 다스림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이자 좋은 것은 계속 지속되게 하는 활동이다. 이 점에서 경세는 기본적으로 현실 개선, 혁신을 지향한다. 따라서 경세적 인문은 우리 사회가 디지털대전환으로 대변되는 근본적 변이에 놓여 있음을 감안할 때 지금 한국사회에 더욱더 요긴하고 적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세적 인문을 인문정책 거버넌스 구축의 이론적 근거로 제시하는 까닭이다.

1.3.3. 인문정책, 인문정책 거버넌스

□ 인문정책

○ 인문정책은 축자적으로는 인문에 대한 연구 및 교육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집행하며 그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갱신하는 것과 관련한 제반 정책을 말한다. 과학기술정책이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 일반을 가리키듯이 인문정책은 인문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 일반을 가리킨다. 다만 인문의 개념을 광의로 잡으면 과학기술 또한 인문에 포함되므로, ‘인문정책’이라고 할 때는 인문학·사회과학 등의 이른바 ‘문과계열’, 자연과학·공학 등 이른바 ‘이과계열’의 이론 분야 및 예술학·체육학 등의 문화학 분야를 포괄하는 ‘기초학술’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 일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정한다. 여기서 학술은 후술하겠지만 학문 자체와 그와 연관된 활동 일반을 가리킨다.

○ 인문정책의 두 축은 기초학술 기반 교육정책과 학술정책이다. 기초학술 교육정책은 초·

35) 『대학(大學)』.

중·고등교육과정의 기초학술 기반 교육정책 일반을 가리키며, 기초학술 학술정책은 기초학술의 진흥과 평가, 조절 관련 제반 정책을 가리킨다.

○ 우리 연구에서의 인문정책은 특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과 동등하게 이루어지는 기초학술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을 가리키기도 한다. 곧 기초학술을 국가사회 운영의 기축으로 삼아 이의 진흥과 조절을 위한 정책을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는 이러한 정책 실현에 기본으로 요구되는 법적·제도적·재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포함된다. 한국은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기초학술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이러한 차원과 목표 하에 시행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사회가 수립해야 하는 인문정책에는 기초학술을 국가사회 운영의 기축으로 삼는다는 정책 이념을 헌법을 위시한 관련 법령에 반영함으로써 인문정책의 법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 이러한 정책 이념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행정기관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정부가 지금까지 시행해온 기초학술 진흥을 위한 제한적·국부적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편하고 재정립하는 것 또한 응당 인문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 국가가 기초학술을 국가사회 운영의 기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국가의 발전과 성숙, 진보를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 같은 국가행위가 인문을 기초로 삼음을 뜻한다. 인문학을 기초학술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세상 통념의 영향 아래 분과학문으로서의 인문학을 기초로 삼는다는 것이 아니다. 한국사회의 통념에 의거하면 인문학은 국가사회와 직접적, 즉시적, 구체적 연계 없이 순수 학술적 가치를 추구해야 참된 인문학이라는 관념이 널리 퍼져 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인문학은 존재와 행위의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사회 차원의 인문정책은 결코 그러하지 않고, 그래서 안 된다. 국가사회 차원에서의 인문정책은 인문학이 아니라 인문을 기초로 수립되고 집행되며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연구에서 ‘인문학정책’이 아닌 ‘인문정책’이라고 명명한 이유이다.

○ 기초학술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라고 하여 인문정책이 반드시 정부 주도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학계와 시민사회 등도 국가 차원에서 구현되는 기초학술 생태계의 어엿한 행위자이므로 이들의 역할과 비중을 정부와 대등하게 또는 우월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곧 국가 일변도의 인문정책 실현이 아니라 정부는 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학계와 시민사회가 자율성을 기반으로 정책 실현의 주체가 되는 형태가 인문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 인문정책은 국가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규모와 위상 등이 설정되고, 이것이 법령과 제도 등으로 구현된다. 이를테면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입국’이라는 표

어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 세기 70년대부터 과학기술을 국가발전의 기축으로 삼아 이에 정책적으로 대응하여 왔다. 그 결과 과학기술진흥은 국가의 주요 책무로 헌법에 규정되었고, 이의 실현을 위한 행정기관이 대통령부터 관련 부서에 이르기까지 구축되었으며, 국가예산이 안정적으로 책정되어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었다. 우리 연구에서의 인문정책은, 선진국으로서의 한국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 갱신하여 가기 위해서는 ‘과학흥국(科學興國, 과학기술로 국가의 번영을 창출하다)’와 “인문을 기반으로 국가를 경영하다”는 ‘인문경국(人文經國)’의 두 날개가 필요하다라는 판단 아래 인문경국의 실현을 기본 목표로 삼는다.

□ 인문정책 거버넌스

○ 인문정책 거버넌스는 인문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 등에 필요한 법적 토대와 재정 체계 및 관련 학계, 교육계, 정부(중앙, 지자체)의 관련 행정 조직, 시민사회, 언론사업·출판사업·문화산업 등의 관련 산업 분야와 같은 행위자로 구성된다.

○ 인문정책 거버넌스는 그 동안 분리되어 운영되어온 기초학술 관련 교육생태계와 학술생태계의 통합을 기초로 구축된다. 이는 이를테면 인문학의 경우 동서양 공히 교육과 연구가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온 역사 전통의 복원이며, 지식기반 사회·평생고등학습 사회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오늘날 문명조건에 부응하는 조치이다.

○ 정부 차원에서는 인문정책의 수립과 집행, 평가, 갱신 등에 필요한 법적·재정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들을 기반으로 인문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학계와 시민사회는 정부와 대등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주도적 위상을 지니고 이 모든 과정에 주체로서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계의 과총, 여성과총과 같이 학계 및 기초학술과 연동되어 있는 시민사회 등 민간을 대표하는 조직의 건설이 필요하다. 인문정책 거버넌스는 이런 점에서 한 국가의 기초학술 생태계를 기반으로 구축된다고 할 수 있다.

○ 국가와 인문학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비판적 관계이다. 이는 전근대시기 유학은 기본적으로 경세적이었고, 그러한 유학은 기본적으로 현실 일신(日新)을 목적으로 삼아온 데서 확인되듯이 혁신 지향적이다. 또한 자기 자신뿐 아니라 현실 사회의 일신을 기본적으로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경세 지향적이다. 곧 국가도 기본적으로 일신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문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면 이로 인해 인문학이 국가에 종속되고 국가의 충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은 오류이고 근거 없는 왜곡이다. 개인 차원부터 국가, 천하 차원에 이르기까지 간단없는 일신을 지향했던 유가의 이념을 차치하더라도, 인문정책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 구현하고자 함은 적어도 공공재로서의 지식과 지혜이고 성숙한 인문사회이며 선도적이고

보편적인 정신과 문화이기 때문이다. 이의 지속적 실현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혁신을 해가야 함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분명하게 일러주는 상식이다.

■ 물론 인문정책 거버넌스가 구축되면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고, 또 얻기 위하여 정부나 정권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기는’ 학자가 더욱 많이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인문학자의 정신과 태도의 문제이지 인문정책 거버넌스 구축과 그 운영의 직접적 소치는 아니다.³⁶⁾ 가령 지금처럼 국가가 순수 지향형 인문학을 지원하고 있어도 정부나 정권의 이해관계를 자발적으로 우선 고려하는, 상아탑이란 울타리의 보호 제도권 인문학자라는 권위에 안주하는 그러한 ‘자기 검열형 탈정치화’를 추구해온 인문학자는 결코 적지 않았고 현재도 그러하다. 결국 국가와 인문학자의 관계는 태도, 정신 차원의 문제이지 결코 순수 지향형 인문학을 하느냐, 경세 지향형 인문학을 하느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이 아닌 것이다.

■ 국가와 대학과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다. 이들은 무엇을 하는가라는 차원에서 구별되기에, 다시 말해 대학은 순수 지향적이든 경세 지향적이든 인문학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고, 국가는 그러한 활동의 소산을 국가 운영의 자원, 동력 차원에서 활용하는 활동과 그러한 자산의 수준 유지와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해 지원하는 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다. 따라서 이 둘의 관계가 예컨대 대학에서 순수 지향적 연구와 교육을 주로 한다고 가까워진다고거나 비판적 거리가 줄어들고 경세 지향적 연구와 교육을 주로 한다고 하여 그 역의 양상이 필연적으로 벌어진다고는 할 수 없다. 이 또한 무엇을 하든 인문학자가 의도적으로 또는 결과적으로 취하는 정신과 태도에 의해 결정될 뿐이다.

○ 21세기 전환기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거버넌스란 표현이 널리 쓰이기 시작하였다. 사전적으로는 관리나 통치, 구체적 실례로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내지 대학의 관리방식 등을 가리키던 거버넌스는 지금은 전통적 ‘거버먼트(government)’와는 다른, 가령 민간부문처럼 국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 간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평가한다는 관념을 기본값으로 지니고 있다.³⁷⁾ 물론 현실적으로 전통적 정부와 거버넌스가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양상을 가리킨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연구진이 인문정책 ‘거버넌스’라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로는 적어도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 하나는 거버넌스는 ‘협력적 통치’라고 번역되는 예에서 목도 가능하듯이, 기존의 거버먼트에 비해 공적, 사적 행위자 간 협업 내지 협치를 기본 속성이자 기반으로 국가의 정책 실현

36) 우리 연구진이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된 근거는 이 글의 〈2.2.1. 한국 인문학의 현주소〉중 ‘연구자의 태도와 정신’ 부분 참조.

37) 이에 대하여는 이명석(2022), “거버넌스 이론화: 기각된 또 하나의 대안?”(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참조. 또한 이명석의 거버넌스 관련 여타의 논문도 참조할 만하다.

을 추동해간다는 점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국가는 결코 정부나 집권 정당, 특정 세력만의 것이 될 수 없기에 국가의 어엿한 구성원이자 행위자 간 협치는 필수적이다. 곧 국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을 환기하고 실현하는 데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더욱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 다른 하나는 궁극적으로 거버넌스는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곧 거버넌스는 ‘자기 조직적 거버넌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 조직적 거버넌스는 정책 목표의 능률적 실현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설계된 거버넌트에 행위자들 간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으로부터 창발된 구조가 결합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이다.³⁸⁾

□ 인문정책 거버넌스는 인문학과 경제가 회통(會通)하는 장이다.

○ 인문은 순수 지향적 인문학과 경제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본래 순수 지향적 인문학과 경제는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인문학이 분과학문화 되고 제도권 중심으로 전유되면서 탈정치화가 이룬 결과 경제와 분리되게 되었다. 인문은 이렇게 분리된 둘 사이를 다시 연동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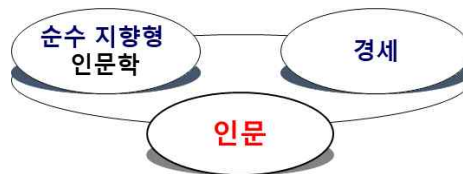


그림 1. 인문의 역할

○ 인문정책 거버넌스는 인문과 경제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곧 관련 학계의 연구와 교육의 성과를 경제와 구조적이고 체계적, 제도적으로 연결하는 매개자이자 장이다.



그림 2. 인문정책 거버넌스의 역할

38) 이에 대하여는 최태현(2014),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의 재고찰 : 설계와 창발 개념의 통합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52권 2호) 참조.

□ 인문정책 거버넌스의 방향성 : 우리 연구진이 수행한 전문가그룹 서면 인터뷰의 답변 가운데는 앞으로 구축해갈 인문정책 거버넌스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이 있었다. 구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문학이 내적으로는 21세기의 변화된 지평에서 새롭게 등장한 의제들에 스스로를 개방하고, 타 학문과 융합하도록 지원함.

○ 외적으로는 사회적 요청에 대응하여 인문정책과 여타 정책 사이의 절합—예를 들면, ‘인문-경제’, ‘인문-과학기술’, ‘인문-노동/사회통합’ 등과—을 비롯하여,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소의 인문학 집단 지원, 정부-기업-민간을 잇는 인문학 생태계 실현을 정책적으로 추진.

○ 정부정책과 사회정책의 수립에 ‘인문학’적 관점과 방향을 확산함으로써 경제 중심 관점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기여.

○ 중등 교육 및 대학 교양교육에서 인문학이 중심을 차지하는 자유학예교육의 강화.



2

인문 개념의 재구축 필요성



- 2.1. 인문을 둘러싼 문명조건의 근원적 변이
 - 2.1.1. 문명조건의 심층적 · 근본적 변이
 - 2.1.2. 고전적 인문과 디지털문명 사이의 불화
- 2.2. 학문의 위기 확산 및 심화
 - 2.2.1. 한국 인문학의 현주소
 - 2.2.2. 인문학의 대학에서의 퇴출, 대학의 위기 심화
 - 2.2.3. 학문의 위기, 인문의 위기, 인간의 위기
- 2.3. 선진성을 구현하지 못한 선진국, 한국
 - 2.3.1. 초갈등사회, 소모사회 한국
 - 2.3.2. ‘인문복지’의 미비, 높지 않은 인문적 성숙도
 - 2.3.3. 선도국가, 보편문명국가라고 할 수 없는 한국

2. 인문 개념의 재구축 필요성

2.1. 인문을 둘러싼 문명조건의 근원적 변이

2.1.1. 문명조건의 심층적·근본적 변이

□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근자의 ‘디지털 대전환’을 두고, 예컨대 ‘4차 산업혁명’ 또는 ‘제2차 기계혁명’이란 조어처럼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 시선은 적지 않다. 반면에 시야를 산업이나 과학기술 차원에서 ‘인간학’으로 옮겨 보면 디지털 대전환·4차 산업혁명 등으로 지시되는 근자의 변화는, 그것이 혁명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사뭇 근본적이고 심층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충분하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다.

○ 이른바 ‘NBIC¹⁾ 기술’의 발달로 ‘100세 시대’는 현실이 되었고 이제 ‘120세 시대’가 운위되고 있다. 생명 연장은 현실이 되었고 죽음의 유보 또는 극복도 넘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는 수명, 다른 말로 연장되는 생명은, 예컨대 인체의 장기를 기계장치 등으로 대체하듯이 “인간+기술/기계”의 형식을 띤다. 생명 연장이 기계의 도움 아래 ‘기술적’으로 실현된다는 말이다. 이는 생명을 ‘자연적’으로 구성된 유기체를 기본단위로 사유하여 온 기존의 세계관을 근본부터 흔든다. 여기에 뇌과학 등의 발달로 인지와 정신 등이 과학적으로 해명되고, 생명공학이라는 용어가 일러주듯이 생명 자체가 공학의 대상이 되어 기술적으로 다뤄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사태는 인간의 생명을 다른 존재에 비해 특권화 해온 기존 관념의 독존적 지위가 해체되는 인식론적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인간+기술/기계’ 형식이 보편화되면, 무엇까지를 또 어디까지를 생명이나 생명현상으로 또 생명체로 봐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아직은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죽음의 유보는 인간이 신적 속성인 불멸성을 일부라도 품었음을 뜻한다. ‘인간+기술/기계’의 방식을 바탕으로 죽음이 유보됨을 ‘인간의 기계화’라고 규정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인간이 신적 속성을 일부라도 실현한 셈이 되기도 한다. 이는 인간이 존재론적 차원에서 근본적 변이를 겪게 됨을 예고해준다.²⁾

○ 2017년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 제로는 바둑 교재나 기보 등 인간의 지식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바둑의 이치를 깨쳤다. 또한 전에는 없던 독창적인 정석을 고안해 내기도 했다. 알파고 제로는 관련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의 신경망에서 출발하여 ‘셀프 바둑’을

1) Nano, Bio, Info, Cogno.

2) 이 단락은 김월희(2017), “포스트휴먼과 죽음—공자, 장자, 도잠, 노신이 죽음을 대했던 태도와 현재적 슬모”(『중국 문학』, 제92집)에서 발췌, 수정 보완하였음.

통해 승률을 높이는 좋은 수를 스스로 터득해갔고, 한 수에 0.4초가 걸리는 초속기 바둑으로 490만 판을 혼자 두는 등, 학습을 시작한 지 36시간 만에 이세돌 9단을 이긴 알파고 리 버전의 실력을 넘어섰다. 그리고 40일 동안 2,900만 판을 혼자 둔 후 당시 세계 랭킹 1위 커제 9단을 3대 0으로 꺾었던 기존 최강 버전 알파고 마스터의 수준도 훌쩍 넘어섰다.³⁾ 이러한 강력하고도 눈부신 성과 때문인지 알파고의 바둑 수에 대한 평가도 사뭇 달라졌다. 이세돌 9단과 대국 시 알파고가 두었던 수에 대하여 ‘이상한 수’라는 반응을 보이던 프로 바둑 기사들이 이제는 알파고의 바둑 수를 앞 다퓰 실전에 적용하고 있다. “이상한 수이다”, “인간이라면 저렇게 두지 않는다”, “바둑 룰에는 맞지 않는다” 유의 평가가 “창의적 수이다” 식으로 바뀌는 데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았다. 이는 인간에게만 고유한 특성이라는, 그렇기에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구현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창의성’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근본부터 흔들었던 일대 사건이다. 창의성은 인간만 지니는 직관과 상상의 힘에서 비롯된다고 여겨왔지만 알파고의 ‘창의적’ 바둑 수는 그러한 관념이 그저 ‘인간 역량 내’에서 가능한 해아림을 기초로 한 판단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창의의 산물’이란 것이 인간의 인지능력으로는 처리 불가능하지만, 자율학습기능을 갖춘 인공지능으로는 너끈히 해아릴 수 있는 거대한 데이터를 계산해낸 결과임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알파고 제로가 강한 이유를 “인간 지식의 한계에 더 이상 속박되지 않은” 데서 찾은 데이비드 실버⁴⁾나, “알파고의 수법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기보를 놓아보면 알파고는 확실히 바둑판을 사람보다 넓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⁵⁾는 바둑프로기사 김지석 9단의 고백은 이를 방증해준다. 그 결과 세계 프로바둑계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으로부터 바둑 수를 배우고 있다.

○ 이는 창의성을 비롯하여 감성, 이성, 자의식, 자율성, 자유의지, 반성적 사유능력(도덕 역량), 자아형성 능력, 암묵지, know-how 영역에 속하는 것 등을 인간에게만 고유한, 그렇기에 ‘디지털화’ 할 수 없다고 여김이 인간의 정보처리 능력 안에서의 판단일 뿐 알파고처럼 그것을 훌쩍 뛰어넘은 범위에서는 꼭 그러하지만은 않음을 잘 보여준다. 이는 비단 바둑 영역의 알파고에서만 목도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챗GPT의 등장으로 인공지능은 이미 ‘평균적 역량’을 지닌 인간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사유해온 일들을 ‘꽤많은 수준’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해냈다. 여기에 기술적 진전을 통해 감성 인지 기술과 감성적 표현 기술,

3) 이상은 “바둑의 도 홀로 깨달은 ‘알파고 제로’ 인간 한계 넘다”(『연합뉴스』, 2017.10.19.)에서 발췌, 재구성.

4)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 딥마인드의 CEO 데미스 허사비스와 소속 연구원 17명은 2018년 과학 학술지 『네이처』에 “인간 지식 없이 바둑을 마스터하기(Mastering the game of Go without human knowledge)”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의 제1저가 3명 중 한 사람이다.

5) 『중앙일보』, 2018.03.09.

도덕 판단 기술과 도덕적 표현 기술, 인간과 구분 안 될 정도의 자연어 구사 능력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인공지능이 개발된다면, 뇌 과학과 관련 의료기술의 진전되어 자율성과 자유의지, 자가 조직 능력 등에 대한 기술적 해명이 진전되고 이것이 인공지능에 결합된다면, 정감이나 감성, 창의력, 통찰력, 상상력 등 ‘인간에게만 있는 고유한 것’들이라 여겨진 것들을 디지털 기반으로 괜찮은 수준으로 구현하는 것은 단지 공상이나 상상에 그치고 마는 일은 아닐 것이다.

○ 아직은 예술적 상상에 국한되지만, 인간다움이 전이된 인공지능은 대개의 경우 기계의 인간 통제나 인간의 기계 노예화 같은 디스토피아적 상황을 펼쳐낸다. 영화 <아이, 로봇>⁶⁾에서 아이작 아시모프가 제시한 로봇 3원칙 중 제1원칙인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위험에 처한 인간을 모른 척해서도 안 된다”에 입각하여 인간을 통제하려는 인공지능 ‘비키’가 잘 말해주듯이 디스토피아적 상황의 전개는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인간의 악한 속성을 전이한 결과가 아니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에게 인간다움만을 이전했는데 이를 전수받은 인공지능은 인간의 악한 속성을 극단적으로 실현하는 상황을 연출한다. 인간다움의 이전이 비인간적 상황을 자아내는 이율배반,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상상인지라 인간을 대체하는 기계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두려움과 불안 등이 투사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른바 ‘인간다움’이란 것이 악함을 논리적으로나 계기적으로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문명화란 명분 아래 행해진 제3세계에 대한 폭력적 통치나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유대인 학살, 과학의 이름으로 자행된 제국주의 일본과 독일의 생체 실험, 평화 실현이란 선한 지향 아래 감행된 미국의 원폭 투하와 이로 인한 수십 만 명의 사망 같은 근대의 역사가 명료하게 말해주듯이 인간다움은 절대적으로 선하다는 인식이 ‘신화’일 수 있기에 그렇다. 만약 인간다움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 신화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적지 않은 SF 영화에 등장하는 포스트 휴먼이 구현하는 인간다움과 인간이 구현하는 그것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을 옹호하기 어려워진다. 곧 포스트 휴먼이 구현하는 인간다움을 인간이 구현하는 그것과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포스트 휴먼이 구현하는 인간다움을 신화, 달리 말해 유의미한 인간다움이 아니라고 한다면 인간의 삶을 유의미한 삶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도 희박해진다. 곧 포스트 휴먼이 구현하는 인간다움을 유의미하지 않다고 하는 순간 인간의 삶도 부정될 수 있다. 이렇게 인간다움을 둘러싼 기존 개념과 사유에 근본적 변이가 추동되고 있다.⁷⁾

6) 원제 “I, Robot”, 알렉스 프로야스 감독, 2004.

7) 이 단락은 김월희(2007), 앞의 논문에서 발췌, 수정 보완하였음.

333333□ 문명은 생물로서의 사람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핵질이다. 그것은 세간(世間), 그러니까 사회에 그 뿌리를 내린 채 그것을 무대 삼아 구현된다. 문명이 뿌리 내리고 피어나는 사회는 물리적 시공간에 기초한다. 곧 문명은 물리적 시공간에 펼쳐진 사회란 세간에서 삶/생명을 영위하는 인간이 내는 제반 활동의 양태이자 소산이다. 따라서 문명조건의 근본적, 심층적 변이를 살펴보고자 한다면 그 토대인 ‘세간(시간-공간-인간의 복합체)’에 대한 탐구를 선행 또는 병행할 필요가 있다.

○ ‘초연결(hyper-connection)’, ‘포스트휴먼(post-human)’이란 표현이 웅변해주듯이 늦어도 21세기 전환기부터는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전 세계적 차원에서 디지털화, 네트워크화가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그 결과 ICT와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 첨단 과학기술이 결코 느리다고 할 수 없는 속도로 발전했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연결이 확장되어 상이한 지역에서 동시적 교류가 가능해졌다. 물리적 시차나 지리적 격절 같은 자연적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상시적·즉시적으로 상호 접속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상세계가 ‘실재화(realize)’ 되고 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항상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고, 사물과 사물 간 통신이 광범위한 범위에서 즉시적·동시적·자동적으로 이뤄지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만물인터넷(IoT) 사회가 펼쳐져 네트워크가 삶과 사회의 조건이자 기반이 되는 ‘디지털-네트워크 세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덕분에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분리된 두 공간에 동시적 참여가 가능해졌고, 종교·이념·지역·문화 등을 넘나들며 다양한 부문 사이에서 방대하고 중층적인 연결과 결합이 생성되고 있으며, 개인이 속해 있다고 할 수 있는 공동체, 이웃이라고 불리는 범위가 전 지구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참여하고 포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확장되었다. 나아가 정보통신기술은 3차원 시공간을 오프라인의 현실보다 더욱 실감나고 생생하게 재현한다. 사람들은 가상공간에서 리얼한 실감을 얻고 ‘디지털 정체성’·‘멀티 페르소나(multi persona)’⁸⁾의 구현이나 가상공간 공동체[virtual community]에의 참여 등을 통해 현실보다 더한 생생함을 체험하곤 한다. 그 결과 가상공간은 현실공간을 효과적으로 압도하거나 아예 대체하고 있으며, 대면(對面, face to face) 접촉의 시대에서 전자 접속(electronic contact)⁹⁾의 시대로 옮겨가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디지털로 재현된 것을 더욱 리얼하다고 인지하게 되는 등 ‘디지털 리얼리티’가 아날로그 시대의 리얼리티를 압도 또는 대체해가고 있다.¹⁰⁾ 아날로그

8) 둘 다 디지털문명의 일상적 구현과 즉시적이고도 실효적으로 연동되어 있는 세계화, 자본주의의 전 세계적 관철 등으로 인해 실현 가능해진 현상을 지시하기 위해 사용된 신조어로, 미래학, 정책지식계·산업지식계 등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이다. ‘디지털 정체성’은 “가상공간과 같은 세컨드 라이프 공간에서 구현해낸 자신의 이차적 정체성”을 가리키고, ‘multi-persona’는 “한 개인이 다양한 정체성을 지니고 활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9) ‘digital contact’, ‘mobile contact’, ‘ubiquitous contact’ 등을 그 구체적 예로 들 수 있다.

10) 무엇이 ‘리얼’한 것인가에 대한 감각과 관념은 역사적·사회적으로 구성되고 학습된다. 곧 사람과 세계를 연결해주

적 세계를 이해하는 능력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디지털 세계를 이해하는 능력[digital literacy]이 삶과 사회의 필수적 역량이 되고 있다.¹¹⁾

○ 이는 삶과 사회의 토대와 이를 둘러싼 제반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시간과 공간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경로와 이를 표현하는 방식, 수단 등도 근본적으로 변이되고 있음을 일러준다. 한마디로, 기존의 물리적 시공간 외로 가상공간이 개인적·사회적 차원 모두에서 유의미한 실존 공간으로 실재화되었음을, 그러니까 ‘가상공간의 삶터화’가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¹²⁾ 가령 온라인 공간에서만 일상 구성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물론 온라인 공간만으로 일상을 구성하는 사람도 분명 오프라인 공간에서 생명을 유지해간다. 그러나 오프라인 공간은 그에게 온라인 공간에서 일상을 영위해가는 존재에게 동력이 제공된다는 점에서만 유의할 뿐이다. 그래서 그는 오프라인에서는 기계와 구분되지 않게 된다. 기계가 오프라인에서 동력을 제공받기만 하면 기술적 공간에서 작동되는, 비유컨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하드웨어가 고장 나거나 낡게 되면 고치거나 온전한 것으로 대체해가며 쓰다가 중국에는 폐기되는 것처럼, 그도 오프라인에서 기계처럼 존재하며 유의미한 삶은 온라인 공간에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 20세기 후반부터 본격화된 세계화는 더는 이상이나 목표가 아니라 기본이자 일상이 되었다. 삶터에서 국제적 이해력[global literacy]이 요청되는 등, 일상 차원에서 관철되고 있는 세계화는 사람과 사회에 대한 기존의 설정과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 지식기반 사회, 초연결-포스트 휴먼 시대가 일상 차원에서 구현되는 토대 위의 세계화는 세계라는 범주가 개인의 실존과 일상을 구성하는 기본값[default]이 되었음만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또한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 국가, 세계가 ‘나’를 중앙으로 하여 파문을 이루는 중심

던 관념들이 바뀌면 리얼리티에 대한 인식도 변화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언급을 참조할 만하다. “중세인에게 우리가 이해하는 물리적 세계는 아무런 현실성이 없는 상징일 뿐이다. 그러나 ‘상징’이라는 용어조차도 오해되고 있다. 우리에게 상징은 시적인 환상을 주관적으로 창조하는 것이고, 중세인에게 우리가 상징이라고 부르는 것은 현실을 정의하는, 객관적으로 살아 있는 유일한 것이다. -이-푸 투안, 구동희·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서울: 대운, 1995), 188쪽. 한편 디지털 리얼리티의 근거에는 ‘물리적 시공간 감각과 對面的 인간 감각의 퇴조’, ‘급속도로 열리는 개인 간, 공동체 간의 관계 밀도와 사회 결속력’, ‘개인의 혈연적·문화적·정치적 정체성과 같은 사회성의 해체 가속화’, ‘파편화·개체화된 삶의 방식의 광범위한 확산과 이에 따른 자신이 속해 있는 혈연적·지연적·국가적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관심도의 현저한 퇴조’, ‘불확실성·불안정성·원자화·파편화 등의 추세에 일상적으로 휘감기는 개인의 증가’ 같은, 아날로그적 리얼리티를 뒷받침해준 근대문명이 만들어낸 ‘근대사회’의 해체 현상에 놓여 있다.

11) 이 단락은 김월희(2013), “인문의 토대 변이와 중국어문학자의 항방”(『중국문학』 제77집)의 1장에서 발췌, 재구성하였음.

12) 그렇다고 기존의 물리적 공간이 더는 삶터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됐다거나 배제됐다는 뜻이 아니다. 물리적 공간과 가상공간은 상호 삼투되면서, 또는 변증법적으로 통일되면서 새로운 형질의 삶터라는 공간을 빚어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실제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원처럼 평면적으로 펼쳐져 있는, 그래서 어디 영역까지를 ‘나’의 일상을 구성하는 실존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비유하자면 개인, 가족, 지역사회, 국가, 세계가 층층이 쌓여 이뤄진 하나의 원통 같은 양태여서, 세계가 ‘나’의 일상이 구성되는 순간부터 실존으로 투입해 들어와 있다. 세계화가 선택이나 목표, 당위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기본이자 출발점이고 현실인 까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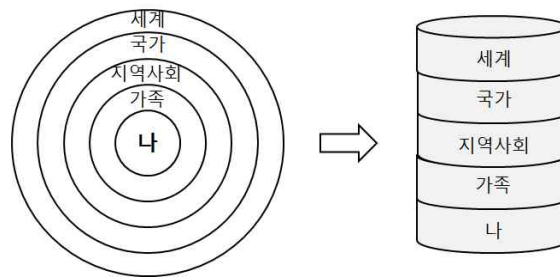


그림 3. 일상의 기본값(default)으로서의 세계화

- 또한 세계화가 이룰테면 권력, 영향력, 이익의 확대 같은 일방향성에 의해 구현되고 작동되는 것처럼, 개체의 삶터가 개체의 의지와 무관하게 세계화에 의해 규정되고 지배될 수 있는 이유기도 하다. 한때 세계화의 유력한 대안처럼 논의되던,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식의 ‘glocalization’도 ‘local’한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도 글로벌한 수준에서 그 가치나 정당성 등이 결정됨을 가리킴¹³⁾이 더욱 실제에 부합한다. 로컬과 글로벌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로컬 차원에서 지니는 고유성이나 특이성 등이 글로벌 차원에서 다양성의 하나로 자리 잡는 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효율과 계산 가능성, 예측 가능성, 통제라는 4가지 지향을 기초로 한 맥도날드사의 경영 전략이 온 세계의 개인부터 조직, 국가 차원에 이르는 사회적 일상을 재편해냈음은, 다시 말해 ‘맥도날드화’ 해냈음은 이를 잘 말해준다.¹⁴⁾ 이러한 사례는 세간의 변동을 디지털 기반 정보통신기술의 진보하고만 연관시켜 사유해서는 안 됨을 말해준다. 맥도날드화의 사례처럼, 중세를 근대로 탈바꿈시킨 자본주의가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 발달에 호응하여 내놓은, 늦어도 21세기 전환기를 거치면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전개된 자본주의의 새 버전인 지식기반 사회도 개개인의 삶터는 물론 그것이 기초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있기에 그렇다. 자본주의라는 체제의 자기혁신과 정보통신기술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반 과학기술의 진보를 같이 봐야 한다는 것이다.

13) 조지 리처(2017), 김종덕·김보영·허남혁 옮김,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서울: 풀빛), 326-333쪽.

14) 전 세계의 맥도날드화와 그 의미 등에 대해서는 조지 리처(2017)의 위의 책 참조.

○ 영국 사회학자 존 어리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는 “누구든지, 어디든지 모빌리티의 네트워크에 직간접적으로 연결”¹⁵⁾되는 사회에서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 ‘모빌리티 네트워크 사회’가 보편적으로 구현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오늘날 사회공간은 미시적 규모에서부터 거시적 규모에 이르기까지 모빌리티를 통해 역동적으로 구성되고 있고, 사람과 기계·이미지·정보·권력·돈·아이디어·위험 요소들이 함께 ‘이동 중’이며, 물리적 이동과 커뮤니케이션 양식 사이에 광범위하고 복잡한 연계들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갱신되면서 전 지구 차원에서 빠른 속도로 연결을 만들고 또 다시 만든다고 보았다.¹⁶⁾ 그렇게 세계의 유동성은 증대되고 제반 연결은 ‘탈(脫) 물질화’ 되는 추세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어리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업무, 가족, 친구 관계의 공간적, 사회적 특성을 각각 분석하면서 이런 관계들이 점점 더 지리적으로 멀어짐과 동시에 네트워크화 한다는 점, 그리고 각 영역의 네트워크들이 상호 중첩되면서 동시에 개인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모빌리티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 공간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고정적 장소가 어떻게 유동적 이동의 공간으로 전환되는가, 이동의 공간 속에서 또 다른 형태의 만남의 장소가 어떻게 생산되는가, 그리고 그러한 장소는 네트워크의 장소 연결적 특성과 장소 기반적 특성을 통해 어떻게 구성되며 네트워크에 대한 연결, 단절 또는 포섭, 배제를 통해 어떻게 파편화되는가 등의 물음¹⁷⁾을 염두에 두고 일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셈이다.

○ 2020년부터 3년여에 걸쳐 겪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유발한 ‘비대면 삶’은 존 어리의 이러한 분석을 한층 보편적 현실로 만들었다. 나이절 스리프트의 ‘이동-공간(movement-space)’ 논의처럼, 모빌리티 사회공간은 곧 지리학에서의 시공간처럼 인간이나 사물이 위치하고 이동하는 고정된 좌표로서의 공간, 곧 데카르트적 절대적 공간이 아니기에 유의미할 수 있었다. 존 어리에 따르면 모빌리티 공간은 마치 베르그송적 시간처럼 공간 그 자체가 움직이는 관계적 공간에 가깝다. 그것은 불변적이고 고정적 존재로서의 공간이 아니라, 인간과 사물(기계) 간 연결과 상호작용을 통해, 그리고 그들의 활동과 작동으로 인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생성으로서의 공간에 해당된다. 이는 구조 지향적, 장소 중심적 사회공간이 흐름 중심으로 탈 장소 지향적으로 변이되고 있다는 조지 리처의 분석¹⁸⁾과도 일치한다. 또한 모빌리티

15) 존 어리(2014), 강현수·이희상 옮김, 『모빌리티』(서울: 아카넷), 574쪽.

16) 존 어리가 제시한 모빌리티 공간은 시간 지리학에서처럼 사람과 사물이 일정한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즉 데카르트적 공간처럼 고정된 절대적 공간이 아니라, 그들의 위치나 관계에 의해 비선형적으로 움직이는, 마치 베르그송적 시간처럼 생성되는 관계적 공간이다. 이는 모빌리티를 이미 주어진 공간 위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보기보다는 공간을 생성하는 다양한 수행 과정으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 가변적이고 역동적 공간 그 자체로 보는 것이다.-존 어리(2014), 위의 책, 583쪽.

17) 존 어리(2014), 위의 책, 582쪽.

네트워크 사회가 이동이 거주의 한 형식으로 변이된 사회공간이며,¹⁹⁾ 그렇기에 연결이 갈수록 관건이 되는 사회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구조, 정주, 고정적 실체, 장소’ 등을 중심으로 문명을 사유해왔던 기존 전통이 ‘연결과 이동, 과정적 실체, 탈 장소’ 등을 기반으로 하는 文도 아우르도록 하는 문명적 압력이 되고 있다.

□ 세간에 대한 이상의 분석은, 사회학에 기존의 ‘사회를 넘어선 사회학’을 요구하고 있듯이 인문학에도 기존의 ‘인간과 사회를 넘어선’ 새로운 인문학을 모색하라는 문명사적 차원에서의 ‘정당한’ 압력이 되고 있다.²⁰⁾ 그런데 인문의 갱신 요구는 세간의 이러한 근본적 변동에서만 기인하고 있지는 않다.

○ 가령 인문이 뿌리내리고 피어나는 영역이 확장되었음을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 세간의 변이는 인간의 변이를 직접적, 유기적으로 추동한다. 세간의 변이를 추동한 과학기술은 인간의 변이에도 주요 원인으로서는 직접적으로 간여하기 때문이다. 상술한 바, 정보통신기술로 인한 시간과 공간의 확장은 인간의 확장을 추동하며, 정보통신기술로 인한 시간, 공간의 속성 변화는 인간의 속성 변화와 긴밀하게 연동된다는 것이다.²¹⁾ 그러한 기술에 힘입어 일상 차원에서 인간의 실존을 구성하는 시간과 공간이 양과 종(種) 차원 모두에서 늘어났을 뿐 아니라 인간 존재의 역량이 시간, 공간적으로 확장²²⁾됐으며, 사회공간에 대해 ‘연결, 이동, 과정적 실체, 탈 장소’ 중심화가 추동됐듯이 인간에게도 유사한 변이가 야기된다는 뜻이다. 예컨대 모빌리티 사회공간서의 인간 존재를 ‘호모 모빌리쿠스’²³⁾라고 새로 규정한 데서 보이듯이, 인간이 ‘이동하는 존재’로 변이됐다는 것이다.

○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확장은 ‘인(人)+기술/기계’의 형식으로 수행됐다. 다만 이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했기에 새로이 나타난 양태는 아니다. 저 옛날부터 인간은 ‘인+기술/기계’였다.²⁴⁾ ‘X’가 ‘+기술/기계’의 양태를 띠면서 비로소 인간이 될 수 있었고, 인간은 그 이후로도

18) 조지 리처(2017), 앞의 책, 319-322쪽.

19) 이는 동적인 이동과 정적이 거주 사이에 존재해온 기존의 이분법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존 어리(2014), 앞의 책, 577쪽.

20) 여기서 넘어서야 할 인간과 사회는 예컨대 4차 산업혁명 이전 시기의 문명 조건에서 형성되고 갱신되어 온 인간과 사회를 가리킨다.

21) 인간의 속성이 변한다고 함은, 생물학적 차원에서 인류라는 종의 본성이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homo politicus]로서 지니게 된 속성이 변한다는 것이다.

22) 이때의 시간, 공간은 절대적 시간(chronos)과 절대적 공간(chora)이 아니라, 상대적 시간(kairos)과 상대적 공간(topos)을 가리킨다. 인간 역량의 증대는 결과적으로 카이로스와 토포스의 확장을 실현한다. 가령 조선시대 지식인의 실존을 구성하던 시간과 공간에 비해 지금 우리의 실존을 구성하는 시간과 공간의 범위는 ‘엄청나게’ 확장됐다는 것이다.

23) 이는 ‘이동전화 같은 모바일 기기를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사용하는 인류’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계속 ‘인+기술/기계’의 존재형식을 띠어왔다고 봄이 인류 역사 전개에 한층 부합되는 해석이다. ‘X’가 기술/기계와 결합될 수 있었기에 인간이 될 수 있었고, 인간도 계속 ‘+기술/기계’의 양태를 선택했기에 인간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일궈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을 ‘인+기술/기계’로 이해하면, ‘기술/기계’ 자리에 자율기술을 장착한 인공지능과 들어오는 것은 전혀 낯선 장면이나 경험은 아니게 된다. 인공지능이 언제 어디서든 통신되는 인터페이스를 신체에 내장하거나 웨어러블 디바이스처럼 바깥에 부착한 후, 이를 인간 자체로 보는 것도 새로운 관점만은 아니게 된다. 인간의 사이보그화²⁵⁾가 아니라 그냥 인간의 확장이라는 것이다.

○ 곧 인간은 인간들 사이[間]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간들 사이에 있었기에 비로소 사회를 이루며 확장을 거듭해왔던 것도 아니었다. 그러한 토대 위에 인간은 자신에 결합되는 기술/기계들 사이에서 일상을 영위했기에 비로소 확장을 거듭할 수 있었다. 이는 문명을 흔히 인문(人文)이라고도 하지만, 그것이 뿌리내리고 피어난 영역이 ‘인간의 세간’으로 국한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또한 문명이라고 할 때 문(文)은 ‘인간+기술/기계’의 양태, 달리 표현하면 ‘인간+기계 혼종체’의 문(文)임을 말해준다. 이런 점에서 문명이 뿌리내리고 피어나는 터전은 처음부터 ‘인간 중심적’ 시공간이 아니었다. 문명을 생산하거나 그것이 존재한다고 여긴 영역이 처음엔 자기 세계인 ‘중화’에서 차츰 야만시하던 ‘이적(夷狄, 오랑캐)’으로 확대되고, 순자(荀子)가 동물과 인간은 기(氣)로 이루어져 있고 생명(生)을 지니고 있으며 앎(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²⁶⁾고 하고, 성리학이 등장하면서 ‘인물성이동론(人物性異同論)’, 곧 사람과 동물의 본성과 같고 다를 것을 철학적으로 사유함으로써 동물로 재차 확대됐던 역사가 이를 잘 말해준다. 이런 맥락에서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이 지구 자체를 포함하여 지구상 모든 생명의 지속을 개인부터 국가, 국제사회가 자기 실존으로 품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제기한 ‘생물권(生物圈)’²⁷⁾, 달리 말해 ‘지구 생명권’도 문명이 생산되고 존재하는 영역으로의 이해가 가능해진다. 경우는 다르지만, 자본주의 체제가 구축되고 보급되면서 법적 인격(法人格)을 부여받은 기업들의 세계

24) 이에 대해서는 김월희(2017), 앞의 논문 1장과 “인간다움의 뿌리는 ‘몸 기술’”(『경향신문』, 2016.09.13.), “벌과 나비가 식물을 번성시키듯 기술은 인문을 진화시켰다”(『경향신문』, 2017.05.27.) 참조.

25) 일반적으로 사이보그라고 하면 인간 신체에 기계 장치를 삽입함으로써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의 영위가 가능해진 존재를 가리킨다. 그러나 사이보그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확충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사람들은 신체 내에 기계 장치를 삽입하지 않았지만, 인간 신체 외부에 설치된 기계와 접속해야 일상의 영위가 가능해진 환경에서 살게 됐다. 이렇게 신체 외부의 기계와 접속하지 않으면 생활하지 못하거나 불편을 겪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양태의 사이보그, ‘21세기형 사이보그’라고 할 수 있다.

26) 水火有氣而無生，草木有生而無知，禽獸有知而無義，人有氣有生有知，亦且有義，故最爲天下貴也。-『순자』 「왕제(王制)」.

27) 관련 논의는 제레미 리프킨(2010), 『공감의 시대』(이경남 역), 733-761쪽, 제레미 리프킨(2012), 『3차 산업혁명』(안진환 역), 27-274쪽, 317-327쪽 등 참조. 생물권은 예컨대 동물을 확대한 인간의 사법처리 시 이념적·윤리적 근거로 활용되는 동물의 생명권, 곧 ‘동물권(動物權)’ 정립에 인식론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

도,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구현되는 자율기술과 이를 장착한 기계[곧 ‘인공 행위자’]로 이루어진 기술적 공간인 ‘정보 생태 공간’²⁸⁾, 그리고 ‘사람과 사회, 지구와 자연, 기계와 기술적 공간’이 생태계처럼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정보권(情報圈, infosphere)’²⁹⁾ 등도 마찬가지로 문명이 생산되고 존재하는 영역으로의 이해가 가능해진다.

○ 한편 문명이 생성되고 존재하는 세간의 변이는 필연적으로 그와 연관된 윤리학의 변이를 촉발한다. 아직은 SF 영화 등 예술적 상상이기는 하지만, 인간보다 인간다움이 더욱 온전하게 구현된 ‘휴머노이드’, ‘로보 사피엔스’ 등으로 불리는 기계³⁰⁾들로 인해 ‘비인간 인격체’³¹⁾에 대한 윤리학적 문제 제기가 활성화되듯이 말이다.³²⁾ 적어도 인간이 동식물 등의 생명체와 상호 긴밀하게 연동된 자연생태계 안에서 생명활동을 펼치는 한, 윤리를 ‘인간중’ 사이의 일만으로 분리하여 사유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한다면, 또한 생태계를 이루는 제반 구성요소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차원에서 윤리를 사유해야 함에 동의한다면, 자율적 인공 행위자를 포함하는 정보권 차원에서 개개 행위자에 대한 윤리학적 사유의 필요성에 동의할 수 있게 된다.

2.1.2. 고전적 인문과 디지털문명 사이의 불화

□ 시간과 공간, 세계의 확장

○ 21세기 전환기 이래 일상 차원에서 ‘시간과 공간, 세계의 확장’이 지속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디지털 기반 정보통신기술의 진전 결과로 온라인에서는 더욱 빠르고 깊이 있게 실현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꾸준히 확장되고 있다. 심해나 우주, 지하, 오지로 또 인체 내부로, 정신의 내부로, 나노의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 시간도 24시간 영업, 엔젤산업, 실버산업 같은 표현이 시사해주듯이 주어진 자연적 시간을 분절하거나 다시 묶어 새로운 ‘문화적 시간’

28) 이에 대해서는 신상규(2017), “하이퍼히스토리과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학”(일송기념사업회 편, 『디지털 시대 인문학의 미래』, 서울: 푸른역사), 86쪽 참조.

29) 이에 대해서는 신상규(2017), 위의 논문, 73쪽 참조.

30) 이들 기계는 “기계가 인간 외부에서 객체인 도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과 마음의 일부로서의 주체가 된”, “나아가 감성, 이성, 자율성 등 그동안 인간에게만 고유한 것으로 인식됐던 능력들”도 구현 가능한 기계들을 가리킨다. 인용의 출처는 이종원(2017), “다가올 로보 사피엔스의 철학적 문제들”(일송기념사업회 편, 『디지털 시대 인문학의 미래』, 서울: 푸른역사), 15쪽.

31) 여기서의 인격은 존 로크의 개념이다. 그는 근대적 개인 개념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인격(person)과 인간(man)의 개념을 구분하여, 인간을 생물학적인 종 개념으로 본 반면, 인격은 “이성을 갖고 반성하며 시간과 장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 여길 수 있는 생각하는 지적 존재자”로 보았다. - 이종원(2017), 위의 논문, 24쪽.

32) 이는 비단 영화 같은 예술적 상상의 영역에서만 일어난다. 2021년 유력 정치인이 로봇 개를 사전에 로봇 개 제작 업체와 합의된 시나리오에 의해 밀쳤지만, 이것이 해당 정치인의 윤리 문제로 비화되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이는 인간이 로봇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가 윤리의 차원에서 사유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관련 내용은 “로봇 업체가 밝힌 이재명 ‘로봇학대 논란’의 전말”, 『미디어 오늘』, 2021.11.01. 참조.

을 만들어내고 내고 있다. 디지털 기반 정보통신기술은 이렇게 확장되는 시간, 공간, 세계를 유의미한 범위 내에서 개개인의 실존으로 품을 수 있도록 해준다. 2003년에 1인당 연결된 정보통신 기계의 수가 0.08대였던 것이 2015년에는 3.47대에 이르렀고 2020년에는 6.58대로 늘는 등³³⁾ 증대 일로에 놓여 있다. 이는 디지털 기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일상의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의 당연한 결과이지만, 한편으로는 일상 수준에서 실존으로 포섭되는 시간, 공간, 세계가 갈수록 늘어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여기서 그렇게 확장된 ‘사이[間]’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의 문제가 도출된다. 그렇게 확대된 ‘사이[間]’가 전통적 자연이나 인간에 대한 이해나 해석을 기반으로 규정되고 재편되는 것이 아니라 이윤으로 대변되는 욕망으로 규정되고 재편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앞서 제기한 문제는 한층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 인공지능은 항상 학습한다. 쉬 없이 학습하도록 프로그램을 짜면 정말 그렇게 한다. 인간 처럼 두어 시간 공부하면 효율이 떨어지는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멍하고 있거나 잠냄에 휩싸이지도, 갈등하거나 회의에 젖어들지도 않는다. 동력이 공급되는 한 지치거나 멈추지 않고 계속 학습한다. 확장되고 있는 시간과 공간, 인간 내 지식과 정보도 계속 학습해간다. 우리는 이미 디지털 기계의 도움 없는 사회적 일상의 영위를 갈수록 더욱 불편해 하고 있다. 기계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지고 있음이다. 이제는 인간다움의 정수라 하는 명징한 이성과 따뜻한 감성, 틀을 깨는 상상과 그윽한 직관조차 디지털 기반으로 표현되고 향유된다. 우리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도 차만 있을 뿐 이미 ‘21세기형 사이보그’³⁴⁾가 된 셈이다. 이는, 기계에 잠식된 ‘나’로 전락되는 건 일도 아니게 됐음을 분명하게 말해준다. 이러한 양상은 ‘학습’의 차원에서 “이에 유의미한 수준 이상으로 대응하려면 현행 ‘초등-중등-고등’ 식의 교육 패러다임으로 가능할까?”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시간, 공간, 인간의 확장과 공진하기 위해서는, 21세기형 사이보그로서의 일상을 영위해갈 수밖에 없게 된 현실에서 인간답게 능동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아울러 제기한다. 지난 시절 우리 사회에서의 인문학으로 이들에 대한 유의미한 답변을 구성할 수 있는지를 진솔하게 짚어봐야 하는 시점이다.

○ 인류의 삶터인 지구를 보자. 이 지구공동체는 인간과 동물, 식물, 미생물, 무생물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인간 중심의 지구촌에서도 살지만 동시에 인류와 모든 생명체와 무생물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도 살아가고 있다. 인류는 과학기술 기반 문명의 획기적 발전을 통해 지구공동체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존재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한 지 꽤 오래되었다. 현대 문명 시기를 ‘인류세(anthropocene)’라고 부를 정

33) 신상규(2017), 앞의 논문, 60-61쪽.

34) 이 장의 주 25) 참조.

도이다. 인간이 지구의 운명을 좌우하는 유일무이한 권력자가 되었다는 뜻이다. 2020년부터 3년 가까이 겪었던 코로나19 팬데믹은 이 권력자와 지구공동체의 다른 구성원 간 조화가 깨지면 인류의 생존이 위협을 받게 될 것임을 고통스럽게 각인시켜주고 있다. 나와 지구공동체는 이렇게 일상 차원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이 이른바 순수의 영역에 머문, 혹은 머물러야 마땅하다는 인문학과 더는 유효한 관계에 놓일 수 없음은 자명하다.

○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전 지구촌이 즉시적으로 리얼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제 두 곳 이상에 실시간으로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는 고전적인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 제한은 무화되고 있다. 어느 곳에서든 인터넷 등을 통해 지구 반대쪽에 있는 이들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있는 곳에서의 실존을 꾸려갈 수 있다. 이는 한 개인에게 의미 있고 리얼한 실존이 전 지구 차원으로 확대되었음을 말해준다. 또한 주지하듯이 정치, 경제, 문화 모두에서 전 세계는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움직이고 있다. 적어도 한두 세대 전부터 이미 국지전이 더는 명실상부하게 그 지역만의 전쟁이 아니게 된 저간의 현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또한 이상기후 등 생태파괴, 이윤 집중의 지구 차원에서의 편중과 이로 인한 갈등의 심화, 국제전으로서의 국지전 빈발과 궤멸적 파괴를 지향하는 첨단무기의 진화와 집적 등으로 인한 평화 파괴 위험성의 증대 등과 같은 국내외적 난제도 한 국가 차원뿐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유의미한 수준에서 형성되는 실존이 전 지구촌으로 확대되었음을 분명하게 일러 준다. 이는 기존의 이른바 순수 인문이, 또 순수 인문학이 감당해오던 범위를 훌쩍 넘어선다.

□ 지성으로부터의 소외의 보편화, 일상화

○ ‘지성’으로부터의 인간 소외는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나는 오늘날에 이르러 처음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³⁵⁾

■ 고대 중국의 지성사를 보면 얹이 삶과 분리되지 않은 채로 존재하고 활용되던 시기가 존재했다. 얹이 곧 삶이고 삶이 곧 얹인 관계였기에 얹은 사람을 인간으로 규정해주는 핵심근거가 될 수 있었다.³⁶⁾ 그리고 얹은 삶과의 되먹임 관계 속에서만 얹이 되었기에 그 존재 형식은 ‘동태적(動態的)’이었다. 얹과 삶의 통합은 ‘상태’가 아니라 ‘과정’의 형식으로 매순간마다 ‘구성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얹은 명사적으로 포착되거나 서술될 수 없다. 이를 잠정적으로 ‘동사형 얹’이라고 명명해보자. 삶은 동사형 얹의 근거이자 본성이고 그 역

35) 아래 두 단락은 김월희(2009), “동태적 인문으로서의 통합적 학문”(『탈경계 인문학』 제3집)에서 발췌, 수정 보완하였음.

36) 이는 전통시기 한자권에서 유의미한 존재로서의 ‘인(人)’과 그 바깥의 ‘민(民)’을 가르는 중요한 근거로 ‘식자능력’의 구비 여부를 활용한 데서도 확인된다.

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였다. 한자권의 경우, 이렇게 합일되어 있던 삶과 앎³⁷⁾은 앎에 대한 ‘의리적(義理的)’ 접근이 일어나면서 ‘명사형 앎’이 독립적으로 구축되었고,³⁸⁾ 그것이 빠져나간 동사형 앎은 실천지³⁹⁾의 형식으로 전화됐다. 다시 말해 앎과 삶의 분리가 일어났던 것이고, 당시로서는 이는 인간의 인간 본성으로부터의 소외에 다름 아니었다.

■ 명사형 앎이 문제적이라는 뜻이 아니다. 명사형 앎의 가치와 의의 등에 대해서는 역사가 웅변해주고 있으며, 명사형 앎도 앎의 한 양태였기에 그것은 재차 인간 본성의 영역으로 포섭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러한 명사형 앎으로부터의 인간소외가 재차 발생하였고 지금 여기에서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의 근저에는 디지털 기반 첨단 과학기술이 놓여 있다. 앎이 인간의 본성이 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의 하나는 인간 존재가 앎을 저장하고 전달하며 사용하는 가장 효율적인 기관이었다는 점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차라리 역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지식의 축적과 분석, 갱신 등이 인간 신체 바깥으로 이전되고 있다. 앎은, 인간 존재보다는 사이버 공간에 더 많이 축적되어 있고 그것에 ‘접속’만 할 수 있다면 ‘빛의 속도’로 앎을 이용할 수 있다. 인간만이 가능했던 ‘즉시적 연동’과 ‘하이퍼텍스트(hyper-text)적 연산’은 더는 인간만의 능력이 아니게 되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예에서 목도되듯이 지식의 갱신과 창출이 이제는 인간 바깥에서도 수행되고 있고, 갈수록 이들에 대한 의존이 일상화되고 심화되고 있다. 사람들은 디지털문명 덕분에 일상 수준에서 지식의 축적, 활용, 갱신, 창신 등에 필요한 역량의 구비 필요성을 갈수록 적게 느끼게 된다. 그 결과 인간은 갈수록 컴퓨터가 수행한 즉시적 연동과 하이퍼텍스트적 연산의 결과를 소비하는 존재로 전락되고 있으며, 이렇게 명사형 앎으로부터도 소외되고 있다.⁴⁰⁾ 동사형 앎으로부터 소외된 인간이 이제는 다시 명사형 앎으로부터도 소외되고 있

37) 이를 양명학을 개창한 명대의 왕양명은 “지행합일(知行合一)”이라는 테제로 정리했다. 여기서의 ‘지행’은 더 이상 분할이 불가능한, 최소의 의미단위로서의 한 단어이지, ‘지’와 ‘행’의 합성어가 아니다. 실제로 『논어』, 『맹자』 등 유가 계열의 텍스트에서는 앎과 삶이 합일된 것으로 사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이점은 이들 텍스트에서는 ‘알다’라는 동사인 ‘知’ 자에 그것의 명사형인 ‘智’ 자의 의미가 통합되어 있었음에서, 다시 말해 동사로서의 ‘知’와 명사로서의 ‘智’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도 확인된다.

38) 학자들은 중국지성사에서 형이상학에 대한 개안이 일어난 시기로 서기전 4세기경을 꼽는다. 그렇다고 그 이후로 형이상학이 대세나 주류를 점했다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논어』와 같은 경서들을 ‘원리’의 차원에서 해석하는 시도(이를 ‘의리’를 규명한다고 한다.)가 본격화됐다는 정도의 의미이다. 따라서 그것은 ‘이성의 자율적인 영역’을 전제한 상태에서 형이상학적 진리를 탐구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다. 실제로 ‘삶’과는 무관하게 앎이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존재할 수 있다는 관념은 비교적 후대에 형성되었다. 정지한 논증이 요청되지만, 필자가 보기에 그러한 관념이 정립되고 일반화된 것은 불교가 중국 지식인에게 ‘소화된’ 시점 이후의 일이라 판단된다. 중국지성사에서의 형이상학 관련 논의는 벤자민 슈윙츠, 나성 역(1996), 『중국고대사상의 세계』(서울: 살림)의 「제5장 공동적 담론의 등장」을 참조할 것.

39) 아리스토텔레스가 “고귀한 것을 이성적으로 파악하는” 철학적 지혜와 “참된 이치에 따라 선을 실현하는” 실천적 지혜(phronesis)로 나뉘었을 때의 실천적 지혜를 말한다.

40) 이러한 판단은 인간과 과학기술의 관계에 대한 비판론적 입장에 근거한 것이다. 한편 이 양자에 대한 낙관론적 견해

음이다. 앞, 그러니까 지성으로부터의 인간 소외가 오늘날 처음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동사형 앞으로부터 소외된 인간이 이제는 다시 명사형 앞으로부터도 소외되는, 곧 ‘앞에 대한 이중의 인간 소외’는 일상화되고 내면화되는 현실이 디지털 대전환의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야기되고 있음이다.

○ 주지하듯이 근대문명은 이성을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이에 비해 오늘날의 디지털문명의 기반은 감성이다. 디지털문명에서 감성은 양가적으로 작동된다. 이를테면 감성은 기존 문명의 결점, 한계 등을 교정, 보완하는 한편 기존 문명과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새로운 문명 창출과 구현의 기반이 되고 있다.

■ 감성은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의 안고이다. 미래 세계의 주역이 될 ‘디지털 네이티브’는 감성 에너지를 사회적 동력으로 전화시키고 있으며, 이질적인 집단과 지역, 국가들이 감성을 매개로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독창적인 감성과 문화를 지닌 도시가 글로벌 브랜드가 되는 것처럼, 개인이나 국가의 삶터도 감성 가치와 문화적 숨결이 덧입혀짐으로써 더욱 가치 있고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감성은 산업화시대를 떠받들던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이나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감성 경영’이 21세기 기업 경영의 화두로 부상한 데서 목도되듯이, 21세기 전환기를 거치면서 디지털 기반 지식기반시대 글로벌 경제를 좌우할 새로운 문화적 가치로 부각되었다. 비단 민간영역에서만만의 현상은 아니다. 정책 수요자의 입장을 공감하는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을 갖추으로써 이성을 바탕으로 내용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구현하는 기존 정부의 ‘감성정부(emotional government)’ 내지 ‘감성지능정부(emotional intelligent government)’로의 전환이 요청된다는 논의도 간헐적이지만 지속되고 있다. 디지털 문명의 진전에 따라 정책 수립과 수행시 감성적 지성을 갖춘 관료가 국민들의 감성을 고려하는 정부의 감성화가 한층 필요하다는 관점이다.⁴¹⁾ 나아가 감성 가치는 산업화시대에 행해진 삶과 사회의 기본 범주가 해체 또는 변이되면서 촉발된 제반 위기를 구제하고 있다. 사람들은 감성이나 취향 등을 공유하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공동체를 넓게는 글로벌 차원에서까지 활발하게 결성함으로써, 불안정성·불

도 존재한다. 가령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인 에른스트 캅서부터 근자의 마셜 맥루한의 입장처럼, 도구를 포함하여 ‘기술 등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인간의 육체적 기관의 연장’이라는 관점이 그것이다. 다만 문명의 이기에 생활과 사유가 심하게 종속되어 있으면서도 막상 인간은 이점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가 심화되어 ‘인간의 사이보그화’가 상당 정도로 진척했다는 비판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일상 차원에서 진척된 인간의 사이보그화에 대한 논의는 이진경(2007), “자본주의의 미래, 미래의 자본주의”(이진경 편, 『모더니티의 지층들』, 서울: 그린비)를 참조.

41) 감성정부에 대한 논의는 우윤석(2008), “감성지능적 정부의 개념화와 구현을 위한 모색: 미학적 아나로기와 도구적 활용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46권 2호) ; 이대희(2005), “감성 정부와 이성 정부의 비교론적 고찰”(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6권 제1호) 등 참조.

확실성·원자화·파편화 등과 같은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고 있다.

■ 기존에 책으로 대변되는 문자 기반 텍스트가 문명 차원에서 수행하던 역할이 디지털 대 전환 속에서 디지털 텍스트로 대거 옮겨지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문자 위주의 평면적, 정적 텍스트를 시각 기반으로 분석함으로써 이해와 판단에 필요한 근거를 획득하던 패턴으로부터 동영상 등 입체적이며 동적인 텍스트를 시각과 청각 등 공감각적으로 느낌으로써 이해와 판단에 필요한 근거를 획득하는 패턴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때 전자는 이성이 작동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큰 데 비해 후자는 감성이 작동될 여지가 절대적으로 크다. 공감각을 기반으로 텍스트를 접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해와 판단의 근거도 이성적인 것에서 감성적인 것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곧 오늘날 디지털문명에서의 이해와 판단의 근거는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감성적이라고 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에 대한 이해가, 삶과 사회를 대하는 태도가 감성화되고 있음이다. 디지털문명의 보급에 따라 본격적으로 출현한 우리 사회의 이념의 감성화, 정치의 감성화, 외교의 감성화 같은 현상에서 분명하게 목도되듯이, 개인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행위의 선택과 수행, 윤리적 판단, 가치관의 구성 등을 이성적 역량 기반보다는 감성적 반응 기반으로 수행하는 경향이 일반화되고 심화되고 있다.

○ 지금까지 목도되는 디지털문명은 감성이 감정 자체만으로 표출되는 양상을 일상화하고 구조화한다. 그 결과 감정 기반 감지의 결과가 이성 기반 앎을 지성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있다.

■ 텍스트가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보급됨으로써 읽기의 패턴이 급변하고 있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매체(media)가 사용자를 변이시키고 있다. 문자이든 이미지든 주로 종이에 담긴 텍스트를 읽는 방식과 그러한 읽기를 통해 야기되는 효과가 사뭇 달라지고 있다. 모바일 기기나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할 때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스크롤링 해가며 텍스트를 접한다. 텍스트를 읽는다고 하기보다는 콘텐츠를 보는(읽는 것이 아닌) 것에 가깝고, 하나의 텍스트에 집중한다보다는 여러 콘텐츠의 표면을 훑고 다님에 가깝다. 디지털 원주민 세대를 두고 글은 읽지만 책은 ‘못’ 읽는다는 진단처럼 긴 글은 물론 디지털 콘텐츠 곳곳에서 “세 줄로 요약해주세요”란 요구를 쉬이 접하는 데서 목도되듯이 길지 않은 글도 못 읽게 된다. “디지털 기기가 사람으로 대충 읽게 만든다”⁴²⁾는 진단이 나올 정도로, 디지털 기기로 콘텐츠를 대하는 습관의 영향 아래 화면을 ‘계속’ 이동시켜 가며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고 다음 화면으로 늦지 않은 속도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는 디지털 기기에는 언어 기반 콘텐츠와 소리 기반, 동영상 기반 콘텐츠가 한 데 담겨 있어서, 그래서 그들 간의 이동이 쉽고 빠르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만은 아니다.

42) 최봉규(2019), “모바일 읽기가 이해력을 퇴보시킨다!”, 『KISTI의 과학향기』 제3295호.

■ 그보다는 디지털 기기라는 매체 자체가 지니는 속성 때문이다. 동일한 텍스트를 종이책으로 읽은 집단과 전자책으로 읽은 집단 사이에 이해력의 차이가 컸다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전자책으로 읽은 집단이 내용 기억의 정밀함, 논지나 서사의 이해와 기억, 재현 등을 수행함에 종이책으로 읽은 집단보다 어려움을 겪었다는 보고⁴³⁾가 이러한 판단을 지지해준다. 언론에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늘어나고, 긴 글을 읽는 것보다 짧은 영상을 시청하는 경향이 심화하면서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됐다는 보고가 속속 올라온다. 디지털 기기라는 매체 자체가 사람의 집중력, 기억력, 이해력 등을, 나아가 문해력, 글쓰기 역량 등을 저하시킨 것이다. 외신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초등학교 4학년생의 ‘국제 읽기 문해력 연구(PIRLS)’의 읽기 능력 점수는 2021년 544점으로 5년 전에 비해 11점 하락하자, 스웨덴 정부는 이를 디지털 학습의 보편화 등이 가져온 결과로 판단하여 유치원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을 의무화했던, 곧 디지털 학습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던 정책을 뒤집고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디지털 학습을 완전히 중단할 계획이라고 한다.⁴⁴⁾ 디지털 기기라는 매체가 사용자의 문해력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은 그저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인 것이다.

■ 디지털 기기는 감소되는 문해력의 빈자리를 감성으로 채운다. 느낌을 통해 앎을 획득할 수 있듯이 감성은 지능을 구성하는 어엿한 원천의 하나다. 감성 지능이라는 표현이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까닭이요, 디지털 기기가 감성을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이것이 문해력의 저하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다만 디지털 기기는 감성을 앎으로 연결해주는 회로 역할에는 친화적이지 않다. 그보다는 감성을 이성적 앎이 아닌 감정으로 산출하는 회로로 쉬이 구동된다. 그 결과 감정적 느낌 자체가 판단과 평가의 근거가 된다. 선택과 결정의 근거도 된다. 이성적, 감성적, 직관적 앎으로 상승되지 못한 감정의 소산이 그들 역할을 대신 차지하게 된다. 한마디로 감정적 반응 결과가 평가와 판단, 선택, 결정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 자체가 유의미한 앎으로 인지된다. 여기에 문해력을 저하시키는 디지털 기기의 매체적 경향성이 결부되며 디지털 기기는 사용자를, 그들로 이루어진 사회의 이성적 성숙도를 갉아 먹는다.

■ 이는 문자문명이 구술문명을 대체하며 지구촌 문명의 주류를 점한 이래 문자문명의 근간이었던 기존의 인문이 처음 접하는 경험이다. 일각에서는 디지털문명으로의 전환을 두고 시각문명에서 청각문명으로의 전이 내지 회귀라고 평가하지만, 디지털문명은 문자문명에 의

43) 최봉규(2019), 위의 글.

44) “종이책과 손글씨로 돌아가는 스웨덴 학교”, 『아시아경제』 2023.09.14.

하여 대체된 과거의 청각문명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무엇보다도 문명의 주요 매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술문명이나 문자문명을 떠받친 인문이 주되게 활용했던 매체와 디지털문명을 떠받칠 인문이 주되게 활용하게 될 매체가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두문명 시기의 인문이 문자문명 시기의 인문만으로는 디지털문명 시대를 떠받치기 어렵다. 어느 시기든 인문은 그 시기의 주요 매체를 바탕으로 구현되고 갱신, 창출되어 왔다. 가령 구술문명 시기에는 사람이 곧 주된 문명의 매체였다. 문명의 전파와 전승, 진보에 필요한 바를 사람에게 담았기 때문이요, 사람에게 의해 그것들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그 자체가 지식”인 매체였음이다.⁴⁵⁾ 문자문명 시기에는 책이 곧 주된 문명의 매체였다. 문명의 전파와 전승, 진보에 필요한 바가 주로 책으로 대변되는 유형의 매체에 담겼기 때문이요, 책을 기반으로 그것들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디지털문명 시기는 앞서 서술했듯이 디지털 기기가 ‘지식으로서의 사람’이나 책을 밀어내며 주된 문명의 매체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있다.

■ 이는 디지털문명 시기의 인문은 이러한 디지털 기기와 합을 잘 이루는 방향으로 변이할 필요가 있음을 웅변해준다. 곧 디지털 기기를 기반으로 구현되고 갱신, 창출되기에 적합한 인문으로 갱신 내지 거듭남이 필요한 까닭이다.

2.2. 학문의 위기 확산 및 심화

2.2.1. 한국 인문학의 현주소

□ 우리 연구진이 수행한 인문사회학술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수행하며 한국 인문학의 현주소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인문사회학술이 처한 현실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라고 질문하였다.

○ 전문가들은 이에 대하여 ‘인문사회학술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문제’, ‘인문사회학술 기반 문제’, ‘인문사회학술 풍토 문제’, ‘인문사회학술 역량 문제’, ‘인문사회학술 정책과 지원 문제’, ‘대학에서의 인문사회학술 재생산 문제’, ‘학문후속세대 문제’의 일곱 가지 차원에서 인문사회학술이 처한 현실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언급하였다. 다음은 서면 인터뷰 답변 중 한국 인문사

45) 노자의 얇이 담긴 매체, 곧 책의 이름이 노자이고, 묵가나 맹자, 순자, 한비자 등의 얇이 담긴 책의 이름이 곧 묵자, 맹자, 순자, 한비자였던 현상은 구두문명 시기 ‘매체로서의 사람’이라는 이러한 특이성이 발현된 사례들이다. 한편 구두문명 시기의 책이라는 문명장치와 문자전승 시기의 책이라는 문명장치는 각각의 문명 안에서 위상과 성격이 많이 다르다. 전자는 구두를 기반으로 구축되고 전파, 전승되는 얇의 보조 장치라는 위상과 성격을 지니지만, 후자는 문자문명의 핵심 매체라는 위상과 성격을 지닌다.

회학술이 처한 현실을 가장 잘 대변해준다고 판단한 답변의 일부이다.

○ “우리나라에서 인문사회학술이 대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매우 열악하고 말 그대로 위기 상황이며 서구 유럽이나 이웃한 일본 등 선진국들에 비해, 또한 중국에 비해서도 우리의 매우 척박한 토양 위에 있다. 그동안 이에 대한 크고 작은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렇다 할 근본적이고 획기적이면서 실제적인 해결책이 모색되고 있지 못했다.”

□ 한국 인문학은 각종 국내외적 과업에 대한 정책 수립과 수행 등의 영역에서 주요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볼 수 있듯이, 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또 팔레스타인-이스라엘의 전쟁이 국지전의 형식으로 발발되었지만 발발 이전부터 국제전의 성격을 분명하게 노정한 데서 볼 수 있듯이, 생태파괴 · 환경오염 ·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및 갈등 · 테러 · 전쟁 등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은 일국 차원을 넘어서 국제적 차원에서 동시적 발생하고 있다. 또한 2022년 2월에 발발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영향이 우리나라 2023년 1월, 2월 ‘난방비 폭탄’으로 드러났듯이, 자연적 · 사회적 재난의 영향을 개인부터 국가 차원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이고도 실질적으로 받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과 대비 역량을 시급히 신장해야 한다. 인문학은 이러한 국가적 현안, 범지구적 이슈 등에 대한 문제해결 역량을 증강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정신, 태도, 자양분의 원천이자 보고이다. 다만 인문학이 직접적으로 이러한 국내외적 과업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아니다. 그러한 해결책 마련의 기초가 되고 이에 필요한 사유와 직관, 상상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인문학은 이러한 역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 한국의 인문학은 국가사회에 대하여 인문학 지원에 대한 국가사회 차원의 인식 부족 내지 결여, 그 당연한 결과로서의 인문학 지원의 왜소함 내지 황폐함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꾸준히 발하여 왔다. 반면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국내외의 현안과 과제, 특히 생태복원, 평화실현, 공존공영 같은 난제에 대하여 인문학이 어떤 기여 내지 순기능을 하였는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그리 많지도 또 높지도 않다. 실제로도 국내외 현안, 난제는 인문학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해왔지만 한국의 인문학은 이에 적극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 차원에서의 인문학의 무기력함이 거듭하여 입증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제도권 인문학자의 고루함과 안일함 등이 겹쳐지면서 한국사회에서 인문학은 그 무용론이 점차 확산, 심화되고 있다. 국내외 주요 현안, 난제 등에 대한 한국 인문학의 대응 역량, 해결 역량이 미흡하거나 부재함의 반증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 디지털문명으로의 대전환되는 시대를 맞이하여 대한민국과 한국사회가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문제들 가운데에서 인문학적 성찰과 통찰이 요청되지 않는 것들은 없다. 이를테면 탄소 중립 등 생태 보전이나 이념 간, 지역 간, 세대 간, 성별 간 충돌과 혐오 등에 대하여 인문학적 반성과 성찰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공존과 공생, 공영을 위한 지속 가능한 문명 조건의 탐색이야말로 인문학의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사유를 요청하는 주제이다. 또한 미중 갈등과 남북 긴장이 고조되는 신냉전 시대의 도래를 맞이해서 요청되는 정신과 태도의 모색, 남북 간 평화 실현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한 공생과 공영을 위한 패러다임 모색도 인문학적 성찰과 통찰을 강하게 요구한다. 경제적 성장과 문화적 성숙, 물질적 풍요로움과 정신적 곤궁함, 지성과 반지성 사이에 놓인 균형과 조화의 구현도, 지역과 중앙의 공존과 공영을 해결 방안 모색도 인문학이 답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 이 문제들은 비단 한국사회에만 국한된 문제들은 아니다. 생태 보전, 혐오 극복, 평화 실현, 풍요 창출, 성숙 구현 등은 사실 21세기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에게 던져진, 더 이상은 회피할 수 없는 난제들이다. 이 과업들은 어느 한 개인에 국한되는 문제도 아니고 어느 한 국가만의 과업도 아니다. 인류 보편의 문제라는 뜻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적어도 위에 제시한 과업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그리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며 그 해결책을 위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노력하는 정도가 한국사회의 품격과 대한민국의 국격 및 대한민국을 생존과 생활의 근거지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결정할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경제 수치 등에서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을지라도 이들에 대한 국가사회적 논의나 사유가 부족하다. 이는 물질적 부유함을 창출하면 자연스럽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은 물론 인류의 평화와 공영을 선도하는 보편문명국가의 지평으로 도약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결국 한국은 물질적 부유함을 토대로 한 선진성은 발현했을지라도 인문학적 풍요로움을 토대로 한 선진성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이다. 한국 인문학의 현주소를 잘 말해주는 양상이다.

○ 자연적·사회적 재난은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사회에서 상수화(常數化)되고 있다. 진척됨에 따라 '문제 해결자'로서의 과학기술의 역할과 영향력도 증대되고 있다. 과학기술이 이러한 사회적 문제, 국제적 난제 해결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인문학은 과학기술의 이러한 역할을 뒷받침하면서 동시에 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문학의 역량 제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문학 고유영역에 대한 심화 발전뿐 아니라 늦지 않은 속도로 진보를 거듭해가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선도 역량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이러했을 때 인문학은 과학기술에 대한 균형추이자 경국(經國)의 두 날개 중 하나로서 다른 날개인 과학기술과 조화롭게 발전해갈 수 있을 것이다.

○ 문명 충돌의 전형적인 사례가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패권 다툼일 것이다. 당장 중국과 미국으로 대변되는 동양문명과 서양문명의 긴장과 대결의 전선이 서해와 휴전선을 거쳐 동해에까지 그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것의 결과 한국과 북한, 중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과 러시아 등의 군사 패권주의와 군국주의가 더욱 힘을 더하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의 유럽의 분위기와는 물론 다르지만, 최소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를 파괴하는 불쏘시개에 기름을 붓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지난 시절 로마제국이, 또 역대 중국제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쓰는 전술, 곧 나누어서 서로 싸우게 하라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전술의 전형적 사례이다. 제국으로서의 영향력을 세계 차원에서 관철하고자 하는 미국과 중국의 세계 지배 전략의 일환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곧 작게는 남북 평화와 크게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방안과 방도를 찾아내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한국의 인문학은 무관심한 편이다. 현실을 개선하고 미래를 기획함에 한반도 평화적 통일과 동아시아의 평화 공존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통일한국 시대, 동아시아 평화 시대의 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통일한국 시대, 동아시아 평화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질적 사고와 감성, 가치관, 생활방식 등 다문화적 실재에 대한 이해력과 포용력, 열린 정신과 태도 등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대립과 갈등, 충돌의 역사로 인한 개인적·집단적 상흔의 미래 지향적 극복, 역내 이권 실현·헤게모니 다툼 등으로 야기된 오해와 혐오의 건설적 해소 등도 일구어내야 한다. 또한 한반도 통일, 동아시아 평화는 단기간에 실현될 수 없는 과제이기에 평화와 자유, 공존공영 등에 대한 신념과 의지가 개인부터 국가 차원에 이르기까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단적으로 통일 한국 시대, 동아시아 평화 시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요청되는 역량은 정신적·문화적 방면의 역량이다. 인문학이 그 자체로 통일한국시대, 동아시아평화시대 구현의 굳건한 초석이 되는 이유이다. 한국의 인문학이 통일 한국 시대, 동아시아 평화 시대의 대비 역량을 시급하고도 체계적으로 제고해야 하는 까닭이다.

○ 한국 인문학이 국내외의 난제에 대하여 무기력하다는 지적은 우리 연구진이 수행한 전문가그룹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관련 답변 중 일부이다.

■ 현재 인류가 처한 절실한 당면과제, 즉 기후위기와 전 지구적인 사회적 양극화(둘은 긴밀하게 서로 얽혀 있다)를 극복할 현실적 대안을 내놓으려면 인문학과 사회과학만이 아니라 자연과학과 공학을 포함하여 모든 학문의 협업이 필요함에도 인문학은 이러한 협업에 적극적이지 않다.

■ 근본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그리고 생명공학 및 정보기술의 발달, 본격적인 AI의 도입 등으로 자본과 기술에 의해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발생하여 우리 삶에 다양한 영향을 미

치고 있는데 한국의 인문사회학술은 여기에 효과적이고 밀도 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 오늘날 한반도의 거주자들과 또 더 큰 범위의 인류·인간이 처한 복합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존 학문의 격벽과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의고적이거나 훈고학적인 인문학과 ‘연구를 위한 연구’, 보편성을 상실한 연구가 외면 받는 것은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인 면도 있다. “인문학적 지식으로 생태계 위기, 현금의 전쟁과 재난, 양극화와 인구 위기 등을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가능한가?” 등을 구체적으로 물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주제나 소재, 현실적 필요 그리고 매체·소통 방법 등에서 유용성과 본질성을 가진 인문학은 외면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언제나 온고지신, 범고창신은 중요하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융합과 협응, 통섭도 인문학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 한국 인문학의 자화상에 대한 성찰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그 중 김석수 등의 『한국 인문학의 자기 성찰과 혁신』(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8)에서의 성찰은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서 다시 소환할 필요가 있다.

○ ‘인문학 하기’의 부재 또는 미흡 : “한국 현대 인문학계의 위기의 근본 요인은 인문학자들의 인문학하기에 대한 근본적인 자기성찰의 부재에 있다.”⁴⁶⁾ “인문학 자신이 한국 현대사 공간에서 개항, 근대국가 건설의 좌절과 식민지, 분단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그리고 군정체제를 거치면서 어떤 모습으로 인문학을 해왔으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우리 학문사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시장의 힘이 학문 활동과 교육 활동 전반에 파급되고 있는 이 현실에서도 그저 이 현실을 개탄할 뿐이지, 이 현실을 제대로 비판하고 발전시키는 실천적인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⁴⁷⁾ 그 결과 “우리의 인문학은 우리의 현실에 낯설고,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인문학에 낯설다. 이 모든 것이 장소와 시간, 그 속에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생동적인 삶과 호흡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식민지 공간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문학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주체적이고 생산적인 ‘적용(Anwendung)’을 상실한 데 있다. 적용은 이론을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며, 사유가 현실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가 강자의 학문을 수용하였을 때, 그 이론이 발생한 현실을 고민해보지 않고, 그저 배웠다고 그것을 우리 현실에 강요한다면, 그 이론은 현실과 겹돌거나 현실을 왜곡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현실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인문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 역시 이런 현실을 담

46) 김석수 등(2008), 『한국 인문학의 자기 성찰과 혁신』(경제인문사회연구회), 103쪽.

47) 김석수 등(2008), 위의 글, 2쪽.

아내지 못하고 있다. 현실은 엄청나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문대학 강단에서 이루어지는 강좌의 제목은 경성제대 시절의 훈기를 담고 있다.”⁴⁸⁾

○ 인문학의 현실성 상실 : “해방 이후 한국의 인문학은 순수학문이라는 미명 아래 그들의 학문의 토양인 현실과 유리되어 있었다. 인문학이 다루는 주제와 소재는 그들이 밭 딛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토대를 기반으로 삼지 못했고, 그들이 생산해 낸 글들은 주로 또 한명의 인문학 연구자를 재생산하기 위한 ‘그들만의 리그’를 위한 의례였다. 결국 인문학은 대학의 학제 속에서나 생존 가능한 박제품으로 전락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⁴⁹⁾ 한국의 인문학이 현실과 괴리되어 나쁜 의미의 문헌학 훈고학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는 까닭이다. “바꿔 말하면 한국의 인문학이 사회전체와 공동체 구성원에게 의미 있는 삶의 체계로서 인정받기 어려워졌다. 인문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문의 논리와 현실을 연계시켜 사고하는 통합적 사고인데, 제도화된 한국의 강단인문학 또는 ‘상아탑에 갇힌 인문학’으로 시종함으로써 사회적 연관관계를 상실했다.”⁵⁰⁾

○ ‘인문 능력’ 내지 ‘인문적 인격’의 결여 : “우리 인문학자에게는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현실기피증’이 내재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으며, 또한 ‘원전(元典)주의, 원조(元祖)주의’가 계속 잔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인문학자는 자신이 수입한 이론을 소개하는데 머물러 있지, 이를 현실과 대화 속에서 새롭게 창조하는 주체성을 상실하고, 또 자신의 전통을 현재 속에 재창조하는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⁵¹⁾ 인문학의 양대 기반인 교육면에서도 “인문학이 본래 인성을 길러주는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연구 공간에 갇혀 과학이 되어버림으로써 스스로의 존립 가치를 상실했다. 지금 인문학자들은 ‘연구 따로, 교육 따로’라는 생활에 익숙해 있다.”⁵²⁾ 이는 “오늘날 인문학 위기의 근본 요인은 “시대의 의제를 설정하는 ‘인문 능력’이나 시대정신을 주도할 ‘인문적 인격’의 결여’에 있”⁵³⁾음을 밝히 말해준다.

□ ‘번역 인문학’ 단계에 머문 한국 인문학

○ 현재 우리는 문명화되는 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그러니까 수입되기 직전까지의 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개념과 가치를 자기 편의대로 사용하고 있다. 물론 한국사회의 기본 가치들의 대부분이 근대화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수입된 것들이라면 이것들은 착상하고 자

48) 김석수 등(2008), 위의 글, 3쪽.

49) 김석수 등(2008), 위의 글, 100쪽.

50) 김석수 등(2008), 위의 글, 95쪽.

51) 김석수 등(2008), 위의 글, 105쪽.

52) 김석수 등(2008), 위의 글, 106쪽.

53) 김석수 등(2008), 위의 글, 107쪽.

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곧 한국화의 과정을 거쳐야 함이 중요하다. 하지만 반대의 과정에 대한 이해와 통찰도 필수적이다. 더군다나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화의 과정을 겪은 가치들이 세계를 주도해 나갈 보편 이념과 교양 척도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위해서 문명사에 대한 통찰은 필수 불가결하다.

○ 문명의 가치들이 겪는 문명화 과정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관장하는 학술이 인문학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문학은 성숙사회의 전제 조건인 문명에 대한 통찰을 수행하고, 그 통찰의 대상들인 가치들의 문명화 과정을 다루는 기초학술임이 분명하다. 또한 이런 이유에서 인류의 여러 생존 방식들과 생활 방식들의 사이에 있는 공통성들과 차이점들에 대한 연구는 이제는 인문학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자리 잡았다. 예컨대 세계 4대 문명권들 사이에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한 마디로 현대 세계는 이미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 시대에 따라서 요청되는 것이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공존 가능성에 합의인데, 그렇다면 어느 문명권이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최소 공통 준거(modus minimus)들의 확보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고, 개별 문명들의 다양한 역사들과 각기 다른 문명의 맥락에서 서로 다른 전개 과정에 대한 이해도 이제는 선택이 필수가 되었다.

○ 문명사의 관점에서, 한국 인문학이 서 있는 위치는 현재 한국어를 이용해서 사건과 사태에 이름을 붙이고, 분류하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번역을 통해서 한국어의 가난함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중이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한국어는 아직 개념화와 이념화의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중이다. 단적으로 과거에는 한문에서 빌려다 썼지만, 이제는 영어에서 문명의 핵심 용어들을 빌려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로 독자적으로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겪는 사태와 사건을 개념적으로 분류하고, 이론적으로 고찰할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성장과 성숙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16~17세기 영어, 17~18세기 프랑스어, 18-19세기 독일어가 겪어야 했던 성장과 성숙의 과정과 유사한 것이다. 한국어는 이제 그 과정을 겪고 있는데, 한국어의 이러한 방향으로의 성장과 성숙에 대한 요청은 시대적으로도 꼭 필요하기도 하다. 한국과 한국사회가 국제관계와 국제 사회에서 주권 국가로서 그리고 국제 사회의 담론을 주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말이다.

○ 통시적으로 한국문명이 역사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해와 통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한국문명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 소위 1차 문명이란 아직 국가 단계의 규모의 차원에 도달하지 못한 원시문명을 말한다. 이어서 2차 문명이란 이른바 기축(機軸)시대 문명을 말한다. 이 문명을 현대문명의 기본 모판

(母板)을 결정지어버린 문명권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그리스·로마 문명, 중국의 진한(秦漢) 문명이 그것들이다. 3차 문명권이란 요컨대 동양문명과 서양문명의 경우 고대의 기본 모판을 바탕으로 중세적 변형을 겪으면서 형성된 것을 말한다. 예컨대 서양의 중세 기독교문명과 동양의 위진남북조시대와 수당시대에 형성된 문명을 말한다. 4차 문명권이란 르네상스의 근세를 거치면서 탄생한 서양의 근세 개별 국가들이 만들어 낸 서양 문명권과 동양의 경우 송대 및 명·청대와 일본의 막부와 근세 그리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의 근세를 거치면서 형성된 동양 문명권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5차 문명이란 동양 문명권과 서양 문명권이, 여기에 더해 여타의 문명권의 문화와 사상과 물질들이, 근세의 조우와 충돌의 단계를 지나서 융합과 회통하고 있는, 이른바 세계화의 현상이 포착되는 시대의 글로벌문명을 말한다.

■ 아쉬운 대목이지만 한국문명의 성격은 인류 문명사의 관점에서 볼 때, 기축 문명의 모판 역할을 한 적은 없다. 또한 중세와 근세의 문명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문명은 중추 문명의 역할을 한 적이 없다. 중국이라는 거대 문명권의 변방 국가였고 그 문명의 수입 국가였다는 사실은 굳이 입증할 필요는 없다. 사정은 근세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의 현대화 과정과 한반도의 현 정세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중요한 결정이 우리의 의지가 아닌 외세에 의해서 좌우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문명은, 만약 한국이 새로운 문명의 발신지가 되고자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기축 문명과 중추 문명이 성과와 결과물로 산출한 가치와 이념들에 대한 탐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가치와 이념들은, 비록 그것들이 과거의 산물들이라 할지라도 현재를 작동하는 원리이자 힘으로 작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것들에 탐구와 이해의 제공이 여전히 한국 인문학에 부여된 시대적 소임과 역할이다. 물질적, 경제적 차원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다고 마냥 자랑스러워할 수만은 없는 한국 인문학의 자화상이다.

□ 교육과 괴리된 한국 인문학

○ 한국 인문학은 교육의 관점에서 “이해의 인문학”에 머물러 있다. 이를테면 사랑, 자비, 인의, 진리, 진실, 양심, 연민, 동정, 관용, 연대, 홍익, 인류애, 인간애, 자기에, 효성, 우애, 우정, 애국심, 애향심, 애교심, 애사심, 경건, 겸손, 절제, 우정, 친절, 예의, 명예, 멋, 수치, 정직, 성실, 근면, 검소, 배려, 희생, 친절, 이웃 사랑, 열린 마음, 관용, 신의, 평형, 균형, 화합, 평화, 조화, 용서, 이해, 감동, 섬김, 나눔, 베품, 용기, 절제, 지혜, 실천, 통찰, 융통성, 중용, 이성, 합리, 상식, 원칙 등은 국가 존속과 발전에 필수적인 개념이다. 이것들은 누구나 알아야 하는 가치들이다. 이것이 국가로 하여금 이것들에 대한 교육을 당연한 의무로 간주하게 만드는 힘이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 개념들을 강제적인 교육의 대상으로 정해놓기까지 할 수 있었던 근거

였다. 전근대시기 한자권의 왕조들이 유교 경전을 교육했듯이, 서양 중세는 그리스도 교회에 속한 학교들을 통해서 이 가치와 개념을 교육하려고 시도했다. 물론 이는 전체주의 혹은 국가주의로 획일화 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했다. 그렇지만 이런 획일화 기획에 대해서 맞서 싸워온 “인문주의” 전통이 늘 함께 작동하고 있었다. 요컨대 앞에서 열거한 개념들은 일률적 혹은 획일적인 교육의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이 개념들에 대한 교육이 개발되고 발전되어 온 과정이 인문학의 역사이기도 하다.

○ 물론 이 개념들이 적어도 여러 다양한 표현 매체를 통해서 출판되고 방송된다. 이들은 예술 작품과 영화 작품으로 표현되거나 대학의 교양 및 전공 강의를 통해서 충분하다 못해 넘칠 정도로 소개되며 교육되고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도 이미 중등교육과정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개념적인 이해만으로는 부족하다. 개념에 담긴 가치들이 현실에서 서로 충돌할 때 어떤 해결책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치들이 서로 충돌할 때, 과연 이를 평화롭게 해결해 본 경험을 교육을 통해서 수행해본 적이 없었다. 예를 들어 한국 정치를 나누고 있는 세력들의 이면에 깔린 가치들로서 자유와 평등을 들 수 있는데, 양자가 대립할 때 이들의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아 본 적은 거의 없었다. 이런 가치들의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가 정치인데, 한국에서는 정치적으로 정해 놓은 규칙에 따라서 해결되기보다는 세력 간의 힘겨루기를 통해서 정리되거나 제압되는 것으로 많은 충돌 사태들이 일방적으로 종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가치 충돌을 해결하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게 된다. 이 문제를 더 심각한 이유는 이런 종류의 사태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더욱 악화되는 방향으로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 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는다.

○ 다음은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시험 문제 중 일부이다.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행복이 가능한가?”, “우리가 하는 말에는 우리 자신이 의식하고 있는 것만이 담기는가?”, “예술 작품은 모두 인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권리를 수호한다는 것과 이익을 옹호한다는 것은 같은 뜻인가?”, “정의를 위해서 폭력은 정당화되는가?”

■ 프랑스는 왜 이런 종류의 물음들을 입시에 내는 것일까? 이런 물음들이 결국은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의 성격과 국가의 품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성숙함을 유지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와 같은 방식의 입시제도라는 소리다. 이 물음들은 개념을 암기하는 것으로는 결코 답을 할 수 있는 것들이고, 날카로운 분석과 깊은 사유의 힘을 요구한다. 또한 이 물음

들은 실은 아주 오래된 것들이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어 부딪히게 되는 물음들이다. 이른바 인문학의 물음들이다. 이 물음들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는 오래되고 그러나 검증된 인문학의 방법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된다. 적어도 이 물음들은 소위 “다음 중 아닌 것은?” 유의 시험 방식에 최적화된 사람들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 이러한 시험은 한국 인문학이 “이해의 인문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보여주는 방증이 된다. 어찌면 이해의 인문학도 아닐 것이다. 우리는 도구 과목의 교육적 산물을 기반으로 대학입시를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벌어지는 온갖 문제에 대한 대처와 해결책은 적어도 도구 과목이 제공하는 정보와 지식의 암기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적어도 프랑스 입시 문제에 나오는 물음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논리적이고도 객관적으로 개진할 수 있을 때에 그 대처와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어진 정보와 지식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답이 정해진 문제를 풀면 유능하다고 판정받는 이해의 인문학 단계를 넘어서는 한국 인문학의 성장과 성숙은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 한국 인문학은 대학의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교양교육용으로 쭈그러들었다가 이제는 그나마도 퇴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한국 인문학은 지난 시절 내내 중등교육과정에서조차 찬밥 신세에 머물러 있었다. 인문학과 교육 간 괴리가 일상화되고 구조화되었음이다. 이러한 잘못을 구제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 인문학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고, 그 첫걸음은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과정에 치중되어 있는 한국 인문학을 중등교육과정으로 ‘하방(下放)’하는 것이다.

■ 한국 인문학이 중등교육과정으로 내려가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본래부터 삶의 기초 기술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대학입시로 인해 그 당연함이 실현되지 못해 왔다. 그런데 서구의 선진국과는 다르게도 인문학이 중등교육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는, 즉 한국 문학의 하방(下放)을 가로막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한국 중등교육의 현 체제가 짜인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 1970년대는 산업화의 수요에 따른 인력 교육이 시급했던 시절이었다. 효과는 있었다. 한국이 이 정도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도 그때 실행되었던 교육 덕분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오늘날 산업구조가 변해 버렸는데 교육 구조는 아직도 그대로라는 점이다. 물론 일부 실업계 고등학교의 변신과 변모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산업의 변화에 따라 교육 내용도 변했고, 학교의 이름까지도 바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대로”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단적으로 1970년대에 도입되어 이제는 뿌리를 단단히 내린 것으로 보이는 중등교육의 틀이 기본적으로 “도구교육”의 성격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대학입시를 좌우한다는 “국영수”라는 과목이 기본 과목으로 운위되지만 기실 도구 과목에 불

과하지 않는가? 남의 나라 말을 잘한다는 이유가 성공과 출세를 결정하는 우리의 현실이 우습기도 하지만, 어찌되었든 ‘영어’도 도구 교육에 불과한 것은 사실이다. 도구 과목에 강한, 아니 더 정확히는 입시체제에 최적화된 사람이 경쟁력을 가진 능력자라고 믿고 있는 나라는 한국 등 극소수밖에 없을 것이다. 입시체제에 최적화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 나라가 총력전을 벌이는 곳이 한국이기 때문이다.

■ “바뀌야 할 것은 바뀌야(mutatis mutandis!)” 한다. 한국 인문학이 한국사회에 본격적으로 또 전면적으로 등장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확보된다. 도구 교육과 입시체제에 최적화된 사람들이 자신이 받았던 혹은 받고 있는 교육이 기본적으로는 “노예 교육”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자신을 주인으로 기르는 것이다. 따라서 공부가 학생들이 해야 할 의무라면 도구 공부가 아닌 주인이 되는 공부를 제공해야 한다.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기본적으로 자생 능력을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역량도 길러주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식별력이 배양된다. 이른바 자존감이라 부르는 것이다. 놀이와 공부의 결합은 이러한 교육 목표를 구현하는 데 검증된 길이다. 그래서 인문학은 이러한 교육에 주인으로서 개입하여야 한다. 각 인문학은 원래는 놀이였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을 뜻하는 그리스어 ‘파이데이아(paideia)’가 ‘놀이’를 뜻했고, 학교를 뜻하는 라틴어 ‘루두스(ludus)’도 ‘놀이터’를 의미했다는 점에서 쉽게 확인된다. 이것이 한국 인문학이 중등교육과정으로 내려가야 할 기본적인 이유이다. 이를 통해 교육과 괴리된 인문학이라는 오류를 건설적으로 극복해야 할 것이다.

□ 연구자의 태도와 정신 : 다음은 우리 연구진에서 수행한 전문가그룹 서면 인터뷰 중 한국의 인문사회학술 연구자의 태도와 정신을 비판적으로 언급한 내용이다.

○ 인문학에 대한 협소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소위 ‘인문학자’들의 고루함을 극복하지 않고는 그 어떤 처방도 효과를 낼 수 없다. 무슨 연구를 하더라도 인문학자 나름의 총체적 사회 인식과 비판적 시각이 필요함에도, 또한 인문학자의 작업은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인접 학문의 최상의 성과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도 인문학 고유의 상상력과 실천성, 총체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줘야 하는 것임에도 현재 대학 안의 인문학은 거의 그러하지 못하다. 이런 점에서 인문학은 고사 직전이라고 봐야 하며 그 책임의 큰 부분은 바로 인문학자 자신들에게 있다.

○ 인문정신 없는 인문학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한국 인문학이 처한 현실 중의 하나이다. 가령 인문학에 종사하는 학자들의 자가 진단 및 자기반성의 필요성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인

문학 본래의 사명과 기능은 인간의 마음을 정화하고 인격을 함양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에도 다수의 인문학자는 문헌을 분석하고 논문을 작성하는 작업만을 인문 교육과 연구의 주요 핵심 영역으로 인정하고 활동하고 있다.

○ 그동안 인문학, 사회과학의 위기를 외친 많은 인문사회영역 교수들은 말로는 위기를 운위했지만 실제로 얼마나 위기를 느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알기 어렵다. 인문학도 사회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적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고 무엇일 수 있는지 충분히 증명하지 않으면, 사회의 지원은 기대하기 힘들다. 그리하면 한국 인문학은 조만간 자연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인문사회학술 연구에서 종종 정부의 정책 연구가 요청하는 특정한 이념적, 정책적 기능 수행이 강조된다면 자율적 연구가 축소되거나, 혹은 정부 정책 기조에 맞는 연구가 늘어나기에 상대적으로 비판적 관심사가 주변화 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학술 연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물론 많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 정책에의 조응 여부가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연구 자체의 양이나 연구 방향에 영향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다.

○ 한국의 인문학이 내부의 분과학문별 “전문화”와 “폐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구에서 지나친 전문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인문사회학자들이 사회가 요구하는 과도한 평가 잣대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 전체보다는 스스로 분야를 좁혀 전문화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중요한 인문학의 본령을 놓치는 경향이 있다.

○ 연구자의 창의적인 주제 설정이나 자유로운 지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 대학 거버넌스와 연구자 및 연구 문화(연구윤리 등)의 타락이 상존한다.

□ 국가의 인문사회학술 정책과 지원 문제 : 우리 연구진에서 수행한 전문가그룹 서면 인터뷰의 답변 가운데는 한국의 인문사회학술 정책과 지원 문제를 언급한 내용이 적지 않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의 인문사회과학은 선진국의 ‘선도형’ 모델 구축에 기여하기는커녕 한국 대학 전반의 위기와 함께 생존의 위협에 처해 있으며 육성정책도 부재하다. 여기에는 정부 수립 이래 한 번도 제대로 된 인문사회학술정책이 없었고, 압축적 경제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입국’의 구호 아래 과학기술 분야에만 집중 투자가 이루어져 왔던 자금의 상황이 큰 영향을 미쳤다.

○ 학술에 대한 장기적, 계획적 안목 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른 정책 입안과 학술 연구가 실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 결과 학술 연구 및 학술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때에

따라 급속히 변화함으로써 장기적인 안목이 절대적으로 취약하다. 그 결과 인문사회학술에 대한 지원들이 서로 연결되어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파편화되어 단편적으로 시행되다 보니 투입되는 재원에 비해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철저하게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학술 연구 및 학술 정책이 입안되고 그에 따라 실행됨에 따라 시스템화된, 그리고 규격화된 연구 성과물이 쌓여가고 있다. 또한 견고한 ‘학진 시스템’에 갇혀 연구자들이 움짱달썩할 수 없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이루어지는 지원이라도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기업-시민사회로 이어지는 일종의 인문사회학술 지원의 생태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정 작업이 시급히 필요하다.

○ 인문학자로서의 열정과 정체성을 뒷받침할 정책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편중된 학술 지원 정책과 인문사회 학술 정책 부재에 따른 예산의 부족과 불안정성 문제가 상존한다. 인문사회분야는 이공계 분야와 비교할 때 너무나 적은 연구비가 책정되어 있으며, 국가 R&D 예산 비율이 심각하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인문사회 연구자들은 학술연구비 수주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연구비의 왜소성은 인문사회계 연구자들이 장기지속적인 학술연구를 하지 못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학이 인문학 영역과 인력을 축소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정책도 이를 방조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는 더 가속화되고 있다.

○ 국가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인문학 연구의 방향을 수립하고, 인문학 분야 집단연구 지원 사업 새로운 모델 설계의 기초 자료 제공하며, 인문학 분야 집단연구 지원 사업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신규사업모델 개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문학 사업에 참여 경험자, 인문·사회과학의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신진·중진 연구진들과 신규 모델 개발을 위한 학제 간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전문성과 현장성을 기반으로 한 분석을 토대로 새로운 인문학 지원 사업 정책에 활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2.2. 인문학의 대학에서의 퇴출, 대학의 위기 심화

□ 한국사회 차원에서 보면 개발지상주의적 사고에 입각한 경제 발전이 한계에 도달하고, 경제적 양극화 현상과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정치·사회적 민주화의 지체와 퇴보 등 그 부작용이 사회적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수립하기 위한 사회적 윤리와 시민의식의 정립이 절실하다. 공교육 차원에서 대학은 미래 시민을 배출하는 마지막 도량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와 같이 고등교육이 대중화되고, 대학 진학생이 70%를 넘는 상황에서 대학의 이러한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 더불어 한국사회에서 대학이 해온 고유한 역할과 기능, 즉 사회에 대

한 비판과 견제, 사회적 요청에 따른 학문적·실천적 대안의 제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진지하게 되살릴 필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현실은 이러한 필요성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 한국연구재단은 2022년 12월 NRF 이슈 리포트 「지방대학의 인문학 위기에 대한 고찰-대구·경북과 광주·전남 지역 대학의 현황 및 일본의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⁵⁴⁾을 발간했다.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지역 소재 4년제 대학교의 인문대학 운영 현황과 교육 과정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이들 지역의 마주한 대학의 위기는 현재 우리나라 대학이 마주한 바와 기본적으로 궤를 같이하고 있다. 예컨대 이러하다.

○ 대다수의 지역대학의 인문대학은 단과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점 국립대를 제외한 대학에서는 인문학 관련 학과들이 다른 단과대학과 통합되거나 폐지되는 등 명맥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 방면에서는 학부 전공과 교양교육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 방면에서는 학문후속세대 양성 기능이 마비 직전에 놓여 있다. 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 대학의 인문학 관련 단과대학이나 학과, 학부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곧 대학에서 인문학 관련 교육단위와 연구단위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문학은 전국적 범위에서 학문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현재 대학 내 교육단위로 살아남은 인문학 관련 학과들은 사회적 수요가 큰 전공과의 융합이나 취업 중심으로의 커리큘럼 전환 등을 기반으로 변신과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⁵⁵⁾ 그러나 이는 근본적 차원이 아닌 ‘대증(對症)적’ 차원에서 마련한 임시적 조치로서의 성격이 강한데다, 이러한 변신의 노력이 입학률이나 취업률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여러 양태의 자구책이 별 효험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이다. 게다가 그 실효성에 대하여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글로벌대학 30 사업’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의 인문학 지원책도 이러한 위기를 구조적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대학에서의 인문학 내지 인문사회계열 관련 학과의 통폐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인문학 내지 인문사회계열 관련 학과의 입학 정원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 교육부의 관련 자료⁵⁶⁾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4년제 대학에서 통폐합되거

54) 한국연구재단, NRF ISSUE REPORT-2022-20, 2022.12.15.

55) 가령 기존의 인문대학을 ‘AI인문대학’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AI인문대학에 대하여는 “가천대, 국내 최초 ‘AI인문대학’ 설립”, 『헤럴드경제』, 2023.12.14. 참조.

56) 도종환 국회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일반대 학과 통폐합·신설 현황’(2023년).

나 신설된 학과는 4108개였다. 이 중 인문사회계열 학과 통폐합이 763건에 달해 가장 많았고 이 과정에서 어문 계열 학과가 많이 통합되거나 사라졌다. 영어영문학과나 실무영어 전공을 주로 하는 영어학과가 51개 통폐합됐고, 중국어과(36개)와 일본어과(27개), 러시아어과(10개) 및 프랑스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아랍어 관련 학과도 아시아나 유럽학과, 유럽중남미학부, 아시아중동학부 등으로 통폐합되거나 아예 없어졌다. 대학 어디나 있던 국어국문학과는 전국적으로 아예 없어지거나 문예창작과 등과 합쳐진 곳이 12곳이다. 이 과정에서 정원이 줄었음은 당연하다.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2013년 13만 3215명이었던 인문사회 계열 입학 정원은 지난해 10만 6692명으로 20% 줄었다. 전체 대학 입학 정원이 10년간 3만 명 정도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전체 입학 정원에서 인문사회 계열이 차지하는 비율은 39.1%에서 34.3%로 감소했다.⁵⁷⁾

■ 범위를 2019년부터 2021년으로 국한하여 대학에서의 학과 통폐합 양상을 살펴보면 대학 학과의 통폐합이 지역대학과 기초학문의 무덤 역할을 하고 있음을 목도할 수 있다. 교육부의 관련 자료⁵⁸⁾에 따르면, 위 기간 동안 전국 일반대학에서 700개 학과가 통폐합됐고 통폐합 사례 700건 가운데 539건(77%)이 비수도권 대학에서 이뤄졌다. 통폐합 건수는 2019년 130건, 2020년 242건, 지난해 328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통폐합 학과 700개 가운데 다른 학과와 합치는 과정 없이 단순 폐과한 경우가 230건(32.9%)으로 가장 많았다. 통폐합 건수를 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 284건, 공학 190건, 자연과학 130건 순으로 나타났고, 기초학문인 인문사회계열(211%)과 자연과학계열(289%)은 2019년 대비 2021년도에 통폐합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⁵⁹⁾

○ 오늘날 대학은 더는 지식이나 정보가 유통되고 생산되는 주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식 생태계의 중심도 아니며 지식의 독보적 공급원도, 핵심 소비처도 아니다. 기존의 유아교육과정부터 초등, 중등, 고등교육과정 모두에서 익힌 지식의 대부분은 정확성과 확실성을 덕목으로 삼고 있지만, 오늘날 요청되는 지식의 덕목은 신속성과 가변성이다.⁶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세간의 변동과 확장 등으로 지식의 유효기간은 빠르게 단축되고 있으며, 그 형질도 계속 변이되고 있다. 특정한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어떠한 지식을 어느 정도까지 습득했는 가보다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최신 지식과 기술의 재빠른 습득과 시의적 갱신, 활용의 능

57) “영어학과 51곳 통폐합… 시학과 54곳 신설”, 『조선일보』, 2023.01.11.

58) 도종환 국회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일반대학 학과(학부) 통폐합 현황’(2022년)

59) “최근 3년간 700개 학과 통폐합… 77%가 지방대”, 『대학지성 In&Out』, 2022.09.20.

60) 위키피디아 공동 창설자 지미 웨일스의 “위키피디아를 잘 쓰는 방법은 지식의 최종 지점이 아닌 출발 지점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언급이 이를 잘 말해준다. 사실 이는 위키피디아의 지식만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 모든 지식에 해당된다. 인용은 신상규, 앞의 논문, 98쪽.

력이 중요해짐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는 엘빈 토플러의 통찰처럼 ‘지속적 학습능력(learning ability)’을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 됐음을 말해준다. 대학이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또한 대학의 위상이 재고되고 조정되어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기존의 고등 교육기관이자 종국(終局) 교육기관이라는 대학의 위상은 평생공부 사회의 n개의 교육기관 중 하나로 그 위상이 재조정돼야 한다. 물론 ‘제1 직업’, 평균적 시민 양성 등을 위한 교육이란 대학의 기존 교육목표와 중점을 폐기할 이유는 없지만, 평생고등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기초지력’의 구비와 이의 갱신, 진보를 자기 주도적으로 지속해갈 수 있는 역량의 구비를 그만큼 또는 그보다도 더 앞세워야 한다. 기존의 지식 전수 기반 교육 콘텐츠도 역량 구비 기반의 그것으로 재편해야 한다. 인문학 교학에서 오랜 세월 동안 근간을 이뤄왔던 읽기와 쓰기 중심의 교수방법도 전통적 어문 문해력과 디지털 문해력, 예·체능적 역량, 공작(工作) 역량 등을 유기적으로 엮은 ‘짓기(poiesis)’ 기반 교수방법의 일환으로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 대학을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대학에 요구되는 바가 이렇함에도 오늘날 대학의 현실은 벌써 한 세대 가까이 ‘미·적분을 모르는 이공대생, 장편을 못 읽는 문과대생, (고시열풍→)전문 대학원 진학 풍조 심화, 스펙 쌓기’ 같은 표현을 매개로 운위된다. 이러한 현상은 ‘청년 백수’, ‘n포 세대’, ‘기울어진 운동장’, ‘유리천장’, ‘개천에서 용 나지 않는 사회’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 내지 병폐 등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⁶¹⁾ 오늘날 대학의 위기는 거시적으로 세계사적 변화, 한국 사회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난 세기 말부터 일상생활 수준에서 본격으로 구현된 지식정보 사회의 도래와 세계화라는 현상은 21세기 전환기를 거치면서 본격화된 디지털 대전환과 맞물리면서 지식의 생산과 유통 양식을 크게 바꾸어 놓았고, 그 당연한 귀결로 지식 자체의 존재 방식도 바뀌었다. 지식과 정보가 전 지구적 이윤 창출과 국제적·국내적 질서 구축의 원천이 되었고, 기업은 한층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대학에 관철시키려고 한다. 기업은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재화와 용역의 생산·유통·소비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는 한국 대학의 경우 대학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는 한편으로 ‘대학 특성화’라는 구호 하에 교양교육의 축소, 인성교육의 포기, 기초학문의 고사, 취업 장려 교과목의 증가, 직업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의 증설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 특히 대학교육에서도 변화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61) 대학의 ‘취업학원화’는 한국에만 해당되는 현상은 아니고, 세계사적 맥락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하버드대학의 2009년 입학생 전공 선택 통계에 따르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상위 학과는 경제학, 자유전공, 생명과학, 영문학 순이다. 영문학은 Law School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라고 한다. 또 대학생 학력 저하 등 일본의 사례와 일본 대학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경대의 사례를 분석한 다치바나 다카시, 이정환 옮김(2005), 『도쿄대생은 바보가 되었는가』(서울 : 청어람미디어)가 흥미할 만하다.

○ 대학에서 교양교육으로서의 인문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전공교육으로서 인문학 연구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전공교육으로서 인문학은 문학, 어학, 철학, 역사, 그 어느 분야나 학문적 재생산을 우려할 정도로 교육과 연구가 위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대학원에 진학하는 대학원생 숫자가 나날이 감소할 뿐 아니라, 대학원생들의 수학능력 저하나 학부 전공교육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대학의 현실은 우리 연구진이 수행한 전문가그룹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관련 답변의 몇 가지이다.

■ 대학에서의 인문사회학술 재생산 구조는 생산성을 현저하게 잃어가고 있다. 대학에서 인문학, 사회과학의 위치가 매우 위축되었다. 졸업 후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비인기 학문으로 여겨지게 되면서, 근본과 뿌리를 다루는 학문인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토양이 약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문적 성과를 생산해내는 능력도 지속적으로 퇴보하고 있다. 대학원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줄어들면서 학문의 흐름을 이어가고 발전시킬 다음 세대의 학자들을 산출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 “대학원이 대학원생들이 좋은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제공하는가?”라는 물음에 결코 “그렇다”고 답할 수 없는 것이 한국 대학의 현실이다. 이는 이른바 ‘연구중심대학’도 마찬가지다. 오랫동안 ‘인문학의 위기’를 말해왔는데, 실제 위기의 핵심에는 ‘학문후속세대’의 대가 끊기고 있다는 점이 있다. 인문학의 위기는 ‘대학 내 인문학자’의 위기이며 ‘학문후속세대의 재생산’의 위기로 진단 가능하다.

■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닌 학문공동체인 대학이란 체제가 신자유주의화로 붕괴되고 변질되며 연구자들의 발밑을 받쳐줬던 전통적인 생존 기반이 무너지고 있으나, 국가와 사회는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인구위기는 그나마 남아 있는 대학 체제를 빠르게 형해화하여 새로운 연구자의 학문 공동체 진입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선순환도 기대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 대학원에서 인문학 연구를 전업으로 삼고자 하는 학생들은 날로 줄어들고 있으며, 그나마도 대학원생들의 학업 중단율이 상당히 높다. 박사급 연구자들은 생존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처럼 실제 인문사회학술의 주체가 되어야 할 “학문후속세대”가 연구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특히 인문학 전공자들은, 예를 들면 사회과학 전공자들에 비해 학자로서의 정체성과 생존 측면에서 실제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인문학자로서의 열정과 정체성을 뒷받침할 정책적 지원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 인문사회 분야는 여성 연구자 비율이 상당히 높은 분야임에도 여성 연구자가 연구자로서

의 자기 경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기 쉽지가 않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다.

○ 이러한 대학의 위기라는 진단은 우리 연구진이 수행한 전문가그룹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관련 답변의 몇 가지이다.

■ 인문사회학술 관련 학과 수뿐만 아니라, 전임교원, 입학 정원도 모두 감소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의 재정 악화로 인해, 학생들의 지원율이 낮아지면서 인문학 분야가 지속적으로 위기 상황에 방치되면서 연구자들의 자존감이 낮아졌고, 그 결과 지적 자부심과 사명감까지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인문사회 분야의 학문 붕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학문 공동체의 와해를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된다.

■ 우리나라는 국가와 사회의 각종 생활 및 활동 영역에서 급변하는 경제상황과 생산력 발전 그리고 취업의 기회와 질의 측면에서 특히 '자기계발'에 대한 욕구와 수요는 항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방면에서 요구되는 '자기'에 대한 제안과 권고에는 '각자의 스펙을 높이는 인문적 소양'과 '특히 시장과 정치변동과 관련된 사회정세에 대한 정보와 독해 능력'에서 우러난 통찰과 판단들이 다채롭게 스며들고 있다. 현재 한국 대학들의 인문학 교육 및 연구 체계는 현재의 이런 다양한 수요와 다채로운 욕구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데는 여전히 미흡하다.

■ 대학의 위기는 인문학으로 전가되고 있다. 대학의 구조조정이라는 위기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취업과 연계되지 않은 인문학 관련 학과는 통폐합되고 있으며, 이에 인문학계는 학과와 전공의 존속을 위해 궁여지책으로 응용, 실용 학문과 제휴하거나 통폐합되어 낮설기 그지없는 학과, 전공 명칭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기도 한다.

■ 인문사회학술 평가에 대한 사회의 왜곡된 인식과 더불어 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이라는 개념이 교육에서 강조된 결과 대학 교육의 핵심 교과목들이 배제되는 등 인문사회 교육에 대한 포기가 심화되고 있다.

■ 대학 입시제도조차 문과를 경시하는 풍조가 팽배해 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입시생들이 이과를 선택함에 따라 우수한 학술 연구 인력이 부족해져 가고 있다. 특히 '의대 몰입'은 순망치한처럼 모든 인문사회과학의 존재에 위협적이다.

■ 최근 정부에서 대학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글로벌대학 30' 사업은 향후 지역 대학에서의 기초 학문 분야의 성패, 나아가 존속 여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기초학문의 물질 조건이 교육인 한에서 그것은 언제나 위기에 놓여 있었다. 대학이 세워진 것은 중세 시대부터다. 중세 대학에서의 교육 목적은 유식한 성직자를 길러내는 것이었다. 이는 지식 독점을 통해서 세속 세계를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교회의 이해관계에 잘 맞아 떨어졌

다. 교육의 핵심은 해석의 독과점을 점유하는 것이고, 경전 암기를 기본적 특징으로 한다. 르네상스 인문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중세 대학의 교육 방식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암기 위주의 교육 방식은 연구를 기반으로 한 교육 방식으로 대체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대체 과정을 통해서 중세의 대학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대학이 출현하는데, 이 대학이 1800년에 세워진 훔볼트 대학이다. “교육과 연구는 하나다(universitas)”가 훔볼트의 핵심 생각이었다. 그래서 대학은 이제 더 이상 경전과 고전의 암기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교육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새로운 사회, 새로운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것과 아주 잘 맞아 떨어졌고, 특히 당시의 대학 교육이 수행하고자 했던 교육 목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작동했다. 당시 대학 교육의 목표는 기본적으로는 시민 혁명의 영향을 받아 교양 시민 양성에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산업화에 필요한 과학과 기술을 연구해 기업과 국가에 그것을 제공하자는 것이었다. 교육 방식은 인문학의 경우, 공동체 의식과 비판적 사고를 길러주는 방향에 그 중점을 두었다. 자연과학의 경우 적극적인 실험과 탐구에 그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기본 토대 위에서 대학은 사회 질서와 변혁을 주도하는 집단으로 자리 잡았고 지식 생산의 주요 공급원으로 자리 잡았다.

○ 사회의 주도 세력으로서 대학에 위기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차 세계 대전 이후이다. 본격적으로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반이라고 학자들은 말한다. 그리고 지금은 그야말로 대학 자체의 위기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위기가 만성화되었기 때문에 위기 자체를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이 더욱 위기일 것이다. 근본적으로 현대 대학의 위기는 물론, 대학이 더 이상 사회 변혁과 질서를 주도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점이다.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 혹은 영향력 있는 인사에 대학 총장이 거명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목소리의 주도권에서 대기업 CEO들에게 밀리는 것은 오래된 이야기다. 심지어는 운동선수에게도 밀린다. 뿐만 아니다. 연구 분야에서 지식 시장의 주도권 문제에서 그 헤게모니를 상실했다. 지식의 생산과 주요 공급원으로서의 지위도 기업의 연구소들에게 빼앗겼다. 증권을 다루는 뉴스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는 교수들의 얼굴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또한 의사소통매체의 다변화로 지식 분배의 터미널 역할도 전문 분야를 제외하고는 이미 상실했다. 인터넷 포털 사업체들이 이제는 지식 분배의 터미널로 기능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들의 사업 분야를 지식 산업이라고 칭한다. 심지어 대학의 고유한 기능인 교육 분야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단적으로 외국어 교육 시장을 보자. 영어회화 교육의 경우, 사교육 시장이 이미 공교육 시장보다 시설과 제공하는 콘텐츠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우수하다. 여기에서 보편적 시민교육에 중점을 두었던 교육은 직업 문제에 그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데 그 위기가 잘 나타난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교양교육 자체도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나온다. 인문학의 위기니 교육의 위기니 하는 소리들이 말이다.

2.2.3. 학문의 위기, 인문의 위기, 인간의 위기

□ 학문의 위기는 곧 인문의 위기

○ 한 세대쯤 전에 제기된 인문학 위기론이 근자에도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한 세대쯤 전이나 지금이나 위기에 처한 것이 과연 인문학인지 아니면 인문학자, 특히 제도권의 인문학자인지에 대한 논의도 여전하다. 그런데 인문학이 결코 인문과 등치될 수 없음을 감안하면, 곧 인문학은 인문의 일부이지 그 전체가 아니므로 인문학이 위기라고 하여 바로 인문도 위기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21세기 전환기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서 인문도 위기 속으로 결코 늦지 않은 속도로 빠져들고 있다. 인문학의 위기뿐 아니라 ‘인문의 위기’가 확산, 심화되고 있음이다.

○ 한 세대쯤 전인 지난 세기 90년대는 전 지구화, 신자유주의 등의 물결이 우리를 본격적으로 삼키기 시작한 시절이었다. 이후 30년 가까이 그러한 물결은 날로 거세졌고 계층이동 탄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금수저’ ‘기울어진 운동장’ ‘유리천장’ 등으로 대변되는 기득권 구조의 고착화가 심화되지 사회는 날로 금력 추구에 휩싸였다. “기-승-전-전[錢]”의 풍조가 기세를 더해갔고 즉시적으로 별 도움 안 된다는 이유로 인간다움의 가치는 뒷전으로 밀렸다. 학문도 마찬가지다. 지식기반 사회가 꾸준히 진척됨에도 학문과 그 기반인 삶의 가치는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인문학 위기론에 이어 언제부터인가 사회과학의 위기니 기초과학의 위기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대학의 위기도 심화 일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인문학의 위기론에 현혹되어서도 매몰되어서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진 셈이다.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학문 전반의 위기가 인문학을 매개로 표출되었을 따름이기에 이를 인문학의 위기로 축소하는 건 타당치 못하다는 얘기다.

○ 인문의 위기는 대학에서 학문의 위기로 구체화되어 심화되고 있다. 대학에서는 교양교육이 축소되고 있고 인성교육이 방기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비인기 학과의 통폐합 등으로 기초학문이 고사되고 있으며, 그 반대편에서는 취업 실무 교과목, 직업기술 인력 양성 등을 위한 학과 등이 증가하고 있다. 기초학문 분야의 입학 정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대학원 진학 수는 한층 현격하게 줄어들어 학문후속세대의 대궐길을 걱정할 정도에 이르렀다. 대학이 전문화된 지식 전수의 장에서 나아가 지식 생산 방식과 지식의 주체적 활용법을 일깨워주고, 피 교육자가 스스로 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곳이 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정도 대신에 절대 다수의 대학은 대학의 수명을 단축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신하고 있다.

○ 다음은 우리 연구진에서 수행한 전문가그룹 서면 인터뷰의 답변 가운데 학문의 위기, 인문의 위기와 관련하여 제시된 대목이다.

■ 학계의 재생산이 위기에 빠졌기에, 학문의 생산도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그전까지 학문이 얼마나 존재 의미를 내보였는지는 알기 어렵다. 답론장에서 ‘잡지’ 혹은 ‘문예지’를 중심으로 20세기 후반에 진행되었던 활발한 대사회적 논의는 사라진 지 오래고, 필자와 심사위원밖에 읽지 않는다고 자조하는 ‘논문’이 학술 활동의 거의 전부가 된 상황에서, 과연 사회에 손을 뻗쳐 인문학을 구원해달라고 말할 염치가 있는지 궁금하다.

■ 우리나라에서 인문사회 분야(인문, 사회, 예술, 체육 분야 포함) 연구교육의 생태계는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랫동안 군사독재의 반민주화와 국가발전주의 전략에 따른 경제성장주의와 물신주의는 인문사회학술 전반에 대한 국가적 몰이해가 덧붙여지면서 인문사회학술 자체에 대한 가치 폄하와 미숙한 사회적 인식 등이 확산되어 왔다. 여기에 최근에는 연구의 실용성이 강조되고 경제적 측면에서 대학을 평가하는 풍토가 심화되면서 인문사회학술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더욱 낮아지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과 경제에 대한 연구가 우대되면서 인문사회학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 그 결과 한국사회에서는 인문사회학술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부재하고, 인문사회학술이 지닌 공공성 및 공익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고,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 역량의 성장보다는 시대적 조류에 편승하는 사고의 가벼움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인문사회학술은 우리 사회에서 적절한 사회적 위상을 획득하는 데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이유이다.

□ 학문의 위기는 곧 인간의 위기

○ 인문학 진흥을 위한 여러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은 근본적으로 인문학이 인문교육과 유리되어 있는 교육구조가 변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한마디로 인문학과 인문교육의 유리가 인문학 진흥책이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해내지 못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라는 뜻이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인문학 연구가 학문후속세대로 이어져야 하고, 이들의 연구 성과가 지속적으로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과정의 인문교육에 자양분으로 공급되어야 함⁶²⁾에도 현실은 그러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인문학의 역사와도 부합한다. 인문학은 인문교육에서 유래했다고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인문학은 본래 인문교육의 심화와 고양을 위해 탐구하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가장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적 보편가치의 실현을 도와주는 인문교육을 위해 그 인간적 보편가치의 내용을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

62) 손동현(2009), “인문학과 인문교육의 동원성 회복을”(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포럼』 제4호), 22쪽.

곧 인문학이라는 말이다. 교회의 지도자인 성직자 양성을 목표로 한 서구에서든, 국정을 담당할 공직자 양성을 목표로 한 동아시아에서든, 동서를 막론하고 고등교육기관에서는 후대의 젊은이를 지성과 덕성을 갖춘 성숙한 인격체로 육성하여 공동체와 세계를 이끌어가도록 책임 지우는 것이 교육의 근본 목표였고, 인문학적 탐구는 바로 이런 인문교육의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었다.”⁶³⁾ 물론 우리 대학들도 인문교육의 이러한 목표에 동의하고 인문학이 이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문제는 실제 현실이다. 절대 다수의 대학에서 인문학 교수들은 학생들로 인간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통찰과 안목을 갖도록 하는 일반적 교양의 핵심을 다루는 인문교육보다는 전공으로서의 인문학 교육에 우선순위를 둔다. 전공 인문학 교육과 교양으로서의 인문교육을 확연히 구분한 후 전자에 더 높은 학술적 가치를 부여하며 후자를 소홀히 하고 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실증과학의 영향 아래 인간의 삶에서 합리적 탐구대상이 되는 부분만을 연구 대상으로 봄으로써 인문학적 성찰의 본래적 주제인 인간 자체를 상실하였다.⁶⁴⁾ 곧 인문학의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인 대학의 인문학 교수들이 인문학을 인문교육과 유리 시킴으로써 인간의 위기 초래를 거들었던 것이다.

○ 학문의 위기는 곧 인문의 위기이고 이는 인간다움의 위기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는 단순히 제도권 인문학 자체의 위기만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오늘날 인문학이 홀대받는 것은 위대한 인간이 인문학을 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도구적 인간이 인문학 무용론을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권의 인문학이 죽어도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인문학이 존립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제도권 인문학의 몰락은 동시에 인간다운 삶의 붕괴와 직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제도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자라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 되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교육을 받지 않아도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다면 몰라도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인간다움이 실현된다면 제도권 인문학은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⁶⁵⁾ 이러한 제도권의 인문학은 이제 ‘융복합’, ‘학생 선택권 강화’와 같은 명분 아래 확실하게 붕괴되고 있다. 인접 학문인 사회과학이나 기초학문으로 묶일 수 있는 자연과학 등과의 유기적·건설적 결합을 위한 해체도, 분과학문으로서의 인문학이라는 위상과 성격을 지양함으로써 제반 학문의 기초라는, 또 삶과 사회의 기초라는 위상과 성격을 지니는 기초학문으로서의 인문학을 향한 해체도 아니다. 그 결과 인문학은 대학에서조차 인간이 인간답게 성장, 성숙, 진보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문명의 본격적 전개로 인하여 ‘다음 인간(post-human)’, ‘다음 사회(post-society)’에 대한 인문학 기반 통찰과 연구, 교육이 절실함

63) 손동현(2009), 위의 글, 22쪽.

64) 손동현(2009), 위의 글, 24쪽.

65) 김석수(2008), 앞의 글, 93-94쪽.

에도 그 주요 진지여야 할 대학에서조차 유의미한 수준에서 이들이 수행되고 있지 못하다. 인문의 위기로 인한 인간의 위기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자못 높은 까닭이다.

2.3. 선진성을 구현하지 못한 선진국, 한국⁶⁶⁾

□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2021년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 68차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의 결정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 회의에서 한국은 1964년 유엔무역개발회의 설립 이래 처음으로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가 변경되었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일구어낸, 세계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성취를 이룩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는 세계 242개 국가 중 국민소득(GDP) 순위 10위권, 제조업 경쟁력이 5위권 인데다가 세계에서 단 7개 국가만 있다는 ‘30-50 클럽’(GDP 3만 불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의 가입국이기도 하다. 국방력도 10위권 이내인 지 제법 되었고, 근자에는 K-팝, K-드라마 등 한류의 높은 인기로 힘입어 한글 등 한국문화의 국제적 확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선진국에 가입할 만한 조건이 충분했음이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범위를 한국의 인문학으로 줄이면 여전히 국제적 난제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무관심하다. 평화 실현, 공존공영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고자 한다. 다양성,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문적 차원의 대비가 미흡하고, 국내외적으로 발신하는 원천 지식과 기술도 빈약하다.⁶⁷⁾ 그 당연한 귀결로 국제사회에 통용 가능한 보편적 가치, 지식 제공 역량도 미흡하며, 그렇다보니 한글문화의 국제화라든지 국제적 ‘문화리더국가’로서의 비전 제시나 실천이 빈약하다. 국내적으로는 정책부문에서의 역량도 강하지 않고, 디지털문명의 본격 전개로 인하여 그 필요성이 점증되고 있는 ‘인문복지’도 미흡하다. 단적으로 정신적, 문화적으로는 선진국의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문명국가’ 단계에 올라서지 못한 것이다.

66) 이 절은 위행복 등(2022), 『인문사회 학술의 종합적 분석을 통한 문명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인문사회 학술의 역할과 방향 재정립』(한국연구재단), 164-182쪽에서 발췌, 수정 보완하였음.

67) 이는 우리 연구진이 수행한 전문가그룹 인터뷰의 다음과 같은 답변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우리나라에서 인문사회 학술은 ‘퍼스트 팔로워(추격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서구 산업 사회가 축적해 놓은 자산을 모방하고 수용하며, 이미 성공한 길을 따라가며 실패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즉 미지의 새로운 분야를 창조해내고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산업을 선도하는 ‘퍼스트무버(선도자)’로서의 역할을 해보지 않았다.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다.”, “한국 인문학계는 여전히 원천 자료에 근거한 인문학적 원천 기술을 축적하지 못했다. 인문학적 기준과 표준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인문학,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연구에 매진해 왔으나, 많은 분야에서 아직 독자적인 연구 방법과 이론을 생산해내거나, 세계 학문의 주류에 포함되어 논의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답론의 학습자, 소개자, 유통자의 위치를 넘어서, 새로운 답론의 생산자인 학자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

2.3.1. 초갈등사회, 소모사회 한국

□ 작금의 한국사회를 개괄할 때 ‘피로사회’, ‘위험사회’ 같은 표현이 곧잘 사용되어 왔다. ‘헬조선’, ‘금수저·흙수저’, ‘기울어진 운동장’, ‘유리 천장’, ‘열정페이’ 등도 우리 현실의 부조리, 불공정, 모순을 잘 드러내준다. 여기에 우리 사회는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이념·지역·세대 간 갈등이 조장되어 왔다. 근자에 들어서는 여기에 성별 간 갈등이 조장되고 있고, 중국이나 이슬람교도에 대한 감정적 반응에서 보이듯이 다름에 대한 갈등이 혐오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 현대경제연구원이 2016년 세계은행의 국가별 거버넌스지수(WGI: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와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활용해 사회갈등지수를 도출하여 국제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는 OECD 29개국 중 7번째로 사회적 갈등 수준이 높았을 뿐 아니라, 이들 OECD 29개 회원국 평균과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⁶⁸⁾ 우리 사회의 갈등지수가 선진국 가운데 많이 높음은 2018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2005년과 2010년, 2015년 이렇게 3개 년도의 사회갈등 수준을 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핀란드·네덜란드·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아일랜드·스페인·이탈리아·포르투갈·그리스·에스토니아·체코·라트비아·헝가리·폴란드·영국·러시아·브라질·멕시코·남아프리카공화국·튀르키예 등 37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3개 년도 모두 32위를 기록했다. 우리보다 사회갈등지수가 높은 나라는 브라질(33위), 멕시코(34위), 남아프리카공화국(35위), 러시아(36위), 터키(37위) 등이었다.⁶⁹⁾ 2015년, 2016년 이후 우리 사회의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확대되어 왔다. 영호남 사이의 지역갈등이 여전한 상태에서 수도권 대 비수도권 사이의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고, 정규직 대 비정규직 간의 갈등,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이 기득권층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조장되고 더해지고 있다. 단적으로 우리나라는 ‘초갈등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갈등지수가 더욱 커졌음을 말해준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년에 적게는 80조 원에서 많게는 246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⁷⁰⁾ 이 추정치 또한 수년 전의 상황을 토대로 한 것이므로 초갈등 사회 수준으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된 지금,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치르게 되는 사회적 비용도 크게 늘었음을 분명하다.

68) 이부형·박용정(2016), “사회적 갈등의 경제적 효과 추정과 시사점-사회적 갈등 개선으로 3%대 성장 가능하다!” (『한국경제주평』 718권, 현대경제연구원).

69) 박준·정동재(2018), 『사회갈등지수와 갈등비용 추정』,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8권, 114쪽.

70) “[심층인터뷰]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 : 정치가 다양한 국민갈등 키워…사회적 갈등비용도 OECD 최고”, 『위클리 서울』, 2020.04.20.

○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가운데 17년째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은 약 13,000명으로 하루 평균 36.6명, 시간당 1.5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자살 시도자도 갈수록 늘어 보건복지부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자해와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수가 2017년에 비해 2021년에 31.8%가 증가했다.⁷¹⁾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보고서』를 보면 청소년의 걱정, 근심, 우울 등 부정정서는 2017년 2.67점에서 2020년 2.94점으로 대폭 늘었고, 우리나라 청소년(만 15세)의 삶의 만족도는 6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⁷²⁾ ‘우울사회’, ‘불안사회’, ‘불행사회’라고 규정해도 과할 것 없는 상태이다. 단적으로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섰음에도 삶과 생명, 생활이 갖은 부정적 요인에 의해 소모되는 총체적 ‘소모사회’라고 할 수 있다.

○ 반면에 우리나라 헌법은 행복사회 구현을 국가의 의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곧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와 제34조의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및 제22조의 제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등에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되어 있듯이 국가는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권리’ · ‘행복을 추구할 권리’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학문과 예술을 향유할 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헌법은 인간과 인간의 삶, 사회에 대한 제도적 규정의 총화이다. 여기에는 인간의 삶과 사회의 본령에 대한 사유가 담겨 있다. 이러한 헌법에 행복추구권 등이 명기되어 있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반 영역에서 진보와 성숙이 더불어 추동될 때 비로소 국가의 발전이 실현 가능함을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갈수록 이와는 엇갈려 전개되어 있음이다.

○ 우리나라는 현재 다문화·다민족 사회로 본격적으로 전이 중에 있다. 대구의 이슬람사원 건축을 둘러싼 이슬람교계와 지역주민의 갈등처럼 이질적 문화 등으로 인한 갈등과 충돌이 현실화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총인구의 4%를 차지하고,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112만 명을 넘어서면서 다문화 국가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다문화가족도 2021년 기준으로 38만 5000가구에 달한다. 한국 전체 가구 수의 2%에 불과하지만, 그 증가세는 가파르다. … 가구 수는 2016년 31만 6100가구, 2017년 31만 8900가구, 2018년 33만 4900가구, 2019년 35만 3800가구, 2020년 36만 7800가구로 4년 만에 16%가 늘었다.”⁷³⁾ 외국인, 다문화

71) “4년 새 응급실 실려 온 자살시도자 31.8% 늘었다”, 『뉴시스』, 2022.10.04.

72) “청소년 자살률 6년째 증가세—‘삶 만족도’ OECD 최하위권”, 『파이낸셜뉴스』, 2022.12.27. ; “17년째 자살률 1위 대한민국, ‘자살 유가족 지원체계 마련해야’”, 『CTS뉴스』, 2023.01.19.

가족 등은 계속 늘 것으로 추산되는 반면 국내 총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속적 성장과 성숙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를 4500만 명으로 잡을 때, 현재 46% 정도인 결혼결합율을 69%까지 끌어올리고 평균 자녀수가 2.79명이 돼야 비로소 4500만 명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실현 난망한 예측이므로 결국 적극적 이민 유치 정책을 통하여 이민자 비율을 15.8%로 높이면 평균 자녀 수 1.7명으로 인구 4500만 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⁷⁴⁾ 이는 다른 선진국 사례를 볼 때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므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형편이다. 앞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다문화·다민족 사회로의 전이 속도가 결코 늦지 않을 것으로 추산되는 이유다. 다문화·다민족 사회로의 전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이다.

■ 다문화·다민족 사회의 연착륙을 위한 인문의 역할은 해외 인구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더욱더 절실하다. 2022년 9월에 배포된 통계청의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20.6%를 차지하여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⁷⁵⁾ 동시에 인구절벽 현상도 늦지 않은 속도로 진척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1년 합계출산율이 0.81명이었고 2022년에는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였다. 이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급속한 인구절벽이다.⁷⁶⁾ 국내 인구와 관련된 이러한 현상은 노동인구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하고 있고 이는 필연적으로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의 감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수년 전부터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고, 이는 정부가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인 ‘이민청’(가칭)을 2023년에 설치하겠다는 정책으로 수렴되었다. 이제는 유아·초등교육 단계부터 고등·평생교육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문화·다민족 사회에 적합한 교육을 기본으로 시행함으로써 다문화·다민족 사회의 본격적 구현을 준비하고 선도해야 할 때이다. 인문의 진흥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이유이다.

○ 이는 국가 차원에서 다문화·다민족 사회로의 전환이 누구에게나 ‘원-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과 함께 “공생공영 하는 다문화·다민족 사회”의 실현이 가능한 문화의 조성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문화·다민족 사회인 미국의 주요 대학에 적지 않은 규모로 종교·문화 관련 교육단위와 연구단위가 설치되어 있음이 시사해듯듯이 문화는 다문화·다민

73) “다문화가정 내 결혼이민자·귀화자 본인이 여성인 비율 82.5%”, 『헤럴드경제』, 2023. 1. 22.

74) “아이 4명 낳아야 4,500만 턱걸이…이민 받으면 1.7명으로 떨어져”, 『시사기획 ‘창’』(KBS 1TV, 방송일시 : 2023.10.31. <https://v.daum.net/v/20231107070015482>)

75) 2022년 9월 현재 충청남도처럼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자체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충남도 초고령화 사회 진입했다”, 『충남일보』, 2022.09.30. 참조

76) “가팔라진 인구절벽 위기—이민청 설립 공론화 나설 때”, 『세계일보』, 2022.08.25.

죽 간 이질성의 공생과 공영을 가능케 해주는 유력한 사회적 버퍼이다. 이에 다문화·다민족 사회가 진척될수록 인문사회학술의 역할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매우 낮다.

2.3.2. '인문복지'의 미비, 높지 않은 인문적 성숙도

□ 우리 사회는 가면 갈수록 더욱더 '기초지력'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기초지력이라 함은 삶을 영위하고 국가사회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제반 앎을 습득하는 데 기초가 되는 지식과 역능을 가리킨다. 기초지력이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데 요구되는 지식이나 역능만을 가리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기초체력이 단지 엘리트 체육 활동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생활체육이나 노동 같이 일상을 꾸려가는 모든 활동에 필요한 것처럼, 나아가 기초체력이 갖춰져야 삶의 유지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기초지력도 전문적 지식을 익히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지식과 역량이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기초지력을 개인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기본으로 요구된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미래 사회의 핵심 경쟁력의 하나는 '인간경쟁력'이다. 인간의 정신적·문화적 역량의 증강, 인간다움의 심화나 제고 등이 개인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 이르기까지 성장의 주요 근거이자 동력이 된다. 기초지력은 이러한 인간경쟁력을 구비하고 갱신, 제고해 가는 데 핵심 기초이다.

○ 지식이 이윤 창출의 고정자산이 되는 사회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날 지식은 사람을 인간답게 해주는 핵심 근거의 하나였다. 그러나 늦어도 지난 세기말부터 지식은 그러한 인간다움의 고갱이보다는 이윤 창출의 핵심 자산으로 더 각광받고 있다. 국가나 기업 차원에서만 그러함도 아니다. 대학에서 큰 학문의 연마보다는 실용적 지식 중심의 스펙 쌓기가 중시되고 사회 진출 후에도 끈질기게 자기 계발이 요청되고 있듯이, 개인 차원에서도 지식이 생계를 위한 밑천이 된 지는 꽤 되었다. 지식을 익히는 일이 전통적 의미의 공부가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는 활동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사회적 인간으로서 생계를 꾸려가는 한, 지속적으로 지식을 익힐 수밖에 없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에 발생한 현상들이다.

○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문명 조건의 변화 결과 지식 습득의 패러다임이 한창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식 습득에 있어 이전까지는 지식을 필요한 만큼 얼마나 많이 또 높은 수준으로 학습했는지가 관건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빠른 속도로 갱신되는 지식을 얼마나 시의성 있게

빠르게 습득하고 갱신해가며 활용해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갈수록 그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사뭇 중요해지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역량의 구비는 중고등학교나 대학을 다닐 때에만 해야 하는 바가 아니라 대학 졸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갖추고 보완해갈 수 있어야 한다. 생계를 꾸려가는 한편으로 학습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다시 대학 같은 제도권 교육기관에 들어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삶의 조건에서 생활해가면서 그때그때 습득이 요구되는 새로운 지식을 유의미한 수준 이상으로 학습해야 하는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기초지력 함양의 필요성이 재차 강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에 학습한 지식의 양과 질 보다는 스스로 계속 학습해갈 수 있는 역량, 곧 기초지력을 키우는 것이 중고등학교 교육을 비롯한 대학 교육, 평생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 갈수록 ‘스마트’해지는 디지털 기기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그 대표적 예다. 이미 오래전부터 짧지 않은 미래에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 노동 등을 대체하고 대신할 것이라는 예측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물론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인간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견해도 여전히 강하다. 그런데 이때 인공지능이나 로봇과 비교되는 인간은 지적, 기술적, 인격적 역량 등을 높은 수준에서 갖춘 인간임에 유의해야 한다. 일상적 업무를 수행할 때 사람들에게 평균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은 지적, 기술적, 도덕적 역량 등을 높이 갖춘 수준이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평균 정도의 역량을 요구받는다. 따라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일상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인 평균적 수준의 역량만 갖추면 그들은 인간의 일자리를 실제로 위협하게 된다.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역량이 높은 사람에 비해서는 부족함이 적지 않은 지금 수준에서도 그것을 우리 인간의 유력한 경쟁자로 봐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최근 대화형 인공지능 Chat GPT의 놀라운 진보에서 볼 수 있듯이,⁷⁷⁾ 인간이 인공지능, 로봇과 협업한다면 더 나은 삶과 사회의 창출이 수월해질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인공지능과 로봇을 인간의 경쟁자로만 보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서 그들과 협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평생에 걸쳐 학습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과 로봇은 진화를 멈추고 있지 않기에 그것과 능률적으로 협업하려면 그들과 협업하는 방법 등 디지털 문해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가야 한다.

□ 게다가 우리에게도 초고령 사회가 임박해 있다. 100세 시대의 도래가 운위되듯이 노년의 삶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 평생직장 패러다임이 붕괴된 지 자못 되었고, 사회 진출 후 첫 직업으로 평생의 삶을 지탱하는 시절도 지나갔다. 제2, 제3의 직업을 가질 수 있거나 아니면 평생직업이 가

77) “무섭게 진화하는 ‘초거대 AI’…의료·법률 분야도 넘본다”, 『파이낸셜뉴스』 2023.01.31.

능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기초지력의 구비는 공부라 생계 그리고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랬을 때 비로소 생활수준이나 여건 등에서 비롯된 디지털 문해력 같은 지식의 편차가 소득과 사회적 지위 등의 차이로 이어지는 구조적 지식 불평등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 단적으로 국가사회 차원에서 ‘인문복지’의 실현이 필요하다. 디지털문명-지식기반사회의 본격 전개에 따라 평생복지의 차원에서 차별 없이 문명의 이기를 활용할 수 있는 인문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 대전환·바이오 대전환·에너지 대전환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 혁명이 진척될수록 인문학의 역할이 증대될 필요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한 국가정책이 전무하며, 관련 논의조차 본격화되고 있지 상황이다.

□ 인문적 성숙도가 높지 않은 사회가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가짜뉴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비용에서 밝히 목도되듯이 문자 그대로 천문학적 수준에 달한다. 인문적 성숙도가 높지 않은 사회는 또한 해외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정책, 지역소멸 위기 극복 정책 같은 중장기적 국가 기획이나 정책 지속의 실현을 어렵게 만든다.

○ 가짜뉴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당시 30조 원을 넘어선다고 할 정도이다.⁷⁸⁾ 또한 개인 차원부터 국가 차원에 이르기까지 성장,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상실로부터 야기되는 손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가짜뉴스 등 인포텍믹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되짚어보면 쉬이 체감할 수 있다. 그런데 가짜뉴스 등은 인문적 성숙도가 낮은 사회일수록 더욱 성행하고 그것이 야기하는 폐해가 한층 큼은 주지의 사실이다. 인문학은 비유컨대 인포데믹을 유발하는 가짜뉴스 등에 대한 ‘사회적 백신’이자 치료제이다. 동서고금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인문학은 한 사회의 인문적 성숙도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이다.

○ 선진국 단계에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일구기 위해서는 어느 정파가 집권하는지와 무관하게 국가의 현실 개선, 미래 기획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가령 중국의 대체제로 부각되고 있는 인도와 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의 아세안에 대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기획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중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인도+아세안’은 2018년 기준 인구가 20억 7000만 명이고, 총GDP는 5조 7000억 달러로 일본의 4조 9000억 달러보다는 많지만 중국의 13조 6000억 달러, 미국은 20조 5000억 달러보다는 적다. 하지만 연평

78) “가짜뉴스, 사회적 비용 연 30조 원”, 『스포츠크항』, 2017.03.20.

균 성장률 5-7%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0년가량 지나면 경제 규모는 두 배가 되어 2030년 쯤 10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의 대체제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충분한 지역인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정책은 국가의 부강한 미래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정파와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한다.

○ 급속하게 진행되는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2022년 3월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3곳이 소멸 위험지역이며 이중 45개 지역이 고위험 지역이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구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해소되지 않음에 따른 결과이다. 서울이 갈수록 권력과 재력, 문화의 집적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한 지역소멸을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면 지역의 붕괴는 늘 중앙의 붕괴를 야기했다. 나라 전체의 붕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살리기는 정권의 이해관계 차원이 아니라 국가 존망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래야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지역 살리기를 위한 꾸준하고도 지속적 정책 집행이 가능해진다.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각종 이로움을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을 다수 지역에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 30년을 내다보며 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2.3.3. 선도국가, 보편문명국가라고 할 수 없는 한국

□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우리나라는 이제 ‘선도국가(First Mover Country)’로서의 정체성을 명실상부하게 실현해야 한다. 그랬을 때만이 ‘선진국다운 선진국’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 갱신, 제고해갈 수 있다. 여기서 선도국가란 정신적·물질적 차원 모두에서 수월성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고, 보편적이면서 동시에 독자적 문화를 창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갱신해갈 줄 아는 나라를 가리킨다.

○ 선도국가는 곧 ‘보편문명’을 창출하고 이를 국내외적으로 발신하는 국가이다. 보편문명은 생존과 생활을 위하여 문화를 빚어냄에 그 소산이 민족과 지역의 경계를, 이념과 종교의 경계를, 나아가 국가와 문화권을 넘어서서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활용되며 로컬 차원에서 변용될 수 있을 때 비로소 구현된다.

○ 보편문명국가는 자신에게 고유하면서 동시에 세계가 수용, 활용할 수 있는 문화를 바탕으로 구현될 수 있다. 지난 세기 말부터 시작된 한류(韓流)가 지역으로는 중화권을 넘어 세계 각지로, 분야로는 드라마, 가요를 넘어 영화와 음식, 복식 그리고 한글 등 다양한 영역으로 20년 넘게 세계로 확산되고 있음은 한국 문화(K-Culture)가 보편문명국가로서의 한국 구현에 탄탄한

원천이자 자산이 될 수 있음을 확실하게 증명해주었다. 이는 ‘글로벌 한글문화권’ 창달이 실현 가능한 현실임을 말해준다.

○ 글로벌 한글문화권의 창달은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으로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동아시아의 양대 강자인 중국은 전근대시기부터 유서 깊은 중화문화권을 형성해왔고, 일본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지난 세기 70년대부터 일본문화의 글로벌화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이는 글로벌 차원에서 한글문화권의 창달에 실패할 경우 한국이 이들 중화문화와 일본문화의 아류로 전락될 개연성이 높음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한창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는 K-Culture를 매개로 한글의 국제적 확산, 국제적 학술어·문화어로서의 한국어 구현, 한국발 지식과 학술의 국제적 보급, 짧은 기간에 민주화 산업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이룩해낸 한국 현대화 경험의 글로벌 공유와 같은 과업을 국가사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기존 선진국은 모두 인문학을 기반으로 문화가 성숙한 나라이며 보편문명국가라는 지향을 구현하고 있음을 통해 이미 입증된 것처럼 인문학은 ‘선진국-선도국가-보편문명국가’ 구현의 원천이자 주동력원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한국은 물질적 차원에서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을 지라도 보편문명국가로서의 선도국가라고 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 디지털 대전환·에너지 대전환·바이오 대전환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문화이다.⁷⁹⁾

○ 이때 문화는 사회경제적 활동과 구별되는, 이를테면 연극, 영화, 문학, 음악, 미술, 건축 같은 전통적 범주로서의 문화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오늘날 문화는 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성찰하고 미래의 창조적 가치들을 생산함으로써 인간과 사회의 존재방식과 실천방식을 새롭게 구성하는 능력들의 총체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문화는 인간학적 위기와 사회적 갈등, 국가적·글로벌 차원의 난제를 해결하는 통합적 요인으로서,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경제적 원천으로 제공하는 창조적 요소로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에너지 대전환·바이오 대전환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곧 ‘문화의 시대’인 것이다.

○ 문화적 가치는 미래세에는 물론 현재에도 이미 글로벌 경제의 주요 상수로 작동되고 있다. UN의 미래 프로젝트 보고서는 이미 수행된 세계화·정보화의 흐름을 결산하면서, 경제윤리·투명성·공정성과 같은 무형의 문화적 가치들이 향후 20년간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바꾸어 나

79) 이 부분은 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학술진흥장기비전위원회(2010), 『2030 인문사회 학술진흥 장기비전』, 37-39쪽의 내용을 발췌 위주로 보완하였음.

가는 핵심 동인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이러한 예측은 지식기반경제의 고정자산이 지식, 문화와 같은 무형의 자산이라는 특성과 맞물려 속속 현실이 되고 있다. 예컨대 유럽연합의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 · ‘소셜 택소노미(Social Taxonomy)’나 우리나라의 국내기업 등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ESG’, 윤리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사회책임투자(SRI) 등에서 볼 수 있는 반부패 · 공정 · 봉사 같은 ‘윤리’나 생태 · 탄소중립 같은 ‘환경’ 등의 문화적 가치가 글로벌 경제의 주요 상수로 이미 작동되고 있다.

○ 이상은 21세기 세계 중심 국가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 문화적 역량이 뛰어난 문화강국임을 시사해준다. 4차 산업혁명시대-지식기반사회-문화의 시대, 정치적,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일구어감에 문화적 역량이 핵심 고리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문적 전통과 유산을 비롯한 우리가 지닌 문화적 자산을 자원화하고, 이를 국제적 경쟁력 있는 가치로 전화하여 국제적으로 발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범국가적인 계획과 행동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21세기 세기를 주도할 문화리더국가로 환골탈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이를 게을리 함은 향후 전개될 미래 세계에서 도태되고 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인문사회과학의 발전은 21세기 한국이 ‘문화리더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역사적 과제인 셈이다.

□ 국제적인 문화어, 학술어가 되지 못한 한국어

○ 서양 인문학이 조선에 서양 인문학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의 모습이다. “美術이란 말은 日本人이 그 明治初年에 英語의 Fine art를 翻譯한 말이니外 東洋 넷날에는 업섯든것입니다.” 육당 최남선(1890-1957년)의 말이다. 이 말에서 인문학 혹은 자유교양학문이라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으나 잘못 이해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자유교양학문을 미술이라 옮긴 명치시대의 일본인의 잘못인지 아니면 혹 육당이 일본식 용어 미술을 잘못 이해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용어는 한국의 대학과 교양 세계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개념이다. 어쩌면 이 용어를 구성하고 있는 ‘자유’, ‘교양’, ‘학문’이라는 개념 자체가 한국어에는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이와 관련해서 서양의 개념들이 한국에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추적하기에 매우 유용한 『나한소자전(羅韓小字典)』에는, ‘자유’를 뜻하는 라틴어 ‘Libertas’가 ‘주장’(주장), ‘주장’(자기주장)으로 번역-소개되고 있고, ‘자유로운’에 해당하는 라틴어 ‘Liberalis’가 ‘관후훈’(관후한), ‘너그러운’(너그러운)으로 되어있다. 또한 ‘기술’(학문)을 지칭하는 라틴어 ‘Ars’가 ‘예업, 술업, 손직조, 법, 계획’으로 번역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식 탐구 방법이면서 동시에 시민 교양을 돕기 위한 교육 제도로서의 서양 ‘학문’에 대한 이해가 백이십년전의 우리 선조예겐 없

있던 것이 분명하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영어의 “fine art”를 “美術”이라는 일본인의 번역을 그대로 수용한 육당의 잘못된 이해가 된다.

○ 자유교양학문이란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회에서는 신분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정신에 있어서도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자유교양시민이라면 알고 있어야 할 ‘지식’과 ‘교양’을 지칭하는 표현이었다. 이러한 지식과 교양을 겸비한 자만이 ‘노예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자유인이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한국 인문학의 역사도 나름의 우수한 역사가 있다. 불교와 유교의 전통이 있고, 지금도 강력하게 살아 있다. 하지만 이 전통에서 우리가 로마인이나 르네상스 시대 이후의 서양의 지식인이 자신의 모국어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국어인 한국어와 한글에 대해서 했는지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단적으로 한글 창제를 통해 대전환의 계기가 마련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조선의 문화를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와 관련해서 인문학이 부활했던 15세기의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의 끝에 위치한 조선의 지식인들의 활동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플로렌스 스튜디오와 조선의 집현전의 비교를 말이다. 하지만 조금 깊게 들여다보면, 르네상스 시대의 스튜디오는 모임의 결성 목적과 이후 이 모임의 목적과 취지가 확산되고 발전하는 과정과 양상이 같은 시기에 설치되어 운영된 집현전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달랐다. 집현전이 국가 기관이었다면, 스튜디오는 사적인 모임이었다. 집현전의 설치 목적 혹은 모임을 결성하게 된 목적에 있어서도 확연하게 달랐다. 전자가 국가 차원에서 요청되는 학문과 문화의 정비에 있었다면, 후자는 중세 교회로부터의 학문의 자유와 서양 고대 문명으로의 복귀를 위해 노력했다. 이런 의미에서, 한글 창제는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자들이 시도했던 노력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한글 창제의 목적과 배경에 대해서 학계에서 이론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한글 창제가 결과적으로는 백성을 위한 것, 나아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일이었다. 물론 알두스의 출판 활동이 보여주듯이 책과 인쇄술이 가지고 있는 대중성은 소위 민주주의 원칙에 결과적으로 부합한다.

○ 단테나 페트라르카가 이탈리아를 사랑했던 것처럼, 또 셰익스피어가 영어를 풍성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한글과 한국어를 사랑했는지는 의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600여 년 전에 집현전에서 창제된 훈민정음을 사랑하고 풍요롭게 만들려는 시도, 즉 한글과 한국어를 학술어와 문명어로 만들려는 노력과 시도는 최근에 형성되기 시작한 전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어를 학술어와 문명어로 만든 사업은 한편으로 학자 개인의 일이지만, 앞에서 라틴어를 학술어와 문명어로 만든 로마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그것은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적어도 한국 문명을 동양과 세계의 선도 문명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말이다.

이른바 K-문화, K-학술을 외치려면 말이다. 언어란 공동체의 물건이기에 더 그렇다.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인문학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K-문학은, 더 나아가 K-문명도 글로벌 문명의 선도 문명이 충분히 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 국가와 사회는 이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3

인문정책 수립을 위한 인문의 재구성



- 3.1. '기초학술' 개념의 재정립
 - 3.1.1. '학문+활동'으로서의 학술
 - 3.1.2. 사람과 사회, 삶과 앎의 기초로서의 '학술 기초'
 - 3.1.3. '학술 기초'를 다루는 기초학술
- 3.2. '경제적 인문'의 이념과 전통
 - 3.2.1. 이론적 근거
 - 3.2.2. 역사적 근거
 - 3.2.3. 전문가그룹 인터뷰에서 도출한 근거

3. 인문정책 수립을 위한 인문의 재구성

3.1. ‘기초학술’ 개념의 재정립

3.1.1. ‘학문+활동’으로서의 학술

□ ‘기초학술’은 기초와 학술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이중 학술이라는 어휘는 기초라는 어휘에 비하여 개념 규정이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다. 먼저 학술의 개념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본다. 국립국어원에서 간행한 『표준국어대사전』에 의거하면 학술은 “① 학문과 기술을 아울러 이르는 말, ② 학문의 방법이나 이론”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하면 학술의 개념에는 ‘학문’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학문을 중심으로 기술을 겸하여 가리키는 말 내지 학문 자체와 연관된 학문방법론이나 이론을 가리키는 뜻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기술은 학술의 ‘술(術)’을 기술로 한정하여 이해한 결과로 보인다. 이 관점에서 보면 “학술은 개별 연구자의 순수한 학문 연구를 포함하여 이와 관계되는 기술 내지 방법까지 확장된 개념으로서 학문 연구의 결과를 일정한 기술이나 방법과 결합하여 응용적 결과물을 창출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학술은 순수한 학문연구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응용하는 활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학술=순수학문’의 등식은 성립하기 어렵게 된다.”¹⁾

□ 학술은 ‘배우다’, ‘학문’ 등을 뜻하는 학(學)과 ‘예술’, ‘기술’ 등을 뜻하는 술(術)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이에 대하여 중국의 대표적 사전인 『한어대사전(漢語大詞典)』에서는 “① 나라를 다스리는 방책을 학습하다(學習治國之術), ② 나라를 다스리는 방책(治國之術), ③ 교화(教化), ④ 학문(學問), 학식(學識), ⑤ 체계적이고 비교적 전문화된 학문(有系統的較專門的學問), ⑥ 관점(觀點), 주장(主張), 학설(學說), ⑦ 학풍(學風), ⑧ 법술(法術), 본질(本領)” 등으로 그 뜻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뜻풀이보다 한층 광범위하게 뜻풀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중 학술의 제일의(第一義)로 치국의 방책을 익히는 것으로 든 점, 학술 자체를 치국의 방책 내지 교화와 같은 뜻으로 이해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학술을 학문과 기술을 그 자체에 대한 내향적 방향에서 이해한 데 비하여 중국에서는 학술을 학문, 학식, 학설 등에 대한 외향적 방향에서 우선적으로 이해하였다. 그 결과 우

1) 김성수(2014), “학술진흥을 위한 입법적 과제—학술진흥법과 과학기술기본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55권 제1호(통권 제79호)), 61쪽.

리나라에서는 이를테면 〈학술진흥법〉 제2조 1항에서 “학술이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발전시키고, 그 생산·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것처럼, 학술에 대한 내향적 이해가 학계를 넘어 사법 분야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통용되고 있다.²⁾ 여기서 학술은 기본적으로 학문으로 이해되어 있고 학문 탐구 활동에 더하여 발표 등 그와 연관된 활동까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학술활동’, ‘학술대회’, ‘학술논문’ 같은 표현은 널리 사용하지만 ‘학문활동’, ‘학문대회’, ‘학문논문’ 같은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법적 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법적 차원에서도 학술은 일관되게 학문과 직접적 연관 아래 이른바 학계라는 범위 안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 이해되었다. 학문보다는 넓은 의미역을 지니고 있지만 학계라는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학술진흥법〉의 학술에 대한 개념 정의에 의거하면 학술은 이론은 물론이고 방법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지식을 생산하고 발전시키는 모든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순수학문 연구단계에 머물지 않고 지식의 응용과 실용화의 단계까지를 포괄하고 있기에 자연과학적인 연구와 그 지식의 응용 및 실용화도 내포할 수 있고 할 수 있다.³⁾ 〈학술진흥법〉의 학술 개념이 학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는 포괄적인 개념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 학술과 등치되기도 하는 학문은 “어떤 분야를 체계적으로 배워서 익힘. 또는 그런 지식”(『표준국어대사전』)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이때의 학문은 ‘學問’으로서 ‘배우다’, ‘묻다’는 활동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행위 내지 그 소산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가령 학문은 지식을 다른 사람과 사물, 기록과 경험, 간접경험으로부터 얻어 배우고 이를 익혀서 체득하는 과정 같은 것을 말한다.⁴⁾ 한편 우리말 학문은 그 한자가 ‘學文’인 경우도 있다. 이때의 뜻은 “육경(六經) 따위의 시서·육예를 배우는 일”(『표준국어대사전』)이다. 여기서 육예(六藝)는 전통적으로 육경의 다른 표현으로도 쓰였고, 전근대시기 식자층이 기본으로 익혀야 하는 “예악사어서수(禮樂射御書數)”의 여섯 가지 기본소양을 가리키기도 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에서는 앞부분에서 육경이 나열된 다음 “시서·육예를 배우는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육예는 여섯 가지 기본소양을 가리킨다고 봐야 한다. 학문(學文)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학문(學文)을 “文을 배우다”의 ‘서술어+목적어’ 구조로 이해하고, 문(文)의 구체 내용으로 육경과 육예를 제시한 결과이다.

2) 법적 규정은 해당 어휘의 개념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이해, 통념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3) 김성수, 위의 논문, 62쪽.

4) 조동일(1993), “학문의 본질을 진리의 탐구”(『우리 학문의 길』, 서울: 지식산업사), 16-17쪽.

□ 학술은 본성상 내향적으로는 좋은 삶을, 외향적으로는 좋은 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존재한다. 배움이라는 활동은 자연상태인 사람이 문명상태인 인간으로 거듭나게 되는 데 관건이 되는 활동이며, 배움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문명화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술이 인간다운 삶과 사회와 자동적으로 연동됨은 당연한 귀결이다. 곧 학술은 사람이 자연적인 존재로서 생존하는 데, 또 인간이 문명적인 존재로서 생활하는 데 요구되는 활동과 필연적으로 연동된다.

□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면, 학술은 <학술진흥법> 제2조 1항에서 규정된 학술 개념에 더하여 학술 자체를 ‘치국의 방책’ 내지 ‘교화’와 같은 뜻으로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치국의 방책’을 익히는 경세 활동을 포괄하는 것으로 재정립할 수 있다. 곧 학술은 “학문과 예술, 기술 및 그와 연관된 활동”, “경세 역량 및 경세 활동”, “좋은 삶의 구현 등에 필요한 역량”을 가리킨다. 이를 압축하면 학술은 ‘학문+활동’으로, 여기서 활동은 학문을 연구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활동 및 치국 등 경세 활동 등을 가리킨다.

3.1.2. 사람과 사회, 삶과 앞의 기초로서의 ‘학술 기초’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기초는 “사물이나 일 따위의 기본이 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사물이나 일 따위’ 대신에 학술을 넣으면 학술 기초는 “학술의 기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학술은 “학문과 예술, 기술 및 그와 연관된 활동”, “경세 역량 및 경세 활동”, “좋은 삶의 구현 등에 필요한 역량” 등을 가리킨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기초는 따라서 “① 학문과 예술, 기술의 기초”, “② 경세 역량 및 활동의 기초”, “③ 살아내기의 기초”를 가리키게 된다. 또한 “교학상장(敎學相長, 가르침[교육]과 배움[학문]은 함께함으로써 성장한다)”⁵⁾이라는 명제가 함축하고 있듯이 학술은 교육과 한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기에 학술 기초는 곧 “④ 교육의 기초”이기도 하다. 그런데 학문, 예술, 기술, 경세, 살아냄, 교육은 모두 활동을 기반으로 구비되고 연마되며 발휘된다. 이 점에서 학술 기초는 역량으로 구성되며 이를 ‘기초역량’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 학문과 예술, 기술의 기초

○ 학문과 예술, 기술의 기초는 기본적으로 학문과 예술, 기술을 익히고 행함에 요구되는 역

5) 이는 유가의 핵심경전인 오경 중 하나인 『예기(禮記)』의 「학기(學記)」 편에 나온다. 「학기」 편은 천하 통치, 곧 경세 차원에서 교육과 학문에 대한 전통과 지혜를 이념화하고 제도화하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이 언명은 단지 권유나 권계 차원에서 언급된 것이 아니라 경세의 ‘기본’이자 ‘당위’로서 제시된 것이다.

량을 갖추에 필요한 기초를 가리킨다. 또한 더 진전된 학문과 예술, 기술을 익히는 데 필요한 바탕과 동력이 되는 것을 말한다.

○ 학문과 예술, 기술을 익히고 행함에 필요한 역량을 굳이 구분하여 지시한다면 ‘지력(知力)’, ‘기력(技力)’, ‘예력(藝力)’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반면에 이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앎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그것과의 유기적으로 연동 아래 구비되고 형성된다는 점에서 ‘지력(智力)’이라는 표현으로 포괄하여 지시할 수 있다. 곧 학문과 예술, 기술의 기초는 이러한 지력(智力)의 기초, 곧 ‘기초지력(基礎智力)’을 기르는 것과 직, 간접적 연관이 있는 것을 가리킨다.

○ 기초지력(基礎智力)은 학문과 예술, 기술의 ‘창조’와 ‘활용’, ‘향유’ 모두의 차원에서 기본적인 이상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리킨다. 이를테면 창조, 활용, 향유를 전문가적 수준에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지향하지는 않는다.

○ 역량 차원에서 이에 해당하는 예를 든다면, 이를테면 전통적 문해력, 예술 문해력, 디지털 기술 문명에 대한 문해력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 경제의 기초

○ 경제의 기초는 기본적으로 ‘나’의 삶이 펼쳐지는 장과 관계를 맺어가는 데 필요한 기초를 가리킨다. 경제의 ‘세(世)’는 곧 ‘사회’라는 뜻으로, 여기에는 세상이나 국가 같은 사회만이 아니라 돌만의 관계부터 가족, 학교나 직장, 지역공동체 등도 당연히 포함된다. 이러한 사회가 바로 ‘나’의 삶이 펼쳐지는 터전이다. 경제의 기초는 이 터전과 그곳에서 삶을 펼쳐내는 나 사이의 관계를 맺어가는 데 요구되는 역량의 기초이다.

○ 인간은 기본적으로 한 명 한 명이 다 복수의 관계들로 이루어진 존재이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다양한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 나와 가족이나 남 사이는 물론 나와 조직·지역·국가 사이에, 그리고 나와 생명들, 나와 지구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가 나를 실질적으로 구성해주고 움직이게 하며 나의 삶에 일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아무리 1인 가구가 확대되고 ‘혼밥’이니 ‘혼놀’ 같은 ‘혼족’ 문화행태가 심화되고 된다고 해도 나는 어디까지나 ‘관계들의 총합으로서의 나’인 것이다. 그리고 공동체는 그것이 학교이든 직장이든 지역사회이든 국가이든 간에 이러한 개인들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관계들의 총합으로서의 나를 건사하는 길이 곧 공동체 회복의 효율적이고도 미더운 길이 된다. 나를 잘 건사하려면 나를 구성하고 있는 관계들을 잘 건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를 구성하고 있는 관계들을 잘 건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나와 연결된 공동체를 잘 돌보고 보살피는 활동이 되기 때문이다.⁶⁾

6) 이재영(2021), “‘관계들의 총합’으로서의 나 그리고 대학의 책무—공동체 회복을 위한 인문 탐색”(『인문360』 2021).

○ 이런 점에서 ‘경세 역량’은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초역량이다. 경세라고 할 때 꼭 정치인이나 관료가 되어 국가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기 때문이다. 나를 잘 건사하기 위하여 나를 구성하고 있는 관계들을 잘 건사하는 것 또한 내가 포함된 사회를 경영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공자를 비롯한 유가들이 “자신을 수양함으로써 타인을 다스린다”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을 경세의 제일 준칙으로 제시함도 이러한 맥락에서의 통찰 결과였다. 자신을 닦아가는 과정이 치인, 곧 사회상태에서 타인을 건사하는 과정과 병행하여, 혹은 그 속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자신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회적 존재로서 정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나를 구성하고 있는 제반 관계를 잘 건사하기 위해서는 나를 제반 관계 속에 위치 지우고, 그 관계 차원에서 바라보며, 관계의 건사라는 활동을 펼쳐내기 위해서는 역지사지와 열린 태도, 공감과 공명의 역량 등이 기본적으로 요청된다. 또한 이른바 ‘소프트 스킬(soft skill)’이라 칭해지는 협업 능력, 의사소통 능력, 조절과 타협 능력 등의 사회적 기술의 구비가 요구된다. 이러한 바들을 ‘사회역량’이라고 칭할 수 있다면 경세의 기초는 이러한 사회역량의 기초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 살아내기의 기초는 인간다운 삶을 지속 가능하게 펼쳐내는 데 요구되는 역량의 기초이다. 가령 상술한 기초지력(基礎智力), 사회역량은 인간다운 삶의 지속 가능한 영위를 위해 필요한 기초이기도 하다. 이외에 기초체력과 기초심력도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필요한 삶의 기술을 익히고 발휘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살아내기의 기초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 기초지력이나 사회역량은 모두 인간 신체를 기반으로 습득되고 축적되며 발휘된다는 점에서 ‘기초체력(基礎體力)’과 긴밀하게 연계된다. 기초체력이 뒷받침되어야 기초지력과 사회역량의 구비와 연마, 발휘가 지속 가능하게 수행될 수 있다. 또한 기초체력은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할 것 없이 어떤 종목이든 간에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비로소 해당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어떤 유형의 삶이든 살아내기를 가능케 해주는 바탕이 된다. 곧 살아가기에 필요한 힘을 ‘골고루’ 또 ‘지속 가능하게’ 갖추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점에서 기초체력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삶의 기술 습득과 연마, 발휘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 맹자와 더불어 전국시대 유가를 대표하는 순자는 “인간이 살아감에 사회를 이루지 않을 수 없다”⁷⁾고 단언하였다. 사회를 이루고 삶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삶은 양날의 칼이다. 사회를 이루고 삶으로써 인간은 비로소 인간다움을 실현할 수 있

11.)

7) 人之生不能無群.-『순자』「부국(富國)」.

는 최소한의 기반을 갖추게 된다. 반면에 사회를 이루고 살아야만 하기에 자신의 욕망대로만 살아갈 수는 없게 된다. 이에 욕망을 조절하는 역량의 구비가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욕망을 절제하는 데는 지력과 체력, 사회역량 등이 필요하며 기본적인 마음의 힘, 곧 ‘기초심력(基礎心力)’도 요구된다. 또한 심력은 지력과 체력, 사회역량 등의 구비와 연마, 발휘에 동력이 되기도 한다.

○ 곧 살아내기의 기초는 기초체력과 기초심력을 갖추고 그 위에서 기초지력과 사회역량을 구비하고 연마, 발휘하는 데 필요한 기초라고 할 수 있다.

□ 교육의 기초

○ 교육의 기초는 교육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며 이를 갱신해감에 필요한 역량의 기초를 가리킨다. “인간과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이 그 세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 학문적 탐구의 중심과제였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능력을 가르치고 기르는 것이 교육의 과정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성과 덕성을 갖춘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하여 세계와 공동체에 대해 책임질 수 있게 되는 것이 교육의 근본목표였고 핵심과제였다.”⁸⁾ 교육의 기초는 이러한 교육의 목표와 과제 수행에 요구되는 기초 역량을 가리킨다.

○ 교육의 기초는 대학 등에서 수행되고 있는 ‘기초교육’, 이를테면 외국어 교과목이나 이과 계열의 공통기초인 수학 교과목 등을 배우는 것 또는 그들을 학습함에 필요한 기초를 가리키지 않는다. 교육의 기초는 전공교육의 기초나 도구도 아니다. 그것은 “사회와 자연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그를 통한 세계관의 확립 및 사회의 지도적 인물로서 필요한 분석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력⁹⁾의 배양”¹⁰⁾을 목표로 하는 학술 교육의 기초를 가리킨다. 또한 “인간은 지(知)·정(情)·의(意)·체(體) 전 영역에 걸쳐 자신에게 내재한 소질을 계발하여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향유함으로써 삶의 내용을 풍부하게 할 권리를 지니고”¹¹⁾ 있으므로, 세계와 자연에 대한 예술적 감수의 능력과 심성·신체의 도야에 필요한 기초를 가리킨다.

○ ‘교육의 기초’와 ‘기초학문 교육의 기초’는 구분되어야 한다. 기초학문 교육의 기초는 기초 학문으로 분류되는 학문을 습득하고 이해하며 활용, 갱신해가는 데 필요한 기초적 역량을 가리킨다. 이에 비해 교육의 기초는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데 필요한 정신

8) 손동현(2006), “인문교양교육의 의미와 과제”(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편, 『인문과학』 제37집), 209쪽.

9) 여기서 사고력이라 함은 “지식 자체보다는 지식의 생성과정을 반성하고 지식의 현실 효과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서울대학교 인문대학(2010), 『서울대학교 교양교육과정 운영에서 인문대학의 역할에 대한 연구』, 9쪽.

10) 김남두·김영식 편(1996), 『대학 개혁의 과제와 방향』, 서울: 민음사, 92쪽.

11) 이태수(1996), “대학 교양교육의 이념”(김남두·김영식 편, 『대학 개혁의 과제와 방향』, 서울: 민음사), 107쪽.

적, 신체적, 사회적 능력, 달리 표현하면 “자립적이고 자기 활동적인, 그리고 문제해결의 능력을 갖춘 생애 충실한 인간을 탄생시키는, 능동적이고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과정”¹²⁾의 수행에 요구되는 기초를 의미한다. 달리 말해 “특정의 전문적인 활동을 하는 직업인이기에 앞서 지(知)·정(情)·의(意) 모든 면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삶을 살아가는 전인적 인격체로서의 인간을 형성케 해주는 교육”¹³⁾의 기초를 지시한다.

○ 교육의 기초는 “인간의 인간적인 삶 자체를 총체적으로 성찰하는 지적 자세와 그 성찰의 내용을 실천에 옮기려는 의지적 자세”¹⁴⁾, 곧 자기 주도적이며 자율적인 태도의 바탕 위에서 구비하여 갈 필요가 있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자유인’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곧 교육의 기초는 특정 목적에 수단으로서 봉사하게 되는 지식이나 기술 등을 습득케 하는 교육의 기초가 아니라 “그 자체로 본래적 가치를 갖는, 품성을 도야하고 자기 목적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의 기초이다. 또한 “자율적이면서도 개방적인 능동적 주체적 인격의 도야와 이를 통한 ‘인간됨’(즉 인격)의 고양”¹⁵⁾에 필요한 교육의 기초이다.

3.1.3. ‘학술 기초’를 다루는 기초학술

□ 기초학술은 기초학문의 연구와 교육 및 이를 바탕으로 수행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여기서 기초학문이란 “주어진 사회질서를 총체적 관점에서 비판적, 반성적으로 볼 수 있는 통합적 개념을 개발하고 있는 학문 분야”¹⁶⁾를 가리킨다. 따라서 개개 전공 분야 내의 전공 기초가 기초학문의 범주에 드는 것이 아니며, 분과학문의 이름, 학과나 학부, 단과대학의 이름이 기초학문 여부를 결정해주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예컨대 문학, 사학, 철학, 어학, 예술학, 체육학, 문화학 등은 기초학문의 일원이 될 수 있지만, 국어국문·중어중문·영어영문 등이 기초학문의 일원이 될 수는 없다. 또한 이들을 도구나 자원으로 실용성을 지향하는 것도 기초학문의 분야에 포섭될 수는 없다.

□ 기초학문이란 자기 점검과 조직 능력과 연관되어 있는 학문이다. 또한 “주어진 사회질서를 총체적 관점에서 비판적, 반성적으로 볼 수 있는 통합적”¹⁷⁾ 역량과 직결되어 있는 학문이다. 이들

12) 손동현(2009), “교양교육의 새로운 위상과 그 강화 방책”(『교양교육연구』 제4권 제2호), 8쪽.

13) 손동현(2006), 위의 논문, 219쪽.

14) 손동현(2009), 위의 논문, 15쪽.

15) 손동현(2006), “인문교양교육의 의미와 과제”(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편, 『인문과학』, 제37집), 220쪽.

16)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1994), 『현대의 학문체계와 대학교육—연구중심대학의 교육 및 연구 편제』: 김남두·김영식 편(1996), 『대학 개혁의 과제와 방향』, 서울: 민음사, 93쪽 재인용.

17) 김남두·김영식 편(1996), 『대학 개혁의 과제와 방향』, 서울: 민음사, 93쪽.

은 “문화를 만들고 한결 나은 삶의 질서를 만드는 작업 그리고 인간다운 삶과 한층 고양된 삶의 질을 가능케 하는 작업 및 단순히 경제적 부를 이루는 것을 넘어 인간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문화적 성취를 이루는 작업의 기초이자 원천이고 방법”¹⁸⁾이다.

□ 지난 세기 말부터 기초학문이라 하면 흔히 자연과학에서의 기초과학과 동일시되어 이해되기도 한다. 이는 자연과학이 학문의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시대를 반영하는 판단이다.¹⁹⁾ 이러한 경향은 지금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반면에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등에서 소위 ‘순수이론’ 기반이 아닌 실용 지향의 응용학문은 기초학문의 범주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그 결과 경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연구 성과가 기초학문과 무관한 것으로 간주되어 결국 기초학문과 경제가 괴리되는 현상이 발생해왔다. 그런가 하면, 인문학은 인간다운 삶에 대해 규범적으로 반성하고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전제 아래 인간다움의 이념이나 그 실현을 인문학의 중심 주제로 잡고 인간의 인간적인 삶 자체를 성찰하는 지적 활동만을 인문학의 본령으로 설정하기도 했다.²⁰⁾ 그 결과 인간적인 삶에 요구되는 물질적 재료 내지 도구나 사회적 기구 내지 제도를 탐구하는 학문은 인문학이 아닌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기초학문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했다.

□ 기초학문은 “경계 자체를 문제 삼고 경계 너머를 사고하려 하며, 지식 자체보다는 지식의 생성 과정을 반성하고 지식의 현실 효과를 내다보는 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정보와 지식, 사고, 실천 모두를 강조한다. 여기서 “실천성이란 학문이 현장성을 떠나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즉 상황을 해석하고 구성하며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 학문을 통해 현실을 바꾸고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말한다. 곧 기초학문은 “학문을 자기 존재와 삶 안에 구현하고 완성시키려는 실천적 정신”에 의해 뒷받침되는 학문이다.²¹⁾ 이를 기존의 학문 분야와 결부해보면 전통적, 관습적으로 기초학문으로 분류되어온 인문학과 사회과학 및 이론 분야의 자연과학, 예술학, 문화학, 체육학 등을 들 수 있다.

□ 라틴어 ‘ars’는 기술 혹은 학술을 뜻한다. 이 말은 원래 그리스어 ‘techne(기술)’를 번역한

18) 김남두·김영식 편(1996), 위의 책, 74쪽.

19) 김남두·김영식 편(1996), 위의 책, 73쪽.

20) 손동현(2006), 앞의 논문, 212쪽.

21) 이 단락의 직접인용 부분의 출처는 모두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서울대학교 교양교육과정 운영에서 인문대학의 역할에 대한 연구』, 2010, 9-10쪽.

것이다. 그리스어 테크네는 경험(ἐμπειρία)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장인의 단순한 반복적 기술이나 솜씨를 넘어서서 학술 일반을 지칭하는 용어다. 이렇게 ‘ars’가 단순한 솜씨를 넘어서서 학술 일반을 지칭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공로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테크네는 로고스(λόγος)를 통한 해명과 접근이 가능하고, 따라서 개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을 대상으로 하며, 결론적으로 하나의 체계적인 이론(θεωρία)으로 성립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면 의학은 기술이면서 학으로 성립 가능하다. 의학적 경험은 개별자 칼리아스나 소크라테스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 행위이지만, 의학은 개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현상 일반을 다루며, 이러한 현상에서 추출된 학적 내용들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식의 학문 분류 방식에 입각해서 경험적 실천 행위들을 지식화하는 작업, 곧 특히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이론화 작업이 본격화된 것은 특히 헬레니즘 시대에 들어와서다. 이와 같은 특성의 이론화 작업을 거친 대표적인 작품으로 우리는 문법 서적들, 농업 서적들, 법률 서적들, 토목 교과서들, 건축학 교과서들, 의학 서적들, 지리학 서적들, 자연과학 서적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 서적들이 실은 헬레니즘시대의 로마에서 학교에서 교육된 학문들의 서적들이다. 이런 이유로 독자들은 전문가들과 학생들이었다. 헬레니즘시대에 출판되었던 교과서들의 문체는 매우 간결하고, 매우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서술 방식이 특징적이다. 전체적인 목차 구성은 체계적인 분류(dihæresis)를 특성으로 한다. 이 분류 방식은 연구 대상을 먼저 유와 종으로 분류하고, 이어서 이 종을 다시 하위 요소로 나누어 대상을 분류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특징은 이렇게 나뉜 분류 항목들이 하나의 독립적 단위의 항목(epitome)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각각의 개별 항목들은 정의, 분류, 그리고 각 분류에 상응하는 예로 구성된다.

□ 인문학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humaniter vivere)” 위한 학술이다. 키케로는 이를 ‘humanitas’라고 부른다. 그에 따르면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목적(quæ ad humanitatem pertinent)에 봉사하는 모든 학문들은 서로가 서로를 묶는 공통의 연결 고리를 가지고 있고 마치 혈연에 의해 연결된 것인 양 상호 결속되어 있다.”²²⁾ 사람을 기르는 교육으로서의 인문학에 대한 키케로의 생각은 “한편 제대로 된 공부와 기술을 통해서 미리 가꾸어지고 갖추어져서 일종의 덕으로 행동을 위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습관들이 있다. 사적인 영역에서는 문(법)학, 산수, 음악, 기하학, 천문학, 기마술, 사냥술, 무기 다루는 법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공적인 영역에서는 특히 덕을 키우거나 신을 섬기거나 부모를 모시거나 친구를 위하거나 우선적으로 그리고 각별하게 대접해야 할 손님에 대한 예와 연관된 노력과 공부가 아주 중요한 예이다.”²³⁾ 키케로의 생각

22) 『아르키아스 변론』 2장.

에 따르면 무기 제조술이나 사냥술이나 기마술도 처음에는 인문학과 마찬가지로 삶의 기초학술이었다.

□ ‘기초학술’이란 폭넓은 이해가 필요한 개념이다. 통상적으로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기초 연구’를 “활용 목적이 아닌 자연 현상의 이해 및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활동”²⁴⁾이라고 정의 내린다. 이 정의는 통상적으로 해당 전공자들에게는 문제없이 통용된다. 물론 이 정의가 크게 문제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기초학술이란 개념이 자연과학에만 적용되는 경우에, 이는 현실적으로 예컨대 R&D 관련 예산 배정과 국가 정책 수립에 있어서 적지 않은 문제들을 야기한다. 따라서 기초학술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요청된다. 기초학술이라는 용어는 특정 영역의 분야에서만 선점되고 전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다 폭넓고 융통성 있게 통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기초학술은 역사적으로 인류의 문명과 인간의 역사에서 여러 종류의 공동체와 수많은 개인들의 삶의 방식에 자리 잡았고 작동해 왔던 개념이다. 인간이 자연적인 존재로서 생존하기 위해서, 아울러서 문명적인 존재로서 생활하기 위해서, 즉 문명 세계의 기본 기제들이 기초학술들이다. 요컨대 문법, 수사학, 논리학 등이 소위 말하는 기초학술에 해당한다. 그 기능과 용도의 측면에서, 이 학술들은 어쩌면 너무도 일상적이고 평범한 도구적인 속성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의 중요성이 관심 영역의 밖으로, 다시 말해서 국가의 잉여 자본이 투자되어야 할 영역이 아닌 분야로 취급되고 있는데, 이런 취급은 그야말로 오해이자 반문명적인 무지에서 비롯된 천박함을 보여 준다.

□ 기초학술은 크게 네 시대로 구분해서 그 실체를 살필 수 있다.

○ 경험과 그 경험을 스토리로 만들어서 이야기의 형태로 보존하고 통용했던 뮈토스의 시대가 첫 번째이다. 경험이 교사이고 판단의 준거 기준으로 작용했던 시대이다.

○ 이 시대를 뒤이어 언어와 말의 합리성과 논리성을 이용해서 경험을 극복하는 기술들이 출현했던 로고스의 시대가 두 번째로 뒤따른다. 뮈토스의 시대에서 로고스의 시대로의 이행은 서기전 5세기 그리스 아테네를 중심으로 지식인들과 철학자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말, 언어, 문자, 기록을 기반으로 하는 로고스를 바탕으로 하는 학문적인 기제들인, 문법, 수사학, 논리학은 바로 이 시기에 등장했다. 공동체의 구성과 지속에 필요한 도구들에 대한 연습과 훈련은 보편적인 상식과 합리적인 이성에 입각한 의사 결정의 필수적인 조건이었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23) 『수사학』 80장.

24) 최성우(2022), 『대통령을 위한 과학기술, 시대를 통찰하는 안목을 위하여-10가지 키워드로 보는 정책 과제의 발자취와 전망』, 서울 : 지노, 20쪽.

이와 같은 로고스를 바탕으로 발전한 학술 덕분에 가능했던 정치체제였다. 문법, 수사학, 논리학이 도시국가 단계의 아테네 민주정의 발전과 존속의 기초학술이었다는 점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른바 강력한 군사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하는 제국의 출현으로 자연학에 속하는 분야들도 마침내 기초학술에 포함되었다.

○ 기독교의 등장으로 종교가 판단의 준거 기준으로 작동했던 시대에도, 비록 기초학술들은 크게 축소되긴 했지만 그 기본적인 기능은 수행하였다. 하나님과의 소통도 중요했지만, 옆집이든 멀리 떨어져 있든, 상하 계층과 높고 낮은 신분으로 구분된 사람들도 서로 의사소통은 필요했고, 폭력을 기반으로 한 물리적인 강제력이 아닌 설득에 바탕을 둔 합의와 동의가 통합과 통치에 효과적이었고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 르네상스시대와 근대를 거치면서 자연언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되고 새로이 발명된 자연과학의 부호들과 기호들의 등장으로 자연과학은 인문학으로부터 독립해 나갔으나, 그럼에도 인문학으로부터 문명의 관리자의 역할까지 가지고 간 것은 아니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근대 초기, 즉 17-18세기에 우후죽순으로 설립된 유럽의 각종 학술원들과 한림원들의 역할에서 그 방증을 제시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연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 경험과 기술과 지식들도 여전히 인간의 활동들인 한에서, 그것들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들은 여전히 정치적인 판단의 영역에 속했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자연의 이해만으로는 인간의 이해를 충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자연과학의 이해도 인간의 이해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인 소통 과정과 이해 기제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는 디지털문명의 시대라 불리는 작금의 현란한 ‘정보 기술’의 레토릭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시기에도 여전히 사정은 마찬가지다. 사실 예전대 ‘메타버스’, ‘ChatGpt’ 등의 이름에 담긴 레토릭 전략이 지금도 인문학적이다. 인류의 현재 문명적 조건이 빠른 정보와 넓은 소통을 추구하면 할수록, 그것은 인문학적일 수밖에 없다.

○ 사정이 이러는 한에서, 작금의 문명적인 작용 방식 자체가 인문학이고 사회과학인 한에서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문명의 관리자’로서 기초학술임을, 기초학술일 수밖에 없음을 자명하게 보여준다. 문명의 관리하는 기초학술로서 인문학의 역할은 이른바 매체 혁명 혹은 정보 혁명이라 불리는 디지털문명 시대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이유는 시간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든 인간 활동의 많은 부분이 ‘근력’을 이용한 노동이 아니라 ‘놀이’를 바탕으로 하는 휴식과 여가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품위 있는 여가(otium cum dignitate)’ 혹은 ‘건강한 휴식’ 혹은 ‘의미 있는 재미’를 위한 여건과 기반이 공동체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 국가 혹은 공동체의 의무이자 당면과제를

라는 점에서 인문학이 기초학술이다. 놀이와 휴식도 문명 활동의 한 단위이고, 그러는 한에서 ‘인문학과 사회과학’이야말로 문명의 기초학술로서 문명의 총괄적인 관리자이다.

□ 기초학술로서 인문사회학술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요청되는 이유는 과학과 기술에서 통용된 이해만으로는 지식 본래의 특성을 포괄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 지식의 속성은 이렇다. ① 지식은 무형(Intangible)이다. 지식은 형체가 없으므로 지식의 창출, 습득, 공유와 가치의 평가가 어렵다. ② 지식은 무한(Infinite)하다. 지식은 무한히 축적량을 늘릴 수 있고 축적량이 증가할수록 수확은 체증하고 비용은 체감한다. 따라서 사용해도 소멸되지 않고 사용할수록 가치가 증가한다. ③ 지식은 공존(Co-existent)한다. 완전한 사유제도 완전한 공공제도 아닌 중간적 성격을 지닌다. ④ 지식은 무경계(Borderless)이다. 지식을 단위별, 부문별로 뚜렷이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일반적인 학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융합이 빈번히 발생한다. ⑤ 지식은 무연령(Non-aging)을 속성을 지니고 있다. 지식은 이전 지식의 기반으로 축적하고 다른 지식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함으로써 스스로 진화하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지식 속성들은 전통적 의미에서 포착되지 않는 것들로 이른바 문명의 무형 조건들이다. 그리고 이 지식은 인문사회학술을 통해 획득하고 도달할 수 있다.

○ 문명의 무형 조건들을 누가 관리해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속성 ① 지식의 ‘무형체’ 속성은 지식의 창출, 습득, 공유, 평가를 어렵게 하지만 지식은 무형의 대상임에도 유형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 유형의 내용을 지켜주고, 그 가치를 인정해 줄 때에 비로소 지식은 ‘창출되고, 습득되며, 공유되며’ 이러한 과정이 널리 촉진되고 보장된다. 이를 위해서는 문명의 무형 조건인 원천 지식의 생산자를 경제적으로 인정하고 그 작업에 제값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만 많은 지식 생산자들이 동기를 가지고 지식 생산 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속성 ② ‘가치의 확대 재생산’ 속성도 가치 발생 매체의 지속적인 환경 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 지식 운용 환경은 확대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호환되도록 구성해주어야 한다. 이는 기계가 하는 일이 아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지식 생산자의 네트워킹 구축을 통해 지식의 흐름과 축적을 관리 운용하는 일인데 이를 총괄하는 것이 인문사회학술이다. 속성 ③ ‘중간재’ 속성은 이중성을 지닌다. 지식 생산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지식은 분명 사유재이다. 왜냐하면 지식 내용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식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측면에서는 그것은 분명 공공재이다. 왜냐하면 지식은 가치 그 자체를 결정하는 척도에서 규정되고, 이 척도는 가치 평가 체계의 공동 기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지

식의 검증과 가치를 규정하는 주체는 결국인 사람이고, 인문사회학술 연구자가 담당해야 할 일이다. 속성④ ‘정리 보관 차원에서 지식’은 소속이 있는 대상이다. 물론 운용과 활용의 측면에서 보면 지식은 경계가 없다. 하지만 이 무경계성은 그 활용의 측면에서 미래적이고, 잠재적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 지식이 확립된 유통 체계를 통해 유통이 될 때 그것은 객관적인 가치를 가지며, 서로 다른 지식들의 조립과 충돌로 새로운 지식이 잉태되고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유통 체계의 확립과 관리하는 주체가 인문사회학술이다. 속성⑤ ‘지식의 연령은 없으나’ 지식 생산자의 조건과 상황은 변화하며, 따라서 지식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지식 생산자의 조건과 상황 변화를 추적 가능할 수 있도록 지식과 생산자 사이의 연결하는 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나아가 지식들의 출처와 연계성을 보장해 주는 끈도 필요하다. 이 끈이 실은 인문사회학술이다. 앞에서 말한 그 ‘누가’는 인문사회학술이고, 그 ‘어떻게’도 문명의 무형 조건의 특성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문명의 무형 조건인 지식의 속성들이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야기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큰 문제이다. 이는 크게 세 가지이다. ① 지식과 자본의 간극, ② 개인, 집단, 단체, 기관, 국가 간의 지식 격차와 소외, ③ 문명의 유형 조건과 무형 조건의 결합과 새로운 지식의 창출 문제가 그것들이다. 문제①과 관련해서, 이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생존 조건은 지식과 자본 사이에 있는 거리를 얼마나 좁혀주느냐의 물음으로 직결되는데, 이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이 교육이고, 특히 인문사회학술이다. 문제② 지식 격차 해소 문제는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지식 소외 문제는 앞으로 한국사회가 지식기반 사회로 발전하면 할수록 더욱 큰 문제로 등장할 것이다. 기술 발전 속도와 이에 기반을 둔 미래 사회를 전망해 보면, 지식 사회는 지식과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시대로 진입할 것이다. 하지만 ‘지식과 정보’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식과 정보도 ‘누구나’에게 열려 있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식 격차가 가져올 문제를 해결함에 요청되는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위해서도 인문사회학술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문제③ 지식 유통 체계’의 확립은 산업 현장 경험과 이론으로 정립된 지식의 결합을 촉진시킬지의 물음으로 연결된다. 외국어 지식 결여나 전문 지식 결핍으로 신규 사업을 개척하거나 신기술 개발 및 연구를 시도할 때, 한편으로 연구자 측면에서는 산업 현장의 상황과 요청을 알 수 없고, 다른 한편으로 사업자나 지식 사용자 입장에서는 활용 가능한 지식 정보의 내용 가치와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방법이 없다는 것이 당면하고 있는 한국의 산업 현장과 지식 생산자간의 현재하는 실정이다. 이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론으로 정립된 지식과 기술이 산업 현장으로 공급되고, 산업 현장의 산 경험이 다시 지식으로 조직 체계화되어 기록 보관되도록 하여, 이들이 신지식을 창출하도록 축적하는 것이 중요한

데, 이를 위한 토대가 인문사회학술이다. 예컨대 디지털 산업도 결국은 자연언어를 얼마나 글로별하게 장악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지식과 정보는 국경이 없다. 하지만 언어는 경계가 있다. 한국어의 경쟁력이 한국사회의 경쟁력인데, 한국어로 지식을 창출하고 축적하며 유통하며 관리하는 체계의 기본 모태는 인문사회학술이다.

○ 결론적으로 앞서서도 말했듯이 이른바 기술은 그 정의의 본성상 지식 일반으로부터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여기에 지식은 언어로부터도 분리되지 않음을 덧붙인다. 이와 같은 속성의 지식 일반을 관장하는 분야가 인문사회학술이다. 소위 지식 경영에서 말하는 “암묵지(tacit knowledge)”의 생산과 유통 교육과 훈련 일반을 총괄하는 분야가 인문사회학술이라는 것이다. “형식지(formal knowledge)”의 매개체(상품, 제품, 콘텐츠)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토대 구조를 담당하는 분야가 인문사회학술이다. 기초가 부실한데 결실이 좋을 수는 없다. 지식과 기술의 이러한 다면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은 인문사회학술 등 기초학술에 대한 새롭고 폭넓은 이해를 요구한다.

3.2. ‘경제적 인문’의 이념과 전통

□ 전근대시기, 한자권의 경세학(經世學) 전통에서 여실하게 확인할 수 있듯이, 또 근대 서구의 전 지구적 확장 과정에서 분명하게 목도할 수 있듯이, 인문은 국가와 사회의 ‘미래 설계자’이다. 또한 국가와 사회 경영의 기반이자 동반자로서 ‘지속 가능’한 국력 창출의 새로운 원천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여 왔다. 특히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선 지금, 인문을 기반으로 우리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구체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실현해야 할 소명이다.²⁵⁾ 이는 인문이 “쓸모없음의 쓸모[無用의 用]”, “이익 없음의 이익[無益의 益]” 등으로 대변되는 ‘순수인문’ 패러다임만을 고수해서는 안 됨을 밝히 말해준다. 또한 ‘선진국-선진국다움’의 창출과 지속 가능한 갱신을 위해서는 ‘순수인문’ 패러다임 하나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인문경국’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명실상부하게 부응하기 위해서는 순수 지향적 인문과 경제 지향적 인문의 병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문사회학계가 과학기술 쪽에는 과학기술과 인문사회라는 두 날개로 날아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인문사회학술에 대해서는 순수 지향적 인문 위주라는 “한 날개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25) 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학술진흥장기비전위원회(2010), 『2030 인문사회 학술진흥 장기비전』, 17쪽.

3.2.1. 이론적 근거²⁶⁾

□ 근대 이후 우리의 인문사회학술은 스스로 자기 역할의 범위, 대상을 축소하는 한편 경제의 전통을 무시 내지 경시해왔다. 그 결과 국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야나 정치·경제·사회의 현장과 연계된 분야를 제외하고는 국가사회의 현실과 ‘무관심’ 내지 ‘비판적 거리’를 둘수록 타당하고 정당하다는 전통이 강하게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전통으로부터 탈피함으로써 인문 개념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3.2.1.1. 동태적(動態的) 인문

□ 인문(人文)은 ‘사람의 문(文)’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관습적으로 ‘글월 문’ 식으로 새기는 ‘문(文)’ 자는 본래 무늬[pattern]를 뜻한다.

○ 무늬는 겉으로 드러난 일정한 모양을 가리킨다. 그것은 주로 ‘명사형’으로 명명되고 ‘정적(靜的)인 것’으로 인지된다. 물론 모든 무늬가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예컨대 동작으로 구성된 춤에서도 패턴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천문(天文)도 마찬가지이다. 보통 “천문을 본다”라고 할 때 이는 단순히 별들이 자아내는 ‘하늘의 무늬’를 평면적 이미지로 인지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하늘의 무늬를 통해 별들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미를 구성해내는 행위 일반을 지시한다. 곧 무늬는 경우에 따라 평면적이고 정적인 양태에 움직임을 함축하고 있는[靜中動] 형상도 가리켰던 것이다.

○ ‘사람의 무늬’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사람의 형상을 본뜬 무늬가 아니라 ‘인간다움’을 표상하는 ‘정중동(靜中動)’한 형상이다. 다시 말해 사람의 모양을 본뜬 ‘인(人)’은 인문이 아니다. 그것은 그저 사물의 외형을 본뜬 기호의 하나일 따름이다. 인문은 겉으로 드러난 사람의 형상을 본뜬 무늬가 아니라 ‘인간다움’의 무늬이다. 그것은 사람임을, 곧 인간다움을 끊임없이 환기해주는 형상이다.

□ ‘문(文)’ 자는 발생의 순간부터 가치중립적인 뜻으로 설정되지 않았다. 우리들은 ‘문’을 ‘글, 문장’ 등의 뜻으로 처음 접하곤 한다. 하지만 이는 2차적으로 파생된 뜻이고 ‘문채, 문양’ 등의 뜻이 그보다 앞서 있었다.

○ 1세기경에 간행된, 지금 전하고 가장 오래된 자전인 『설문해자(說文解字)』에는 ‘문’이 “교

26) 이하의 논의는 김월희(2003), “인문교학(人文敎學)의 실현을 위한 제언”(한국중국어문학회 편, 『중국문학』, 제40호), 제3장, 「배타적으로 빛나는 중화」(김민정 외(2011), 『문명 안으로』, 파주: 한길사)의 “예는 문명함의 실상” 부분에서 발췌, 수정 보완하였음.

차하여 그리는 것으로, 교차된 것을 본뜨다”라고 풀이되어 있다. 그러나 『설문해자』보다 훨씬 오래전에 쓰인 갑골문이나 청동기에 새겨진 고문자를 보면 ‘문’은 가슴에 문양이 새겨져 있는 사람을 본뜬 형상으로 나온다.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분분하다. 그러나 대표적인 학설들에서는 ‘문’의 기원을 의례와 연관된 문신(文身)이라는 시각에서 규명했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상고시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가도록 시신의 가슴에서 피가 흘러나오게 했는데 ‘문’은 이렇게 가슴에서 피를 흘리는 사람의 형상이라는 설이라든지, 제사 지낼 때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을 죽은 조상의 모습으로 분장시키고[이를 ‘시(尸)’라고 불렀다] 그의 가슴에 문신을 새겼는데 ‘문’은 이렇게 가슴에 문신을 한 ‘시’의 모습을 상형한 것이라는 설, 그리고 원시 의식을 행할 때 문신을 한 채로 춤을 추는 이의 모습을 상형한 것이라는 설 등, 모두 ‘문’을 의례로 인해 문신을 하게 된 사람의 형상을 본뜬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출생이나 성년, 죽음의 때에 행하는 통과의례를 나타내는 문신이라는 설도 마찬가지이다.²⁷⁾ 곧 ‘문’ 자는 단순히 문양이나 문채 그 자체를 지시하지 않고 의례와의 연관 아래 그 의례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문양이나 문채를 지시했다.

○ 이로부터 ‘문’ 자는 의례 그 자체를 가리키는 글자로도 쓰였다. 의례가 거듭될수록 그 의례와 해당 문양은 더욱 긴밀하게 연관되기에,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문양은 그것만으로도 해당 의례를 환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서 결국 ‘문’은 예(禮)와 동의어로 사용되기에 이르렀다.²⁸⁾ 격식을 갖춘 절차를 행하는 것이 예인데, 그러한 ‘행해지는’ 격식과 절차들이 하나의 동적(動的)인 문양[文]으로 인지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예는 ‘문’이 되었고, 예는 사람을 금수로부터 구분해주는 핵심 근거였기에 ‘문’은 자연스레 ‘인간의 문’, 곧 ‘인문(人文)’이 되었다.

○ 여기서 인문은 사람이라는 무늬가 아니라 사람의 무늬이다. 그것은 사람임을, 곧 인간다움을 끊임없이 환기해주는 형상이다. ‘문’ 자가 처음부터 지니게 된 의미, 지향 덕택에 인문은 결코 가치 중립적이지 않았다. 사람은 예를 지니고 있는가의 차원에서 금수와 같은 존재들과의 대비를 통해 사람으로서 정립되었기에 인문은 인간다움을 표상하고 있어야 했다. ‘하늘의 무늬[天文]’는 곧 ‘하늘의 섭리[天之理]’라는 주희(朱熹)의 언급처럼, 사람의 무늬는 단순히 패턴화된 형상을 이루고 있음에 멈춰서는 안 됐고, 그러한 패턴을 자아낸 근거의 원리와 지향하는 가치

27) 시라카와 시즈카, 심경호 역(2005), 『한자 백 가지 이야기』(서울: 황소자리), 37쪽.

28) 『논어』「자한」 편에는 “문왕이 이미 돌아가셨으니, 문(文)은 여기에 있지 않은가?(文王既沒, 文不在茲乎)”라는 언급이 나온다. 이에 대해 주희는 “도가 드러난 것을 문이라 하니, 무릇 예악제도를 가리킨다.(道之顯者謂之文, 蓋禮樂制度之謂)”라는 주석을 달았다. 이처럼 ‘문’은 넓게는 예악제도부터 좁게는 예절과 의식 일반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널리 쓰였다.

까지도 표상해야 했음이다.

□ 인간다움은 행동을 통해 표현되고 실현된다. 그것은 명사적으로 표현되고 설명될 수가 없다. 가령 우리가 “천문을 본다”고 할 때 우리가 보는 것은 이를테면 큰곰자리, 사자자리와 같이 하늘의 별들이 자아내고 있는 2차원적 이미지를 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28수로 대변되는 하늘의 별들이 특정한 주기를 기반으로 운행하는 그 움직임을 본다는 것이다.²⁹⁾

○ 마찬가지로 사람의 문도 그 움직임을 가리킨다. 공자는 제자 자공(子貢)이 모든 면에서 별로 본받을 것이 없는 공문자(孔文子)의 시호에 왜 ‘문(文)’ 자가 쓰이게 되었냐는 질문에, “그는 명민하고 배우기를 좋아했으며, 자기보다 못하거나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대답했다.³⁰⁾ 또한 앞의 요체나 본성을 묻는 제자들에게 그는 개념의 정의 대신 생활의 구체적인 행위를 예시했다. 예컨대 인(仁)의 정체를 묻는 제자들에게 공자는 “인(仁)은 인(人)과 이(二)의 결합”으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제어하는 근원적인 윤리덕목’이나 “인은 사랑의 결이요 마음의 덕”³¹⁾이라는 식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나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기”³²⁾,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않기”³³⁾와 같은 구체적 행위를 제시했다. 인간다움은 고정적 실체라기보다는 ‘과정적 실체’이었기에 유동하는 실체의 표현에 더욱 적합하도록 동사형으로 표현했던 것이다. 그래서 고대 중국인들은 성인의 행적 그 자체를 성인이 기록한 책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간주했다. 인문은 ‘고정적 실체’로서가 아니라 ‘과정적 실체’ 곧 끊임없이 자신을 변이시켜 가며 그때그때마다 새로이 조성되는 ‘유동적’ 개념이자 실체였기에 주로 동사형으로 표현됐던 것이다.

○ 한자권 지성사의 초기 단계에서 앞이 동사적으로 표현된 까닭이 여기에 있다. 공자는 앞의 대상 영역을 ‘덕행[윤리] · 정사[정치] · 언어[수사 34] · 문학[문헌]’의 넷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그는 이들을 명사형으로 설명하거나 규정하지 않았다. 앞의 요체나 본성을 묻는 제자들에게 그는 개념의 정의 대신 생활의 구체적인 행위를 예시했다. 예컨대 “인(仁)이란 우주만물의 근본이다”식이 아니라 “인이란 남을 용서하는 것이다”식으로 대답하였다. 이는 당시에는 앞의 대상 영역이 지식인으로서의 삶의 영역과 분리되어 사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삶이 유동하는 실체이기에 앞도 동사형으로 표현됐던 것이다. 이점은 7세기 무렵 확정된 후 출몰 한자권의

29) 이 단락의 서술은 김월회(2007), 앞의 논문에서 발췌, 수정 보완하였음.

30) “子貢問曰, ‘孔文子何以謂之文也?’ 子曰, ‘敏而好學, 不恥下問, 是以謂之文也.’”-『논어』「공야장(公冶長)」.

31) 愛之理, 心之德. -주희, 『논어집주(論語集註)』.

32) 克己復禮. -『논어』「안연(顔淵)」.

33) 己所不欲, 勿施於人. -『논어』「안연」.

34) 여기서의 수사(수사)는 말이나 글의 꾸밈보다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레토리케(rhêtorikê)에 가깝다.

주류적인 앎의 분류 방식이었던 ‘경사자집(經史子集)’이라는 4부 분류법에서도 동일하게 목도된다.

○ 일반적으로 ‘경’에는 통치의 합법성의 근거가 담겨 있는 경서(經書) 및 그 해설서가, ‘사’에는 역사의 기록과 관련된 텍스트가, ‘자’에는 사상의 개진이나 입론 위주의 텍스트가, 그리고 ‘집’에는 경·사·자에 배속되지 않는 갖가지 글쓰기가 각각 배속된다. 일견 그 경계가 확연하게 나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과 무관하게 전통시기의 앎은 경·사·자·집의 겹침 집 속에서 포착되고 표현되었다. 공자는 경서 중의 경서인 육경(六經)을 다 사료로 간주했으며, “오경은 다 역사[五經皆史]”라는 관점은 전근대시기 내내 만만치 않은 세력을 형성했다. ‘경’과 ‘사’ 사이의 구분이 절대적이지 않았음이다. ‘사’와 ‘자’의 관계 양상 또한 마찬가지였다. 사마천은 공자는 『춘추』라는 역사책을 쓰면서 위대하고 올바른 왕도(王道)를 밝혔다고 전제한 후, 자신도 『사기』의 저술을 통해 “하늘과 사람의 경계를 탐구하고 고금의 변화에 통달하여 ‘일가(一家)의 언론(言論)’을 이루었다.”고 하였다.³⁵⁾ 곧 그는 ‘사’에 배속되는 행위를 통해 자연과 인간사회의 궁극적인 원리와 법칙을 밝힌다는 입언(立言), 곧 ‘자’에 배속되는 행위를 했던 것이다. 앎의 영역 간의 겹침 현상은 ‘경’과 ‘자’의 관계양상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천 년이 넘게 ‘자’에 속해 있던 『맹자』는 성리학자들에 의해 경서로 승격되었다가 다시 고증학자들에 의해 ‘자’로 환원되기도 했다.

○ 구분 가능한 앎의 영역을 각각 담당했던 경·사·자·집의 겹침은 동사형으로 포착되고 표현되는 인문의 양태를 가능한 그에 빚진한 앎의 형태로 표현하고 설명하고자 했던 능동적인 시도로 읽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인문학은 인문을 온전히 다룰 수가 없다. 인문학에서의 ‘학(學)’은 사물과 사태 및 그들의 관계와 같이 연구대상으로 설정된 것들의 항구적인 법칙이나 구조를 밝혀내는 작업을 가리킨다. 그러나 동태적으로 존재하는 인문은 ‘고정적 실체’로서가 아니라 ‘과정적 실체’, 곧 끊임없이 유동하는 존재³⁶⁾이기 때문에 그것의 항구적인 법칙이나 구조를 논의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그래서 인문은 분과학문체제로서의 ‘학’으로 정립될 수 없으며 그렇기에 인문은 분과학문체제의 외부에 존재한다. 설령 인문학에서 ‘학’에 주목하지 않고 사회과학의 대립항으로서 개성 기술적 성격에 주목한다고 하여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인문학이 ‘학’임을 주장하는 한, 곧 동태로서의 인문을 명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한, 인문과 인문학 사이에 존재하는 생래적인 거리는 영(零)이 될 수 없다.³⁷⁾

35)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홍상훈(1999), “전통시기 중국의 서사론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참조.

36) ‘과정적’ 실체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박성수 등(2004), 『21세기 인문지식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식공유체계의 재구성 및 활성화 방안—인문과학의 개방』(서울 : 인문사회연구소), 41-44쪽 참조.

37) 인문학이 조어를 보면 일견 인간 본성의 발현으로서의 인문 그 자체를 다루는 것 같지만, 서구 근대문명이 빚어낸

○ 이 점은 사회과학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동태적 인문의 여러 측면을 나름의 방식으로 파악하고 설명함으로써 인간과 삶, 자연에 대한 속 깊고 폭 넓은 이해에 크게 이바지해왔다. 인문학과 사회과학 및 인문은 존재론적 자리가 상이한 상태에서 ‘따로 또 같이’ 가며 상보적으로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관계이다. 따라서 이 셋은 ‘처방’의 차원에서 통합될 수 있고, 논리적으로 볼 때 인문이 내포와 외연이 더 크고 발생적으로 앞서기 때문에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그에 포섭되는 양상을 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을 통해 생성되는 앎은 인문이 동태적인 것처럼 동사적인 형식을 띠게 된다. 물론 이러한 앎은 ‘학’적 차원에서 볼 때 유동적이고 안정화되지 못한 미성숙한 앎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동사형 앎은 묵하 겪고 있는 앎으로부터의 인간 소외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이라는 점에서 ‘처방’으로서의 시의성과 현재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

3.2.1.2. 동사적 앎

□ 인문, 곧 인간다움의 무늬가 동사로 표현되고 설명된다는 것은 인문이 곧 역량[德]임을 함축한다. 그것은 내가 인간다운 사람임을 나타낼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³⁸⁾

○ 얼굴과 사지를 갖추고 직립보행이라는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람인 것이 아니라, 예컨대 학문을 좋아하고 문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인간답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사는 ‘고체적’이지 않고 ‘액체적’이다. 그것은 유동하는 존재의 표현에 주로 동원된다. 그것은 ‘그릇[器]’을 지시하기보다는 그것에 담기는 ‘물’을 지시한다. 인문을 체현하고 있어 삶 그 자체가 인문인 군자는 공자가 “그릇이어서는 안 된다”³⁹⁾고 했듯이 ‘불기(不器)’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 규정된다. 그러나 군자는 성인(聖人)이 아니다. ‘불기’는 순간순간 구성되는 현실에 대처하는 ‘변이 능력’의 구비를 지시하지, 온전함·만능·만덕(萬德)의 구현과 같은 온전함 그 자체를 지시하지 않는다. 주전자가 필요한 현장에서는 주전자가 되고, 술잔이 필요한 현장에서는 술잔이 되는 능력이 바로 ‘불기’의 본질이다. 마치 도마뱀[易]처럼 새로운 상황이 조성될 때마다 그 현장에 가장 ‘적합한’ 양태로 자신을 변이해가는 능력을 지닌 자가 ‘인간다운 자’, 곧 인자(仁者)인 것이다. 그렇기에 그는 ‘불기(不器)’의 비유에서처럼 복수의 능력이 단일 형상으로 표현된 것이 자신이라고 주장한다.

‘학(學)’의 일원으로 규정되는 한, 곧 ‘인문학’이 되는 순간 인문학도 여타의 분과학문처럼 ‘법칙 정립적’으로 다룰 수 있는 대상만을 다루게 된다. 가령 인문학과 ‘인문과학’을 등치하는 용례에 이러한 경향이 비근하게 드러나 있다. 이처럼 생래적으로 동태적인 인문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한 인문과 인문학은 등치될 수 없다.

38) 이 단락의 서술은 김월희(2007), 앞의 논문에서 발췌, 수정 보완하였음.

39) 공자가 말했다. “군자는 그릇이 되지 않는다.”(子曰, “君子不器.”)-『논어』「위정(爲政)」.

○ 이러한 인간다운 자[仁者]는 진정으로 유능하며 능동적이다. 그는 복수의 능력이 단일 형식으로 표현된 것이 자신이라고 주장한다. 그에게 있어 현실은 순간순간 조성되는 것이기에, 그것을 ‘명사적’으로 이해하는 데 만족하지 ‘못한다’. 사회적 힘에 의해 위계화 된 질서마저도 그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⁴⁰⁾ 도리어 그는 그것을 자신의 능력을 신장하고, 자신을 한층 더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변이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의 긍정하는 힘은 부정적인 것마저도 자신을 강화하는 데 활용한다.⁴¹⁾ 그에게 ‘어진 자[仁者]’는 진정으로 강한 자였다. 인자는 인(仁), 의(義), 예(禮)를 통해 자신을 변이시킬 줄 아는 자이며,⁴²⁾ 자신의 능력으로 먼저 타인을 세우고 이루게 할 줄 아는 자다.⁴³⁾ 그는 너그름만을 표현하지 않는다. 오직 인자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다.⁴⁴⁾ 그는 ‘단호한 자’⁴⁵⁾로 그 어떠한 조건에서도 자신을 뜻을 지키고 실현하는 능력을 지닌 자이다. 심지어 그는, 성난 군중에 포위되어서도 “하늘이 문명을 포기하지 않을 터인데 저들이 날 어찌하겠느냐?”라며 거문고를 탔던 공자처럼,⁴⁶⁾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강해지는 이다. 그것은 능력의 신장을 통해 자신을 변이시키고 현실을 능동적으로 조성하는 ‘자기 증강’의 표현이다.

○ 이처럼 한자권에서의 인문은 ‘인간다운 이’, 곧 ‘어진 자[仁者]’가 되는 과정을 지시하는 ‘살아 움직이는’ 무늬이다. 그것은 능력의 신장을 통해 자신을 변이시키고 현실을 꾸준히 조성해가는 능동성의 동적 표현이다. 따라서 인문은 그 자체로 어떤 유형의 현실이든 그것을 긍정

40) “강자들은 자신의 사회적인 힘과 위계를 긍정하며, 이것을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는 기반으로 사용한다. 내가 남과 다르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긍정의 대상이 된다.”-고병권(2001), 『니체, 천 개의 길 천 개의 눈』(서울: 소명출판사), 78쪽.

41) “긍정은 부정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부정은 긍정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같은 책, 204쪽.

42) 공자가 말했다. “공손하면서 예가 없으면 피폐해지고, 신중하면서 예가 없으면 두려워만 하게 되고, 용맹하면서 예가 없으면 문란하게 되고 곧으면서 예가 없으면 경직되지만 한다.”(子曰, “恭而無禮則勞, 慎而無禮則憊, 勇而無禮則亂, 直而無禮則絞.”)-『논어』 「태백(泰伯)」. 여기서 예(禮)는 ‘공(恭, 공손함), 신(慎, 신중함), 용(勇, 용맹함), 직(直, 곧음)’이란 능력을 각각 ‘불로(不勞, 피폐하지 않게 함) · 불사(不憊, 두려워하지 않음), 불란(不亂, 문란하게 하지 않음), 불교(不絞, 경직되지 않음)’한 능력으로 변이시켜준다. ; 공자가 말했다. “군자는 의로써 위가 되나니 군자는 용기가 있고 의가 없으면 문란해지고 소인은 용기가 있고 의가 없으면 도적이 된다.”(子曰, “君子義以為上, 君子有勇而無義為亂, 小人勇而無義為盜.”)-『논어』 「양화(陽貨)」. 여기서 의(義)는 ‘용(勇)’이란 능력을 ‘불란(不亂)’, ‘부도(不盜, 도적질하지 않음)’의 능력으로 변이시켜준다. ; 공자가 말했다. “사람이면서 인하지 않으면 예는 무엇에 쓰겠는가? 사람이면서 인하지 않으면 음악은 무엇에 쓰겠는가?”(子曰, “人而不仁, 如禮何. 人而不仁, 如樂何.”)-『논어』 「팔일(八佾)」. 여기서 인(仁)은 예와 악을 예와 악하게 만들어준다.

43) 무릇 인자는 자기가 서고자 하면 남을 먼저 세우고 자기가 현달하고자 하면 남을 먼저 현달하게 한다.(夫仁者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논어』 「옹아(雍也)」.

44) 공자가 말했다. “오로지 인자만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子曰, “惟仁者能好人, 能惡人.”)-『논어』 「이인(里仁)」.

45) 공자가 말했다.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아니하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子曰,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논어』 「안연(顔淵)」.

46) 이와 관련한 이야기는 『논어』 「술이」 편과 「자한」 편에 나온다.

하고 능동적으로 재구성한다. 그것은 시대나 지역의 경계를 가로지르고, 하부구조나 사회제도 등도 경쾌하게 넘나든다.

□ 앎(지식)은 본성적으로 동사적이다.

○ 맹자가 사람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양지(良知)’와 ‘양능(良能)’을 타고난다고 했을 때 이는 인간은 모름지기 ‘할 줄 앎’을 선천적으로 구비하고 있는 존재라는 통찰이다. 양지는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배운 적이 없음에도 배고프면 엄마의 젖을 찾을 줄 아는 앎 곧 ‘알 줄 앎’이고, 양능은 마찬가지로 누구로부터도 익힌 적이 없어도 배고프면 울 줄 앎 곧 ‘할 줄 앎’이다. 공자와 맹자 모두 공유하는 앎에 대한 이러한 통찰은 ‘지행합일(知行合一)’이라는 명제로 정식화된다. 양명학을 정초한 명대의 왕양명(王陽明)은 이러한 동사적 앎에 대하여 이렇게 단언한다. “앎[知]은 행함의 시작이다. 행함은 앎의 완성이다. 성인의 학문은 오로지 공부(功夫) 한 가지일 뿐이니 앎과 행함은 두 가지 일로 나눌 수 없다.”⁴⁷⁾ 앎은 이렇게 행함, 곧 삶과의 되먹임 관계 속에서만 앎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존재 형식은 ‘동사적’일 수밖에 없다. 앎과 삶의 통합은 ‘상태’가 아니라 ‘과정’의 형식으로 매순간마다 ‘관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 지행합일은 각각 별도로 존재하는 지와 행의 사후적 합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통찰이다. 이러한 견해는 앎과 삶을 분리 가능한 두 개의 독립적인 것으로 본 결과이다. 왕양명은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지와 행, 곧 앎과 삶은 애초부터 분리 불가능한 하나였다고 잘라 말한다. 앎과 삶은 비유컨대 하나의 동전에 동시에 존재하는 양면일 따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효를 알아도 행하지는 앎을 수 있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하는 제자에게 “그것은 효를 모르는 것이다. 행할 줄 모르는데 어찌 안다고 하겠는가?”라고 단언했다. 그가 보기에 사람들은 머리로 알면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일종의 착각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앎은 삶으로 펼쳐냈을 때, 곧 실천했을 때 비로소 참다운 앎으로 완성되고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 ‘한 몸으로서의 앎과 삶’이라는 왕양명의 통찰은 그의 “사상마련(事上磨鍊)”이라는 모토로 이어진다. 사상마련이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 공부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경야독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공부는 오늘날처럼 학문이나 기술 등을 익히는 활동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것을 포함하여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과 기술, 그러니까 ‘좋은 삶을 위한 삶의 기술’을 익히는 활동을 가리킨다. 가령 나의 직업이 무엇이든 그 직무를

47) 知者行之始, 行者知之成. 知行不可分作兩事.-왕양명, 『전습록(傳習錄)』.

수행하면서 그것이 바로 삶의 기술을 익히는 일이 되게 한다는 것이다. 왕양명은 당시를 대표하는 학자인 동시에 명대 중엽 최고의 무장이었다. 왕양명은 부패와 무능력에 빠진 조정을 대신하여 수차례 지방 반란을 진압하는 등赫赫한 무공을 세웠다. 진압할 때에도 무조건 무력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다시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강구한 후 이에 따라 무력 사용을 조절하였다. 요새 식으로 표현하자면 지방 반란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한 후 이를 구조적 차원에서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무력 사용을 활용했다. 무장의 임무를 띠고 있지 않을 때에도 그는 적잖은 기간 동안 관직에 있었다. 그가 세상을 뜨게 된 직접적인 계기 역시 오지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절치 못하고 받들었다가 과로로 지병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이러한 삶의 궤적을 보면 도대체 언제 공부를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래서 왕양명도 이러한 질문을 늘 받았다. 그때 그에게 준비되어 있던 답이 바로 사상마련이었다.

○ 왕양명이 보니 사람들은 일상생활은 그것대로 하고, 공부는 따로 시간을 내서 한다고들 한다. 그는 지와 행, 그러니까 앎과 삶이 분리되는 등의 병폐는 바로 그러한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앎이 삶에 관한 것이요, 삶 속에서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그 둘은 분리될 수 없는 법, 응당 살아가면서 알아가고 알아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따라서 그에게는 무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여 또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여 학문을 못 닦을 이유가 없었다. 이처럼 사상마련은 지행합일이라는 앎과 삶에 대한 정확한 통찰을 일상생활 차원에 적용한 윤리적 지향이었다. 일상생활에서 동사적 앎의 공능을 구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권계였음이다.

3.2.1.3.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의 되먹임구조

□ “자신을 수양하고 타인을 다스린다”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지향은 전근대시기 한자권의 치자 계층에 요구되었고 그들이 기본적으로 공유하였던 유가사상의 핵심 이념이자 윤리였고, 공부이자 역량이었다.

○ 이것의 원류에는 “내성외왕(內聖外王)”이란 지향이 놓여 있다. 이는 『장자(莊子)』 「천하(天下)」 편에서 유가를 대표하는 이념으로 언급된 것으로, 군주를 비롯한 치자 계층이 기본이자 목표로서 갖추어야 할 궁극적 지향이자 실질적 역량이었다. “안으로 성인이 된다”는 뜻의 내성은 성현의 도로 자신을 수양하여 성인군자의 삶을 일상에서 펼쳐냄을 말하고, “밖으로는 왕도를 실현한다”는 뜻의 외왕은 성현의 도로 천하를 통치하여 치세를 일구어냄을 말한다. 여기서 내성은 수기로 치환되기도 하며, 외왕은 치인으로 치환되면서 치자로서 마땅히 지향하고 수행해야 할

공부의 두 기축으로 작동되었다.

○ 단적으로 유가는 수기치인을 학문의 목적으로 삼고 내성외왕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유가는 수신(修身, 도덕적 수향)과 경세(經世, 천하 통치)를 동시에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수신 곧 수기와 경세 곧 치인은 서로 독립된 별개의 공부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현실적으로 치자 계층 모두가 현직 관리일 수도 없고, 송대 주희나 조선의 퇴계 이황(李滉)의 예에서처럼 치자 계층 모두가 관리를 꿈꾸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치인의 지향을 접어두고 수기의 공부를 삶의 기반으로 삼기도 하였다. 마찬가지로 외왕도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이들의 몫으로 따로 떼어내기도 하였다. 개인 차원의 도덕 수양과 사회 차원의 경세 실천으로 나누어 대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수기를 치인에 종속된 공부로 보기도 하였다. 곧 수기는 수단으로, 치인은 목적으로 이해되기도 했다. 수기라는 과정을 거쳐 치인이라는 목적 실현에 도달하다는 이해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수기치인에 대한 오해 내지 왜곡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가 경전인 사서(四書) 중 『대학(大學)』의 ‘팔조목(八條目)’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대학』의 팔조목은 ‘삼강령(三綱領)’, 그러니까 “밝은 덕을 밝힌다(明明德)”, “백성을 피붙이같이 사랑한다(親民)”, “지극한 선에 머문다(止於至善)”이라는 『대학』의 궁극적 지향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여덟 가지 공부를 말한다. “격물(格物), 치지(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가 그것으로 각각 “만사만물로 나아가다”, “앎을 이룩하다”, “뜻을 참되게 하다”, “마음을 바로잡다”, “자신을 닦다”, “가문⁴⁸⁾을 가지런하게 하다”, “나라를 다스리다”, “천하를 평안하게 하다”는 뜻이다. 여기서 격물과 치지, 성의, 정심은 개인의 내면, 곧 개체 차원에서의 수양과 연계되고, 제가와 치국, 평천하는 개인의 외면, 곧 사회 차원에서의 수양과 연계된 공부이다. 곧 격물과 치지, 성의, 정심은 수신의 내향적 공부 내용을, 제가와 치국, 평천하는 수신의 외향적 공부 내용을 각각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 가능하며, 그 결과 격물부터 정심의 공부는 수기에, 수신부터 평천하의 공부는 치인의 공부에 각각 배속 가능하다.

○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수신 공부를 치인의 공부에만 배정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팔조목에서 수신 공부는 지성에 대한 공부인 격물과 치지 공부, 마음에 대한 공부인 성의, 정심 공부를 경세 공부인 제가와 치국, 평천하의 공부를 결부해주는 공부이다. 이런 점에서 수기나 치

48) “제가(齊家)”에서의 ‘가(家)’는 본래 봉건제 아래서의 대부(大夫)가 제후로부터 일정 지역의 통치를 위임받아 다스리던 지역을 가리켰다. 곧 가정, 가문이라는 뜻으로 이해되기에 앞서 정치단위의 하나로서 이해되었다. 곧 봉건제의 천하질서는 천자가 다스리는 천하, 천자로부터 일정 지역의 통치를 위임받은 제후가 다스리는 지역인 국(國), 제후로부터 다시 일정 지역의 통치를 위임받은 대부가 다스리는 지역인 가(家)로 구조화되어 있었다.

인 어느 한 쪽에만 속하지 않는, 수기 공부와 치인 공부가 동시에 갖추어지고 수행되는 공부라고 할 수 있다. 격물부터 정심의 공부는 사회 차원에서는 개체[身]를 바탕으로 발휘되며, 제가부터 평천하의 공부 또한 개체[身]를 바탕으로 수행되기 때문이다. 또한 격물부터 정심의 공부는 개체를 통해 사회 차원에서 드러남으로써, 곧 현실에서 발휘됨으로써 비로소 그 공부의 성패가 검증된다. 격물, 치지, 성의, 정심 공부의 완성은 개체의 내면이 아니니 개체가 속한 외면, 곧 사회에서 공부한 바가 발휘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제가와 치국, 평천하의 치인 공부 또한 마찬가지다. 이들은 수신 공부를 매개로 격물, 치지, 성의, 정심의 공부와 유기적으로 결합됨으로써 비로소 그 완성을 이룩해낼 수 있게 된다. 무엇으로 어떤 상태에 이르게 해야지 비로소 ‘가-국-천하’ 각각의 정치단위에서 ‘가지런하게 하다[齊]-다스리다[治]-평안하게 하다[平]’는 통치의 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지를 알고 그럴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 공부와 결합될 때 비로소 제가, 치국, 평천하의 공부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곧 팔조목에서의 수신 공부는 격물부터 정심 공부의 단순한 종합이 아니라 그들과 제가부터 치국, 평천하 공부를 한 몸으로 결합시켜내는 공부인 것이다. 『대학』의 팔조목은 애초부터 ‘수기-개인 차원의 수양’ 대 ‘치인-사회 차원의 경세’ 식의 이분법적 분절이 전혀 전제되어 있지 않았음이다.

□ 이렇게 수기와 치인을 서로가 서로를 완성해주는 관계로 사유한 데는 인간 내지 인간다움에 대한 유가의 사유가 놓여 있다.

○ 공자가 인간다움의 핵심으로 제시한 ‘인(仁)’은 사람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사람답게 됨을 당연시한 결과이다. 비단 타인과의 관계뿐만이 아니었다. 지금 전하는 가장 오래된 자전인 『설문해자』에는 사람은 “천지가 낳은 것들 가운데 가장 귀한 존재(天地之性最貴者也)”이며 “천지의 마음(天地之心也)”이라는 풀이가 보인다. 사람은 천지, 곧 우주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인간이 되는 존재라는 사유이다. 따라서 수기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되고자 하는 공부라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장은 당연히 우주자연과 인간사회가 된다. 인간은 인간 개체 차원에서는 인간다워질 수 없으므로 인간다움의 구비와 실현을 목표로 하는 수기 또한 인간 개체 하나의 차원에서는 실현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맹자는 자신을 선하게 함보다 타인을 선하게 함에 더 즐거워하였고, 더불어 천하를 선하게 한다는 “겸선천하(兼善天下)”의 지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세상이 걱정하기 전에 앞서 걱정하고 천하가 즐거워한 후에 즐거워한다는 “선우후락(先憂後樂)”의 지향도 분명히 했다. 옛적 성인들이 “천하의 백성을 생각함에 필부필녀 중에 요임금과 순임금의 은택을 입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 마치 자신이 그들을 도랑으로 밀어 떨어뜨린 것처럼 여겼으니 그들이 천하를 스스로 맡음이 이와 같이 무거웠다”⁴⁹⁾고 함으

로써, 치자로서 자신에게 유의미한 실존의 범위를 천하 백성 전체로 확장하였다.⁵⁰⁾ 곧 맹자로 대변되는 유가에서 당연시한 ‘자기[己]’의 범위에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천하 백성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세계관 아래서 자기를 닮는다고 함은 그 자체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되고, 세상을 다스린다고 함은 그 자체로 자신을 닮는 것이 된다.

○ 이와 같이 수기와 치인은 서로 되먹임을 통해 서로를 완성해주는 회로를 이루고 있다. 곧 수기는 치인의 명실상부한 실현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고, 치인 또한 수기의 명실상부한 실현을 통해 완성된다. 이러한 수기치인의 이념이 전근대시기 내내 유가의 핵심 윤리이자 역량, 공부로 당연시되어 왔다. 학문이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음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었다. 곧 개인의 내면을 지성적, 심적 차원에서 닮는 공부와 사회에 참여하여 현실을 성현의 도에 의거하여 다스리는 공부는 처음부터 별개의 것으로 사유되지 않았음이다. 아니 애초부터 서로 독립적인 별개의 것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사유조차 하지 않았다. 이를 오늘날에 대입하면, 이를테면 경세를 인문학과 무관한 것 또는 인문학의 본령이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이른바 ‘순수 인문학’은 진정한 인문학의 반쪽짜리에 불과한 셈이 된다.

3.2.2. 역사적 근거

□ 경제적 인문의 역사적 근거를 짚어보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경제적 인문의 전통이 유장했음을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동양의 경우 고대 중국의 학정일체 전통과 역대 황실이 주도한 도서 정비 사업과 출판 사업을 살펴보고, 서양의 경우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르네상스 시대, 근대 전환기에서의 인문학과 경제의 관계를 고찰한다.

3.2.2.1. 고대 중국의 학정일체(學政一體) 전통

□ 경제로서의 인문은 “학술과 정치는 한 몸”이라는 학정일체 전통의 소산이면서 동시에 학정일체의 전통이 지속되게 하기도 했다.

○ 학정일체의 정통은 학문이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정초된 것이었다. 상고시대의 성인이 하나같이 문화적 영웅인 데서 목도되듯이 훗날 학문이란 이름으로 묶이는 바들은 기본적으로 천

49) 思天下之民，匹夫匹婦，有不被堯舜之澤者，若已推而內之溝中，其自任以天下之重如此。-『맹자(孟子)』 「만장상(萬章上)」.

50) 이는 수기치인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공자의 “수기이안인(修己以安人, 자신을 닦음으로써 사람들을 평안하게 한다)”는 지향에도 잘 드러나 있다. 『논어』에는 “안인(安人)”의 지향이 “백성을 평안하게 한다”는 “안백성(安百姓)”으로 확장된다. 이에 대하여는 이종선(2014), “수기이안인(修己以安人) 체제에 관한 시론적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가을호 제37권 제3호(통권 136호)) 참조.

하 경영, 국가 통치라는 맥락에서 고안되고 발달되었다. 고대 제왕이 분할 불가능한 단일어인 ‘군사(君師)’라는 말로 그 정체성이 지시된 저간의 사정이다. 그렇다 보니 국가 통치의 골격인 제도를 운행하는 데 필수적인 제반 관직에 할당된 직무도 기본적으로 훗날 학문으로 묶이는 바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관리는 ‘이사(吏師)’,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백성의 스승 격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제기된 것은 이러한 전통에 비추어 보면 당연한 귀결이기도 했다.

○ 한(漢) 제국에 들어 유가를 비롯한 제자백가의 원류를 관직의 직무와 직결시킨 것은 이러한 학정일체의 전통을 경세 차원에서 정식화한 결과였다. 반고(班固, 32?-92)는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에서 한대까지의 학술을 정리하면서 제자백가를 10가로 나눈 후 그 원류에 대하여 이를테면 “유가는 대체로 사도(司徒, 각종 지식과 교육을 관장하는 관직)로부터 나왔다”, “도가는 사관(천문, 역법, 역사 등을 관장하는 관직)으로부터 나왔다” 식으로 설명하였다. 노자와 장자같이 모든 인위적 활동과 소산을 부정했던 도가조차 경세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고 보았던 셈이다. 곧 경전은 애초부터 경세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었고, 사서 또한 경세의 참조체계 구축을 위해 집필된 것이니 결국 경전과 제자백가서, 사서 모두 경세와 밀접한 연계 속에서 빚어졌던 것이다.

○ 『한서』 「예문지」에 앞서 사마천(司馬遷, 145?-86?년 BCE)의 『사기(史記)』 「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에 실려 있는 「육가요지(六家要旨)」에서는 “음양가(陰陽家), 유가(儒家), 묵가(墨家), 명가(名家), 법가(法家), 도가(道家)는 모두 세상 다스림에 힘쓴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제자백가를 “다스림[治]”라는 각도에서는 모두 동일하다고 하였다. 훗날 한자권 양대 역사서 모두에서 학정일체를 공인하고, 이를 정사와 학문의 정통으로 표방한 것이다.

□ 이후 전근대시기 내내 학정일체의 전통 위에 정사와 학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운용된 데는 이러한 역사적 바탕이 뒷받침되어 있었다.

○ 공자가 “정치는 바로잡는 것이다(政, 正也)”⁵¹⁾는 언명은 학정일체를 뒷받침하고 구현하는 데의 핵심 이념이었다. 여기서 ‘바로잡는다’고 함은 성인의 도로 대변되는 도덕적 목적을 정치적으로 구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래서 공자는 “『시경(詩經)』을 원다고 하여 그에게 내정을 맡겼더니 모자라고, 사방에 사신으로 보냈더니 독자적으로 일처리를 하지 못했다. 많이 외운들 무엇 하겠는가?”⁵²⁾라면서 경전 공부와 경세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강조했다. 또한 “너희들은 왜 『시경』을 공부하지 않는가? 시는 자신을 진작시킬 수 있고 정사의 잘잘못을 볼 수 있으며 좋은

51) 『논어』 「안연」.

52) 誦詩三百，授之以政，不達，使於四方，不能專對。雖多，亦奚以爲。-『논어』 「자로(子路)」.

봉당을 이룰 수 있고 공적 분노를 드러낼 수 있다. 가까이서 부모를 섬길 수 있게 되고 멀리서 군주를 섬길 수 있게 된다”⁵³⁾라며 경전 공부를 교화와 직결하였다. 공자의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하여 한자권에서는 전근대시기 내내 시로 교화를 일궈낸다는 ‘시교(詩敎)’와 음악으로 교화를 일궈낸다는 ‘악교(樂敎)’의 전통이 주류로서 도도하게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음악과 본래 노래의 가사였던 시, 오늘날의 관념으로는 문예의 범주에 드는 이 둘이 전근대시기 한자권에서는 줄곧 정사, 곧 경세의 차원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 학술과 정사의 일체화는 한 제국에 이르러 관제(官制)로 제도화되기에 이른다. 악부(樂府)라는 관서의 설치와 오경박사(五經博士)의 설치가 대표적 예이다.

■ 악부는 한 무제(武帝)가 서기전 112년에 설립한 관청으로 각 지역의 민간 음악과 노래를 수집하고 이를 정리하며, 궁중과 종묘 등에서 필요한 음악을 제작하고 연주 등을 관장함이 그 주요 임무였다. 여기서 각 지역의 민간 음악과 노래를 수집하는 것은 『시경』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이는 경세의 한 수단이었다. 곧 예로부터 ‘채시지관(採詩之官)’이라고 하여 민간의 노래, 곧 시를 채집함이 직무인 관리가 있어 각 지역에서 민요를 채취하여 조정에 보고하였다고 한다. 민요를 채취하는 목적은 공자가 “정사의 잘잘못을 본다”고 분명하게 밝혔듯이, 민요 채취는 오늘날로 치자면 여론 파악을 통하여 정치의 잘잘못을 밝히는 경세 행위였다. 이러한 전통이 한 무제 대에 이르러 전담 관청이 설치됨으로써 국가장치의 하나로 제도화된 것이다. 특히 예컨대 미술이나 건축 등을 관장하는 관청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악부의 설치가 지니는 의의는 자못 크다고 할 것이다.

■ 오경박사는 본래 전국시대부터 여러 나라에 설치되어 제자백가사상을 연구하던 박사라는 학관을 이어받아 한 무제가 조정에 설치한 학관(學官)으로 『시경』과 『서경(書經)』, 『역경(易經)』, 『춘추(春秋)』, 『예기(禮記)』의 다섯 가지 유가 경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한편 제자를 양성하는 관직이었다. 유학자인 동중서(董仲舒)의 건의를 수용하여 유학을 제국 최고 통치이념으로 정립한 무제는 한대에 들어서도 설치됐던 제자백가를 연구하는 박사제도를 폐지하고 오로지 유가 경전을 연구하는 오경박사를 정립함으로써 공경대부 같은 고위직은 물론 중간과 하위직의 관리들도 기본적으로 유학을 익혀야 관작과 봉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유학과 정사의 일체화가 한층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심화되었다. 곧 오경박사 관제의 정립은 학술을 기반으로 천하를 경영한다는 학정일체의 전통이 중국제국의 기본값으로 확고하게 정위(定位)되었음을 밝히 일러주는 징표였다. 학술과 경세의 일체화가 이념 차원에서뿐 아니라 제도 차원에서도 기본으로 실현되었음이다.

53) 子曰, “小子何莫學夫詩. 詩, 可以興, 可以觀, 可以羣, 可以怨. 邇之事父, 遠之事君.”-『논어』「양화」.

○ 학정일체의 전통은 관리 임용 차원에서도 제도화되어 천 수백여 년 간 지속되었다. 과거(科擧)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7세기 초엽, 왕조로는 수대(隋代)부터 도입된 과거제는 1905년 폐지되기까지 경전과 시가에 대한 역량을 바탕으로 관리를 임용하던 제도였다. 전근대시기 한 자원의 학술을 크게 경전 공부와 문장 공부로 양분된다. 시가는 그러한 문장의 대표로, 과거는 그러한 학술 역량을 시험하여 경세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관리로 임용하는 제도였다. 곧 관리 후보자의 경세 역량을 학술 역량을 기반으로 시험하는 것을 제도화한 것이 과거였다. 이는 현대 한국사회에서 치르는 국가고시에 행정, 외교, 법 등 해당 공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함께 영어, 한국사 등을 시험과목으로 제정하였지만 문예를 시험과목으로 설정한 예가 전무함과 사뭇 대조적이다. 곧 전근대시기 한자권에서는 학술이 경세의 요체로서 당연시되었지만, 현대 사회에 들어서는 학술과 경세 간에 괴리가 일어났고 이것이 국가제도 차원에서도 관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오늘날 인문에서 경세를 당연한 듯이 배제하는 관점은 국가제도 차원에서 과거 등으로 제도화된 학정일체라는 역사적 실재를 도외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2.2.2. 역대 중국의 황실 주도 도서사업과 출판사업

□ 황하와 장강 유역의 대부분을 동시에 석권하는 통일 제국을 이룬 왕조는 건국 초기의 혼란을 수습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장서 사업을 시행하였다.

○ 가령 한 제국은 초기의 정치적 혼란이 수습되자 황실이 나서서 도서를 널리 수집하였다. 궁궐에 석거각(石渠閣)·천록각(天祿閣)·기린각(麒麟閣)·난대(蘭臺)·석실(石室)·연각(延閣)·광내(廣內) 등의 장서각을 건립하고 태상(太常)·태사(太史)·박사(博士)·태복(太卜) 등의 관직을 설치하여 그렇게 모은 도서를 관리하고 정리, 연구하고 그 소산을 간행하였다. 350여 년간 이어진 위진남북조시대의 혼란과 분열을 통일한 수 제국은 건국 초기의 정치적, 사회문화적 안정화 정책의 하나로 도서 수집과 정리 작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그 결과 존속 기간이 30년도 채 못되었던 단명한 제국이었음에도, 건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문제(文帝) 시절에 4권으로 된 『수개황사년서목(隋開皇四年書目)』 같은 도서 목록이 편찬되었고, 이후 4년 단위로 같은 권수로 두 종이 더 출판되었다. 이는 양제(楊帝) 재위 시절에도 이어져 『향주사부목록(香廚四部目錄)』 4권 등 수 종의 목록서가 출간되었다. 정치사회적으로 불안정성이 이어지던 상황이었음에도 도서의 수집과 정리,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었음이다. 이를 통해 경세와 학술의 관계, 특히 경세에서의 학술의 위상과 비중, 역할 등에 대한 당시인들의 사유를 잘 말해주는 사실들이다. 수 제국을 이어받아 제국을 건설한 당 또한 건국 초기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자 황제의 이름으로 도서를 수집하여 궁중에 보관, 정리, 연구하며 이를 정사, 곧 경세에 적극적으로 활용

하였다. 도서사업을 전적으로 관장하는 부처로 비서성(祕書省)을 설치하였고, 홍문관(弘文館)과 숭현관(崇賢館) 등을 별도로 설치하여 도서의 수집과 정리, 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였다.

○ 한대나 수대, 당대의 문화 여건을 고려하면 가령 “조정에서 경세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도서 외에 또 다른 무엇이 더 있었겠는가?”와 같은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오산이다. 당시 도서만큼 경세에 실질적 자산이 될 수 있는 문명 장치는 사뭇 드물었다. 이는 역대의 도서사업에서 주목해야 할 대상은 도서라는 물적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 수록되어 있는 지혜와 지식, 정보 등임을 시사해준다. 도서라는 형식을 지닌 물건의 수집이 목적이 아니라 그 속의 내용 수집과 이의 정리, 분석 등이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도서에 담긴 바 학술을 경세의 핵심 자산으로 삼고자 한 제국 차원의 적극적 활동이 곧 도서사업의 형태로 발현된 것이다. 여기서 “학술을 경세의 터전으로 삼음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타당하지 않은 질문이다. 분서갱유에서 분명하게 목도할 수 있듯이, 한 제국에 앞서 중국 역사상 최초로 제국을 건설한 진시황은 학술을 기반으로 제국을 통치하는 길이 아닌 실무적 역량, 기술적 역량, 전투력 등과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法]을 기반으로 하는 제국의 통치라는 길을 선택했다. 비록 이러한 길을 선택한 후 제국을 채 20년도 유지하지 못했지만, 통일 제국을 이룩하기 전의 진은 이러한 길로 부국강병을 일구어냈고 급기야 중원을 크게 통일해냈다. 진시황의 길도 분명 경세의 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이다. 따라서 한 제국과 수 제국, 당 제국이 개국 초엽부터 도서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는 학술이 곧 경세의 기반이라는 분명한 인식에 의한 선택이며, 그에 의거한 경세 방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 황하와 장강 유역의 대부분을 동시에 석권하는 통일 제국을 이룬 왕조는 건국 초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나면 어김없이 대규모 간행 사업을 수행하였다.

○ 물론 이는 대규모 출판 인쇄가 기술적 차원에서 가능해진 당대(唐代) 이후의 현상이다. 위진남북조시대부터 수 제국에 이르는 4백 년을 상회하는 혼란과 분열을 통일한 당 제국은 초기의 불안정이 해소된 태종(太宗) 대에 이르러 『오경정의(五經正義)』를 간행하여 학술을 기반으로 제국 통치의 기틀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오대십국의 혼란을 딛고 제국을 개창한 송(宋)은 초엽의 혼란이 해소되자 『태평광기(太平廣記)』·『태평어람(太平御覽)』·『문원영화(文苑英華)』·『책부원구(冊府元龜)』 같은 방대한 규모의 유서(類書, encyclopedia)를 편찬하였다. 당시 송은 대외적으로는 서하(西夏) 제국, 거란의 요(遼) 제국, 여진의 금(金), 몽골의 원(元) 제국 등 그 이전과는 분명하게 달라진 유목세계와 마주하고 있었다. 대내외적으로는 직전 왕조인 당대

까지 천여 년 간 정치의 주축이었던 명문세족의 몰락과 신흥 사대부 계층의 주류화, 미증유의 경제와 민간부문의 성장 등과 마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대내외적 상황에 송조는 방대한 규모의 유선 편찬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곧 유서의 편찬이 단순한 학술적 욕구의 소산이 아니라 경제와 밀접하게 연동되면서 수행된 산물이었음이다. 명대(明代) 초엽에 간행된 방대한 분량의 유서인 『영락대전(永樂大全)』도 경제와 학술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시대적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한 정책의 산물이었다. 명은 몽골 원 제국의 해체에 따른 국제정세의 격동과 원 제국에 의해 해체된 중화 정통의 복원이라는 대내적 과제를 시대적 과제로 부여받고 있었다. 명조는 송대처럼 방대한 유서의 편찬을 통해 이에 본격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패턴은 이른바 ‘오랑캐’가 중국을 통치할 때도 동일하게 반복되었다. 만주 정권인 청조(淸朝)에서는 거대 규모의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과 『사고전서(四庫全書)』가 각각 강희제(康熙齊)와 건륭제(乾隆帝) 때 연이어 제작, 간행되었다. 또한 석경(石經)과 사전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는 건륭석경(乾隆石經)과 『강희자전(康熙字典)』이 제작되어 보급됐다. 이는 유목민족 왕조인 청이 중국을 능률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과업의 일환이었다. 유목민족 왕조였지만 한과 당, 송, 명 왕조처럼 경제와 학술의 유기적 결합을 바탕으로 중국을 통치한다는 전통을 적극 수용하였던 것이다.

○ 황실 주도 하에 수행되었던 이러한 대규모 간행사업의 근저에는 ‘문화 중국’이라는 전통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었다. 중국은 3천여 년 전쯤 ‘나라들의 중심’, 곧 중국(中國)이 상상되고 모색됐던 주나라 초엽에 이미 주변에 대한 문화적 우위를 점하려는 의식적 활동이 전개됐다. 5백여 년쯤 흐른 뒤 이를 이어받아 공자가 오랑캐 땅의 치세보단 중원의 혼란이 차라리 낫다⁵⁴⁾고 단언하자 이는 중원의 도도한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수백 년이 또 흐른 후, 진시황의 진을 이은 한이 ‘문화 제국’으로서의 기틀을 튼실하게 다지자 중국은 중원과 주변을 통틀어 최고 문명국으로 우뚝 섰다. 달리 말해 한자권 유일의 보편문명이 됐다. 관념적으로만 그렇게 주장됐음이 아니다. 중국 자신이 하늘 아래 유일한 보편문명임을 명실상부하게 구현하자는 활동이 적극적으로 수행되었다. 가령 한 무제 시절, 『춘추번로(春秋繁露)』의 저자 동증서는 제국 경영의 이념적 청사진을 마련하면서 중원뿐 아니라 주변 종족의 문화를 중국 중심으로 변주해냈다. 같은 시대 『사기』를 완성한 사마천은 제국의 역사를 지으며 중국 주위에 포진해있던 흉노, 남월, 조선 같은 이민족의 문화를 중국 중심의 세계관으로 포착해냈다. 그렇게 그들은 타자들의 문화를 중국의 하위문화로 편입시키며 보편문명에 걸맞은 넓이와 깊이를 확보해갔다.

54) 공자가 말했다. “이적의 땅에 군주가 있음은 중국에 군주가 없음보다 못하다.”(子曰, “夷狄之有君, 不如諸夏之亡也.”)-『논어』「팔일」.

○ 동시에 학술 진흥과 문헌의 정비, 편찬을 통해 문명의 중심임을 표방함으로써 역내 문화 중국의 위상을 최정점에 위치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단지 문화 방면에서의 일만은 아니었다. 중국의 본령인 ‘문화 중국’인데서 목도되듯이 이러한 활동은 제국의 통치, 곧 경제의 핵심적 과업이었다. 예컨대 한 무제는 오경박사를 설치하여 유교 경전 해석의 표준을 장악하였고, 이를 제국의 통치와 직결시켰다. 유교 경전은 당시의 ‘문명 텍스트’였기에 이에 대한 해석의 표준을 장악함은 곧 문명 표준을 장악하는 것이었고 이는 문명의 중심으로 정립되는 것이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제국 통치의 기틀을 확고히 하고자 했던 것이다. 당 태종도 같은 맥락에서 『오경정의』를 간행하였다. 곧 한 제국에 이어 재차 유교 경전의 원문을 확정하고 그 표준을 독점함으로써 당 제국의 기틀을 탄탄하게 구축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종(玄宗)은 『효경(孝經)』과 『도덕경(道德經)』, 『금강반야경(金剛般若經)』에 주석을 달아 유·불·도 3교의 교의를 자신의 해석에 복속시킴으로써 정치적 군장인 황제가 유·불·도 3교로 대변되는 학술의 지존이기도 함을 선언하였다. 황제가 정사와 학술 모두에서 정점에 위치함을 분명히 하였던 것이다. 또한 문종(文宗)은 지금의 국정 교과서쯤 되는 석경(石經), 그러니까 조정이 공인한 판본의 유교 경전 원문과 주석을 새긴 비석을 제작하여 보급했다. 이를 통해 흔들리는 제국의 기틀을 다시 다잡고자 하였다. 학술은 이렇게 정사, 곧 경제와 마치 한 동전의 양면처럼 유기적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었다.

○ 송대 초엽에는 훗날 ‘북송 4대 백과전서’라고 불린 『태평어람』·『태평광기』·『문원영화』·『책부원구』 같은 방대한 규모의 유서(類書)가 편찬되었다. 『태평어람』은 1,000권으로 구성된 중국적 특색이 전형적으로 구현된 백과전서라는 평을 받는다. 55가지의 대분류 항목에 5,400여 가지의 소분류 항목을 설정한 후 기존 서적에서 해당 항목과 관련한 내용을 추려 수록하였다. 이렇게 『태평어람』에 인용된 기존 서적은 1,700종에 육박한다. 500권으로 이루어진 『태평광기』는 『태평어람』과 동시에 편찬된 유서로 그것에는 수록되지 않은 야사와 소설, 설화, 민담 등을 92가지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수록한 유서이다. 1,000권에 달하는 『문원영화』는 남조(南朝)시대부터 송 건국 직전까지의 시가, 산문 등의 문학 작품을 39가지의 문체로 나누어 수록한 유서 형식을 띤 문학선집이다. 1,000권으로 이루어진 『책부원구』는 역대 군신 간의 사적을 전문적으로 수록한 역사 기반의 ‘정치 백과전서’이다. 경제에 필요한 항목 별로 역대의 통치 사례가 다량으로 수록되어 있어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증시되었다.

○ 송대 초엽에는 대내적으로는 사회문화의 발달과 수준의 제고, 경제와 문화 방면에서의 민간부문 역량의 확대와 제고 및 사회적 영향력의 강화, 경제부문의 획기적 성장, 활자 기반 인쇄 출판 문화와 사업의 비약적 증대, 제지술·화약·나침반 등으로 대변되는 과학기술의 눈부신

진보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대외적으로는 서하와 요, 금, 원 등이 새로운 유목제국으로서의 실질을 갖추며 송과 때로는 대립하고 때로는 교유를 하고 있었으며, 동남연해안으로는 명주(明州), 천주(泉州), 광주(廣州) 등의 대외무역항을 중심으로 동남아 일대를 넘어 아랍 지역과 활발히 교역하고 있었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 아래서 경제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고, 학술과 과학기술 등도 크게 발달하였다. 그 결과 송대 초, 중엽에 일어났던 변화는 “중국역사상 항상 있었던 반란, 침략, 그리고 왕조 간의 전쟁만이 아닌 그 이상이었다. 이러한 변혁은 중국문명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사회적·문화적·정치적·경제적인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⁵⁵⁾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이전 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환경이 펼쳐졌다. 이에 새롭게 다채로운 사유와 상상, 지식, 정보, 경험 등이 넘치게 되었고 문화 또한 이전 시대와는 확실하게 다른 결을 자아냈다. 송조는 방대한 규모의 유서 편찬을 통하여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했던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제국 통치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고자 했던 것이다. 명대 초엽에 조정 주도로 간행된 방대한 분량의 유서인 『영락대전』도 마찬가지였다.

○ 명조는 중국을 비롯하여 중앙유라시아 일대를 석권한 몽골의 원 제국을 만리장성 이북으로 축출하면서 수립된 한족(漢族)의 왕조였다. 유목세계는 몽골제국의 해체를 계기로 새로운 질서 구축을 위한 움직임으로 동탕되고 있었고, 만리장성 이북으로 축출된 몽골은 소멸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제국 규모의 군사력 등을 갖춘 채 중국과 대치 중이었다. 대내적으로는 몽골의 원 제국이 중원 통치를 위하여 적극 해체한 ‘중화 전통’의 복원이 시급하였고, 민간부문의 성장에 이 거둬되었다. 경제력은 동시기에 진행된 서구의 지리상의 발견과 이로 인해 형성된 은 본위제 경제체제, 서구의 동아시아로의 본격적 진출 등을 매개로 크게 증대되고 있었다. 송대 초엽 못지않은 격변과 갱신의 시대였다. 명조는 이를 『영락대전』과 같은 방대한 분량의 유서 편찬을 기반으로 대처해가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성리학을 제국 최고의 통치이념으로 표방하면서 『성리대전(性理大典)』, 『사서대전(四書大典)』, 『오경대전(五經大典)』 같은 경전에 대한 정비와 재해석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념 차원에서도 제국 통치의 기틀을 확고하게 다지고자 하였다.

○ 이는 이른바 ‘오랑캐’가 중국을 통치할 때도 동일하게 수행되었다. 만주 정권인 청은 중국 점령 후 대대적인 도서 정비와 간행 사업을 벌여 무력에 의존하던 유목민족의 한계를 깨고 유교문화국가로 탈바꿈하고자 하였다. 대단위 문화사업의 시행으로 한족 지식인들에게 출사의 기회를 줌으로써 중국 통치의 인적 기반을 닦았으며, 고금의 도서를 수집 정리하고 진위를 가리는 과정에서 고증학을 발전시켜 실사구시(實事求是)·경세치용(經世致用)의 새로운 학풍을 일으켜 제국 통치의 학술적, 사상적 토대를 닦았다. 조정의 이러한 노력은 5020권 502갑의 거

55) P. B. 에브레이(2000), 배숙희 역, 『중국 여성의 결혼과 생활 : 송대 여성을 중심으로』(서울: 삼지원), 서문.

질 『고금도서집성』과 79338권 36000여 책⁵⁶⁾의 『사고전서』의 연이은 제작으로 결실되었고, 석경과 사전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는, 곧 13경을 온전히 새긴 건륭석경과 『강희자전(康熙字典)』의 제작, 보급으로 이어졌다. 또한 전통적 증원을 포함하여 만주와 몽골, 위구르, 티베트 등을 동시에 통치하는 미증유의 성세를 일구어낸 상황에서 각 지역의 풍토 지리와 종족 등에 대한 정보를 이미지화 하여 모은 『황청직공도(皇清職貢圖)』도 간행되었다. 보편문명으로서 갖춰야 할 정보를 집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명 표준과 최고 높이, 넓이를 확보하려는 시도는 증원을 차지한 족속이 누구든, 그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이어졌음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봉건문화의 척질을 명분으로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한 결과 태어난 사회주의 현대중국에서도 이러한 보편문명자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던 전통이 여전하게 이어져 다양한 사업으로 발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3.2.2.3. 인문학이 만든 로마 국가와 로마문명

□ 로마 인문학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로마 공화국의 성립 근거를 제공했다.

○ 로마 공화국은 다름 아닌 공과 사의 분리에서 시작되었다. 키케로의 말이다. “여기에서부터다. [왕정에서 공화정으로의] 저 새로운 전환이 비롯되었다. 독자여, [여러분은] 자연적인 운동의 순환과 방향을 저 발단에서부터 살펴보고 통찰하시기를! 이것이야말로 국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핵심 사건이므로. 그래서 나(아마도 키케로)도 이를 서술함에 있어 전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동의 일, 공동의 것, 공동의 나라가 어떤 여정을 통해서 어떤 방향을 향해 발전해 나아갔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중략) 내가 말한 저 왕,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는 일찍이 아주 뛰어난 선왕을 살해했는데, 이 때문에 종종 두려움에 떨곤 했다.(…) 그의 큰 아들이 트리키티누스의 딸로 콜라티누스의 부인인 루크레티아를 강제로 범하게 된다. 고귀하고 정숙한 여인이었던 그녀가 저 불의의 폭행에 맞서 죽음으로써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는데, 이를 보고서 한 남자가 의연히 일어났다. 그가 바로 덕과 능력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었던 루키우스 브루투스였다. 그는 질곡의 노예 상태에서 시민들을 구원한 사람이었다. [국가로부터] 어떤 공직도, 어떤 중책도 맡고 있지 않은 사인(私人)에 불과했지만, 그는 공동체 전체를 구했고, 시민들의 자유(libertas civium)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공사(公私)의 구분이 없다는 것을 가르친 최초의 인물이다. 그를 중심으로 그의 주동을 통해서 일어 선 국가(concitata civitas)는 가깝게는 루크레티아의 아버지와 그의 친척들이 낸 탄원을 받아들여서,

56) 이는 명대에 제작된 『영락대전』의 약 3.5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멀리는 타르퀴니우스 왕의 폭정과 그 자신과 그의 아들들이 저지른 수많은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왕 자신과 그의 자식들은 물론 타르퀴니우스 일가 전체를 추방하는 명령을 내렸다.”⁵⁷⁾

○ 루크레티아 사건 자체는 어느 나라의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핵심은 루크레티아라는 한 여인의 강제 폭행 사건 속에 들어 있는 사건의 본질에 대한 브루투스의 통찰이다. 그것은 국가란 한 개인의 사적 왕국(res privata)이 아니라 공동의 나라(res publica)라는 점이다. 원래 공동의 나라인 것을 개인적으로 사유화한 인물인 왕이나 그 왕의 아들인 왕자가 공동체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즉 로마 인민의 공동체에 속하는 한 여인이 폭행당했는데, 이는 단순한 한 여인에 대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한 공동의 나라에 대한 폭행이다. 비록 한 사람의 사건이지만 온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건에 다름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공직에 있든 없든 관계없이 로마 인민이라면 의당 일어나서 싸워야 하는 문제라고 한다. 왜냐하면 루크레티아라는 한 여인의 일을 넘어서 그것은 공동의 일이 되며, 한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때 그것은 공동체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로마라는 국가-공동체는 탄생했다. 시민의 자유(libertas civium)가 침해되는 순간, 그의 자유를 지켜주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체가 일어날 때(concitata civitas), 이때 로마라는 국가-공동체가 자동적으로 발동한다는 것이다.

○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자동적으로 “일어난 국가(concitata civitas)”의 성격이다. 그것은 정체(政體), 즉 주권과 권력구성의 문제를 포함하는 의미에서의 국가의 구성 조건, 가능 조건이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로마 전통에 의한 구분, 즉 공공의 영역으로서의 폴리테이아(politeia)와 사적 영역인 오이코스(oikos)의 구분, 또는 폴리테이아(공동의 통치)와 튀란니스(tyrannis, 사적 지배)의 구분으로부터 “공공의 것은 공공의 것으로”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공동체(res publica)” 개념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적 지배의 왕정에 대한 대립 개념으로서 주권 구성을 요체로 하는 근대 국가의 기본 모형(母型)을 우리는 브루투스가 호소해서 일어난 “국가-공동체”에서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이 공동체는 제도적 형식으로서 완성된 조직체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정체로서 공화정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 이 공동체는 제도적 형식으로 한 조직체를 지칭하는 의미의 국가라는 제도가 성립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구성 조건으로 요청되는 개인과 공동체와의 관계 규정에서 성립하는 공동체이다. 그러니까 브루투스가 호소하고 주동하고 있는 이 국가-공동체는 인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 받을 때,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일종의 의지(voluntas)와 의식(conscientia)의 산물로서의 국가-공동체이다.

57) 『국가론』 제1권 45-46장.

인민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지켜 주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새로운 종류의 국가-공동체가 역사의 지평 위에 등장했다. 이렇게 일어난 국가는 왕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 인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ius populi Romani*)이다.

○ 로마 국가는 로마 시민들의 공동체이다. 로마 시민은 법률에 기초해서 탄생했다. 키케로에 따르면, “하나는 태어난 장소에 따라 [부여되는] 조국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가 부여한] 시민권의 획득으로 속하게 된 조국인데. 예를 들어 저 카토(Cato, 234-149년 BCE)는 비록 투스쿨룸 출신이지만 로마 인민의 시민권을 받았네. 그래서 태생상 투스쿨룸 사람이지만 시민으로는 로마인이어서 장소상의 조국과 법률상 조국이 다른 것이네. (...) 그러나 우리는 법률상의 조국을 더 우선시해야만 하네. 법률상의 조국에 기초해 국가 전체에,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해당하도록] ‘공동의 일’(rei publicae)이라는 이름이 성립하는 것이네.” 공동의 일이란 곧 ‘공동의 일을 공동으로 다룸’을 의미하고, 그것은 바로 ‘공화정’을 의미한다. 위의 인용문은 키케로가 ‘태생의 조국(patria naturae)’ 보다 ‘법률상의 조국(patria iuris)’을 상위에 놓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키케로는 그 이유로서, 개개인에 대하여 태생의 조국이 차지하고 있는 영향권보다 법률상의 조국이 미치는 영역이 훨씬 넓고 보편적이고, 그래서 ‘공동의 일’이라고 할 것이 더 많으며, 종국에는 전체 구성원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universae civitati)는 것을 든다. 왜냐하면 국가란 누구에게나 해당하고 모두의 이해관계(res publicae)와 연관된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문제를 하나의 단위체 아래에서 강제력을 동원해 처리할 수 있는 조직이 키케로에게 ‘법률상의 조국’이다. 키케로에 따르자면, 법률이 결여되는 조직은 도저히 국가(civitas)로 간주될 수 없다. 키케로는 종족의 국가에서 시민의 공화국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법률론』을 저술했고, 이는 로마 국가론은 물론 이후 서양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국가의 존립과 지속을 위한 중용한 담론으로 활용되었다.

○ 서양 역사에서 시민 개념은 특수성인 종족과 보편성인 국가의 분리를 전제하고, 그래서 제도(institutio)로서의 국가(civitas)를, 각 구성원의 합의와 동의에 의해 수립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며, 그래서 누구에게나 통용될 수 있는 기준과 규칙체계라고 규정한다. 시민이란 바로 이러한 기준과 규칙에 의해 규정된 자격과 신분을 가지고 있는 법적 인격체이다. 즉 법적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 개인과 국가 공동체와의 관계 규정이 발생하는데, 그런 관계 규정에 따라 국가 공동체와 개별적 개인 사이에 의무-권리관계가 성립되고, 시민이란 그 어떤 종족 출신인가와 무관하게 이 관계의 주체일 수 있는 자를 뜻할 뿐이다. 흥미로운 점은 키케로의 ‘법률상의 조국’과 그 ‘조국의 구성원인 시민’에 대한 논의는 로마 제국의 존립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다종족으로 구성된 로마 제국의 상황은 로마의 내적 안정과 평

화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민족과 종족들에게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과 규칙의 확보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족과 국가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키케로의 제안은 로마 제국의 확장과 존속에 매우 유용했는데, 이는 로마 제정의 초대 프린체스(princeps)였던 아우구스투스가 키케로에 대해 내린 평가에서 잘 살필 수 있다. 플루타르코스가 전하는 말이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카이사르가 그의 외손자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나러 집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양손에 키케로의 책을 가지고 있었고, 깜짝 놀라 그것을 옷으로 감싸 숨겼지요. 카이사르는 그것을 보고 취하였습니다. 선 채로 그 책의 많은 부분을 훑어보고 난 후, 다시 그 젊은이에게 돌려주면서 ‘참 연설을 잘하시던 분이었지. 이보게 젊은이, 그분은 참 연설을 잘하시던 분이었어. 그리고 조국을 사랑하시던 분이었다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카이사르가 안토니우스를 완전히 눌러 이기고 집정관이 되었을 때, 그는 곧 키케로의 아들을 함께 통치해나갈 동료로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원로회는 안토니우스의 석상들을 제거했으며 또 다른 모든 명예들을 무효화시켰습니다. 심지어 안토니우스라는 성(性)을 가진 사람은 어떤 누구도 마르쿠스라는 이름을 가질 수 없다고 표결하여 공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은 키케로의 가문을 위하여 안토니우스에 대한 응징을 완결했던 것입니다.”⁵⁸⁾

□ 로마가 공화국에서 제국으로 전환되었을 때에도 로마 인문학은 소정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

○ 대표적으로 베르길리우스의 작품인 『아이네이스』를 들 수 있다. 그는 아우구스투스 통치를 예찬하고 로마 제국의 정통성을 문학적으로 옹호했다. 포에니 전쟁 이후의 로마의 현실은 매우 참담했다. 장기간의 전쟁은 토지를 황폐케 하였으며, 자영농민(colonus)을 빈농으로, 도시 빈민으로 내몰았다. 다른 한편으로 전쟁에서 포획된 노예들이 대토지 경작에 투입됨으로 명실상부한 토지 경영 기법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와 같은 노예 노동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대토지 경영 방식의 도입으로, 로마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도시 빈민으로 몰락한 자영농민의 실업과 구제 불능의 빈곤이 바로 그것이었다. 토지를 상실한 자영농민들의 유입으로 당시 로마 인구는 5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학자들은 추정하는데, 그들 대부분이 경제 기반을 상실한 도시 빈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이른바 로마식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집세와 집값은 폭등했다. 일종의 아파트인 인슐라이(insulae, ‘벌집형’ 고밀집 다세대 주택)가 집중적으로 지어졌지만, 부실 건축에 의한 건물 붕괴와 대화재, 집세 폭등으로 주택 문제가 심각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곡물

58) 『데모스테네스 대 키케로』 제69장.

부족으로 인한 곡물 가격의 폭등이었다. 특히 서기전 135년에 식민지인 시킬리아에서 노예들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는 그나마 불안했던 로마의 곡물 문제를 더욱 심각한 위기 상태로 몰고 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 이가 티베리우스 그라쿠스(Tiberius Gracchus, 162?-133?년 BCE)였다. 그가 내건 개혁 프로그램은 농지 분배 법안(lex agraria)이었다. 개혁 프로그램의 핵심 논지는 공동의 토지(ager publicus)였다. 소위, 현대적 의미의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토지 사유 상한제를 실시하였고, 불법으로 차지한 대지주의 토지의 경우, 일정 정도의 보상을 해주고 다시 국가로 환수하여 토지를 상실한 농민들에게 분배하도록 하자는 골자의 법안을 제출하게 된다. 하지만 법안의 통과로 로마는 본격적으로 양분화되기 시작한다. 선점했던 공유지(ager publicus)를 몰수당하게 된 대지주 중심의 부유층과 농지법의 시혜를 받게 된 평민층으로 나뉘었고, 원로원은 보수와 개혁이라는 양 진영으로 분열되었으며 이 분열을 당시 역사학자들은 한마음이 아닌 “두 마음”(discordia)라 불렀다. 이 두 마음은 100년이 넘게 이어진 내전으로 이어졌다. 이런 저런 개혁의 시도가 있었지만, 어찌 되었든 개혁들은 실패했고 그 결과는 로마 역사는 되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든다. 근본적으로 로마 사회의 양극화는 로마의 국가-공동체를 통합하고 화합으로 이끄는 교환 정의와 분배 정의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지경으로 로마-공화국을 몰고 갔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정의”의 사망은 평화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개혁이 실패한 이후 약 100여 년에 걸쳐, 진행되었던 로마의 정치적 혼란의 마지막은 평화의 또 다른 반대 짝인 내전(bellum civile)으로 직결되었다. 내전의 결과는 공화국의 몰락이었고, 제국의 등장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를 바라보는 베르길리우스의 관점이다. 제국의 등장은 필연적이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말이다. “기억하라! 로마인이여, [굳건한 기강(紀綱) 위에 세워진] 통치를 통해서 인민들을 다스리는 것, (이것은 너희만의 기술일진저!), 평화의 법도를 수립하는 것, 순종하는 자에겐 관용을, 오만한 자들에겐 징벌을 내리는 것을!”⁵⁹⁾ 흥미로운 점은, 베르길리우스가 로마 제국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 전략이 키케로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키케로는 “정의와 불의”, “신의와 배신”, “자유와 억압”, “불화와 화합”과 같은 개념 관계를 중시한다면, 베르길리우스는 “전쟁과 평화”, “선과 악”, “문명과 야만”이라는 이분법을 구사한다. 이는 이른바 제국 담론의 원형에 해당한다. 규모에 있어서 도시 국가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와 외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에 요청되는 기준과 규범들과, 제국 단계에 들어선 로마가 감당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처리할 때에 요구되는 기준과 가치들을 비교함으로써 제국의 성립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도시국가 로마의 틀을 구성했던 기준과 덕목들로는 이미 규모에 있어

59) 『아이네이스』 제6권 851-853행.

서 그리고 실제로 실질적으로 지중해 지역의 거의 모든 나라와 종족을 포괄하면서 그들을 통치해야 하는 위치로 성장해버린 로마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런 이유에서 그는 로마를 제국의 지평 위에 올려놓는다. 제국 담론을 만든 것도 인문학이다.

○ 로마 인문학이 제공하는 제국 담론은 싫든 좋든, 특히 세계화의 시대에서는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논의이다. 그것을 알고 있을 때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와 관련해서 모든 국가는 그 규모에 준해서 그에 맞는 정치와 문화의 기준과 척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씨족 중심의 부족 단계에 있는 나라는 그 나뭇잎의 규모에 따라, 도시 중심의 종족 국가는 나뭇잎 그 규모에 따라 다 종족과 다 국가의 단계를 넘어서는 제국 단계에 있는 나라도 그 규모에 따라, 자신의 크기와 무게를 유지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구조와 체계를 가지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서구 역사에서 로마는 제국 단계에 이르는 규모로 힘과 크기가 성장한 나라에서는 어김없이 되살아난다는 것이다.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해 본 경험이 이전 자신들의 종족 역사에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서, 로마는 일정 정도 이상의 규모로 커진 국가의 역사에는 항상 반복되어 나타난다. 이런 의미에서, 로마는 지금도 살아있는 제국이다.

■ 이런 이유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게임의 기본 판도와 그 판의 규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좋든 싫든 배워야 할 것 가운데에 하나가 로마 제국의 역사일 것이다. 각설하고, 우선 미국이 현대의 로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대의 로마가 단적으로 한반도의 문제와 관련해서 펼치는 전략-전술이 어떤 원리에 입각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과 관련해서 고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사용하던 전략-전술에 대한 이해도 매우 중요한 참조 사례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아주 뜻밖의 사례이겠지만 다른 아님 중국도 또 다른 로마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공산당 통치 체제가 로마 원로원의 그것과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중국의 학자들이 로마 원로원의 역사를 매우 심도 깊게 연구하고 있다. 일당 중심의 통치제제라는 점에서 다른 한편으로 소수의 원로 그룹 세력들이 막후에서 최고 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고대 로마의 원로원 정치와 중국의 현대 공산당의 통치 방식이 서로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 현 시점에서 한국이 로마제국의 역사를 배워야 한다는 주장을 과연 우리의 역사에서 우리가 세계를 움직이고 운영해 보았던 적이 있었는가라는 물음과 연동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테면 군사 대국으로서 로마 제국을 우리의 모델로 삼자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적어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의 전략 전술이 로마의 그것에 뿌리를

두고 응용-변용되고 있다면,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로마의 세계 지배 전략과 전술을 알아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지요 하는 말이다. 로마 인문학이 제공한 제국 담론은 이 점에서 좋은 교재가 될 것이다.

□ 동양의 경제(經濟,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축약형)에 해당하는 정확한 개념을 로마의 경우에는 찾기 어렵다.

○ 하지만 지식 관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에 해당하는 프린킵스 아우구스투스는 인문학 진흥을 위해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모방해서 팔라티누스(Palatinus) 도서관을 설립했다. 이 도서관은 팔라티누스 언덕에 세워졌다. 그가 팔라티누스 도서관을 설립한 이유는 로마의 국격을 높이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제국의 수월한 통치와 관리를 위해서였다. 제국의 지식 관리를 위해 설립된 이 도서관의 초대 관장은 마르쿠스 테렌티우스 바로(Varro, 116-27년 BCE)였다. 이 도서관은 로마 제국의 발전과 존속에 필요한 경험, 기술과 지식을 수집하고 정비하며 갱신하는 곳으로, 제국의 지배와 통치에 요청되는 이른바 “지식 경영(Knowledge Management)”의 중심지였다. 이 도서관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원과 물산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총괄하는 기관이기도 했다. 요컨대 그리스 로마 신화의 보고인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라는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도 실은 이 도서관에 수집된 책들과 자료 덕분이었다. 가령 『변신 이야기』 3권에는 개들의 다양한 품종들이 열거된다. 오비디우스에 따르면, “그는 망설이고 있다가 개떼의 눈에 띄었다. 먼저 멜람푸스와 영리한 이크노바테스가 짚어대며 신호를 보냈는데 스파르테 품종이었다. 이어서 다른 개들이 바람보다 더 빨리 돌진해 왔으니 팜파고스, 도르케우스, 오리바소스, 이들은 모두 아르카디아 산이었다. 탄탄한 베브로포노스, 사나운 테론, 라일랍스, 발빠른 프테넬라스, 냄새 잘 맡는 아그레, 얼마 전에 멧돼지에게 찢긴 적인 있는 거친 휠라이우스, 아버가 늑대인 라페, 양떼를 지키는 포이메니스, 새끼 두 마리를 데리고 다니는 하르뛰이아, 옆구리가 날씬한 시퀴온 산 라톤, 드로마스, 카나케, 스텍테, 티그리스, 알케, 털이 눈처럼 흰 래우콘, 검은 털의 아스볼로스, 힘이 절륜인 라톤, 달리기 능한 아엘로, 토오스, 날랜 퓌키스케와 그 오라비인 퀴프리우스, 흰 반점이 있는 하르팔로스, 멜라네오스, 털이 거친 라크네, 덕테 산의 아버와 라코니케 산 어미에게서 태어난 라브로스와 아르기오두스, 날카롭게 짚어대는 활락토르가 곧 그들이다. 그 밖에 다른 개들의 이름을 다 말하자면 시간이 한참 걸릴 것이다.⁶⁰⁾ 이와 같은 개들의 품종은 오비디우스가 실은 팔라티누스 도서관에 수집된 물산 자료나 가축 일반을 정리한 문헌이나 개들의 품종을 다루는 다른

60) 『변신이야기』 3권 206행-224행.

문헌을 참조할 수 있었기에 작품에 열거될 수 있었던 개들의 이름이었다. 참고로 오비디우스는 팔라티누스 도서관의 2대 관장인 휘기누스의 제자였다.

○ 문명의 충돌 시대이다. 불화와 갈등은 불가피하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종족, 종교, 지역, 혈통, 인종 등의 특정 맥락 의식을 뛰어넘는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 참고로 로마는 이런 문제에 시달려야 했던 나라다. 키케로가 후마니타스 개념을 통해서 혈통 중심의 종족과 시민을 기본 단위로 해서 성립하는 국가의 구분을 전제로 해서 성립한 시민인문학(studium civile)을 제시한 것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의 인문주의 개념은 계약 정신을 기본으로 하고, 또한 신본주의(divinitas)가 아닌 인본주의(humanismus)에 중시하며, 농경 문명이 아닌 도시 문명에서 요청되는 교양 인문학(urbanitas)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인문주의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이성과 언어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 설득 능력과 소통 능력을 중시한다. 문명의 충돌의 관점에서, 보편 이념으로서 키케로의 인문주의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지닌다. 내용적으로 키케로는 정의와 평등과 선함을 인간다움의 기준으로 제시한다. 형식적으로는 키케로가 사람 안에 여러 인격(persona)이 있고, 사람(persona)과 사건(res)을 구별하고, 사람과 행위(actio), 사건과 행위로 구별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구별은 나중에 개인의 개별 행위를 법률로 지배하고 이를 통해서 국가를 통합하고 통치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이 토대 위에서 작동하는 정치적 공동체가 공화국이기 때문이다. 교육의 관점에서 이 구별 방식이 중요한 이유는 구체에서 추상으로, 특수에서 일반으로, 개별에서 보편으로 사유를 끌어올리는 데 큰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이 구별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말과 감정의 분리로 이어지는데, 이도 또한 종족, 종교, 지역, 혈통, 인종 등의 특정 맥락 의식을 뛰어넘는 훈련을 통해서 공동체 구성을 위한 핵심적인 교육방식으로 자리 잡는다.

○ 키케로의 'humanitas'는 양면성을 띤 개념이다. 보편 이념이고 제국 이념이다. 때로는 따로, 때로는 함께 나타난다. "따로 또 함께" 개념이다. 국가와 문명의 발전 과정에서 때로는 보편 이념으로 강조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제국 이념으로 부각되어 보이는 것일 뿐이다. 부족 국가에서 도시국가의 공화국으로 이행할 때에 'humanitas'는 보편 이념으로 작동한다. 시민과 국가의 탄생과 형성에 교육을 통해서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근대국가가 탄생할 때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프란시스 베이컨의 4대 우상(종족, 동굴, 시장, 극장)에 대한 비판이 크게 보면 키케로의 'humanitas' 개념과 같은 궤도 위에 서 있었다. 그런데 제국은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힘은 정복에는 효과적이지만 지배에는 한계를 노출한다. 이때에 요청되는 것이 'humanitas' 프로그램이었다. 문명의 이름으로 말이다. 'humanitas'의 이와 같은 양면성을 가장 극적으로 잘 보여주는 문건이 유스티니아누스

스 황제의 칙령으로 트리아보니아누스가 528년에서 534년에 편찬한 『법학제요(Corpus Iuris Civilis)』이다. 다음은 제1권의 시작 부분이다. “정의는 각자에게 그 자신의 권리를 부여하는 확고하고 영속적인 의지이다. 법학은 신의 일과 인간의 일에 대한 지식이고, 옳음과 그름에 대한 앎이다. (...) 법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다. 명예롭게 사는 것, 타인을 해치지 않는 것, 각자에게 그 자신의 것을 주는 것이다. 이 공부는 두 분야로 나뉜다. 공적인 분야와 사적인 분야가 그것들이다. 공법은 로마 국가의 성립 조건에 관한 것이고 사법은 개인의 이익과 연관된다. 따라서 사법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 그것은 자연적인 것, 종족에 관련된 것, 시민들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⁶¹⁾ 인용은 로마 제국의 법체계가 앞에서 이미 언급한 키케로의 ‘humanitas’가 지향했던 보편 이념의 원리에 기초해 있음을 잘 보여준다. 세 가지 점에서 그렇다. 먼저 자연과 종족으로부터 시민의 구별을 들 수 있다. 인종, 혈통, 종교, 지역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보편 이념으로서 시민 개념(persona civilis)이 중요하다. 제국은 이것들을 묶어낼 수 있는 시민이라는 최소 공통성에 기초한 정치체인 셈이다. 다음으로 사태, 사건과 이해관계(res)를 지역, 종족 등의 특정 맥락인 아닌 공과 사의 보편 맥락으로 접근한다. 이는 각자의 것은 각자에게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예를 들면 사적인 것은 사적인 것에, 공적인 것은 공적인 것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공동의 일(res publica)은 공동체에게 부여하자는 논리가 성립하고 이를 근거로 국가가 성립한다. 그리고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의무와 권리라는 계약 관계로 해명한다. 참고로 각자의 것은 각자에게의 원칙이 정의, 더 정확하게는 분배 정의이다. 앞에서 인용했듯이 키케로는 이 정의를 인간의 본성 가운데에 하나로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의 법체계의 목적 이념이 기본적으로 ‘humanitas’이다. 명예롭게 사는 것, 각자에게 그 자신의 것을 주는 것, 타인을 해치지 않는 것이 ‘humanitas’의 하위 가치들이다. 중요한 것은 각자와 타인이 추상화와 일반화의 심급에서 서 있는 인격체(persona)로서 자신의 권리가 법적으로 자격을 획득한 형식체이라는 점이다. 여기에서는 그의 고향이 신분이 종교가 혈통이 인종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로마 제국이 하나의 정치체로 묶일 수 있는 원리가 여기에서 해명된다 하겠다. 그것은 다름 아닌 ‘humanitas’라는 보편 이념 덕분이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보편 이념 안에 이미 제국 이념이 내재해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다만 보편 이념이 제국의 통치와 지배에 동원되고 활용될 때에 그것은 제국 이념으로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2.2.4. 그리스·로마의 인문 진흥과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 부흥

61) 『법학제요』 제1권 1-4장.

□ 그리스·로마의 인문 진흥과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부흥은 개괄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된다. 먼저 그리스 인문학이 로마 인문학에 의해서 계승되었고, 다시 르네상스시대에 부활된 것은,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설득력일 것이다. 이 보편적인 설득력은 로마의 울타리를 뛰어 넘었고 중세 1000년이라는 시간의 두께도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으로 작동했다. 예컨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지식, 기술, 경험, 이를 아울러서 기초학술이라 부르고자 하는데, 이것은 인종, 국가, 종교를 아우르고 관통하는 문명의 최소 공통성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 다음으로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해명해주는 것이 인문학이었다. 사람이 곧 나라이다. 인간이 국가의 확장이라는 점을 해명하려고 시도한 것이 플라톤의 『국가』였고, 그러한 한에서 인간의 행복은 국가의 존립 근거였음을 정당화해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이고 정치학이었다. 또한 국가의 성장과 성숙을 가능케 해준 것이 또한 인문학이었다. 키케로의 인문학은 국가의 존속과 지속, 아울러 확장과 유지에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제공하였다. 리더십에 대한 교육과 배움 없이는 좋은 지도자는 탄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대 국가의 형성과 발전에도 인문학은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국가도 인문학의 중요성을 알고 그에 상응하는 후원과 제도적인 지원을 했다. 근대의 한림원들과 학술 아카데미들이 그 방증이다.

□ 르네상스시대의 인문학으로는 피렌체 공국의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 로마 공화국으로의 복귀와 서양 고전을 부활을 꿈꾼 피렌체 공국의 지도자들의 인문진흥의 노력은 그리스 출신의 명망학자인 아르귀로폴로스(Argyropoulos, 1415-1487년)와 같은 학자들을 위해서 작은 모임 공부방이라는 뜻의 스튜디오(studio)를 세워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아르귀로폴로스는 이 작은 스튜디오에서 그리스어를 배워서 그리스 원전을 읽고자 하는 사람들의 작은 모임을 가질 수 있었다. 중세 대학과 교회의 교육 기관에 제도적으로 편입되지 못한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했던 모임을 위한 사적인 공간이었지만 이 작은 공부방에서 일어난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다. 예컨대 새로운 책을 찾아내었다는 포찌오의 편지를 함께 읽으면서 기뻐했고, 이렇게 찾아낸 책을 판독하고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고 누구나 믿고 인용할 수 있는 책을 만들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친절하게 주석과 주해를 달았다. 번역은 그들의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문 것은 아니었다. 책을 읽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평생 안 볼 정도로 거친 논쟁을 벌였다. 책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지키면서 교육에 치중하자는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책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진보적인 사

람들도 있었다. 마키아벨리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런 논쟁을 통해서 그들은 한편으로 고대의 부활을 꿈꾸었지만, 그들이 꿈꾸었던 미래는 고대도 중세도 아닌 근세라는 새로운 세계로 이어졌다. 사랑과 투쟁의 연속이었다. 이 작은 공부방에서 그들은 그리스어를 배우고 그리스 원전을 직접 강독하면서 라틴어 번역이 만들어 놓은 오해를 걷어내었다.

○ 히에로니무스가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 성경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에라스무스가 알게 된 것도 알두스의 공부방에서 읽은 그리스어 성경 덕분이었다. 에라스무스가 만든 비판정본은 출판 직후 엄청난 비난과 비판을 들어야 했지만,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으로 이어지고 종교 개혁의 소용돌이를 몰고 왔다. 알두스가 출판한 책들은 대중을 겨냥했고 이 책들을 읽고 똑똑해진 대중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했다. 이 목소리는 엘리트 중심의 귀족 사회에서 부르주와지 중심의 시민 사회로의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아르퀴로폴로스의 친구이자 맞수였던 피치노의 플라톤 번역은 그리스도교에 눌러 묻혀있던 플라톤의 영혼에 대한 생각을 유럽 대륙에 널리 뿌렸다. 기독교적인 인간관과는 다른 새로운 인간관이 유럽 대륙에 뿌리내리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했지만, 인간이 욕망의 주체이고 다른 말로 그것이 '자유'라는 고상한 이념의 옷을 입게 된 것도 영혼에 대한 새로운 이해, 곧 인간에 대한 새로운 자각의 힘 덕분이었다.

○ 이는 소위 '인문주의'로 번역되는 'humanitas' 이념으로 요약된다. 이 이념의 실현을 위한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놓고 다툰 것이 이 작은 공방이었다. 하지만 이 모임과 공부 공간에서 벌어진 논쟁과 다툼은 출판과 대학 교육을 통해서 유럽 전체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다툼에서 뛰쳐나간 사람들이 벌인 정치 투쟁과 종교 전쟁의 발단도 사실은 이 작은 공방에서 비롯되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일국(一國)의 사건이 아니라 유럽 대륙의 여러 나라에 걸쳐 일어난 국제적인 사건이었다는 점이다. 에라스무스는 네덜란드 사람이었고, 뷔데는 프랑스 사람이었으며, 델란히톤은 독일 사람이었으며, 아르퀴로폴로스는 그리스계의 비잔티움 사람이었다. 작은 공부방에서 소수의 지적 엘리트들 중심으로 시작된 공부는 이탈리아에서 독일과 프랑스로, 독일과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의 대중 사회로 확산되어 나갔다. 여기에는 이 공부방에서 만든 책들과 읽었던 책들이 인류 보편의 공통적인 이념과 욕망을 담고 전파했다는 점이 한 몫 단단히 했다. 이런 의미에서, 스튜디오라는 작은 공간은 이른바 보편 지성의 힘을 살려내려는 염원과 희망의 등지였고 등불이었다. 이 등지에서 흘러 퍼진 등불이 만들고 퍼나른 이념이 정초한 세계가 근세였다. 사실, 이 영향 아래에 대한민국이 서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는 없다. 단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정의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3.2.2.5. 서구 근대를 빛낸 인문학

□ 17세기에 들어서서 인문학은 중대한 전환을 맞이한다.

○ 그동안 인문학의 편제 하에 있던 자연학이 본격적으로 자연과학의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분가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이 분가는 소위 ‘보편 언어’ 논쟁과 직결되어있다. 이 논쟁은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와 같은 이른바 ‘성스러운 언어’가 아닌 ‘세속어’, 즉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덴마크어와 같은 근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지만, 이는 자연언어로 자연과학의 대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확장되었다. 역사적으로 이 시기는 프랜시스 베이컨이나 갈릴레이(Galileo Galilei, 1564-1642년)와 같은 근대 과학자들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자연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였고 이 모색을 통해서 근대 학문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데, 이들은 자연의 사물들을 자연 언어의 표기 체계가 아닌 새로운 기호 체계를 마련하려고 시도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새로운 기호와 부호를 사용하는 학문 운동은, 또한 학술 아카데미와 같은 학회의 창설은 서양의 학문 체계를 이전까지의 기독교 교리 중심의 교육 방식과 그리스·로마의 고전 해석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 전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내었다.

○ 자연의 탐구를 위해서 보편언어 혹은 근원언어 혹은 “진정한 문자(real character)” 체계를 개발하자고 제안한 학자는 영국의 프랜시스 베이컨이었다. 베이컨의 제안은 새로운 학문들이 사용하게 될 기호체계(Novum Organon) 혹은 부호 체계의 표준화와 통일화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고 논의로 확산된다. 예컨대 화학, 의학, 수학, 음악은 자연언어의 표기체계가 아닌 그 학문만이 공유하고 있는 표기 혹은 기호체계를 사용하자는, 예컨대 화학의 개별 원소들을 표시하는 표기체계나, 수학의 부호체계들, 또한 음악의 기보와 음가를 표시하는 기호들이 만들어 사용하자는 제안들로 이어졌다. 존 윌킨스나 조지 달가르노와 같은 그의 후계자들, 화학자 로버트 보일이나 건축가인 크리스토퍼 렌과 같은 학자들, 독일의 라이프니츠와 같은 철학자들은 이와 같은 새로운 학술 운동에 앞장섰다. 이들은 영국에서는 1662년에 왕립 아카데미가, 파리에서는 1666년 학술 아카데미가, 베를린에서는 1700년에 학술 아카데미의 창설을 주도했다.

□ 동양문명이든 서양문명이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인간답게 사는 길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문제의식을 가졌는지는 의문이다.

○ 이러한 의문을 던지게 된 근거는 문명사의 관점에서 도시 문명의 인문학적 특성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인류가 지금과 같이 거대 도시에서 거주하는 형태의 문명 조건에서 모여 살기 시작한 것은 산업화 이후이고 대략 18세기부터이다. 이에 대한 증인은 라이프니츠이다. 그의 말이다. “일찍이 누가 믿을 수 있었겠는가? 도대체 이런 종족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말이다. 물론 나의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우리 유럽인들이 미풍양속의 모든 세련됨을 위해서 배우고 익힌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이런 우리를 교양이 우러나는 세련된 생활양식에 대한 가르침으로 능가하는 종족이 있기에 말이다. 여하튼 간에 내가 이 종족을 더 잘 알게 되면 될수록, 나는 이 사실을 중국인들에게서 확인하였다. (...) 일개 농부에 불과할지라도 심지어 일개 하인에 불과할지라도, 중국인들은 친구들에게 안부를 묻고 혹은 오래 동안 만나지 못한 경우 서로의 얼굴을 살피며 기뻐한다. 아주 사랑스럽고 아주 존경스럽게 서로를 극진히 떠받든다. 이런 모습에 우리 유럽인들은 놀라서 어안이 병병할 정도로 말이다. 이와 같은 농부와 하인들의 예의 방식은 심지어 우리 유럽의 귀족들이 자랑하는 온갖 예법에 도전할 정도이다. 하물며 고위 관리들 고급 학자들은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지 싶다.”⁶²⁾ 인용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교양이 우러나는 세련된 생활양식”이라는 표현이다. 원어는 ‘civilitas’이다. 예의, 교양을 뜻하는 프랑스어 ‘civilitéé’가 여기에서 유래했다.

○ 라이프니츠가 이 말을 강조한 것은, 물론 예의범절을 중시한다는 중국에 대한 찬양도 한몫 거들었지만, 17세기 말부터 급속하게 진행된 유럽 도시의 팽창과 발전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대도시로 성장한 유럽의 도시들, 예를 들면 런던과 파리는 갑작스럽게 몰려 든 사람들이 더불어 모여 살기 위한 어떤 제도적 기반과 시민 교양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런 혼란스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라이프니츠에 의해서 제안된 개념이 시민 교양에 해당하는 ‘civilitas’ 개념이었다. 따라서 이 개념은 통상적으로 한국에서는 정치적 권리 개념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시민 교양 혹은 예의범절 혹은 교양 에티켓을 뜻하였다. 도시의 공기가 제공하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의가 절실했고, 그 절실함의 역사적 배경은 도시의 급성장과 급팽창과 직결된 문제였다. 이와 같은 절실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의 도시들은 소위 인문적 시민 사회 구축을 지속적으로 시도했는데, 유럽의 대도시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세련되었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실은 이 덕분이다. 특히 도시의 발전 기획과 관련해서 공간의 재구성 내지 도시의 제도적 운영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기본적으로 인문적 시민 사회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은 눈 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각설하고 라이프니츠가 중국을 보면서 경의를 표했던 교양이 우러나는 세련된 생활 방식이 다름 아닌

62) 『Novissima Sinica(중국에 대한 최신 소식들)』, pp. 11-12.

키케로가 강조했던 도시의 세련됨(urbanitas)이다.

○ 18세기 유럽의 학술 운동은 동양의 학술 사업에도 영향을 끼쳤다. “진정한 문자(real character)”체계를 개발하자고 최초로 제안했던 영국의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런 주장을 한다. “진정한 문자를 사용하여 글을 쓴 것은 극동의 왕국, 중국에서였다. 진정한 문자는 대체로 글자나 단어가 아니라,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한다. 언어가 미칠 수 있는 지역보다 문자들이 더욱 일반적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나 지역에서 서로의 글을 읽을 수 있었다.”⁶³⁾ 인용은 베이컨의 보편 언어에 대한 기획이 한자 체계의 영향을 받았음이 분명함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의 한림원도 유럽의 학술 운동을 주도했던 아카데미들의 창립하는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설립되었다는 것이다. 『강희제 전기』를 저술한 부베에 따르면, “강희제는 우선 우리에게 만주어로 유클리드의 기하학을 설명하라고 했다. (...)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12번도 더 그것을 읽었다고 한다. (...) 대중은 이 두 가지 흥미로운 기구의 발명을 왕립 아카데미의 학자들에게 빚지고 있다. 황제는 우리에게 이것의 사용법과 중국 달력에 적용하는 방식을 설명하라고 명했다. (...)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수학 도구들뿐만 아니라 중국에 들어온 예술의 모든 작품들에 대해 현재 그가 가진 수준 높은 견해를 가지기 시작했을 때, 유럽에서 만들어진 수학 도구들에 대한 존중은 곧 황제에게서 궁정의 대신들에게로 옮겨 갔다. (...) 황제는 지금 제국의 초기의 번영을 회복하기를 열망했고, 자신의 제국에서 학문과 좋은 기술들을 육성시키고 자신의 통치를 훌륭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을 본보기로 제시하여 다른 이들을 장려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기하학 다음으로 황제는 철학을 배우고자 했다. (...) 우리가 참고한 고대와 현대의 모든 철학서들 중에서 왕립 아카데미의 뒤아멜의 고대와 현대 철학서 말고는 우리가 가진 목적에 더 적절해 보이는 것을 찾지 못했다. (...) 황제는 철학서의 입문용으로 우리가 쓴 표면적으로 짧은 논리학 서적만을 보았다. (...) 우리는 이 저작에 이 시대에 발견된 가장 흥미롭고 유용한 모든 것들과, 유명한 베르네와 이 분야에서 탁월한 왕립 아카데미의 다른 학자들의 성과들을 담았다.” 강희제가 설립한 왕립 아카데미, 즉 한림원에 이룩한 성과를 보여주는 한 사례로, 서양의 음악을 배우기 위해 강희제가 페레이라 신부(Thomas Pereira, 1645-1708년)에게 명해서 한자로 저술된 『율려찬요(律呂纂要)』를 소개한다.

63) The Oxford Francis Bac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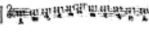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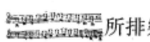
分度之一。速形號所屬之二音，以此三音聯爲一處，三三排之，讀此音時亦與讀前二圖所排二項之音相同，但讀過準四分度之一。小之半形號所屬之一音，則繼續速形號所屬之二音時，須令倍速於小之半形號所屬之音。此三音節乃準半度。若將此三層圖所排樂音互易之，令如此圖 , 先讀速形號之二音，後讀小之半形號之一音，則此三音節，乃仍如前準半度。至於此二層圖  所排樂之首音，係準四分度之一。小之半形號所屬之音，以其傍綴一點，故其音節如前所說輒加一半。以此點加小



그림 1. 페레이라 신부(Thomas Pereira) 저술
『율려찬요(律呂纂要)』(일부)

○ 참고로 라이프니츠는 부베의 『강희제 전기』를 라틴어로 번역해서 유럽의 왕실에 퍼뜨렸다. 이는 그 자신이 17-18세기에 유럽의 왕실을 휩쓸었던 계몽군주 프로젝트의 기획자이자 실천자였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그가 프로이센의 왕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왕들을 위해서 활동했다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아무튼 라이프니츠가 유럽에서 아카데미아의 창립을 주도한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그가 국가 발전을 위한 토대로서 학문을 진흥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만들고 학술원(academia)을 조직해야 한다고 설득했다는 점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이다. 러시아에서부터 포르투갈에 이르는 유럽의 모든 나라들에서 도서관이 건립되었고 학술원이 조직되었다. 그런데 학술원은 소위 18세기 서양에서 유행한 계몽군주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통치 사업이었는데, 이 프로젝트와 유사한 현상을 조선 정조의 통치 방식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규장각이 그것이다. 따라서 18세기 전 세계에 걸쳐 유행했던 소위 계몽군주 프로젝트는 유럽만의 국지적인 현상이 결코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례들은 인문학을 포함한 기초학술 일반이 처음부터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과 후원을 바탕으로 발전해왔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유럽의 아카데미들, 중국의 한림원, 조선의 규장각이 없었다면, 작금의 학문 체계와 교육 체계는 현재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다. 적어도 학술이 취미가 아닌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한에서, 인문학 및 여타의 기초학술의 지원과 후원은 처음부터 그리고 구조적으로 국가의 몫이다.

○ 여기에 덧붙여 서양 인문학이 지속적으로 살아남아 역사를 만들고 문명을 바꾸어 나갈 수 있던 원리가 모방과 경쟁이었다는 점을 덧붙인다. 서양 인문학은 좋은 것에 대한 열린 시각과

개방적인 태도로 모방해야 할 것은 모방했다. 하지만 그 모방이 과거의 단순 반복이 아니라 미래의 창조로 이어지는 경쟁 정신으로 이어졌다. 서양 문명과 동양 문명이 서로 만나는 초창기의 모습도, 그들의 활동도 실은 그것이 교회 차원이든 국가 차원이든 제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임을 확인했다. 단적으로 강희제의 후원이 없었다면, 예수회의 문헌들은 탄생하기 어려웠다. 이상의 내용을 한마디로 설파하자면, 동양문명이든 서양문명이든, 학술은 문명의 필요조건이고, 문명은 국가의 필요조건이라는 점에서 학술은 국가의 필요조건이다. 국가는 학술 없이도 존립할 수 있다. 하지만 학술 없는 국가가 오래 지속할 수는 없다. 국가의 필요조건인 문명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명’이란 다른 아닌 ‘삶의 방식(modus vivendi)’이 문명의 또 다른 일컬음이다.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요청되는 생존과 생활의 여러 방식과 기제들이 곧 문명이기 때문이다. 문명을 ‘삶의 방식’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순간, 국가는 인문학의 지원과 후원이 스스로 그 자신의 기본적인 의무임을 알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삶의 방식에 대한 동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세워진 것이 국가라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3.2.3. 전문가그룹 인터뷰에서 도출한 근거

□ 전문가의 답변 가운데 가령 “학자들이 강의실과 연구실에서 생산해낸 연구들이 우리 국민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를 더 풍성하게 하는 데에도 미흡한 상황이다”와 같은 답변은 인문학은 당연히 경제를 지향해야 마땅하다는 관점을 표출이다. 이렇듯 인문학의 기본에 경제적 인문이 내포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인문학의 경제적 지향을 언급한 전문가들이 적지 않았다. 다음은 관련 답변의 일부이다.

○ 인문학은 인간의 근본을 강화하는 학문이고 동시에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강화하는 학문이다. 이를 토대로 ‘교양 있는 인간’과 ‘성숙한 세상’을 만드는 일이 인문학의 본령이다.

○ 양극화 사회를 극복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는 선진국다운 성숙한 사회의 기반일 뿐 아니라 현실적인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묻지마 범죄’의 증가도 한 예다.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인문사회학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이다.

○ 인문사회학술에 대한 국가 지원은 단순히 분과학문으로서 인문학, 인문학자, 인문학 졸업생의 일자리 지원만을 뜻하지 않는다. 양극화·갈등 해소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

○ 가치 지향적이며 올바른 방향을 고민하는 인문사회학술은 효율적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올바른 문제 해결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토대로 작용한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는

인문사회학술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첨단지식의 생산구조를 확보해야 하며,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 인문사회학술은 사회 혁신이 가능하게 하는 기초가 되는 정치, 사회적 역량으로, 구체적으로는 다음 같은 역량이다.

■ 기존의 관성을 되짚어보고, 그것의 연원을 추적하여 현재 우리에게 적합한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역량.

■ 새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법안의 형성, 정치적 협상, 정치세력의 변동, 대중의 지지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국민들의 지적 역량

■ 공동체의 문제해결능력

○ 국가 사회 경영, 사회 문제 해결 등에 필요한 인문학적 역량이란 곧 우리가 마주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들의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발 딛고 있는 이 사회와 그 역사에 관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식과 판단력이 필요하다.

○ 국가사회 차원의 인문학적 역량 구축은 선도국가의 지속가능한 '사회 인프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가령 자연과학기술의 활용과 재조직화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낼 수 있는 역량 같은 것이 이에 속한다.

□ 적지 않은 전문가가 경제의 대상에 '나'라는 개인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인문학은 기본적으로 경제를 지향한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다음은 관련 답변의 일부이다.

○ 인문학을 통해 우리는 인간으로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조망하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개개인의 삶이 더욱더 불안정해지는 오늘날에는 특히 자기 삶의 방향을 적절히 설정하고 이를 성찰하며 지켜나갈 수 있는 자기성찰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인문학의 본령이다.

○ 인문학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회를 구성해 가는 과정 속에서 타인들과 관계 맺음의 관계를 어떻게 더 '인간적으로' 만들어 가느냐에 있다.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을 단순히 축적해 가는 것은 결국 '기능적 지식'일 뿐, 인간을 둘러싼 거대한 사회구조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간적으로 삶을 꾸려나가고 관계를 맺을 것인가는 실천적인 덕성을 기반으로 한 행동 양식에 있기에, 이를 함양하는 핵심 키워드가 '인문학'이다.

○ 인문학은 가장 실용적인 학문이다. 나와 나를 둘러싼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행복한 나의 삶을 추구하고 나의 삶을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그러하다.



4

인문정책 사례 고찰



- | | |
|-----------------------|---|
| 4.1. 중국 전국시대의 직하학궁 | 4.4. 독일과 프랑스의 인문진흥 정책 |
| 4.1.1. 설립 목적과 운영 양상 | 4.4.1. 서언 |
| 4.1.2. 사적 의의 | 4.4.2. 국가 중심의 연구소 조직을
통한 포괄적 인문학 연구 지원 |
| 4.2. 조선시대의 규장각 | 4.4.3.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집단 연구
사업 지원 |
| 4.2.1. 설립 목적과 기능 | 4.4.4. 연구의 국제적 네트워킹을
목표로 한 중장기 집단 연구
체계 사업 지원 |
| 4.2.2. 학술진흥 사업 | |
| 4.2.3. 사적 의의 | 4.5. 전문가그룹 인터뷰에 제시된 사례 |
| 4.3.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인문진흥 | |
| 4.3.1. 그리스의 인문진흥 | |
| 4.3.2 로마의 인문진흥 | |
| 4.3.3 르네상스시대의 인문부흥 | |

4. 인문정책 사례 고찰

4.1. 중국 전국시대의 직하학궁

4.1.1. 설립 목적과 운영 양상

□ 직하학궁(稷下學宮)은 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 제(齊)나라 환공(桓公)이 설치하고 그 아들 위왕(威王)이 ‘제나라 중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대적으로 키운 역사상 최초의 왕립 아카데미이자 지식생산제도였다. 직하(稷下)는 ‘직문 아래’에라는 뜻으로, 직하학궁이 제나라 도성 임치(臨淄)의 서문인 ‘직문(稷門)’ 바깥에 건립된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직하학궁은 지금으로 치자면 ‘종합대학+고등학술연구기관’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활약한 지식인은 직하학사(稷下學士)라고 불렸다.

○ 초기에는 직하학궁의 기관 규모나 학자 대접은 소박했던 듯하다. 이를 대대적으로 정비한 이는 위왕이었다. 그는 제나라 부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직하학궁을 활성화했고, 이를 이어받아 선왕은 시설과 대우 면에서 한층 제고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선왕은 순우곤(淳于髡)을 비롯하여 추연(鄒衍), 신도(慎到) 같은 저명 학자 76명에게 대저택을 하사했고, 고위직인 상대부(上大夫)에 준하는 높은 명예직과 봉록을 제공하였다. 또한 학식과 덕망이 높아 직하선생(稷下先生)이라 불린 인사 1,000여 명을 학파 불문하고 후원하였다. 사통팔달한 거리에 높은 문이 달린 커다란 집을 마련해주고 존대하였던 덕분에 그들은 생계 걱정에서 벗어나 상호 담론하고 저술하며 운집한 학생 수천 명에게 강학할 수도 있었다. 당시 직하학궁에 모인 학인들은 직하학사로 불렸고 이들은 직하선생의 추천이 있으면 관직 임용이 가능했다.

○ 직하학궁의 원칙은 “세상에 대한 저술과 담론은 수행하지만 정사(政事)를 직접 맡지는 않는다”에 있었다. 물론 치자의 자문과 정책 건의 요청 등에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순우곤의 예¹⁾에서처럼 직하학궁에서 나와 현실정치에 참여할 수도 있었다. 제나라의 통치자는 직하학사들이 책을 쓰고 이론을 세우는 데 힘쓸 수 있도록 그들에게 넓은 거리에 높은 문이 달린 커다란 집을 주었고, 관직을 맡기지는 않았지만 경제에 대하여 강의하고 의론할 수 있도록 특별 대우하였다. 그들에게 고위직인 상대부(上大夫)의 칭호를 하사하는 등 직하학사에 대한 대우는 최상급이었다. 항상 그들을 존대하고 아꼈으며,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현실정치에 직접 간여하는 관직이 허여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재

1) 이에 대해서는 사마천, 『사기』 「골계열전(滑稽列傳)」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정적으로 최상급으로 대우하면서 나라 대소사를 맡껏 의론할 수 있도록 한 셈이었다. 그 결과 전병은 본래 팽몽(彭蒙)의 제자였지만 직하선생이 된 후 재산이 천 종(鍾)에 이를 정도로 부유해 졌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 백여 명이나 될 정도로 현달하였다. 비록 직하학사는 아니었지만 맹자(孟子)가 제나라의 재상 자리를 버리고 고향인 추(鄒)로 돌아가려고 할 때 제나라의 선왕(宣王)은 수도 임치에 강의실을 지어주고 제자를 기를 수 있도록 만종의 기금을 주어 그를 붙들었다. 그렇다면 직하학궁은 순자와 신도, 송견(宋鉏), 전병(田駢), 접여(接予), 추연, 노중련(魯仲連) 등 전국시대의 내로라하는 학자가 모이는 공간이 되고, 맹자와 장자 같은 대학자와도 긴밀하게 연동될 수 있었다.

□ 직하학궁의 설치 이유는 부국강병에 있었다. 순수하게 학문의 발전을 위해 설치된 것은 아니었다.

○ 전국시대 들어 각 제후국의 사(士, 식자층) 확보 경쟁은 국운을 거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열국의 제후들이 군사적, 정치적 각축을 벌이는 상황에서 사(士)들은 자신을 쓰고자 하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갔고, 더 중용하고자 하는 곳이라면 오늘 봉직하고 있던 나라와 적대하던 나라라도 내일 그리로 옮겨가곤 했다. 이를테면 “초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초나라를 중요시하고, 제나라에서 나오면 제나라를 가벼이 여기며, 조나라를 위해 일하게 되면 조나라를 완전하게 하고, 위나라에 반대해서 일하게 되면 위나라를 해롭게 할 수 있는”²⁾ 존재였다. 단적으로 사(士)는 증원의 정세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역량이었다. 제나라가 직하학궁을 설립하여 전 중국의 사, 곧 인재를 모은 데는 이러한 배경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결과 인재를 잘 모으고 잘 활용하는 나라가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실제로 제나라의 선왕(宣王), 위왕(威王)이 증흥을 구가했던 시기는 당시의 내로라하는 인재들이 모여 일상적으로 학술을 연마하고 담론을 펼쳐내며 강학에 임했던 직하학궁의 전성기였다. 반면에 민왕(湣王) 이래 몰락하기까지의 시기는 직하학궁의 쇠퇴기와 일치했다. 맹자의 “사가 지위를 잃는 것은 제후가 나라를 잃는 것과 같다”³⁾는 진술은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명분 혹은 당위가 아니라, 실제로 인재가 국력의 요체였던 상황에 대한 개괄이었던 것이다.

○ 직하학궁을 바탕으로, 달리 말해 ‘학술 융성’으로 국제적 헤게모니를 거머쥐는 데 성공한 사례는 사실 직하학궁 이전에도 목도되는 사실이다. 제나라만 해도 직하학궁 설립 200여 년 전에 이미 인재 확보가 가장 확실하고도 빠른 국력 신장 방도였음을 경험한 바 있었다. 당시 증원

2) 六國之時，賢才之臣，入楚楚重，出齊齊輕，爲趙趙完，畔魏魏傷。-왕충(王充), 『논형(論衡)』 「효력(效力)」.

3) 士之失位也，猶諸侯之失國家也。-『맹자』 「등문공하(滕文公下)」.

최초로 패자가 됐던 제 환공(桓公)은 천하 인재를 확보하는 데 진력했다. 세객 80명에게 많은 물자를 주어 사방으로 파견, 각지의 현사를 제나라로 불러들이도록 하였다. 재야에 묻힌 인재를 모실 때면 삼고초려에 그치지 않고서 아무리 거친 곳이라도 기꺼이 “오고초려(五顧草廬)”, 그러니까 다섯 번이라도 찾아갔으며 그 인물이 빠져나기만 하면 출신 배경을 따지지 않고 바로 재상 급으로 임용하기도 했다. 전국시대에 종종 목도되는, 아침에는 평민이었지만 저녁때엔 경상(卿相)이 됐던 현상이 그보다 수백 년 앞서 이미 벌어졌던 셈이다. 게다가 재상 중의 재상 관중은 환공에게 깨끗하고 편안한 거처를 사들에게 제공하고 함께 거처케 하라고 진언했다. 그러면 그들은 서로 의론하면서 가치 있는 일을 도모할 것이며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그들의 자손들도 자연스레 쓸모 큰 인재로 자라날 것이라고 아꼈다. 제 환공이 40년 넘게 중원 최고의 강국으로 군림한 바탕에는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다. 제나라만 그랬던 것도 아니었다. 월(越)나라 왕 구천(句踐)은 현사를 모으면서 곳곳에서 찾아온 사들을 극진하게 대접하였고 뛰어난 이들에게 깨끗한 처소와 좋은 옷, 넉넉한 음식을 제공하여 인재가 6,000명에 달하기도 했다. 이것이, 그가 오(吳)나라 왕 부차(夫差)에게 당한 치욕을 갚고 더 나아가 중원의 패자가 되는 데 튼실한 밑천이 됐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4.1.2. 사적 의의

□ 직하학궁의 설치 이유는 부국강병에 있었다. 곧 학술 융성을 토대로 여러 나라로 나뉘어져 중원의 패권을 놓고 각축하던 당시 중원에서 절대 강국으로서의 헤게모니를 거머쥐고자 하는 것이었다. 순수하게 학문의 발전을 위해 설치된 것은 아니었다.

□ 전국 중, 후기 중원의 강대국은 서쪽의 진(秦)나와 동쪽의 제(齊)나라였다. 제나라는 위왕이 그 위세를 36년간 떨침으로써 중흥의 발판을 마련한다. 이후 직하학사의 도움 아래 양대 강국의 지위를 상당 기간 유지한다. 위왕의 업적은 눈부셨다. 그의 공적은 아들 선왕이 중원의 대통일을 도모하는 데 기틀이 됐다. 선왕은 부친이 일군 자산을 바탕으로 여러 왕들 가운데 한 명의 왕이 아니라 ‘왕 중의 왕’, 곧 중국 최초로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 건설을 도모했다. 실제로 선왕은 ‘동제(東帝)’, 그러니까 동방의 황제를 자칭하며 제나라의 부강을 일궈냈다. 여기에는 위왕 때부터 변성한 직하학궁이라는 학술기관이 큰 몫을 하였다. 한편 진(秦)나라는 부국강병의 구현을 제일 목표로 삼은 법가(法家)를 등용하여 변법(變法), 그러니까 제도개혁을 시행한 이래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간다. 또한 직하학궁 출신의 인재를 지속적으로 등용하여 급기야 제나라와 견주는 강국의 대열에 진입한다. 결국 직하학궁의 학사들이 전국시대 중, 후기 중원의 정세에 미친 영향은 지

대했다고 할 수 있다.

□ 당시 직하학궁은 “분열과 혼란을 종식하고 ‘대일통(大一統)’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전국시대의 시대적 과제에 부합할 수 있는 지적 혁신을 추동하는 데에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 또한 후한 대우와 높은 명예를 근거로 중원에 흠어져 있던 지식인을 끌어 모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예컨대 그것은 문자전승 문명패러다임이 기존의 구두전승 문명패러다임을 대체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다양한 양상의 새로운 글쓰기를 직접적으로 추동한 제도적 기반이자 그것을 추진한 제도적 장치였다. 또한 지식인의 전성시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었다. 곧 직하학궁은 당시 지식인과 지식의 존재방식, 권력과 지식인의 관계, 지식과 글쓰기와의 관계 등이 집적되어 있었던 지식 제도였다. 따라서 직하학궁은 단순히 전국시대 제나라에 설치된 학술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넘어 전국시대의 지식 생산과 유통, 활용 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제도적 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관습이 제도화된 경우가 아닌, ‘목적의식적’으로 마련한 중국사상 최초의 ‘지식생산제도’였다는 것이다.⁴⁾

□ 제나라 선왕 시절의 직하학궁에는 수천의 학사들이 운집해있었다. 그 결과 전국시대의 각종 사유양태는 직하학궁에서 거의 목도된다. 또한 새로운 혹은 한층 진전된 사유도 보인다. 노자가 발견한 주어진 세계의 외부는 예컨대 추연의 대구주설(大九州說)⁵⁾에서도 관찰되며, 묵자에게서 싹뻗던 변증(辨證)이라는 관념은 형명가(刑名家)로 묶일 수 있는 직하학궁의 명가(名家)와 법가들에 의해 개화한다. 전대의 계승 발전만이 아니라 후대의 주요 사조 역시 직하학궁에서 그 단초가 마련되고 기초가 놓인다. 전국시대 중엽 이후부터 한대 초엽까지 성행했던 황로학(黃老學)이 그러했으며, 한 무제 때 동증서(董仲舒)가 유가에 입힌 음양오행설 역시 그러했다. 유가 역시 직하학궁의 최고 지위인 췌주(祭酒)를 세 차례나 지낸 순자에 의해 통일 제국에 걸맞은 이데올로기로의 전변이 일단락되었으며, 잡가(雜家)⁶⁾의 대표 격인 여불위(呂不韋)가 편찬한 『여씨춘추(呂氏春秋)』 또한 제반 학술과 사유가 상호작용 속에서 섞이고 변이된 결과를 바탕으로 진 제국의 중국 통일과 통일 제국의 통치 청사진을 담아낼 수 있었다.

4) 이상은 김월희(2011), “직하학궁과 전국시대의 글쓰기”(『중국의 지식장과 글쓰기』, 서울: 소명출판)의 관련 부분을 수정, 보완하였다.

5) 당시 중국을 전통적, 관습적으로 구주(九州)라고 불렀다. 추연은 천하는 중국과 같은 규모의 세상이 9개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곧 천하는 중국과 같은 9개의 큰 주(州)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6) 서구의 중국학자는 잡가를 ‘혼합주의’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 경제 차원에서 직하학궁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바로 한 제국 초엽, 적어도 70년 가까이 제국 최고 통치이념 역할을 담당했던 황로학의 산실이었다는 점이다. 결과적이기는 하지만 한 제국 초엽의 통치이념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했음이다. 학술과 정사의 일체화가 제국 차원에서 최초로 경제 차원에서 구현되는 양상이 펼쳐졌던 것이다. 또한 직하학궁이 황로학이라는 학술을 빚어냈다는 점 또한 무척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황로학은 ‘도법가(道法家)’라는 별칭이 말해주듯이 도가와 법가의 융합체이다. 주지하듯이 도가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이라는 지향 아래 모든 인위의 소산을 부정한다. 반면에 법가는 인위의 소산인 ‘법(法, system)’에 의한 천하 통치를 지향한다. 이 둘은 서로 극단에서 있는 셈이다. 황로학은 이러한 두 극단을 하나로 융합해내었다. 이후 중국 제국의 최고 통치이념은 황로학처럼 대립 내지 모순되는 두 사상의 융합으로 빚어진 학술이 바탕이 되었다. 황로학 이후 한 제국의 최고 통치이념이 된 유교는 “외유내법(外儒內法, 겉으로는 유가를 표방하지만 법가를 안으로 삼는다)”는 표현으로 갈무리되는 데서 목도되듯이 유가와 법가의 결합을 통해 정립되었고, 이것이 당 제국, 송 제국 시절에도 지속되었다. 원대 이후 제국 최고 통치이념으로 채택된 성리학은 “유교의 외피를 입은 불교”라는 평가를 받고 있듯이 불교의 영향을 유교화한 학술이기도 하다. 직하학궁은 이러한 제국 최고 통치이념이라는 차원에서 구현된 학정일체의 전통이 빚어지는 요람이었던 것이다.

4.2. 조선시대의 규장각

4.2.1. 설립 목적과 기능

□ 정조가 즉위한 해(1776년), “우문지치(右文之治)”와 “작인지화(作人之化)”라는 2대 목표 아래 설립된 규장각은 세종 대의 집현전과 성종 대의 홍문관과 함께 조선시대 국가의 인문정책을 담당한 대표적 기구로 꼽힌다. ‘우문지치’란 “문(文, 글·인문)을 우선하는 다스림”이라는 뜻으로 문치주의를 지향하는 것이고, ‘작인지화’란 “사람을 완성하는 교화”라는 뜻으로 문치주의를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 규장각은 설립된 이래 국립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도서의 수집, 정리, 보관, 열람, 배포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동시에 서적 간행을 전담하던 교서관(校書館)의 기능을 흡수하여 국립 출판기구 역할을 겸하였다. 또한 학술진흥정책 등 문화정책 추진 기관의 핵심 부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정조가 천명한 “민산(民産, 백성 소득 확충)”, “인재(人才, 인재 양성)”, “융정

(戒政, 제도 개혁)”, “재용(財用, 국부 증대)”의 4대 개혁 구상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⁷⁾ 국가정책 연구기관이었다. 초계문신(抄啟文臣)으로 대변되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기도 하였으며 왕립 학술기관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정조는 경연(經筵)을 통해 신하들에게 재교육을 받았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규장각을 중심으로 군신 간의 학문 연구와 상호 토론의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자신의 학문적 우월성을 과시하고 군사(君師, 임금이면서 곧 큰 스승)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였다.⁸⁾ 정조가 규장각을 토대 삼아 정제와 학계의 최정점에 우뚝 서고자 했음이다. 한편 규장각은 홍문관과 예문관의 양관 기능 외에 승정원의 비서실 기능, 춘추관의 역사 기록 기능, 사간원의 언론 기능, 종부시의 왕실 관련 업무까지 아우르면서 조정의 관료 체제의 중심이 되었다.⁹⁾ 이와 같이 규장각은 복합적 기능을 지닌 기관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치, 행정, 학술, 문화의 중심이 되었고 정조 대 문예 진흥의 모체가 되었다.

○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배후에는 조선과 중국, 일본 간 한자권 내 세력 재편과 만주 등 유목 세력과 한자권 세력 간의 패권 다툼이 놓여 있었다. 조선은 양란을 겪으면서 이러한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대처 방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예치(禮治)를 기반으로 양란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국가사회를 재건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했다. 이는 칼을 든 무사의 나라 일본과 무서운 기동력을 보여준 유목민의 나라 청과의 전쟁 끝에 내린 결론으로, 문치주의(文治主義)의 전통을 강화함으로써 조선의 힘은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붓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결과였다.¹⁰⁾ 이에 조선은 문화국가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사명은 정조 대에도 고스란히 이어졌다. 이에 정조는 규장각의 설립으로 대변되는 학술진흥정책과 인재 양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고, “17-18세기 소중화의 인식을 뛰어넘어 증원을 지배하고 있는 청을 극복하고 동아시아 일대의 문명을 주도하는 국가로 성장하고자 노력”¹¹⁾하였다. 그 결과 정조 24년간의 치세는 조선 후기 문예부흥의 시대로, “왕조 문화의 절정기인 동시에 5천 년 한국문화의 정점”¹²⁾, “조선 후기의 르네상스”¹³⁾ 등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문화가 크

7) 정조는 당시 사회가 마치 중병이 든 사람처럼 진원(眞元)이 허약해져 혈액이 막히고 흑이 불거진 상황 같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사회를 타개하고자 이와 같은 4개 개혁과제를 대내외에 천명하였다. -김준혁(2008), “정조대 정치체제 운영과 개혁정책”(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동양정치사상사』 제7권 제2호), 69쪽.

8) 김준혁(2008), “정조대 정치체제운영과 개혁정책”(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동양정치사상사』 제7권 제2호), 77쪽.

9) 정옥자(2006), “奎章閣의 지식기반사회적 의의와 동아시아문화”(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 29), 95쪽.

10) 정옥자(2006), 위의 논문, 114쪽.

11) 김준혁(2008), 앞의 논문, 59쪽.

12) 박성수 · 이득재 · 김정인 · 노명우(2004), 『21세기 인문지식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식공유체계의 재정립 및 활성화 방안-인문과학의 개방』, 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총서 2004-01, 174쪽.

13) 김문식(2009), “규장각: 정조대(正祖代) 인문정책의 산실”(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 포럼』 1호), 94쪽.

게 진작되었다.

○ 정조의 치세였던 18세기는 대외무역이 활성화되고 화폐경제가 신장되었으며, 사상(私商)의 기능 강화 및 잉여 생산물의 증가로 상업이 크게 흥성하였던 시대였다. 경쟁적인 시장경제가 발전하고 과학기술의 진보에 힘입어 상공업이 발달하였으며 그 당연한 귀결로 상업문화가 크게 성행하였다. 경제성장이라는 빛과 아울러 빈부격차의 심화와 천박한 대중문화의 범람이라는 그늘이 병존하였다.¹⁴⁾ 단적으로 농업 일변도의 국가 운영이라는 경세 패러다임은 시효가 끝나가고 있었으며, 농업과 상공업이 병진하는 전향적인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일이 요구되었던 시대였다. 또한 사회의 발전으로 양반사회의 학문 수준과 일반 백성들의 민도가 높아졌으며 하층민들의 의식구조가 발달되고 따라서 신분제에 따른 차별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역모사건도 끊이지 않았다.¹⁵⁾ 한양은 경제 성장의 중심으로서 상업도시화가 가속되었고, 지방 인구의 유입으로 갈수록 새로운 촌락이 늘어나는 등 행정구역이 넓어졌으며 한양과 지방을 잇는 도로망이 확충되면서 이러한 한양 집중 현상이 확대 재생산되었다. 이에 재야의 선비와 백성을 적극 포용하여 지방사회의 동요를 막고 사회통합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점증되었다. 이는 기존의 물리적 통제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리더십만으로는 능률적으로 대처해 갈 수 있는 현상이 아니었다. 한층 제고되고 강화된 문치(文治) 역량이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¹⁶⁾ 규장각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해 가고자 설립된 경세를 위한 핵심 문명장치였다.

□ 창덕궁 후원(지금의 비원)에 설립된 규장각 일대에는 여러 기능이 나누어 배속된 건물들이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었다. 규장각은 창덕궁 내에서 가장 경치가 좋다는 영화당(映花堂) 옆 작은 동산에 2층 누각의 아래층에 배치되었다. 이층은 주합루(宙合樓)로서 여기에는 정조의 어진, 어제, 어필, 보책, 인장 등이 보관되었다. 이 2층 누각을 중심으로 봉모당(奉謨堂), 열고관(閱古館), 개유와(皆有窩), 서고(西庫) 등의 부속건물이 배치되었다. 서남쪽에 있던 봉모당에는 역대 선왕들의 어제(御製), 어화(御畵), 고명(誥命), 유고(遺詔), 밀교(密敎), 선보(璿譜), 세보(世譜), 보감(寶鑑), 장지(狀誌) 등이 보관되었고, 정남쪽의 열고관과 그 북쪽의 개유와에는 중국 서적이, 서북쪽의 서고에는 조선 서적이 보관되었다. 이로써 도서관, 아카이브 등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었다. 주합루의 서쪽에 서재로 지었던 서향각(書香閣)은 이안각(移安閣)으로 고친 후 주합루와 봉모당에 보관한 어제 등의 포쇄(曝曬, 책이나 문서에 바람을 쏘여 건조시킴으로서 부식을 방지하는 작업) 장소

14) 박성수 · 이득재 · 김정인 · 노명우(2004), 위의 글, 174쪽.

15) 김준혁(2008), 앞의 논문, 71쪽.

16) 김준혁(2008), 앞의 논문, 71쪽.

로 사용하였다.¹⁷⁾

4.2.2. 학술진흥 사업

□ 정조는 국내외의 서적을 꾸준히 수집하였고, 이를 정리, 간행함으로써 널리 보급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규장각 등에는 방대한 서적이 수집, 보관되었는데, 1781년에 간행된 규장각 소장 도서 목록인 『규장총목(奎章總目)』에 의거하면 중국본 2만여 권과 한국본 1만여 권, 총 3만 여 권이 수집, 보관되어 있었다.

○ 정조는 조선의 제도와 문물을 정비함과 더불어 이를 방대한 도서로 출판해냈다. 정조가 세손으로 있던 1772년부터 사망한 1800년까지 직접 지은 어제(御製)와 신하들로 편찬하여 간행하게 한 여러 서적에 대한 해제집인 『군서표기(群書標記)』에 의하면 정조 대에 편찬된 도서의 총량은 153종 3,991권이 된다. 이중 정조의 저서는 89종 2,490권에 이르고 신하들로 작업하여 편찬하게 한 도서가 64종 1,501권에 이른다. 이들 서적은 단지 그 양이 방대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고 질적 차원에서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¹⁸⁾ 정조는 도서를 수집, 정리, 보급함에 정학(正學)의 부흥을 통해 조선의 문화를 발전시킨다는 지향을 준수하였다. 정학은 조선의 고유성과 주체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올바른 정통학문이라는 뜻으로 구체적으로는 육경(六經)에 대한 경학(經學)과 성리학이 그것이었다. 이를 기반으로 정조는 이들 정학 관련 국내외 서적을 활발히 수집, 편찬, 간행, 보급하였다. 『홍재전서(弘齋全書)』와 『군서표기』에 실린 해제를 보면 관련 서적이 경사자집(經史子集) 전반에 걸쳐 고루 수록되어서 학문 전 분야에서 편찬 사업이 활기를 띠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천주교 서적이나 잡술방서(雜術方書), 패관소품집(裨官小品集) 같은 불경(不經)한 서적은 엄금하기도 했다. 이들 중 정조가 직접 주도하여 편찬, 간행된 서적은 정치, 경제, 군사, 역사, 문학, 과학 등 전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¹⁹⁾

○ 서적의 수집, 보관은 규장각 설립 초기에는 중국본이 조선본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그러다 1795년(정조 19)에 이르러서는 조선본 장서량이 중국본보다 약 4,800여 권이 더 많아졌다. 이는 규장각의 역할이 단순히 서적의 수집과 보관에 머물지 않고 서적 편찬 사업을 활발히 수행한 덕분이었다. 이는 조선 자체의 학문적, 문화적 역량을 총집결하여 발휘하고자 했던 정조의 의도가 구현된 것이기도 하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니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책을 읽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중국을 능가하는 조선의 학술, 문화에 대한 강한 자부심의 표

17) 정옥자(2006), 앞의 논문, 95쪽.

18) 김문식(2009), 앞의 글, 94쪽.

19) 강혜선(1999), “정조의 문예진흥과 시문선집의 편찬”(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창간호), 412쪽.

출이기도 했다.²⁰⁾ 조선에서 산생된 서적을 기반으로 청의 문화적 높이와 넓이에 당당히 대응하고자 했던 것이다.

○ 출판은 기존 서적의 정리와 보존 활동 및 새로운 서적의 저술 등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또한 인쇄에 필요한 여건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수행될 수 있다. 이에 정조는 활자에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재위 기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100만여 자의 활자를 제작하였다. 세자 시절인 1772년에 임진자 15만 자를 처음으로 제조하였고, 즉위 직후인 1777년에는 한자와 한글 병용으로 만든 15만 자의 정유자를 제작하였다. 1782년에는 8만 자의 임인자를 만들었고, 1792년에는 32만 자에 달하는 목활자인 생생자를, 그 3년 후에는 같은 모양을 동활자로 만든 정리자를 제작하였다. 정리자는 정유자와 마찬가지로 한자와 한글을 병용한 활자였다.

□ 정조는 세손 시절부터 시작하여 많은 양의 서적을 편찬하였다. 이중 주목할 점은 다수의 선집(選集)을 편찬, 간행하였다는 점이다.²¹⁾

○ 『시관(詩觀)』: 1792년(정조16)에 간행되었다. ‘치세(治世)의 목소리’를 드러내고자 하다는 취지 아래 『시경』 「국풍(國風)」으로부터 명의 전칠자(前七子)와 후칠자(後七子)²²⁾ 이르기까지의 역대 명시 총 77218수를 집대성하여 560권의 방대한 책으로 묶어내었다.

○ 『두율분운(杜律分韻)』, 『육률분운(陸律分韻)』, 『두륙분운(杜陸分韻)』, 『두륙천선(杜陸千選)』: 『두율분운』과 『육률분운』은 당대를 대표하는 시인 두보(杜甫)와 송대를 대표하는 시인 육유(陸游)의 시 중 율시(律詩)를 모은 것으로 1798년(정조 22)에 간행되었다. 『두율분운』에는 두보의 율시 777수가 실려 있고, 『육률분운』에는 육유의 율시 4877수가 실려 있다. 같은 해에 이 두 책을 합하여 44권 15 책으로 간행한 것이 『두륙분운』이다. 『두륙천선』은 그 다음 해에 『두율분운』과 『육률분운』에서 각각 500수씩을 뽑아 간행한 것이다. 정조는 이들 책을 두루 보급하여 시작(詩作)의 모범으로 삼고자 하였다.

○ 『아송(雅誦)』: 1799년(정조 23)년 정조가 도학(道學)적 관점에서 직접 가려 뽑고 신하들로 주석을 달게 하여 편찬, 간행한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朱熹)의 시선집이다. 정조는 공자와 맹자를 이은 주희를 정통으로 삼아 당대의 학문과 문학을 진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주희의 문

20) 강혜선(1999), 위의 논문, 413쪽.

21) 이하는 강혜선(1999), 위의 논문, 414-431에서 발췌, 정리한 것이다.

22) 전칠자는 명대 홍치(弘治) 연간과 정덕(正德) 연간(1488-1521)에 활동한 이몽양(李夢楊), 하경명(何景明), 서정경(徐禎卿), 변공(邊貢), 강해(康海), 왕구사(王九思), 왕정상(王廷相)의 일곱 문인을 가리킨다. 후칠자는 가정(嘉靖) 연간(中期, 1522-1566)에 활동한 이반룡(李攀龍), 왕세정(王世貞), 사진(謝榛), 오국륜(吳國倫), 종신(宗臣), 서중행(徐中行), 양유예(梁有譽)의 일곱 문인을 가리킨다. 이들은 명대 초, 중엽의 대표적 문인들로 “시는 반드시 성당 시기의 시, 문장은 반드시 진대와 한대의 문장(詩必盛唐, 文必秦漢)”의 기치 아래 복고적 문학창작을 주장하였다.

헌을 꾸준히 편찬, 간행하였다. 20대에 『주자회선(朱子會選)』, 30대에 『주자선통(朱子選統)』과 『자양회영(紫陽會英)』, 40대 이후 『주서백선(朱書百選)』과 『주자서절작(朱子書節酌)』을 편찬하였다. 또한 『주자대전(朱子大全)』과 『주자어류(朱子語類)』 등 주희의 모든 문헌을 집대성한 전서(全書)를 만들고자 하였다. 『아송』도 이러한 출판, 간행 계획의 일환이었다.

○ 『율영(律英)』: 『군서표기』에는 1799년(정조 23)에 편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현재 그 실물을 찾아볼 수는 없다. 『율영』은 당, 송, 명, 조선의 칠언율시를 뽑아 한 시대마다 각각 한 편으로 만든 선집으로, 총 79인의 시가 선발되었다. 정조는 일찍부터 조선의 시문을 선발한 책자의 편찬을 구상해왔는데 『율영』은 그러한 구상의 일환이었다.

○ 『사원영화(詞苑英華)』, 『문원보불(文苑繡黻)』: 『사원영화』는 정조가 세손 시절인 1775년에 조선 초기 이래의 관각문(館閣文, 조정의 관리들이 왕명에 의해서 쓴 글이나 문서)을 직접 가려 뽑아 편찬, 간행한 것이며, 『문원보불』은 조선의 관각문을 정리, 집대성한 것이다.

○ 『역대국조명신주의(歷代國朝名臣奏議)』, 『주의찬요(奏議纂要)』, 『육주약선(陸奏約選)』: 정조는 역대 명신들의 주의문(奏議文, 임금에게 받치는 글) 가운데 핵심적인 문장을 뽑아 1782년(정조 6년)에 『역대국조명신주의』를 편찬, 간행하였다. 뒤이어 주의문의 모범을 제시하고자 송대의 삼현(三賢), 정호(程顥), 정이(程頤), 주희와 조선의 구현(九賢), 조광조(趙光朝), 이황(李滉), 이이(李珣), 성혼(成渾), 김장생(金長生), 송시열(宋時烈) 등의 주소(奏疏)를 모아 편찬, 간행하였다. 또한 1794년(정조 18년)에는 주의문의 대가로 정조가 주희의 글과 더불어 가장 애독했다고 하는 당의 육지(陸贄)의 주의문 중 가장 정수가 되는 29편을려 뽑은 『육주약선』을 편찬하기도 했다.

○ 『팔자백선(八子百選)』, 『팔가수권(八家手圈)』: 1781년(정조 5) 정조가 직접 ‘고문(古文)’의 대가인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산문 가운데 100편을 정선하여 3책 6권으로 간행한 책이다. 여기에는 당대 한유(韓愈)의 글 30편, 유종원(柳宗元)의 글 15편 및 송대 구양수(歐陽修)의 글 15편, 소순(蘇洵)의 글 5편, 소식(蘇軾)의 글 20편, 소철(蘇轍)의 글 5편, 증공(曾鞏)의 글 3편, 왕안석(王安石)의 글 7편이 수록되어 있다. 『팔자백선』은 여러 차례 유생들에게 하사되는 등 널리 보급되었다. 이는 당송팔대가의 글을 산문의 모범으로 추켜세우려고 한 정조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는데, 이는 1798년(정조 22) 『팔가수권』의 간행으로 이어졌다. 정조는 팔대가의 문장 가운데서 모범이 되는 중요한 구절을 뽑아 권점(圈點)을 치고 이를 수합하여 여러 신하들로 교정을 보게 하여 『팔가수권』을 편찬하였다.

○ 『주서백선(朱書百選)』: 정조가 직접 주자의 문집에 실린 편지글 중에서 의미가 큰 글 100편을 선별하여 6권 3책으로 편찬하였다. 정조는 규장각 관리는 물론이고 지방 각지의 유생들에

게 이 책을 널리 보급하여 주자학 학습의 한 발판으로 삼게 하였다.

○ 『사기영선(史記英選)』: 정조가 문장의 법도를 보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와 반고(班固)의 『한서(漢書)』를 직접 초록하여 8권으로 엮은 책으로 1796년(정조 20)에 간행되었다. 이는 정조의 명으로 1797년 영남, 호남, 관서의 감영에서 번각되어 목판본으로 간행되었으며, 태백산과 오대산, 적상산의 사고(史庫)에 보관되기도 하였다.

○ 『오경백선(五經百選)』: 정조가 오경(五經)에서 가장 중요한 글 100편을 뽑아서 엮은 책이다.

4.2.3. 사적 의의

□ 정조의 규장각 재정립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래 지속되고 있던 동아시아와 유목세계 일대를 무대로 한 국제질서의 재편과 그 흐름 속에서 청의 중국 및 일본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정조의 답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청과 일본은 무력 기반의 국가 운영을 내려놓고 문화국가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었다. 중원 점령 후 정치적 안정을 일군 만주의 청은 대규모 도서 정비 사업, 간행 사업 등을 기반으로 문화진흥에 적극 나서며 한자권의 문화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갔으며, 일본도 17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유교문화 국가로 선회하고 있었다. 규장각은 조선의 인문 경험과 경륜, 역량을 바탕으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고자 설마련한 제도적 기반이었다. 정조는 군사대국 청이 중원의 주인이 된 현실에서 명나라를 계승한 동아시아의 문화 중심국임을, 곧 “조선이 바로 중화”라는 조선중화사상에 기초하여 변방의식을 걷어내고 문화 중심국임을 자처하던²³⁾ 시대적 사조 위에서 규장각을 설립함으로써 조선 인문진흥정책의 중추적 제도로서 대내적으로는 산적한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수적인 인문역량을 제고하고, 대외적으로는 한자권의 문화적 헤게모니를 두고 청과 각축할 수 있는 역량을 신장하고자 했던 것이다. 규장각은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국가장치였다.

□ 정조는 세손 시절부터 재위 기간 내내 근본 차원에서 변이가 촉발되고 진행되던 국내 상황에 적극적이고도 타당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그는 유학의 경세 전통을 바탕으로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정면으로 대처하여 갔다. 정조는 수기(修己)에서 시작하여 치인(治人)으로 완성되는 유학의 실천적 경세 이념을 바탕으로 경학과 성리학의 학문적 성취와 천하 경영, 국가 통치를 위한 경세학을 연결시키면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방

23) 정옥자(2006), 117쪽.

안을 제시하였다. 정조 당시 ‘정학(正學, 정통 학술)은 경학(經學)으로 대변되는 한학(漢學)과 성리학으로 대변되는 송학(宋學)이었다. 정조는 송학을 중심으로 한학과 송학의 장점을 절충하고자 했다. 여기에 경세학에 장점을 가진 조선 학자들의 문집 간행을 주도함으로써, 조선에 축적되어 있는 경세 역량을 결합하고자 하였다. 이는 정조가 자신이 추진하는 개혁 정치가 유학의 정통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시에 조선의 학문 전통에 기반을 둔 것임을 천명한 것이었다. 그리고 규장각을 기반으로 관련 도서의 수집과 정리, 편찬, 간행함으로써 이러한 지향을 학술적으로 뒷받침했다. 시대적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명분을 학술 진흥을 통하여 확고하게 확보해갔던 것이다.

□ 정학(正學)의 이름으로 경학과 성리학의 전적을 정리하고, 이를 군왕의 이름으로 재해석하며 선집을 편찬, 발간한 것은 대내적으로는 개혁정책의 이념적 정당성을 구축하여 개혁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는 작업이었다.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청과 일본에 대한 이념적, 문화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적어도 청과 대등한 위상에 서고 일본에는 우월한 위상에 서기 위한 전략의 소산이었다. 명의 멸망 이후 ‘소중화(小中華)’를 자처했지만, ‘소중화’라는 조어에서 극명하게 목도되듯이 이는 중국의 그늘 밑의 조선 중화의 동쪽 변방으로서의 조선이라는 의식이 당연히 된 결과였다. 정조는 경학과 성리학을 주체적으로 정리하고, 『시경강의(詩經講義)』, 『주역강의(周易講義)』, 『상서강의(尙書講義)』, 『논어강의(論語講義)』, 『맹자강의(孟子講義)』, 『대학강의(大學講義)』, 『중용강의(中庸講義)』, 『좌전강의(左傳講義)』 등 경전에 대한 정조 자신의 해석을 담은 저서를 간행한 데서 보듯이 경전을 주체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중국의 그늘 밑에서 나와 조선중화주의, 곧 중화라는 이념체(idael type)를 조선에서 구현하려 했음이다. 이를 토대로 적어도 문화 차원에서는 청과 대등한 더 나아가 청에 우월한 국제적 위상을 점하고자 했던 것이다.

□ 이는 조선이 문화적 강함을 갖추므로써 문화 방면에서 대내외적 자신감을 구비하는 과업이기도 했다. 동서고금의 역사가 밝히 입증하고 있듯이 문화적 강함, 그러니까 문화의 높이와 넓이, 깊이를 유의미한 수준 이상으로 갖추었을 때 비로소 대내외적을 개방적이게 되고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정조는 조선 정학의 구축을 기반으로 이러한 문화적 강함을 구비하는 과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였고 그 소산을 바탕으로 문화적 넓이를 추구할 수 있었다. 이념적, 학술적 차원에서는 조선 유생에 의해 사문난적으로 규정된 양명학의 장점을 수용하였고, 명말청초 이래의 실사구시적 경세학, 백과전서적인 고증학의 덕목을 받아들였다. 대외적으로는 청을 통해 전래된 서구의 과학기술 중심의 서학(西學) 등 신진 문물을 수용하여 『신법누주통의(新法漏籌通義)』, 『신법

중성기수민묘전(新法中星紀壽民妙詮), 『칠정보법(七政步法)』 등의 과학서적을 편찬하였다. 또한 『고금도서집성』을 구해옴으로써 그에 들어 있던 서구의 기하학과 기기학 등을 접할 수 있었고 이를 수원 화성 건설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정학의 정립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조선 중화주의의 실현은 이처럼 대내외적 차원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실현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다시 정학의 현실 대응력을 증강하여 그것의 교조화를 미연에 방지하는 순기능적 회로를 구축하였던 것이다.

□ 정조의 도서 간행 사업에서 주목할 점은 적지 않은 '선집(選集)'이 편찬, 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절대 다수가 정조 자신이 직접 가려 뽑아 발간한 것이었고, 선집 발간 대상은 주로 한자권의 문화적 근간에 해당하는 것들이었다. 달리 말해 문화적 표준 내지 전범에 해당하는 것들이었다. 가령 『두율분운』과 『육율분운』은 한시의 양대 산맥인 당시와 송시 중 율시(律詩) 방면에서 각각의 대표 격인 두보와 육유의 율시를 대상으로 한 선시집이다. 여기서 왜 율시를 뽑았는가 하는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다. 답은 율시는 한시의 여러 시체 가운데 가장 정련되고 제고된 시체로서 그야말로 한시를 대표하는 시체였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곧 한시 중 가장 표준적이고 전범이 되었기에 율시를 선택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두율분운』과 『육율분운』은 율시, 당시와 송시, 두보와 육유라는 표준 내지 전범을 세 겹으로 중첩하여 펴낸 시선집이었던 것이다. 한편 당, 송, 명, 조선의 칠언율시를 뽑아 한 시대마다 각각 한 편으로 만든 선집인 『율영』에서도 율시라는 표준과 전범에 대한 정조의 집중을 목도할 수 있다. 한시 방면에서만 그러했음이 아니었다. 산문의 정수를 가려 뽑아 『팔자백선』을 편찬, 간행하였다. 이는 한문 산문의 표준이자 전범이었던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문장을 대상으로 조선의 시각으로 대표적 작품 100편을 가려 뽑은 선문집이다. 또한 조선에서의 산문 창작의 모범을 제시하고자 정조는 1856년 송시열 시문집인 『양현전심록(兩賢傳心錄)』을 편찬하기도 했다. 이는 이들이 시문이라 병칭되는 한자권 인문의 양대 학질인 시가와 산문에 대하여 조선의 시각을 정립할 수 있는 토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작지 않았다. 주희 시선집, 두보와 육유 율시 선집이 시가 창작 실체라는 차원에서 표준과 전범을 제공하는 작업이었다면 주희 선시집은 '시 정신' 차원에서의 당위 내지 표준을 제시하는 작업이었다. 이러한 선집을 직접 빚어냈다는 것은 정조가 한자권의 문화적 표준 내지 전범을 자신의 손으로 다시 세우는 작업을 수행했음을 시사해준다. 조선이 곧 중화라는, 한자권의 문화 중심이라는 의식이 도드라지게 드러난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 문장의 표준 내지 전범을 제시하고자 하는 정조의 노력은 가령 굴원(屈原)과 송옥(宋玉)으로

부터 위진남북조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부(辭賦)의 정수를 가려 뽑는 작업²⁴⁾으로 이어지기도 하였고, 실용적 글 가운데 관리로서 빈번하게 쓰게 되는 주의문(奏議文)의 모범을 제시하고자 하는 작업으로도 이어져 『역대국조명신주의』, 『주의찬요』, 『육주약선』 같은 주의문 선집을 편찬하기도 했다. 주의문 이상으로 자주 쓰는 실용적 글인 서간문의 모범도 제시하고자 주희의 편지글 100편을 직접 가려 뽑아 『주서백선』을 편찬하였다. 또한 기사(紀事, 역사 글쓰기) 문장의 법도를 제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사기』와 『한서』에서 모범적 문장을 가려 뽑은 『사기영선』을 간행하였다. 이렇게 표준과 전범을 재정립하여 제시하고자 한 정조의 인문기획은 문장 영역뿐 아니라 사상 내지 이념 영역에서도 공히 수행되었다. 경학 방면의 『오경백선』이라든지 성리학 방면의 『주자선통』, 『주자서절작』 등이 그 예다. 또한 『시경강의』와 『논어강의』 등 삼경과 사서에 대한 정조 자신의 해석을 담은 서적을 편찬함으로써 해석 차원에서도 표준과 전범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편 『규장전운(奎章全韻)』, 『규장운서(奎章韻書)』 등의 운서를 편찬함으로써 한자 독음의 표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 규장각은 정조가 펼친 국가 인문정책 수립과 추진의 총화였다. 이는 국가 인문 역량의 제고를 통하여 당면 과업의 능동적 해결 역량을 제고하는, 곧 학문 역량을 경세 역량으로 전화하는 제도적 장치였다. 정조는 즉위 이후 경세의 기반이 되는 각종 제도 관련 서적을 많이 편찬했다. 관제(官制, 행정제도)와 관련해서는 『규장각지(奎章閣志)』, 『홍문관지(弘文館志)』, 『동문휘고(同文彙考)』 등을, 형정(刑政, 사법제도)과 관련해서는 『흠휼전칙(欽恤典則)』, 『대전통편(大典通編)』,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증수무원록언해(增修無冤錄諺解)』 등을, 법전으로는 『대전통편(大典通編)』을, 군사 방면으로는 『병학통(兵學通)』, 『병학지남(兵學指南)』,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 『무예도보통지총보(武藝圖譜通志總譜)』 등을, 국가사회의례로는 『함흥본영의식(咸興本宮儀式)』, 『영흥본영의식(永興本宮儀式)』, 『향례합편(鄉禮合編)』, 『오륜행실도춘관통보(五倫行實圖春官通考)』, 『성단형의(星壇享儀)』 등을 편찬함으로써²⁵⁾ 학문 역량을 경세 역량화 하는 데 필요한 토대를 탄탄하게 구축하였다. 정조는 이와 병행하여 규장각을 포스트 삼아 초계문신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학문 역량과 경세 역량을 겸비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였다. 그 결과 규장각은 적어도 정조 재위기간 동안에는 국가 인문정책의 산실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었고 나아가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새로운 지식정보의 지속적 수집과 보급, 개혁 비전을 가진 인재의 양성과 개혁 정치 실현의 본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²⁶⁾ 곧 국립 도서관이자 출판기구, 학술기관, 정책연구

24) 강혜선(1999), 앞의 논문, 423쪽.

25) 정옥자(2007), “규장각의 지식기반사회적 의의와 동아시아문화”(『조선시대 문화사(상)—문물의 정비와 왕실문화』, 서울: 일지사), 397쪽.

기관, 관리교육기관의 역할을 겸했던 정조 대 조선 인문정책 거버넌스의 총화였던 것이다.

4.3.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인문진흥

4.3.1. 그리스의 인문진흥

□ 그리스 인문학의 초기 모습

○ 서양 역사에서 국가 차원에서 시행된 최초의 ‘인문정책’은 서기전 6세기에 아테네의 정치가인 페이시스트라토스(Peistratos, 600-527년 BCE)의 공공도서관 설립이다. 서기 6세기에 스페인의 세빌라에서 활약한 이시도로스는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아테네 참주 피시스트라투스가 최초로 도서관을 설립했다고 전해진다”²⁷⁾라고 보고한다.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도서관을 세운 것은 아테네 시민의 교육과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리스 인문정책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발전과 직결되어 있었다. 이에 대한 전거는 켈리우스의 전언에서 제시할 수 있다. “교양교육을 통해 아테네인을 자유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해 책을 공적 차원에서 처음으로 제공한 이는 참주 피시스트라투스(Pisistratus, 605-527년 BCE)라고 전해 온다. 이어 아테네인들 자신이 열의를 가지고 [도서관을] 풍부하게 가꾸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가 도시를 장악하고 성채를 제외한 나머지 전 도시를 불 지르고 나서 이 책들을 페르시아로 약탈해 갔다. 수 세기 후,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책들을 니카노르라 불리우는 셀레우쿠스 왕이 아테네인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²⁸⁾

○ 국가와 인문학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아주 이른 사례는 페이시스트라토스가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국가 차원에서 정비한 문헌 정비 사업이다. 키케로에 따르면, “누가 당대의 동시대의 사람들중에 그보다도 더 학식이 뛰어났겠는가? 혹은 어떤 연설이 글의 도움을 받은 그의 연설보다 더 학식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가?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이전에 흩어져 있던 호메로스의 책들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정비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자신의 시민들에게 유익함을 제공했을 뿐만이 아니라 연설로 꽃피웠는데, 글과 학식으로도 탁월하였다.”²⁹⁾ 그런데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정비하면서 페이시스트라토스는 트로이 전쟁에 참여한 그리스의 연합군

26) 김문식(2009), 앞의 글, 95쪽.

27) 『어원론(Etymologica)』. 6.3.3.

28) 『아티카의 밤들』, XVII.

29) 『연설가에 대하여』 3권, 137장.

을 소개하는 『일리아스』 제2권의 ‘선박 목록’에 ‘아테네의 역사’도 삽입시켰다. 이는 나중에 위작으로 판명되었지만, 이 사건은 국가가 인문학을 어떻게 이용하느냐를 보여주는 최초의 사례이다. 국가의 정체성을 확보함에 있어서 인문학은 국가의 역사적인 존립 근거와 정통성의 논리를 제공하는 도구였다.

□ 플라톤의 『국가』에 나타난 인문학의 특성

○ 국가의 존재 목적은 그 구성원인 시민들의 최대의 행복이다. 근대 철학자 벤담이 이를 이론적으로 체계화시켰지만,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최대한으로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꾸었던 사람은 플라톤이었다. 플라톤에 따르면, “실사 이들이 이려고서도 가장 행복하다고 할지라고, 이는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나라를 수립함에 있어서 유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어느 한 집단(ethnos)이 특히 행복하게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시민 전체가 최대한으로 행복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그런 나라에서 올바른(올바른 상태, 정의: dikaiosyne)을 가장 잘 찾아 볼 수 있는 반면, 가장 나쁘게 경영되는 나라에서는 올바르지 못함(올바르지 못한 상태, 불의: adikia)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며, 일단 이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오래 전부터 추구해오던 것에 대한 판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일세.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듯, 지금 우리가 행복한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을 따로 분리해내서 이 나라에서 행복한 사람이게끔 함으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를 행복하게끔 함으로써 하는 것이네.”³⁰⁾ 플라톤은 국가의 번영과 시민의 행복이 정의와 불의를 분간하는 판단 능력에 달려 있음을 강조한다. 한 국가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그 구성원의 화합과 행복을 위해서는 조화와 균형을 따질 수 있는 판단 능력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판단 능력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오랜 교육과 훈련을 거칠 때에 획득되는 능력이고 소양이다. 플라톤이 『국가』를 저술한 것도 실은 정의와 불의를 구분하고, 조화와 균형의 원칙과 원리에 따른 행위와 행동을 가능케 하는 이 판단 능력의 함양을 위한 것이었다. 국가가 사람의 행복에서 그 존립 목표를 확보하고 있다면, 그 목표의 실천 수단은 결국은 교육이고, 그 교육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인 영혼의 교육이 그것이다. 국가는 그 스스로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인문학의 도움을 필수적으로 요청할 수밖에 없다.

○ 인간 영혼의 교육을 위해서 플라톤이 철학을 중시한 것은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서 플라톤이 이른바 평생 교육을 강조했다라는 점은 중요하다. 예컨대 통치자의 교육은 35세에서 50세에 이르는 실무 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지천명의 나이인 50세를 넘겼을 때 시작하는 것으로 놓

30) 『국가』 4권 420 b-c.

았다. 인생 전체가 교육의 연속이라는 점에 눈길이 간다. 한국의 인문 교육과 관련해서는, 물론 통치자를 자임하는 정치가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영혼 교육을 시작하는 시기에 대한 플라톤의 언급에 주목해야 한다. 플라톤은 이 시기에 수행되는 이야기 교육을 강조한다. “우리로서 무엇이 보다도 먼저 이야기 작가들을 감독해야만 하겠거니와, 그들이 짓는 것이 훌륭한 것이면 받아들이되, 그렇지 못한 것이면 거절해야만 될 것 같으니. 그러나 일단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것들을 보모들과 어머니들로 하여금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어, 그들의 손으로 아이들의 몸을 가꾸어 주는 것 이상으로, 그들이 설화로써 아이들의 영혼을 형성해 주도록 설득할 결세.”³¹⁾ 이야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교육이 한국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과정에서는 거의 생략되거나 경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교육의 시작은 영혼을 형성시키는 이야기 교육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영혼의 형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부족으로 이야기 교육에 대한 과정이 무시되거나 생략된 채로 교육 과정과 교과 편제가 이루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정치학』에 나타난 인문학의 특성

○ 아리스토텔레스는 삶의 목적을 행복으로 정의한다. 그는 말한다. “목적들은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목적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선택된다. 예컨대 재물, 피리 그리고 일반적으로 도구들이 그러하다. 그러므로 목적이라고 해서 모두 다 완전한(teleion)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최고선은 완전한 어떤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만일 단지 하나의 것만이 완전한 것이라고 하면 이것이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된다. 그러나 만일 완전한 것이 여럿이라고 한다면, 이 완전한 것들 중에서도 가장 완전한 것(teleiotion)이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체로 추구될 만한 것이 자신 아닌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추구되는 것보다 더 완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자신 아닌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선택되지는 않는 것이 그것들 자체로 그리고 동시에 자신 아닌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선택되는 것들보다 더 완전하다고 우리는 말한다. 따라서 결코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항상 그 자체로 선택될만한 것이 바로 단적으로 완전한 것이라고 우리는 말한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행복이 이러한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복을 항상 그 자체적으로 선택하지 결코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선택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명예, 즐거움, 지성 그리고 모든 종류의 덕을 우리는 그것들 자체 때문에 선택하지만 (왜냐하면 이런 것들로부터 아무런 결과가 생겨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것들 각각을 선택하고자 하기에), 또한 동시에 이것들을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선택하기도 한다. 이것들을 통해서 행복하게 되리라고 우

31) 『국가』 2권 377 c.

리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행복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이것들을 위해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선택되는 것도 아니다.”³²⁾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탁월성에 따르는 영혼의 어떤 활동”³³⁾으로 규정한다. 그는 이 활동을 통해서 잘 사는 것(euprattein)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잘 사는 것을 다시 고귀한 것, 유익한 것, 즐거운 것으로 나누어 구분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의 특징은 그것이 “인간적인 것의 경계(kata to anthropeion)”를 중시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학 혹은 인문학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특정 분파의 철학적인 현자가 아니라 그의 윤리학은 ‘자유인(eleutheros)’과 ‘벗(philios)’을 위한 논의였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논의는 국가의 내적인 존립 근거였다. 이는 국가가 인문학 담론에 기초한 공동체이고 조직임을 잘 보여준다.

○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 인상적인 점은 ‘자유민’에 대한 논의이다. 그에 따르면, “자유민다운은 재물에 관련된 중용으로 보인다. 자유민다운 사람이 칭찬을 받는 것은 전쟁과 관련한 일에서가 아니고, 절제 있는 사람이 칭찬을 받는 일에서도 아니며, 또 판결과 관련된 일에서도 아니기 때문이다. 자유민다운 사람은 재물을 주고받는 일과 관련해서, 특히 주는 일과 관련해서 칭찬을 받는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물은 그 가치가 돈으로 측정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 쓰임새가 있는 것들은 잘 쓸 수도 있고, 나쁘게 쓸 수도 있다. 부(富)는 쓰임새가 있는 것들 중 하나이다. 그런데 쓰임새가 있는 것들을 가장 잘 쓰는 사람은 그것과 관련된 탁월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다면 부 또한 재물과 관련된 탁월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사용할 것이다. 이 사람이 바로 자유민다운 사람이다.”³⁴⁾ ‘자유민’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한편으로 인간의 삶과 관련해서 존재가 생성의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생존이 생활이 우선하지만 생활이 생존에 우위에 있음을 보여준다. 인간은 단지 생존만을 목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살기 위해, 즉 자신의 생활을 좋고 아름답고 고귀한 것으로 채우고 누리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에서 이런 자유민이 많은 나라가 좋은 국가이고 아름다운 공동체이다. 국가가 자신의 존재값, 즉 국격을 높이는 일에, 즉 인문학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도 자명하게 드러난다.

○ 국가의 존립과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공교육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그런데 입법가가 무엇보다 젊은이들의 교육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질 않을 것이다. 실제로 폴리스에 교육이 없으면 정치체제를 손상시킬

32) 『니코마코스 윤리학』 1권 1097a25-1097b6.

33) 『니코마코스 윤리학』 1권 1099 b 26.

34) 『니코마코스 윤리학』 4권 1119 b 20-1120 a 7.

테니까(각각의 정치 체제에 맞추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각각의 정치체제에는 고유한 성격이 있는데, 예를 들어 민주정적 성격은 민주정 정치체제를, 과두정적 성격은 과두정 정치 체제를 말하는 것처럼, 으레 성격이 정치체제를 보호하고 애초부터 그 정치체제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어떠한 경우에도 더 나은 성격이 더 나은 정치체제의 원인이 된다. 게다가 각자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능력과 기술에 관련해서 미리 교육되고 미리 습성화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어야 하기에, 따라서 덕의 활동을 위해서도 그런 것들이 미리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폴리스 전체의 목적은 하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시민의 교육도 하나고 동일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리고 이 교육의 돌봄도 각 개인이 자신의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돌보고 자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개별적인 과목을 가르치는 현재의 개인 단위의 방식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 공공 사항에 관한 훈련도 공통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시민은 누구든지 자신을 자신에게 속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각자는 폴리스의 일부이므로, 모든 시민이 자신이 폴리스에 속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부분에 대한 돌봄은 전체에 대한 돌봄으로 향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런 측면에서 사람들은 라케다이모니아인들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아이들에게 최대한의 진지한 관심을 기울였고, 그 진지한 관심을 공동으로 향했기 때문이다.”³⁵⁾ 여기에서 주목해야 점은 세 가지다. 하나는 폴리스는 교육 없이는 존립이 어려운 조직이라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폴리스의 공통성을 제공해주는 것이 교육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은 시민은 폴리스의 부분이고, 그러는 한에서 부분의 돌봄에서 전체에 대한 돌봄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서 공교육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그 근거를 확보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의 교육의 실체는 인문학이라는 점에서, 인문학은 폴리스의 공동체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제공하는 필수 학술이다.

□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 국가가 지식을 본격적으로 관리(Knowledge Management)한 사례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다. 켈리우스에 따르면, “많은 책이 이집트에서 프톨레마이우스 왕조에 의해서 수집되기도 했고, 70인 역 성서가 거의 수 천 권에 될 정도로 구축되기도 했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에서 벌어진 전쟁 중, 나라가 약탈당하는 중에 군사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계획에 입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마도 보조 군사들에 의해서 이 모든 책들은 불태워졌다.”³⁶⁾ 이 도서관을 짓기 시작한 이는 소테르(Soter, 서기전 367-282년) 왕이었고, 완공한 이는 소테르의 후계자였던 필라

35) 『정치학』 제8권 1장 1337 a 10-34.

36) 『아티카의 밤들』, XVII.

텔레푸스(Philadelphus, 서기전 308-246년) 왕이었다. 도서관은 시인으로도 이름을 날린 칼리마코스 시절(서기전 3세기)에 이미 40만 두루마리를 소장했고, 후대 보고에 따르면 70만 두루마리를 소장했다. 그러나 도서관은 단순히 고대 문헌들을 보관만 하는 장소는 아니었다. 오히려 이곳은 엄밀한 비판-검증(collatio)을 거쳐 문헌을 교정(emendatio)하고, 그것의 비판 정본(textus criticus)을 만들었으며, 이를 다시 주해하고 번역하는 업무도 수행했고 도서 목록을 작성하는 일까지 포괄하는 일종의 연구소였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검증 과정을 통해 탄생한 책들을 출판하는 일도 관장했던 곳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검증 과정을 통해 탄생한 책들을 출판하는 일도 관장했던 곳이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이 도서관이 헬레니즘시대 지식의 산실이자 지혜의 배꼽(omphalos)이었던 셈이었다. 그리스문명이 남겨놓은 문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전승되는 그리스의 고전들의 대부분이 이 도서관에서 편찬된 것들이다.

○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교육 기관이기도 했다. 스트라본에 따르면, “궁정 안에 무사이온(무사 여신들을 섬기는 사원)이 있는데, 이곳은 회랑과 열람실용 엑스에드라(돌로 된 좌석)와 큰 집을 포함하고 있다. 이 집은 무사이온에 속하는 학자들이 공동 식사를 하는 곳이었다.”³⁷⁾ 인용은 책이 원래 보물이고 귀한 물건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준다. 그래서일까? 도서관은 도서관 관계자와 학자들, 무사이온 학생들과 왕실 관계자에게만 허용되었다. 일반 대중에게는 이용이 허락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공공 도서관의 최초 기획자였던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정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다. 원래 도서관은 적어도 켈리우스에 따르면, “교양 교육을 통해 자유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세워진 공동의 재산(res publica)이었기 때문이다. 본래 사정이 이러함에도, 공공의 보물인 책에 대한 왕실의 관리와 감시는 엄격했다. 아테네의 아고라 근처의 로마 제정 시대 도서관 유적지에서 나온 대리석 비문이 그 증거다. “어떤 책도 가지고 나갈 수 없다. 도서관 개관 시간은 첫 번째 호라(오전 7시, 9월 기준)에서 여섯 번째 호라(정오 12시, 9월 기준)까지이다.”³⁸⁾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되었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자신들이 소장하고 있던 문헌들과 새롭게 편찬하거나 출판한 텍스트를 바탕으로 많은 문인들을 교육했다. 이 교육의 힘은 나중에 로마의 문예 전성기를 이끄는 소위 “교육받은 시인(poeta docta)”들인 카툴루스(Catullus), 호라티우스(Horatius), 베르길리우스(Vergilius)와 같은 대문호들이 탄생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로마문명은 그리스 인문학의 도움 없이는 결코 설명이 안 된다.

○ 서기전 5세기는 그리스 학문과 문화가 활짝 꽃피었던 시기에 해당한다. 운문에 있어서는

37) 『지리학』 제17권, 1장 8절.

38) Dorandi 1997.

비극과 희극이, 산문에 있어서는 역사와 철학이 절정에 도달한 시기다. 이를 고려할 때, 공적이든 사적이든 어떤 형식으로든 책을 모아두었던 도서관이 있을 법한데, 유감스럽게도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직접적인 자료도 남아 있지 않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플라톤이 개인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다 한다. 이른바 ‘도서관’이라 부를 수 있는 시설이 등장한 것은 서기전 4세기부터다. 도서관 기능에 맞게 책들을 분류하고, 단지 책을 보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육을 위해서 도서관을 세운 이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니 그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다. 개인 서재가 아닌, 자신이 건립한 학교 뤼케이온(Lykeion)에 도서관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그의 도서관이 겪어야 했던 운명은 그 주인공만큼이나 기구했다. 이에 대한 지리학자 스트라본(Strabo, 60 BCE-24년)에 따르면, “그들은 아탈로스 왕이 페르가몬에 도서관을 세우기 위해 책들을 구하고 모으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그들은 땅을 파서 참호를 만들고 여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을 숨겼다. 한참 후 책들이 습기와 벌레들에 의해서 손상을 입자, (중략) 아펠리콘은 벌레들에 먹혀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였고 새로운 복사본을 만들었다. 그러나 정확하지 않게 보충되었고 오류와 오식들로 가득 찬 것들이었다. (중략) 여기에는 로마도 한 몫 거들었다. 왜냐하면 당시 아테네를 장악하고 있었던 술라는 아펠리콘이 죽자 곧바로 도서관을 전리품으로 가져왔고, 이곳(아마도 로마)으로 옮겨진 도서관을 아리스토텔레스 추종자였던 튀라니온이 관리했기 때문이다. 이 도서관에서도 필경사들이 도서들을 교정하고 고쳤다. (중략) 필사본들을 전혀 대조하지도 원본을 비교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로마뿐만이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었다.”³⁹⁾ 책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땅을 파고 책을 숨기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였다는 대목이 인상적이다. 책들이 황금과 같은 보물 취급을 받았고, 이는 지식과 지혜가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는 문명의 공통 토대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런 인식은 전통적인 상무(尙武) 국가였던 로마에서도 확산되었는데, 이는 로마의 독재자인 술라(Sulla, 138-78년 BCE)가 아리스토텔레스 도서관을 전리품으로 취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도시에서 도시로, 나라에서 나라로, 문명에서 문명으로 전승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도서관이, 즉 그의 책들이 공간의 경계와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원동력의 실체는 그의 철학에 담긴 보편성과 실체성이었을 것이다.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그가 제시한 철학은 심지어 독재자 술라에게도 필요한 학술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규모의 정치를 고려할 때, 제국의 단계에서 들어선 로마와 같은 큰 나라를 하나로 묶어내는 힘은 로마의 고유한 역사를 강조하는 정도로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39) 『지리서』 13권 1장 54절.

4.3.2 로마의 인문진흥

□ 로마의 교육과 학술의 초기 모습

○ 로마의 교육은 가난했다. 이에 대한 증인은 로마의 역사가인 수에토니우스이다. 그에 따르면, “문법이 로마에서 처음부터 제 자리를 잡은 것은 아니다. [문법이] 제대로 대접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했다. 그 때는 나라[의 문화가] 척박했고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했기에, 자유교양학문에 큰 힘을 쏟아 부을 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문법의 초창기 모습도 따라서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다. 비록 학식 있는 사람들 중 가장 옛날 지식인들이 활동했다 할 지라도 말이다. 그들이 그리스계 학자인 동시에 시인이었던, 나는 리비우스 [안드로니쿠스]와 엔니우스를 언급하고자 하는데, 그들이 집에서든 밖에서든 그리스어와 라틴어 두 언어로 강의했다는 사실은 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그들이 했던 일들은 고작 그리스 작가들의 [작품]을 [해석-]번역하는 정도였고, 설령 라틴어로 뭔가를 저술했다 할지라도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낭독하는 수준에 머물렀다.”⁴⁰⁾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국어인 라틴어를 가르칠 문법 학교도 없었고, 라틴어 문법서를 지을 정도의 수준도 갖추지 못했다. 오랜 전쟁, 즉 포에니 전쟁을 치러야 했던 로마의 학술과 문화의 수준이 낮았고, 다시 말해서 라틴어로 된 저술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 로마의 학술은 빈약했다. 단적으로 로마인은 모국어인 라틴어에 대한 문법학마저도 그리스인에게서 배워야 했다. 수에토니우스에 따르면, “문법학을 로마에 처음으로, 내가 생각하기엔, 도입한 사람은 아리스타르쿠스의 학문적 맞수였던 크라테스 말로테스였다. 크라테스는 아탈로스 왕의 사절로 로마 원로원을 방문했는데, 이 시기는 제2차 포에니 전쟁이 끝나고 제3차 포에니 전쟁이 막 시작하는 그 사이였는데, 그러니까 [시인] 에니우스가 임종했던 바로 그 즈음에 [로마에 온 셈이다]. 그는 [로마 근교의] 팔라티움 지역의 하수구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 때 그만 정강이가 부러졌다고 한다. 그는 사절 기간과 동시에 부러진 다리가 다시 이어지는 동안 내내 많은 청중을 대상으로 강연을 지속적으로 했고 성실하게 강의에 임했는데, 이것이 우리 로마인이 모방하게 되는 모범 선례가 되었다.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모방 단계에 머물렀다.”⁴¹⁾

○ 로마 교육은 인문학을 통해서 실행되었다. 로마 인문학은 그리스의 자유교양교육을 수용하고 모방하였다. 여기에는 로마인의 개방성이 한몫 거들었다. 라틴어로 학술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그리스 학술의 수용과 모방을 통해서 로마의 학술과 교육을 정비하기 시작한 학자는 바로였다. 그는 포세도니우스의 자유교양학문의 체계를 받아들여 라틴어로 3학 4과의 초기 모델이

40) 『로마의 문법학자들』 제1장.

41) 『로마의 문법학자들』 제3장.

라 할 수 있는 저술을 남겼다. 그는 로마의 역사학, 정치, 군사학, 철학, 법학, 종교학, 지리학, 문학 일반을 두루 관장했고, 이에 대한 저술을 남긴 학자로 『학문 9권(Disciplinarum IX libri)』의 저서도 저술했다. 이 저서에는 문법학, 변증론, 수사학, 기하학, 산학(算學), 천문학, 음악, 의학, 건축학이 포함되었다. 바로의 학문 분류는 아우구스티누스, 카펠라, 카시도루스, 이시도루스, 알키누스를 통해서 중세의 3학 4과 체제의 자유교양학문 전통으로 변용, 수용되어 전해진다. 이 전통은 물론 약간의 변용과 변형은 있지만 현대 대학의 교양교육으로 이어진다.

○ 로마의 문명은 그리스문명의 번역 문명이다.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Horatius, 56-8년 BCE)는 이를 “정복당한 그리스가 사나운 정복자 [로마]를 사로잡았고 야만스런 라티움에 학문을 가져다 주었다”⁴²⁾라고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다. 이 말은 로마가 힘으로 그리스를 정복했지만 반대로 그리스의 학문과 문화에 의해서 지배당했던 로마의 현실을 언급할 때 늘 언급되는 구절이다. 사실 로마의 교육을 담당한 문법학자들은 그 대부분이 희랍 출신 노예였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 노예를 선생으로 모신다는 것은 오늘날 시각에서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는 로마인들은 희랍 출신 노예를 자신과 자식들의 선생으로 맞아들였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로마는 전통적으로 상무 전통이 강한 나라였다. 그래서 로마는 인문 교양교육 전통이 원래 없었다. 따라서 인문 교육을 경험한 자도 드물었고, 교육을 전담할 사람도 없었다. 둘째, 라틴어의 가난함이다. 모국어인 라틴어로 된 텍스트로 학생들을 교육시키고자 해도 읽힐 만한 책이 없었다. 희랍어 책들이 교재로 선택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로마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인문 교양이 척박했던 로마에 그리스의 문화와 사상이 수용되는 과정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 즉 라틴어의 가난함이 극복되는 과정과 인문 교양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던 로마인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해명함에 있어서 본보기가 되는 사례이다. 한 공동체가 성장, 발전함에 있어서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유지, 존속함에 있어서, 인문교양교육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강력하게 웅변하는 본보기 로마문명이고 로마 역사이다.

□ 로마의 인문진흥을 위한 후원

○ 로마 인문학의 대표적인 후원자는 마이케나스(Maecenas)다. 그는 르네상스시대의 메디치 가문이 인문학진흥의 모범으로 삼았던 정치가였다. 마이케나스는 아우구스투스의 정치적 동지로도 유명하지만, 그가 더 유명한 것은 그가 바로 베르길리우스, 바루스, 호라티우스의 절대적 후원자라는 점 때문이었다. 로마의 문학과 사상이 꽃 피울 수 있었던 것도 그 배경에는 마

42) 『서간문』 2.1.156-157행.

이케나스와 같은 경제적 후원자들이 있었기 가능했다 하겠다. 마이케나스는 아우구스투스의 제정(帝政)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이를 위한 이데올로기 작업을 시인과 문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했던 사람이었다. 이와 같은 후원의 배경에서 탄생한 작가들이 호라티우스이고 베르길리우스이다. 『아이네이스』 같은 작품은 전형적인 로마의 서사시이다. 이렇게 마이케나스가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공화정으로의 회복을 주장하는 연설가보다는 시인들을 후원하게 된 배경은 로마의 평화(Pax Romana)를 위해서 아우구스투스의 황제 통치가 하늘의 뜻이라고 홍보하고 설득하기 위함 때문이었다.

○ 앳티쿠스(Atticus)는 키케로의 후원자이자 친구로서 그리스 문화와 사상을 사랑하고 로마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재력가였다. 앳티쿠스라는 이름도 그가 아테네를 사랑했고 생애 대부분의 시간을 그리스의 앳티카 지방에서 보냈다는 데에서 유래한다. 에피쿠로스 사상을 추종했던 그는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키케로와는 달리 은둔과 여유의 삶을, 곧 에피쿠루스 학파의 정신에 따라 “숨어사는 삶(lathe biosas)”을 즐겼다. 친구 키케로가 네 번이나 경제적 파산을 겪었을 때에도, 그가 정치 활동은 물론 학문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앳티쿠스의 절대적 후원 덕분이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인문학의 대표적인 후원자 문제를 잠시 언급하고자 한다. 대개 우리는 인문학의 대표적인 후원자로 르네상스 시대의 메디치 가문을 든다. 반면에 앳티쿠스는 학문이나 문학이 그 자체의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에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야말로 학문 자체의 목적에 봉사하고 인문학의 본령인 자유로운 정신을 기르고 가꾸는 일을 중시했다. 이는 그가 심지어 에피로타(Epirota)와 같은 그리스 출신의 노예들까지도 후원했다는 점, 다시 말해서 키케로와 같은 중요 인사에게만 후원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소장학자들까지도 적극적으로 신분과 출신에 관계없이 후원했다는 사실에서 분명하게 확인된다. 이렇게 앳티쿠스의 후원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네포스이다. 네포스는 하나의 문학 장르로서 전기 장르를 탄생시킴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작가이다. 네포스는 자신의 저서 『유명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를 앳티쿠스에게 헌정했다. 국가의 시각이나 종족의 관점에서 해방되어 개인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기 작가 네포스의 입장을 앳티쿠스는 끼꺼이 지지하고 흔쾌히 지원해주었다. 바로 이런 후원을 바탕으로 탄생한 문학 장르가 전기 텍스트이다. 적어도 전기 텍스트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시선 혹은 공동체의 관점에서 해방될 때 가능한데, 특히 하나의 문학 장르로서 전기 텍스트가 탄생하는 시점이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런 일은 네포스가 혼자서 감당하기에 어려운 일이었고, 아마도 경제적 지원자로서 그리고 정신적 지지자로서 앳티쿠스와 같은 인문학 후원자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 로마 인문학의 성장과 성숙

○ 로마 인문학이 만든 성과 가운데서 가장 오래가고, 가장 지속적인 특징은 라틴어가 학술어이자 문명어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번역 덕분이다. 라틴어가 가난했기 때문이다. 라틴어가 가난했던 시절에 로마 학자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그리스 작가를 모방하고 번역하는 것이었다. 훈민정음 창제 직후의 한글 작품 대부분이 『월인석보(月印釋譜)』, 『두시언해(杜詩諺解)』 등의 언해라는 점에서 우리 한글의 초기 상황과 유사하다. 라틴어가 가난함은 다음의 사실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당시 로마의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로마인들이 아니었다. 로마의 학교를 장악했던 교사들 대부분이 그리스 출신 노예들이었다. 그들이 로마의 학교를 장악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한마디로 라틴어 작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로마인들이 그토록 시기하고 기만의 대명사로 여겼던, 그토록 혐오했던 영웅 오디세우스의 귀향 이야기가 라틴어로 된 첫 번째 문학 작품이었고, 이 작품이 로마의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라틴어가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아닌 게 아니라 라틴어의 가난함은 그리스어와 비교해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라틴어로 접할 수 없었던 세계를 그리스어를 통해서 배우고 알 수밖에 없었다. 이 앓은 무엇보다도 학문적 경이로움으로 로마인들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이 앓은 앓의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았다. 그리스어를 통해서 알게 된 새로운 앓은 로마라는 국제-도시에서 벌어지는 온갖 종류의 사건-사고를 해결할 때에 요청되는 인문학적 사유 방식과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제국과 대도시의 경험이 없었던 로마인들에게 이러한 사태를 이미 경험한 그리스인들의 저술은 인간과 삶과 대해서 사유하는 방식을 알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리스어는 학문적 관점에서뿐만이 아니라 생활의 유용함과 내용의 즐거움에 있어서도 라틴어를 압도했다.

○ 이러한 이유에서 대부분의 로마 지식인들의 그리스어 승배는 대단했다. 이는 대표적으로, 카이사르가 브루투스에게 칼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리스어로 “아들아, 너마저도!(kai su, teknon!)”⁴³⁾라고 했다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라틴어의 가난함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현상이었다. 이런 사정을 자연학자이자 시인인 루크레티우스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나도 결코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리스인들이 발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라틴어 시문(詩文)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새겨내는 일이 어려운 일임을 말이다. 특히 처음 접하게 되는 사태와 말의 가난함 때문에, 자주 나는 단어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시작(詩作)을] 수행해야만 하기에 말이다.”⁴⁴⁾ 라틴어의 가난함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자연학자에게서만 나타나는

43) 수에토니우스, 『황제열전』 「아우구스투스 편」, 제82장.

현상은 아니었다. 이는 말을 도구로 삼고, 말로 먹고 살며, 말에 삶을 신고자 하는 집단인 시인들에게서도 발견된다. 대표적으로 시인 호라티우스의 말이다, “어쩔 수 없이 새롭게 말을 만들어 전혀 알려진 바가 없는 것들을 표현해야 한다면, (중략)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의미를 살려낼 수 있도록 말을 새롭게 만드는 일은 시인들의 특권이고, 이는 [항상] 허용되었고 언제나 허용될 것이요. 마치 곤두박질치며 기울어가는 한 해를 따라 숲을 채웠던 잎들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처음에 있던 단어들도 그렇게 시들어 사라지고, 젊음의 힘이 그러하듯이, 새로운 단어들이 태어나서 자라 번성하고 만발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요.”⁴⁵⁾ 호라티우스는, 자고 나면 새롭게 다가오는 세계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늘 새롭게, 항상 다르게 나타나는 감정의 양상, 즉 서정(敍情)의 세계를 라틴어로 규정하고 표현해본 적이 없었다. 결국 호라티우스는 자기만의 고유한 느낌을 표현하는 데도 그리스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역시 라틴어의 가난함 때문에 생겨난 문제이다.

○ 사실 언어와 언어 사이에 있는 경쟁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유와 사유 사이에 있는 경쟁력에 있어서도 라틴어는 그리스어를 당해내지 못했다. 한 치를 더 깊게 파질 수 있는 사유와 한 길을 더 내다볼 수 있는 관조의 힘 때문에 로마인들은 그리스인들의 사유와 반성의 결과를 직접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호메로스 이후 수많은 시인과 철학자, 역사가들이 세워놓은 그리스어에 축적된 삶에 대한 반성과 세계에 대한 시각과 인간에 대한 이해는 어느 한 순간, 어느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로마인들은 번역을 통해서 그리스 고전을 직접 수용한다. 로마가 힘으로 그리스를 정복했지만 역으로 그리스의 학문과 문화에 의해서 지배당했던 로마의 현실을 언급할 때 늘 인용되는 구절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의든 타의든 고전의 번역이란 점에서 아마도 최초의 르네상스는 로마에서 일어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로마 인문학은 라틴어의 성장을 통해서 더욱 성숙하게 된다. 하지만 라틴어의 성장은 라틴어의 혼탁 현상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라는 성장통을 앓아야 했다. 한편으로 제국의 언어로 다른 한편으로 보편문명의 언어로 작동하고 기능하기 위해서는 라틴어는 그 스스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을 겪어야 했는데, 퀸틸리아누스의 보고는 그 과정을 잘 보여준다. “아울러 말을 하는 사람이나 글을 쓰는 사람들은 다음의 사항을 관찰해야 할 것이다. 말[의 사용은] 규칙(ratio)과 전통과 권위와 습관에 기초해서 통용된다. 특히 유추와 때때로 에티몰로기아(etymologia, 말의 제보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실제 사이의 관계, 의미를 따져보는 일)는 규칙성에 기

44) 『사물의 본성에 대하여』 1권 136-139행.

45) 『시학』 46-59행.

초해 [새로운 표현의 사용을] 보장한다. 어떤 권위들과 소위 종교는 옛날 표현의 사용을 용인해 준다. 권위에 의지해서 하는 표현은 연설가나 역사가들에게서 취해야 한다. (중략) 최고의 연설가로 칭송 받는 사람들이 내린 판단을 권위로 내세울 수 있는 표현은, 그것이 비록 규칙을 어길 지라도 오히려 인정받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그들이 실수까지도 그들을 최고의 연설가로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하기의 가장 강력한 스승은 실은 관용이다. 공동체에서 통용되는 표현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마치 화폐처럼 말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분명한 주의를 요구한다.”⁴⁶⁾ 인용은 라틴어가 마침내 그리스의 언어와 이론을 빌리지 않고서도 자기 스스로 자정 능력과 창조 능력을 갖춘 성숙한 언어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라틴어는 학술어로 성숙할 수 있었고 문명어로 성장할 수 있었다.

○ 로마 인문학이 그리스의 인문학의 모방을 통해서 성장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중요한 점은 단순 모방에 그친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경쟁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경쟁의 전통은 번역의 초기 역사에서부터 발견되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라틴어로 번역한 『오뒷세이아』가 모방 차원에서 진행된 단순한 번역이 아니었다. 이미 이 번역에서부터 소위 ‘경쟁’의 전통이 발견된다. 이와 관련해서 『오뒷세이아』 번역은 당시 로마의 상류층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친 헬레니즘에 대한 반작용으로 탄생한 작품이었다. 이 번역이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문화가 그리스의 문화에 흡수, 동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 걱정에서 시도되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마케도니아이다. 그들은 아테네는 물론 세계를 제패했다. 그러나 그들은 문화적으로는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문화에 흡수, 동화되어 버렸고 중국에는 그들의 고유한 언어마저 잃어버렸다. 그들 자신의 문학과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함에 있어서도 그들은 그리스어를 차용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는 마케도니아의 정체성 상실로 이어졌다. 하지만 『오뒷세이아』 번역은 그리스의 무사(Musa) 여신이 아닌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노래를 관장하는 카메나 여신에게 노래를 간청하고 있고, 『오뒷세이아』 번역을 함에 있어서 그리스의 육각음보가 아닌 사투르니아 음보를 사용했다. 따라서 『오뒷세이아』 번역은 단순한 옮김이 아니라, 로마 문학이 소위 그리스 문학을 수용할 때부터 작동했던 창조적 경쟁의 한 사례이다. 이런 경쟁 정신이 더욱이 베르길리우스와 같은 후대 시인들이 라틴어로 서사시를 지을 수 있었다.

○ 로마 인문학의 성숙은, 하지만 단기간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비록 로마인들이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처음에는 로마는 그리스를 모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의 모방 단계를 벗어나자 로마인들은 서서히 그리스인들과 경쟁하려는 자의식을 본격적으로

46) 『수사학교육』 1권 6장.

표현하기 시작한다. 우화 작가인 파이드루스(Phaedrus, 서기 18-55년)가 작은 사례이다. “나(파이드루스)는 그(아이소포스)가 남긴 작은 오솔길을 큰 길로 만들었다. 이를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⁴⁷⁾ “오솔길”은 원래 아이소포스(이솝)가 노예였기에 직설적으로 말하지 못한 것을 뜻하고, “큰 길”은 파이드루스가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과 장치를 새로이 개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은 아이소포스의 이야기를 수용하면서 단순 모방이 아니라 창조적 경쟁을 거쳐 이미 극복했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극복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로마의 경쟁 노력은 계속되었고 그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리스 작품 대신에 라틴 작품이 학교의 교재로 사용되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에피로타는 베르길리우스와 다른 신세대 시인들의 작품을 강의의 대상으로 삼은 최초의 교사였다.”⁴⁸⁾ 정신적으로 정복당한 로마가 이제 그리스 정신의 모방 단계를 지나 본격적으로 경쟁하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과정을 확인해 주는 사례라 하겠다. 로마에서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는 시기는 대략 1세기 초 무렵이다. 그런데 1세기 말 정도가 되면 로마인 가운데서 심지어 그리스를 극복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아예 대놓고 로마가 그리스보다 더 뛰어나다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나온다. 바로 퀸틸리아누스다. “내(퀸틸리아누스)가 보기에, 키케로는 그리스인들을 모방하는 일(ad imitationem)에 자신의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연설로 데모스테네스의 역동하는 힘과 플라톤의 깊이 있는 사유와 이소크라테스의 유쾌한 즐거움을 오롯이 새겨내었다.”⁴⁹⁾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단적으로 그리스인에게 호메로스가 있다면, 우리 로마인에게는 베르길리우스가 있다.”⁵⁰⁾라는 주장은 로마 학문의 경쟁력이 높아졌고, 라틴어가 이제 가난하지 않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 로마 인문학의 성장과 성숙에 동반된 원리는 “모방과 경쟁(imitatio et aemulatio)”이라는 원리였다. 모방이야말로 로마 인문학에 경쟁력을 제공하는 동력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방은 글 읽기이다. 글을 읽는다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베끼고 모방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경쟁”은 말하기이고 글쓰기다.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행위의 고유한 특징 가운데에 하나가 같은 것을 반복하길 싫어한다는 점이다.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지, 말하는 이에게 고유하고 그 자신만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표현을 선택하는 것이 자연적인 일이다. 퀸틸리아누스는 모방과 경쟁의 원리를 교육 과정에도 도입하는데, 이 과정에

47) 『우화』 제3권 서문 38장.

48) 『로마의 문법학자들』 제18장.

49) 『수사학 교육』, 10권 1장 108절.

50) 『수사학 교육』, 10권 1장 85절.

서 등장한 것이 “고전” 교육이다. 그의 말이다. “40. 내 생각의 핵심을 솔직하게 드러내겠다. 세월을 견뎌낸 이들 중에서 아주 소수만이 시간의 검증を 견디었다고, 아니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본다. 판단력을 갖춘 이들에게 어떤 유익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다. 키케로 또한 실로 저 오래된 작가들로부터, 재능은 있으나 기술은 결여한 자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으니 말이다. 41. 나는 오늘날의 작가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즉 저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뭔가 믿을 구석이 있다면, 자신의 작품이 후대의 기억에 살아남길 바라지 않을 유의 사람들이 말이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장 작품의 첫머리에서 드러날 것이고, 그 사람은 우리가 그를 검증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기 전에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⁵¹⁾ 퀸틸리아누스에 따르면 고전이란, 첫째, ‘시간의 검증’을 견디어 낸 것으로 당대의 취향을 넘어선 것이다. 둘째, ‘유익함’을 지닌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 설령 소위 ‘취향’ 내지 ‘선호도’에 있어서 나름 ‘독자적인 판단’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어떤 유용함을 지닌 것이기에 고전이다. 셋째는 고전은 반드시 옛날 것이어야 함을 고집하지는 않는다. 넷째, 고전은 ‘탁월함’을 지닌 책으로 최고의 시인, 연설가, 역사가, 철학자의 말과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어야 한다. 물론 퀸틸리아누스도, 가능한 한 많은 책들을 읽는 것이 좋다고 권한다. 마지막으로, 표현에 유용한 것을 제공하는 책이 고전이다. 이를 바탕으로 퀸틸리아누스는, 예컨대 문학의 경우에 그리스 서사시인의 경우, 호메로스, 헤시오도스, 안티마코스, 파니아시스, 아폴로니우스, 아라토스, 테오크리토스, 페이산드로스, 니칸드로스, 에우포리온을, 로마 서사시인의 경우, 베르길리우스, 마케르, 루크레티우스, 아티키누스, 바로, 엔니우스, 오비디우스, 코르넬리우스 세베루스, 발레리우스, 플라쿠스, 바투스, 라비리우스, 페도, 루카누스를 읽어야 할 작가로 제시한다. 퀸틸리아누스가 제시한 이 작가들의 작품들은 라틴어가 문명어가 되었음을 보증하는 증거들이다.

○ 로마 인문학의 경쟁력은 로마인이 선정한 고전의 목록에서 확인된다. 그런데 고전 선정의 기준과 관련해서 중요한 점은 퀸틸리아누스가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기르는 데에 무게 중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 예컨대 좋은 시인이 되기 위해 읽어야 할 무엇이 고전이 아니라는 점, 탁월한 철학자가 되기 위해 읽어야 할 무엇이 고전이 아니라는 점, 유익하고 감동적인 하지만 전문적인 역사가가 되기 위해 모방 대상으로 삼아야 할 무엇이 아니라, 퀸틸리아누스에게 고전이란 좋은 연설가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즉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양은 물론 사회와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데 요청되는 소양을 길러내는 것이었다. 이는 퀸틸리아누스의 ‘좋은 연설가’가 기본적으로

51) 『수사학 교육』, 10권 1장.

키케로가 제안한 ‘이상적 연설가’와 다르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먼저 키케로는 수사학보다는 철학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였지만, 퀸틸리우스는 수사학에 방점을 찍으며, 공동체의 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일체의 공적 활동과 의무를 방기하는 당대 철학자들의 생활 태도를 그 이유로 제시한다. 퀸틸리아누스는 연설가가 철학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선언한다. 파벌을 지어 그 안에서 말장난이나 하면서 현자인 척하는 철학자가 현인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리고 공적사회에 나와 공적 활동을 하는 로마 시민이 바로 현인이라고 주장한다.

■ 다음으로 키케로의 이상적 연설가론은 특히 미학적 면을 강조한다. 이에 비해 퀸틸리아누스는 미학적 측면보다는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키케로의 이상적 연설가는 설득과 관련하여 연설가의 기능적 효용성을 극대화한 인물이다. 비록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연설가라 할지라도 말이다. 하지만 퀸틸리아누스는 이 사람을 이상적 연설가로 취급하지 않는다. 퀸틸리아누스에게는 어떤 이가 이상적 연설가상의 기준에 맞는지 않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척도는 도덕성(virtus)이기 때문이다. 이 도덕성은 두 가지를 강조한다. 하나는 로마적 덕목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성 혹은 사람 됨됨이다. 인간성 혹은 인류의 강조, 즉 좋은 사람이 훌륭한 연설가이지, 능력 있는 자가 좋은 연설가는 아니라는 게 퀸틸리아누스의 입장이다.

■ 그리고 키케로와는 대조적으로 퀸틸리아누스는 학교 교육을 중시한다. 퀸틸리아누스는 예를 들어 수사학의 체계적 교육을 통해 연설가가 이상적 연설가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하나는 모방(imitatio)이고, 다른 하나는 경쟁(aemulatio)이다. 모방 원리에 따라 무엇을 읽어야 할지가 결정되는데, 이를 상세히 다룬 것이 『수사학 교육(institutiones oratoriae)』 10권이다. 이는 퀸틸리아누스의 교육자적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이다.

■ 마지막으로 키케로의 이상적 연설가는 사실 이상적 정치가론이다. 이에 반해 시민 교양 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이 퀸틸리아누스의 이상적 연설가론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연설가에게 정치 활동이 핵심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퀸틸리아누스는 이 부분을 크게 강조하지 않는다. 대신에 건전 시민의 양성에 무게를 둔다. 이는 먼저 공화정에서 일인정(一人政)으로 정치체제의 변화에 이어 이 변화에 따라 연설가들이 연설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했다는 데에서 해명된다. 물론 『수사학 교육』에 연설의 타락을 비판하는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퀸틸리아누스는 사회 정치적 맥락을 크게 강조하지 않는다. 아마도 황제의 후원을 받고 있는 퀸틸리아누스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 덕분에 퀸틸리아누스의 『수사학 교육』은 중세의 고등 교육의 중요 교재로 사용되었다. 중세 고등교육의 ‘거울(specula)’이었다. 퀸틸리

아누스의 『수사학 교육』은 1470년 로마에서 처음으로 책(editio princeps)으로 출판된다. 이어 수많은 문헌학자들에 의해서 편집되고 번역되며 이에 대한 주석서가 저술되고, 아울러 수많은 작가들과 사상가들과 정치가들의 입과 손을 통해서 인용되고 참조되고 교육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사학 교육』은, 아니 퀸틸리아누스는 다시 서구 근세와 현대 역사에, 특히 수사학과 문헌학 그리고 교육의 현장에 다시 부활한다.

□ 로마의 인문학과 교육

○ 로마인에게 인문학은 처음부터 무용지물이었다. 인문 교양보다는 상무(尙武) 정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무사(武士)들의 나라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 프로그램도 원래는 무사 교육 중심의 체육과 교련이 중심이었다. 이러한 전통은 그리스의 학교 교육 프로그램인 ‘김나지움(Gymnasium)’ 전통과도 맥을 같이 하는 전통이고, 라틴어의 학교 명칭인 ‘루두스(ludus)’도 검투사 훈련학교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일 것이다. 오늘날 독일의 중등학교를 지칭하는 표현인 ‘Gymnasium’이라는 명칭이 여기에서 유래한다. 어찌되었든 항시적인 전쟁의 위협에 처해있는 나라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체육과 군사 훈련 프로그램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고, 또한 사회에서 출세함에 있어서도 무예가 출중하고 군사에 능한 사람이 훨씬 유리한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 전투와 전쟁으로 점철된 로마의 역사에서 칼이 아닌 펜을 들고 학교에 쪼그린 채 앉아서 알파벳을 베끼는 풍경은 로마인들에게는 상당히 낯설고 못마땅한 일이었음에 틀림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시각과 견해도 불구하고, 로마인들이 이제 검투사의 훈련이 아니라 문법의 교육을 받으려 학교로 가기를 서두르고 있음을 수에토니우스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한 마디로 전쟁이 가고 평화가 찾아 온 시대에서 사회적으로 출세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하기 때문이다. 칼을 든 장군이 아니라 지식과 지혜로 가득 찬 머리와 혀를 칼처럼 휘두를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말을 잘 하려면 머리와 가슴 속에 들어 있는 것이 있어야 하고, 따라서 머리와 가슴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글을 읽게 하게 위해서 로마인들은 학교로 자신의 자식들을 서둘러 보냈고 있는 재산을 다 투자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와중에서 가장 흥성했던 곳은 물론 검투사들의 무희 경기장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학원들이었고 그리스 문법과 문학을 강의하는 학원 강사들이었다. 또한 문법 학교가 이제 로마가 아닌 이탈리아로, 이미 서기 전 1세기에 알프스 이남의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 로마의 초등교육은 프로김나스마타(Progymnasmata)라 불렸고, 중등교육은 김나스마타(Gymnsamata)라 불렸다.

■ 로마 교육에서 소위 초등 교육을 담당했던 이들은 문법학자들이었고, 중등교육을 담당했던 이들은 수사학자들이었다. 이들 사이에는 소위 학교 교육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교육 시장의 경쟁 현상과 관련해서는 사실, 아테네에 민주주의의 발전과 직결되어 있다. 아테네에서도 민주주의의 영향이 교육 시장에도 근본적 변화를 주기 시작했는데, 이 변화를 주도한 곳이 이소크라테스와 같은 수사학자들이 열었던 수사학 학교였다. 소위 수사학 학교의 교육은 오늘날의 중등교육에 해당한다.

■ 하지만 수사학 학교는 사회적으로 여러 부작용을 야기했고, 이를 비판하기 위해 세워진 교육 기관이 바로 플라톤의 아카데미이다. 이 과정이 오늘날 고등교육에, 그러니까 대학 교육에 해당한다. 초창기 시절의 플라톤의 아카데미는 이소크라테스와 같은 수사학 학교에 맞수가 되지 못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플라톤의 아카데미 전통이 이소크라테스의 전통에 승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소크라테스 전통이 플라톤 전통에 밀려 사라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소크라테스의 교육 전통은 중등교육으로 편제되었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공적 활동 일반을 위한 소양 교육으로 자리 잡는다. 그 결과 그리스와 로마의 시민들은 공적 행위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행위인 연설 교육을 받는다. 이를 잘 보여주는 흔적이 로마의 수사학 학교들이다.

■ 요컨대 로마 공화정 말기에 오면 교육 과정의 풍경은 이렇다. 문법학교에서 문법과 문학과 역사를 배우고 나면, 중등교육 기관이 수사학 학교로 진학해서 연설 교육을 받는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여기에서 교육을 멈춘다. 그런데 좀 여유가 더 있는 시민들은 수사학 학교를 마치고 나서, 플라톤의 아카데미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운 뤼케이움으로 가서 보다 고급 사상과 학문들을 연마한다. 이런 교육 과정을 분화를 통해서 이소크라테스의 학교 전통과 대표적으로 플라톤의 아카데미의 교육 전통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양립할 수 있게 된다.

○ 로마의 문법 학교에서 교사가 받는 강의료는 일 년에 10만 세스테르티우스였다. 이 강의료는, 로마 공화정 말기의 거부(巨富)였던 크랏수스가 소유했던 부동산의 시세가 200만 세스테르티우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어마어마한 거액이다. 그러니까 학생이 20명만 모이면 당시 로마에서 최대 부호였던 크랏수스의 부동산을 모두 구입할 수 있을 정도였다. 여기에서 학교 교육이 이제 단순한 교육 활동이 아닌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경제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 문제는 그리스에서 잡혀온 노예들이 진심으로 학문적 열정과 인간적 덕성 때문에 로마인의 교육을 위해 노력하였겠는가이다. 로마에서 학교 혹은 학원이 성행하게 된 배경에는 경제적 이득이 더 큰 이유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이 처음에는 그리스 출신 노예들에게

자유민이 되는 길을 제공했다면, 이제 교육은 그리스의 노예들에게 부와 명예를 제공하는 기회의 장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강의 방식 개선에 대한 언급이다. 개선의 핵심은 학교 강의에 경쟁(aemulatio) 방식의 도입이다. 아마도 이러한 시도는 나중에 로마 학급의 구성 편제 개편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로마의 학교에서 원래 한 학급의 구성은 나이의 구분을 따랐다. 그런데 소위 능력에 따른 우열반이 나중에 도입되었는데, 아마도 이러한 학급 구성 방식의 기원은 플라쿠스(Flaccus)라는 문법교사의 경쟁 방식에서 연원한 것이다. ‘어느 학교 혹은 어느 학원이 좋다’라는 평에 따라서 학교와 학원의 성패가 달렸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학교와 학원은 각기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 경쟁 관계에 놓였을 것이고, 이를 위해서 보다 좋은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교육이 이제 로마에서는 하나의 중요한 사업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만약 교육이 로마에서 돈벌이가 되는, 아니 사업적으로 소위 ‘메리트가 있는 비즈니스’였다면 왜 로마인들이 그리스인들처럼 교육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는가에 있을 것이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로마인이 교육에 참여하기에는 아직 그들의 학문 수준이 낮아서 일 것이다. 일단 책이 있어야 하는데 책들이 모두 그리스어로 쓰여 있었다. 다른 가능성은 당대 로마 지식인층 혹은 지배층의 교육 참여에 대한 인식이 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은 노예들이나 하는 짓 정도로 낮추어 보는 시선이 그들로 하여금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막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키케로의 『연설가에 대하여』에서 등장하는 주요 대화자들이 보여주는 태도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수사학에 대해서 뭔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꺼려하는데, 수사학 따위의 말재주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자신들의 품위와 수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로마 사회의 지식인층과 지배층에서는 이러한 견해가 지배적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대화편의 주요 등장인물들은 한결같이 수사학과 같은 기초 방법과 지력(智力)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조심스러워 한다.

■ 그럼에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교육에 대한 로마인들의 인식 변화일 것이다. 10만 세스테르티우스라는 거액을 주고 자식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배경에는 이제 지식과 학문, 그러니까 얹이 정치적 출세와 사회적 성공과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회적 변화와 그리고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술한 외전과 내란의 와중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은 무예와 병법에 뛰어난 장군들이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이후, 원로원과 민회를 중심으로 공동의 일과 공동의 재산이 공동의 참여를 통해서 처리되고 운용되는 공화정과 소위 ‘민주주의’의 원리와 방식에 입각해서 로마사회가 작동할 때에는 사회적으로

로 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주로 설득력을 갖춘 말 잘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사회 변화가 아마도 로마인들의 가슴에 교육 열풍 아니 교육 광풍을 불어넣었을 것이다. 말을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들어 있는 게 있어야 입으로 나오는 것이 있기에”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그들을 설득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기초해서 로마에서 교육은 흥행에 흥행을 거듭했다. 결론적으로 강의료 10만 세스테르티우스라는 거액은 로마 역사에서 상징적인 사건인데, 전통적으로 상무(尙武) 정신과 실질을 중시하는 로마의 인식과 가치가 그리스적 자유 정신과 인문 정신에 의해서 변화하고 있음을, 그리니까 정복당한 그리스인이 정복자 로마인의 정신세계를 역으로 정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로마 교육의 특징은 오늘날 중등 교육에 해당하는 수사학과 고등교육에 해당하는 철학의 표지 아래에 자리한 학문과 기술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포세도니우스(135-51년 BCE)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 세네카에 따르면 포세도니우스는 학술을 크게 넷으로 분류한다. “[21] 포세도니우스에 따르면, 기술은 네 종류로 분류된다. 상스럽고 품위 없는 것들과 재미를 추구하는 것들과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들과 자유민들에게 어울리는 것들로 말이다. 상스러운 것들은 기술자들에게 속한다. 이것들은 손으로 행하는 것들로 생존에 필요한 기술들이다. 여기에는 어떤 몇 부림도 어떤 명예 자랑도 없다. [22] 재미를 추구하는 것들은 귀와 눈의 즐거움을 노리는 것들이다. 여기에는 아마도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기계 장치와 소리 없이 마루를 공중으로 일으켜 세우는 무대 장치와 여타의 다양한 예기치 않는 방식으로 즐거움을 주는 장치들을 발명한 기술자들이 속한다. 연결된 것들은 풀리거나 떨어져 있던 것들이 자동적으로 합쳐지거나 드러나 있던 것들이 천천히 자신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방식을 통해서 말이다. 눈은 이것들에게로 끌리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 이들은 이 모든 것들에 감탄하기 때문이다. [23]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것들은 자유로운 것들과 유사한 뭔가를 지니고 있는데, 이 기술들을 그리스 인들은 박식한 것들이라고 부르는 반면에 우리는 자유로운 것들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오로지 자유교양 학문들이 자유로운 것들이고 덕을 돌보는 것들이다.”⁵²⁾ 포세도니우스가 로마에서 머문 기간은 서기전 87년-86년이다. 자유교양학문의 개념과 체계가 처음으로 혹은 본격적으로 로마에 소개된 것은 대략적으로 이 시기일 것이다.

■ 이와 같은 실용 교육에 대한 비판은 철학자들에 의해서 강력하게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철학자 세네카는 자유교양교육을 이렇게 비판한다. “[1] 자유교양학문에 대해서 내 생각이 무엇인지를 자네는 알고 싶어 하네. 나는 결코 주저하지 않네. 나는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좋

52) 세네카, 『서한』 88.

은 것들에 포함시키지 않네.”⁵³⁾ 세네카의 시선은 차가운 정도를 넘어 경멸에 가까운데, 자유 교양학문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돈만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질타한다. 그들은 좋은 사람을 기르는가에 대해서 묻는 것 자체도 시도하지 않는다고 세네카는 비난하면서 문법 교사를 한 사례로 제시한다. “[7] 자네 관심은 오뒷세우스가 헤매고 다닌 곳이 어디인지 따위에 있네. 우리가 언제나 헤매지 않도록 만드는 일은 안중에도 없네. 그렇게 한가하지 않네. 오뒷세우스가 방황한 곳이 이탈리아와 시칠리아 사이 어느 곳인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 너머의 어느 곳인지를 따지고 앉아 있을 시간이 없기에 말일세(…).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것은 적이 아니네, 외도일세. 여기에서 사나운 괴물이 나온다네. (…). 여기에서 귀를 흘리는 음흉스런 알랑 거림이, 여기에서 배들이 난파당하고 온갖 고난이 생긴다네. 이런 것을 나에게 가르치게나. 어떻게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아내를, 어떻게 아버지를, 배가 난파되었을지라도 어떻게 훌륭한 것들로 항해해갈 수 있는지를 말일세.”⁵⁴⁾ 인용은 제정 초기 로마의 문법 교사가 『오뒷세이아』를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풍자하는 한 대목이다. 모두 삶에 전혀 중요하지 않는 물음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한다. 오뒷세우스가 표류한 지역이 실제로 시칠리아인지를 따지는 일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우리가 실제로 사는 현실이 오뒷세우스가 겪었던 유혹과 재난보다 더 매혹적이고 더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가득 찬 곳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실의 세이렌이 우리의 귀를 더 강력하게 지배하고, 현실의 키르케가 더욱 세게 우리의 눈동자를 흔들고 있기에. 사정이 이러함에도, 문법 교사는 학생에게 정답 던져야 물음, 즉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묻지도 가르치지도 않는다고 한다. 세네카는 소위 자유교양교육에 속하는 개별 학문들은 몸만 기름지게 만들 뿐이라고 일갈한다. 그러는 사이에 영혼은 메말라 비틀어지기에. 이렇게 세네카가 자유교양교육에게 보인 태도는 가혹함을 넘어 잔혹하다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자유교양교육이 짧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옳음과 그름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 로마의 교육은 사교육이 주도했다. 이는 많은 문제점을 양산했다. 로마에서 학교 교육을 담당한 교사들은 대부분이 그리스에서 붙잡혀 온 노예 출신 학자들이다. 그들은 엄격하고 체계적인 문법 교육을 강조하였다. 특히 그리스어라는 외국어를 배워야 하는 교육 특성과 라틴어를 어긋나지 않게 말하고 쓰도록 엄격하게 가르쳤던 문법 교육의 특성 때문에 로마의 교육 방식은 기능적이면서 소위 전문 체계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교육 방식으로 진행된 로마의 교육은 엄밀하게 자유교양교육을 지향했던 그리스의 ‘paideia’ 교육 이념과

53) 세네카, 『서한』 88.

54) 세네카, 『서한』 88.

도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이러한 이념은 사실 돈과 생존을 위해서 교육에 종사하였던 그리스계 노예 출신 문법 교사들에게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 보니 노예 출신 문법 선생들은 한편으로 생존을 위해서 다른 한편으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학교의 소위 특성을 위해서 문법 교육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문법의 발전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대목이라 하겠으나 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대목이었다. 오늘날 한국의 사설 학원의 상황에 유사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자유 교양의 이념을 문법 교사들에게서 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결론적으로 키케로는 한편으로 기술적인 측면만이 부각된 로마의 학교 교육의 현실과 다른 한편으로 기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술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말인 ‘humanitas(인문학)’라는 개념을 만들어낸다. 그리스의 자유교양교육은 로마의 인문학 전통으로 전환된다. 물론 그리스의 ‘paideia’ 전통이 인간을 중심에 두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리스인들은 기본적으로 교과 과목 구성과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진리와 전문성을 강조했던 반면, 로마인들은 학문적 진리보다는 사람 사는 법을 더욱 강조했다. 이는 키케로의 교육 이념에서 확인된다. 그것은 ‘사람답게 사는 법(humaniter vivere)’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였다. 그의 최대 관심사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이고 ‘인간답게 사는 것과 그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학문의 주군(主君)으로서 진리(veritas)를 중시하지만, 키케로는 진리를 교육의 주군으로 놓지는 않는다. ‘인간됨(humanitas)’을 그 자리에 놓는다. 순수한 의미에서 인간이 중심에 서 있는 그리고 사람을 기르는 학문으로서의 인문학(humanitas)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이다.

○ 로마에서 인문학 무용론은 로마를 이끌어 갈 지도자의 양성과 리더십의 교육을 통해서 극복되었다.

■ 키케로는 말한다. “이 논의를 통해서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은 어떤 법정에서 같은 소리만 맴맴 대는 자도 아니고 목청만 돋우는 자도 아니고 돈만 챙기는 삼류 변호사가 아니네. 내가 진실로 갈구하는 이는 다음과 같은 이어야 한다네. 우선 그는 자연본성이 우리에게 부여한 위대한 능력이라 여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의 본래 주인은 신(神)으로 간주해야 하는 학문의 사제가 되어야 한다네. 물론 이 학문은 인간만의 고유한 물건이기에 우리 인간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신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흘러들어와 뿌리를 내린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네. 다음으로 그는 ‘연설가’라는 이름의 갑옷과 활(笏)을 방패삼아 자신을 무사히 지키면서 적들이 던지는 창과 화살 사이를 유유히 누빌 수 있는 자이어야만 한다네. 이어서 그는 말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사악한 자들의 기만과 범죄가 만천하에 공개되어 시민들의 증오의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하고 이를 통해서 그들을 단죄할 수 있

는 능력의 소유자일세. 또한 마찬가지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지성의 힘을 방패로 삼아서 무구한 사람을 재판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자이어야 한다네. 또한 그는 삶의 무기력에 빠져 흐느적거리는 인민들과 갈팡질팡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인민들을 제정신이 번쩍 들도록 만들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와 원래 갈 길로 되돌리는 한편, 간악한 무리들에게는 분노의 불길을 타오르게 할 줄 알며, 그러나 선량한 사람에게 타오른 분노는 부드럽게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의 소유자이네. 결론적으로 그는 삶에서 부딪히는 혹은 발생하는 사건 사고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디로 이끌고 가든지 간에, 그 마음을 격양시키고 싶으면 격양시키고, 부드럽게 가라앉히고 싶으면 가라앉힐 줄 아는 힘의 소유자이어야 하네.”⁵⁵⁾ 키케로가 강조했던 리더십의 특징은, “자네 무슨 말을 하는 건가? (···)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인륜(人倫)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일어나게 하고 가라앉히는 방법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상고(上古) 시대에 대해서, 국정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 심지어는 시민법에 대해서조차도 무시해도 되는 것들인가?”⁵⁶⁾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 키케로 리더십 교육의 특징은 그가 책임기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오롯이 드러난다. 이는 “[13] [배심원 여러분!] 이 학문의 탐구에 헌신했음이 진짜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렇다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혹 어떤 사람들이 책과 글자에 갇혀서 그것들로부터 모두에게 이로울 뿐만 아니라 알기도 쉽고 명백한 어떤 결실도 꺼낼 수 없다면, 그들은 부끄러워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배심원들이여, 내가 살아온 수십 년이 증인인데 말입니다. 나만의 정신적 여유를 즐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형사 소송이든 [우정을 위해 나서야 하는] 민사든 어떤 종류의 소송이든 기피한 적이 없고, 육체적인 달콤함을 좇아서 그런 적도 없고 심지어 늦잠 때문에 늦어본 적도 없습니다. [14] 만약 내가 무릇 한 인생을 살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칭찬과 명예를 추구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그런데 이것들을 실천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신체의 고통과 죽음과 추방의 위험까지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야 한다는 인생 좌우명을 어린 시절에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과 많은 글들로부터 배우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당신들의 안전(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저 술한 종류의 그리고 저 대단했던 전투에 그리고 오늘 벌이는 이 재판처럼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드는 불량배들의 공격에 이 한 몸을 내던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릇 모든 책들은 모범사례(模範事例)로, 현인들의 목소리는 규범전례(規範典例)로, 옛 역사는 전범선례(典範先例)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만약 문자의 빛이 더해지지 않았다면, 이 모든 모범들은

55) 『연설가에 대하여』 1권 202장.

56) 『연설가에 대하여』 1권 165장.

어둠 속에 묻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작가들은 가장 용감했던 이들을, 경탄뿐만 아니라 본받음의 대상이 되도록 얼마나 많은 모범 인물을 저술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국가를 통치할 때, 나의 마음과 정신을 이끌어주고 지켜 준 것은 이 위대한 분들에 대한 생각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분들을 항상 마음의 첫 자리에 모셔두곤 했습니다.”⁵⁷⁾라는 그의 고백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 키케로가 봉착한 최고의 어려움은 결정적으로 로마의 젊은이들을 가르칠 라틴어로 저술된 책들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본인이 직접 라틴어로 책을 쓰는 것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었다. 그의 말이다. “[1] 가능한 한 최대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숙고하고 그 방도를 찾아서 이리 저리 모색하는 나(아마도 키케로)에게, 나라 일에 참여하여 조언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 최선의 학문으로 가는 길을 건설하는 일 이외에 더 좋은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이 일을 이미 많은 책들을 통해서 성취했다고 자부한다. 즉 나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호르텐시우스』라는 책에서 철학 공부를 권면하였고, 철학이야말로 가장 오만하지 않고 가장 일관적이면서 고상한 [학문]임을 4권으로 된 『아카데미카』에서 밝혔기 때문이다. [2] 그리고 철학의 근본 토대는 선의 목적과 악의 경계에 놓여 있는 것이므로, 나는 [이 문제를] 5권으로 책으로 깔끔하게 정리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어떤 입장을 옹호하고 어떤 입장에 반대하는 지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다. 『투스쿨룸 대화』를 정리한 5권의 저서는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드러냈다. 제1권은 죽음 극복 문제에 대해서, 제2권은 고통을 견디는 법에 대해서, 제3권은 병으로부터 오는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도에] 대해서, 제4권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리 저러한 혼란(混亂)에 대해서, 제5권은 철학 전체를 하나로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총괄 정리하고 있다. [3] 이 책들을 출판한 후 『신들의 본성에 대하여』 3권의 책이 나왔는데 이 저서는 다음 주제(아마도 신에 관하여)에 대한 모든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이 주제가 명백하고 완벽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나는 이 책(아마도 『신성에 대하여』)의 저술에 착수했다. 이 책들에 『운명에 대하여』를 추가할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 주제는 전체적으로 흡족할 만한 정도로 해명될 것이다. 그리고 이 책들에 『공화정에 대하여』도 포함시켜야 한다. 이 작품은 내가 국정에 참여하고 있을 때, 지었던 저술이다. 철학의 큰 주제이자 고유한 [논의]이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테오프라스토스 그리고 페리파토스 학파의 견해가 아주 충실하게 취급되었다. 『위로에 대하여』라는 작품을 내가 언급해야 하나? 분명 이 작품은 나 자신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듯이,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도움을

57) 『아르키아스 변론』 13-14절.

주리라 생각한다. 아티쿠스에게 보낸 최근의 저서 『노년에 대하여』도 아울러 포함시켜야 한다. 특히 훌륭한 사람과 용기 있는 사람은 철학을 통해서 배출되는 한, 『우리의 카토』도 [철학] 저서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4] 그리고 엄밀함에 있어서 그리고 주제를 폭넓게 취급함에 있어서 탁월했던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테오프라스토스가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말하기 기술을 정립하였으므로, 연설가의 저술 또한 [철학] 저술들의 목록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3권의 『연설가에 대하여』, 『브루투스』는 제4권으로 『연설가』는 제5권으로 말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이다. 나머지 주제에 대해서도, 더 중요한 사유가 방해하지 않는 한, 철학의 어떤 주제이든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라틴어로 해명해 책으로 담아 놓을 때까지 긴장을 끈을 풀지 않고 마음을 다잡을 생각이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젊은이들을 묶고 거두어야만 할 정도로 그들을 망치고 타락시킨 이런 시대와 세태 앞에서,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더 크고 중대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내가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보다 말이다. [5] 나는 이 일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지는 않는다. 철학 공부에 헌신하라고 모든 젊은이들에게 강제로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수만이 이라도! 그럼에도 그들의 노력으로 이 나라에 이 [공부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말이다.”⁵⁸⁾

■ 키케로의 책 쓰기에서 나타난 특징은 그가 글을 통해서 시민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도했다는 점이다. 그의 말년 작품인 『우정론』과 『의무론』이 그 방증이다. 로마 공화정의 몰락을 목도하면서 그는 공동체와 개인과의 관계 규정, 즉 의무-권리의 문제에 천착한다. 키케로에게 국가(civitas)란 인간적인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성립하는 것이라면, 그 인간적인 목적이 ‘인간답게 사는 것(humaniter vivere)’의 실현이고, 그 실현이 키케로가 말하는 ‘humanitas’ 라면, ‘humanitas’는 ‘인간 안에 있는 국가(civitas in homine)’를 지칭하는 개념이고, 그렇다면 ‘국가 안에서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몫과 권리(ius in civitate)’가 ‘ius civile’이다. 그런데 고대 로마에서의 권리 문제는 인간답게 산다는 것의 핵심 조건 중의 하나였다. 이는 단적으로 로마법에서 잘 드러나는데, ‘nullum ius(권리 없음)’라는 말은 ‘nullum caput(생명의 권리가 없음)’와 같은 말이다. ‘nullum caput’는 노예를 지칭할 때 말이거나 극형이나 추방을 당한 자를 호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따라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 권리를 가진 자만이 인간이다. 이 권리를 가진 자(persona)가 시민이다. 결론적으로 시민(civis)이란 인간에 있는 여러 인격성 혹은 자격성(personae) 중에서 국가성(civitas)을 표지하는 ‘persona’ 표지이다. 또한 바로 이 권리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타인을 폭행하거나 타인의 몫을 침범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인간답

58) 『신성에 대하여』 서문.

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지켜주는 국가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만약 어떤 이가 타인의 몫, 곧 권리에 개입하고자 한다면 국가를 매개로 할 때만이 가능하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본성 안에 있는 국가성이라는 속성이 매개해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civitas)라는 매개 구조를 통해서, 혹은 그 매개 구조가 제도적으로 실현된 장치가 법정인데, 이 법정을 통해서 타인의 권리에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라는 존재도 인간의 본성 중의 하나인 다시 말해서 폴리스적 존재라는 성격에서 그 존립 근거를 두고 있음이 분명하다. 인간 안에 있는 국가성도 기본적으로는 인간이 사회적 혹은 정치적 존재라는 속성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가성도 결국은 인간성(humanitas) 개념의 하위 범주 가운데에 속하는 한 속성에 불과하다. 흥미로운 점은 ‘humanitas’와 ‘civitas’의 영역이 근본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일 것이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불일치(disagreement)에서 성립하는 것이 정치이다. 이러한 불일치에서 정치가 성립한다는 주장은 단적으로 바로 ‘인간 안에 있는 국가(civitas in homine)’, 곧 ‘humanitas’에 그리고 ‘국가 안에서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몫과 권리(ius in civitate)’가 보장하는 ‘ius civile’의 바탕에 깔려 있는 힘 때문에 정당화된다. 정치란 정확하게 ‘civitas’와 ‘humanitas’ 사이에 있는 불일치 때문에 성립하는 인간 행위이기 때문이다. 만약 실정법으로 인간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면, 설득과 토론과 세력 간의 경쟁을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선거 그리고 자신의 운명과 미래를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불용지물(不用之物)임이 분명하다. 물론 ‘humanitas’와 ‘civitas’는 일치하지 않는다. 만약 일치한다면, 정치는 굳이 필요하지 않는다. 법의 적용과 지배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 그 예로 우리는 서구의 중세 시대를 예로 들 수 있다. 중세는 『성경』이라는 카논(canon)에 입각해 통치가 이루어졌던 소위 신정-법치의 시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법에 의해서 포섭되지 않는 영역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정법은 인간과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요청되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렇다면 인간답게 살기의 목적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법체계와 법학이라는 앎도 필요하겠지만, 더 적극적으로는 정치라는 충분조건이 더욱 중요해진다. 따라서 정치에 대한 앎도 또한 중요하고, 이러한 점에서 ‘정치적인 것’에 대한 앎도 또한 인문학의 필수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민법에 대한 앎도 당연히 인문학(studia humanitatis)의 엄연한 한 분과학문이었다. 키케로의 인문학은 ‘시민법에 대한 앎(scientia iuris civilis)’을 기본으로 요구한다. ‘정치적인 것(civitas)’에 대한 앎도 또한 필수적이다. 하지만 삶을 삶답게 누리기 위해서 자유교양학문(studia humanitatis)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삶을 잘 산다는 것은 인간답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는 키케로에 따르면 인간이 자신

의 본성에 따라 살 때에 가능한데 이 본성은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진실 혹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욕구와 직결되어 있다. 이러한 앎에의 욕구가 충족될 때에 인간은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삶을 키케로는 관조적 삶(vita contemplativa)이라고 규정한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러한 앎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은 인간에게는 하나의 필요조건이 아닐 수 없다. 이 앎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인간의 “내적 목적” 가운데에 하나라면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문학은 필수적인 것이다. 인간의 내적 목적을 충족시켜주는 수단이 바로 인문학이다. 삶을 삶답게 만드는 힘들 가운데에는 정치학적인 의미에서 정치적인 것들이 아닌 일은 물론 순수한 의미에서 비정치적인 사건, 관계, 노력, 좋아하는 것들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것이 소위 교양의 힘이 관장하는 영역인데, 이는 또한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법정에 가기 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작동하는 힘이기도 하다. 인문학과 교양의 중요함에 대해서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키케로의 이후, 인문학 전통은 시민법(scientia iuris civilis)에 대한 앎과 정치적인 것들에 대한 앎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기실 이 앎의 전통은 소크라테스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서 키케로까지는 분명하게 전승되었던 흐름이었다.

4.3.3 르네상스시대의 인문부흥

□ 페트라르카의 인문주의

○ 페트라르카는 르네상스시대에 서양 고전인문학의 부활을 시작한 인문주의자였다. 그의 인문학은 퀸틸리아누스가 제창한 ‘모방과 경쟁’의 원리에 의해서 해명된다. 페트라르카에 따르면, “고대인들이든 현대인들이든, 고대의 지성으로 부싯돌에서 튀겨 나오는 미세한 불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살아 있다면, 그는 당신(호메로스)을 신성한 철학자로 여길 것입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뿐만 아니라 아니, 내가 말했듯이, 당신은 여느 철학자보다 더 위대하고 더 고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철학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세련된 옷으로 감싸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⁵⁹⁾ 페트라르카는 자신이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과 후대인들이 모방해야 할 가장 뛰어난 모범이 호메로스라고 주장한다. 그는 그 증인으로 베르길리우스를 소환한다. 페트라르카에 따르면 베르길리우스야말로 호메로스를 모방하고 심지어 경쟁하며 호메로스를 ‘능가하는 시인(victor)’이었다. 그는 호메로스의 진정한 모방자는 베르길리우스였고,

59) 「호메로스에게 보내는 편지」.

이를 통해서 호메로스로 전승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모방 없이는 참된 전승도 없다는 것이 페트라르카의 생각이었다. 그는 모방을 어떤 작가가 살아남게 되는, 즉 문헌 전승의 비결로 보았다. 모방을 지하 세계에서 있는 작가들을 다시 살리는 방법으로 여기는 것이 페트라르카의 인문주의 특징이다. 그에 따르면, “당신(호메로스)은 당신의 모방자들에게 많은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고마워할 줄 모른다고 말입니다. 무식한 도용자들이라고 말입니다. 이는 어느 경우를 놓고 보더라도 맞는 말입니다. 만약 당신만이 홀로 이를 겪었다면 말입니다. 당신을 짓누르고 있는 일들은 사람 손에 달린 일이 아닙니다. 사실 사람들 사이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그러니 진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무리들 사이에서 당신은 가장 위대한 희생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일한 희생자는 아닙니다. 이제 모방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당신은 미리 내다보았어야 했습니다. 당신 자신이 정신의 날개 너머로 드높게 솟아 있는 당신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을 때에 말입니다. 당신을 모방하는 사람들이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아니 당신은 기뻐해야 합니다. 당신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처럼 되려고 희망하는 그런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점을 말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으신 거죠? 항상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 만약 나의 친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 경쟁하고-사실 어떤 이도 사랑 없이는 모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있는 것을 본다면 말입니다. 심지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나를 뛰어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본다면, 그 모방자들 가운데에서 진정한 승리자들이 말입니다. 만약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이 자신보다 더 뛰어난 것을 바라다면, 그런 마음을 가진 아버지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⁶⁰⁾ 한마디로 “모방과 경쟁(imitatio et aemulatio)”은 르네상스 인문학에도 여전히 살아있던 인문 정신이었다.

○ 르네상스 인문학은 물론 서양 고전의 부활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그 종착역은 서양 고대가 아니었다. 그곳은 근대 국가의 탄생 및 근대의 개별 국가들의 인문학이었다. 르네상스 인문주의를 시조인 페트라르카의 인문 활동을 그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 페트라르카가 서양 고전을 사랑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는 서양 고전을 맹목적인 최애(最愛)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른바 “모방과 경쟁”의 원리에 입각해서 재활용했다. 작은 도시 국가들로 분열된 이탈리아의 정치적 상황과 교황청이 로마에서 아비뇽으로 유수된 사건(1309-1377년)은 페트라르카에게 심대한 영향을 주었는데, 대표적으로, 그가 이탈리아의 통일을 염원하며 지은 『아프리카(Africa)』에서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Aeneis)』를 재활용한다. 이탈리아의 통일을 처음 언급한 베르길리우스에 대해서 페트라르카는 키케로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부른다. “당신(키케로)이 ‘위대한 로마의 두 번째 희망’이라고 불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60) 「호메로스에게 보내는 편지」.

나온 이 말은 그 자신(베르길리우스)도 기쁘게 했고, 그의 기억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당신이 세상사를 던지고 하직했을 때, 그는 이를 똑같은 말로 자신의 신적인 작품 안에 깊숙하게 심었습니다.”⁶¹⁾ 『아프리카』에서 페트라르카는 자신이 ‘위대한 로마의 세 번째 희망(magne spes tertia Rome)’이라고 선언한다. 『아프리카』는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의 또 다른 버전이다. 페트라르카는 이 작품으로 1341년 ‘로마의 계관시인’이라는 칭호를 얻는다.

○ 르네상스 인문학의 특징은 근대어의 발전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단적인 사례가 이탈리아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단테와 보카치오와 페트라르카가 중요하다. 이들은 서양문명을 중세문화에서 르네상스문화로 전환해낸 주역들인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라틴어가 아닌 자신의 모국어로 이야기를 만들고 노래를 부르고 글을 썼다는 점이다.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노래들이 새로운 언어인 이탈리아어의 평원에 무성하게 자라났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다. 이탈리아어의 평원에서 자라난 새로운 노래와 새로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소수 지식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아무 때나 편하게 오랜 공부 없이도 쉽게 펼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탈리아어가 때로는 놀이로, 때로는 위안으로, 때로는 죽비로, 때로는 지식을, 때로는 경험을, 때로는 기술을 전해주는 도구가 되었다는 점은 인문학의 역사에서 혁명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탈리아 사람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노래할 수 있게 해준 노래꾼이 페트라르카이다. 그의 노래의 한토막이다. “저 창문, 태양 하나가 얼굴을 드러내는 곳,/ 그녀가 기뻐할 때, 정오에는 또 다른 태양이./ 그 창문, 차가운 바람이 달그덕 소리를 내는 곳,/ 날들이 짧아지고, 북풍이 불어내기 시작하면. (...) 해마다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면, 나의 오랜 상처를 새롭게 한다네./ 그날의 상처를. 그 얼굴, 그 말들, 아직도/ 내 가슴에 깊숙이 박혀 있는데, 내 눈가에 눈물로 땀도네.”⁶²⁾ 사랑의 노래는 이렇게 다시 시작되었다. 오늘날 시각에서 보면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감정 표현 같지만, 중세 말의 시대적인 분위기를 고려하면 이 노래는 매우 도발적이었고, 비유컨대 위험천만한 폭탄이었다. 어느 길거리에서 만난, 그것도 유부녀였던 ‘라우라(Laura)’와의 사랑도 인구에 회자되는 스캔들이 분명했지만, 그 사랑이 끝나고 난 뒤에도 아직도 그 사랑의 정념을 버리지 못하고, 아예 그 감정을 공개적으로 만인이 공감하는 감정의 하나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적 윤리관과 르네상스적인 개인주의에 입각한 사랑에 대한 생각이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싹트기 시작하는 새로운 종류의 세계관이 서로 밀고 당기며 한판 승부를 버리는, 거칠게 표현하자면 이성과 감정이 서로 맞붙어 ‘밀

61) 「키케로에게 보내는 편지」.

62) 『노래』 소네트 100.

당'을 본격적으로 벌이는 마음-씨름 한마당을 누구나 쉽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 르네상스시대 : 피렌체의 인문진흥, 인문학과 근대 자연과학, 인쇄술·출판업과 인문학

○ 피렌체의 인문진흥 :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서 집현전이 세워져 왕성하게 학술 활동이 일 어났던 15세기에 비잔티움 제국이 몰락하면서 그리스 출신인 아르귀로폴로스라는 철학자가 이탈리아로 망명한다. 1453년에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하자 1456년에 이탈리아로 망명한 그 를 위해서 피렌체 공국은 "Florentine Studium"이라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리스어와 그리스의 철학과 학문을 가르치도록 후원한다. 그리스 철학과 학문의 부활을 위해서 아르귀로폴로스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를 위해 그리스 원전을 라틴어로 번역했다. 아르귀로폴로스의 말이다. "반대로 따라서 우리 시대에 이탈리아의 학교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교육되게 되 었고, 다른 사람들의 철학은 무시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사들은 플라톤 철학의 올바 른 가르침도 바라게 되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올바른 가르침을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결실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⁶³⁾ 아르귀로폴로스가 무게 중심을 두고 노력한 분야는 플라 톤의 철학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의 번역이었다. 그의 노력은 『범주론』, 『명제론』, 『분석론 후서』, 『자연학』, 『천체론』, 『영혼론』, 『형이상학』, 『니코마코스 윤리학』, 그리고 『정 치학』의 라틴어 번역들의 결실로 맺어졌다. 그의 많은 번역과 저술들이 아직도 필사본의 형태 로 남아 있다. 이 번역 전집을 통해서 이탈리아의 독자들과 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전체를 조감할 수 있게 되었고, 원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전집을 통해서 다 읽을 수 있게 되 었다. 이는 교부학자들이 선별적으로 발췌해서 전해주고 알려주었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완전히 다른, 그리고 새로운 이해를 제공했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한편으로 아리 스토텔레스 텍스트의 번역에 많은 학자들이 참여했고, 이들은 대개 비잔티움 제국의 멸망으로 이탈리아로 망명한 그리스 출신의 학자들이었다는 것이다. 요한네스 아르귀로폴로스, 헤르모 라우스 바르바로스, 세베리누스 보에티우스, 안토니오스 데모카리스, 시몬 귀르네오스, 페트루 스 알퀴니오스, 테오도르 가자, 네오나르도 아레티노스, 게오르기오스 발라, 야코보스 스타폴 렌시스, 알렉산드로스 카밀라르도스, 게오르구스 트레페준티오스, 프란치스코스 필엘포, 알렉 산드로스 파치오스 파트루티오스 플로렌티노스, 베사리온 추기경, 니콜라오 레오니코스, 야코 보스 스케치오스, 루드비코스 코엘리오스 등이 그들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들은 그리스 원전을 직접 강독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일반 교양 대중을 위해서 라틴어 번역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

63) Argyropoulus et alii(1542), Praefatio, in Aristotelis Stagiritae Philosophorum Omnium Facile Principis Opera.

이다. 이는 그리스 철학의 부활 운동이 피치노와 같은 몇 명의 저명 학자들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 아니라 콘스탄티노플에서 망명한 학자들에 의해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수행되었음을 보여준다.

○ 인문학과 근대 자연과학 : 르네상스의 인문학의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근세와 현대의 자연과학으로 이어져 나갔다는 점이다. 예컨대 아이작 뉴턴(Isaac Newton, 1643-1727년)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을 그리스어로 필사했는데, 뉴턴이 필사한 『범주론』의 저본은 아르귀로폴로스가 이탈리아로 가져온 필사본이었다. 뉴턴의 필사본에 보이는 전승 오류들과 문장의 통사 배열이 아르귀로폴로스의 필사본과 일치하고, 그도 그럴 것이 아르귀로폴로스의 필사본이 영국의 옥스포드대학에 소장된 것이기 때문이다. 뉴턴의 필사본의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그리스 원전을 통해서 읽고 공부하려는 욕망은 갈수록 커져갔으며, 뉴턴이 활약했던 17-18세기에는 바야흐로 유럽의 지성이 중세 교회의 지배로부터 상당 정도 벗어나 있음을, 즉 완전히 르네상스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독자성을 확보했음을 잘 보여준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중세에서 르네상스의 학문 운동은 고대로 가지 않았고 근대로 나아갔다. 뉴턴이 아리스토텔레스 『범주론』을 직접 베끼면서 공부할 수 있기까지는 대략 250여 년이 흘러야 했다. 물론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비잔티움에서 망명한 그리스 출신의 학자들의 활약은 르네상스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더 나아가 그리스 철학에 대한 논의와 연구의 성격을 많이 바꾸어 놓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비잔티움에서 망명한 학자들, 특히 아르귀로폴로스가 피렌체와 로마에서 양성한 제자들의 공로가 컸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아르귀로폴로스의 학술 활동과 번역 작업은 폴리치아노의 정치와 보티첼리의 예술 작업에 영향을 주었고, 나중에 유럽으로 확산되어 포르투갈의 코임브라 대학의 주석서들과 뉴턴의 근대 과학에도 영향을 주었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영향력이 특정 분야의 학문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방식은 물론 문화 전반에 광범위하게 포착된다는 것이다.

○ 인쇄술, 출판업과 인문학 : 르네상스 인문학의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인쇄술과 출판업의 발전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알두스 마누티우스(Aldus Manutius, 1452-1516년)라는 사람이 중요하다. 대학에서 인문학을 정식으로 배운 학자였다. 그가 출판사를 세운 해는 1493년이였다. 출판사의 모토는 “천천히 서둘러라!(festina lente!)”였다. 이 출판사의 책들 대부분은 서양 고전의 초판본(editio princeps)들이었다. 5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서양 고전 문헌 비판정본의 저본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책을 통해서 특정 소수에게 국한되었던 지식을 대중에게 널리 제공했다는 점이다. 이 계기를 통해서 서부 유럽에는 정신의 새로운 대륙이 형성된

다. 알두스의 성공은 크게 네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문헌 편집을 전문가에게 의뢰했다. 알두스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일종의 책임-편집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를 통해 가능한 한 오류를 줄였다. 이렇게 출판된 책들은 독자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았다. 이를 통해서 알두스 출판사는 당시 지식인들 그리고 특히 신부들의 문헌 편집에서 생겨나는 오류 때문에 들어야만 했던 출판 서적에 대한 비난과 오해를 극복할 수 있었다. 구텐베르크가 사업에 실패하게 된 것도 실은 출판본의 오류들에 대한 비난 때문이었다. 필사의 경우, 성경 말씀이 잘못 필사된 경우는 한 번의 오류만 생겨나지만, 책의 경우 3000권을 간행한다면 한 번의 실수로 3000개의 오류가 생겨날 수도 있다. 이 문제를 알두스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이를 위해 1500년에 자신의 집에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을 초대한다. 이렇게 초대된 사람들은 학문 연구회(sodalitas)를 결성한다. 이 연구회에 모인 사람들의 면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암스테르담의 에라스무스, 프랑스 왕립학사인 귀욤 뷰데(Guillaume Bude, 1468-1540년) 등을 들 수 있다. 뷰데는 나중에 부영이 로고의 출판사인 뷰데 출판사를 파리에 세운다. 둘째, 책값의 인하였다. 그는 당시 초등 학교 교사 한 달 급료의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가격에 책을 판매하였다. 박리다매 판매 전략인데, 이 전략은 사업적으로 적중했고, 출판사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알두스는 아울러 책의 제작 비용을 낮추고 운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책을 크기를 줄였다. 이 크기가 바로 소위 펍권 판 시리즈 규모의 크기다. 누구나 호주머니에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셋째, 향료가 팔리는 곳이면 책이 팔렸다. 알두스는 책의 수요처를 정확히 파악하고 판매 전략을 세웠다. 상업적으로 성공했지만 줄부라는 소리를 듣던 신흥 상업 세력들의 지적 욕구는 대단했다. 능력에 대비해 볼 때 사람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언제나 불만이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책의 출현을 가장 반기었던 세력이 소위 나중에 부르주아지로 불리는 사람들이었다. 넷째, 알두스는 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책 자체를 구입하도록, 그러니까 책 자체가 상품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책을 읽기에 편하게 도와주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책을 한 번 보면 사지 않았을 수 없도록 만들자는 전략이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읽기 쉬운 글자체를 개발하는데, 이때 개발한 글자체가 소위 이탤릭체였다. 물론 알두스가 최초의 출판업자는 아니었다. 최초의 출판업자는 독일인 요한네스(Johannes)였고 그가 출판소를 차린 곳은 마인쯔 지역의 스파이어를 조그만 동네였다. 아울러 그리스어 폰트를 처음 개발한 사람은 프랑스인 니콜라스 엔손(Nicholas Jenson, 1402- 1480)이었다. 중요한 점은 알두스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갔다는 점이다. 블루 오션을 증명한 거의 최초의 CEO였다. 그러나 사업가로서 알두스의 이런 능력은 처음부터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근본적으로 인문학에 대한 열정(studia humanitatis), 책에 대한 사랑

(philobiblia) 혹은 문헌에 대한 사랑(philologia)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사랑이 없었다면 사업적으로 그가 아무리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수많은 학자들이 그에게 모여 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쇄술과 출판업은 유럽의 근대화의 역사에서 무시해서는 안 되는 항목이다. 단적으로 조금 거칠게 이야기하자면, 알두스 출판사를 기점으로 유럽은 이제 새로운 정신적 대륙으로 변해가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알두스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이다. 베아투스 레나누스(Beatus Rhenanus, 1485-1547)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라인강이 발원하는 곳에서 태어났다 해서 레나누스라 불리는 그는 프랑스의 파리에서 왕립학사로 활약한다. 말년에 고향 스트라스부르그로 돌아가서 많은 문헌들을 편집하고, 다른 한편으로 많은 학자들과 교류를 나눈다. 이 교류 범위에 속하는 지역이 독일의 프라이부르그, 스위스의 바젤, 상갈렌, 현재는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그 지역이다. 이곳은 모두 유럽 남부에 속하는 지역이다. 이는 인문학의 중심지가 이탈리아가 아니라 알프스를 넘어서 유럽의 심장부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또 다른 대표적인 인물로 요한네스 로이클린(Johannes Reuchlin, 1455-1522년)과 필립 멜란히톤(Philipp Melanchton, 1497-1560년)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에라스무스와 함께 유럽 북부의 인문학을 주도한 학자들이다. 이들의 활동과 교류가 중요한 것은 한편으로 에라스무스의 신약성경 편집에 직, 간접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것 때문이다. 특히 멜란히톤은 비텐베르크에서 1518년에 대학을 다녔는데 이곳에서 루터를 만난다. 이 만남은 이후 성서 해석학사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알두스 출판사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뭐라 해도, 구텐베르크(Gutenberg, c. 1400-1468년)의 인쇄기 발명 덕분이었다. 15세기에 인쇄술의 발명은 서양 문화에 혹은 인류사에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중요한 한 획을 그었다 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이는 출판 혁명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인쇄술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특성으로 하는 산업화의 최초 모델 역할을 했으며, 책의 보급은 고립된 단위로 단절된 하위 문명권과 지역들을 묶어 내었다. 인쇄소가 있는 곳에 대학이 세워지고 연구가 진행되어 책으로 엮여 전파되었다. 그 결과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삶의 양태가, 다시 말해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경제적으로 산업화와 시장 경제가, 문화적으로 개인의 발견이 이루어졌고, 사회적으로 시민 사회가 설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발전의 방법론적 기초를 제공한 것이 인쇄술과 책이었다. 책과 인쇄술이 서양 근대의 단초가 되는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서양 역사가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전환된 데는 책과 학자들의 노력이 컸다. 물론 르네상스시대 학자들은 그리스와 로마로 돌아가고자 했다. 하지만 서양 역사는 서양 고대로 회귀하지 않고, 근대와 현대로 나아갔다. 여기에는 인쇄술과 책이라는 기술과 매체가 가지

고 있는 대중으로의 확장성이 결정적이었다.

□ 르네상스 인문학과 종교개혁

○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of Rotterdam, 1466-1536년)는 1516년에 바젤에서 초판하였고, 1519년에 개정판으로 『신약성경 주해서(In Annotationes Novi Testamenti)』를 출판한다. 『신약성경 주해서(In Annotationes Novi Testamenti)』는 에라스무스가 1516년에 출판한 『신약성경(Novum Instrumentum)』을 출판하게 된 이유를 해명하고 이에 대한 근거들을 제시하는 주해서인데, 중요한 점은 서양 근세어로 번역된 대부분의 『성경』들이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비판 정본을 바탕으로 번역되었다는 점이다. 몇 사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1522년 마틴 루터(Martin Luther)의 독일어 『신약성경』
- 1523년 덴마크어 『신약성경』
- 1524년 윌리엄 틴데일(William Tyndale)의 영어 『신약성경』
- 1526년 스웨덴어 『신약성경』
- 1526년 덴마크어 『성경』 전체
- 1530년 이탈리아어 『신약성경』
- 1532년 이탈리아어 『성경』 전체
- 1533년 베네텍 콤파티(Benedek Komjati)의 헝가리어 「바울 서신」
- 1535년 네우샤텔(Neuchatel)의 프랑스의 『신약성경』
- 1543년 스페인어 『신약성경』
- 1548년 핀란드어 『신약성경』
- 1611년 킹 제임스 영어 『성경』 전체 등.

역사적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Novum Testamentum’이라는 이름을 책의 얼굴에 단 『신약성경』들이 서양의 근세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종교개혁이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종교개혁의 발단과 관련해서 에라스무스가 ‘Novum Testamentum’이라고 서명을 붙인 것이 우연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이 이름의 선택에서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신학의 개혁에 대한 에라스무스의 입장을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서명인 ‘Instrumentum’은 글을 담는 도구를 지칭하기 때문에 『신약성경』이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 자체임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 에라스무스의 입장이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살아있는 존재임을 증언하는 것이 그의 입장인데 이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신약성경』이고, 그러기에 책을 ‘Novum

Testamentum’이라고 불러야 옳다는 것이다. 예컨대 에라스무스는 『요한복음』 제1장 1절에 나오는 그리스어 ‘Logos’를 ‘단어’ 혹은 ‘언어(verbum)’가 아닌 ‘sermo’로 번역한다. 라틴어 ‘sermo’는 살아있는 말씀, 이야기, 대화를 뜻한다. 살아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살아있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 온전하게 살리는 것,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살리는 것이 실은 에스무스가 견지했던 ‘그리스도를 위한 철학(Philosophia Christi)’이었다. 이 철학은 일반 대중에 이해하기엔 너무 어렵고 추상적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기반으로 한 스킴라 철학의 전통이 아닌, 일반 대중과 보통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아 있는 하나님과 살아 있는 그리스도의 존재로 파악하자는 점을 기본 골자로 삼는다. 이는 그가 출판한 책들이 세상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혹은 번역되면서 유럽의 여기저기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속성으로 이어진다. 그가 출판한 이 책들의 이와 같은 속성 때문에 에라스무스 자신은 교황청으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받았고, 말년에는 매우 외로운 삶을 살아야만 했다. 종교 논쟁이 격화되자, 그는 어쩔 수 없이 신앙과 신학의 개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어느 정도는 굽힐 수밖에 없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책들이 교회의 분열을 위한 것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는 점, 신교 운동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하지만, 실제 역사는 그의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았다. 그리스도교는 종교전쟁을 거쳐서 마침내 구교와 신교로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이 분리의 시작점에 서 있는 작품이 『신약성경 주해서(In Annotationes Novi Testamenti)』이다. 『신약성경 주해서(In Annotationes Novi Testamenti)』는 260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별 주석 항목들은 에라스무스 자신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위한 철학을 정당화하며 그리스어 원전에 있지만 히에로니무스의 라틴어 번역에 누락된 문장들을 엄밀하게 비교하고 날카롭게 비판한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비교와 실증에 입각한 비판을 통해서 중세 1000년을 지배해온 히에로니무스의 라틴어 통행본 성경의 위상과 권위는 심각하게 도전을 받는다.

□ 르네상스시대 동서 인문학의 조우와 만남, 충돌과 융합, 그리고 새로운 시작

○ 르네상스 인문학의 또 다른 특징은 서양 인문학과 동양의 인문학이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중국의 『명리탐(名理探)』은 아르귀로폴로스가 피렌체에서 메디치가문의 후원을 힘입어 번역한 라틴어 『범주론』이었기 때문이다. 아르귀로폴로스가 비잔티움에서 가지고 왔던 그리스어 필사본과 이를 바탕으로 번역한 라틴어 『범주론』은 그리스 원전을 라틴어 번역과 함께 병기한 1604년에 출판된 코임브라 라틴어 『범주론』으로 출판되는데, 이 작품을 저본으로 삼아서 예수회 신부였던 프르타도(Francisco Furtado, 傅汎際, 1587-1653년)

는 17세기 초반에 이지조(李之藻, 1571-1630년)의 도움을 받아서 한자로 『명리탐』으로 서명으로 출간했다. 물론 자신의 라틴어 번역이 한문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아르귀로폴로스는 당연히 몰랐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 사상이 이렇게 필사와 번역을 통해서 유럽을 넘어서 동양에도 전해졌다는 점은 예사 사건은 아니다. 작은 사건으로 볼 수도 있지만, 명말청초에 예수회 신부들이 주도한 서양어에서 한문으로의 번역들이 동양의 언어들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르네상스 시대의 지식인들이 서양 고대의 회귀를 목표했지만, 우연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동양 근대로도 이어졌다.

○ 서양 교육의 역사에서 ‘classicus’라는 말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1548년에 토마스 세빌레(Thomas Sébillet)가 지은 『시학(Art poétique)』에서다. 하지만 세빌레가 사용한 표현은 라틴어가 아니고 ‘classique’의 형태였다. 영어에서 ‘classic’이란 표현을 사용한 작가는 알렉산더 포프(Alexander Pope, 1688-1744년)였다. 여기에서 ‘고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포프의 ‘백 년을 지속하는 것’이라는 언표는 호라티우스의 말을 자기 식으로 변안한 것이다. 그러나 ‘classicus’라는 개념이 이른바 ‘고전’을 지칭하는 전문 용어로 자리 잡게 된 데는 고전학자들과 낭만주의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무엇이 고전인가?”라는 논쟁이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예컨대 단테, 셰르반테스, 셰익스피어, 밀턴, 라신느, 몰리에르, 코르네이유, 괴테와 실러와 같이 서양 고대에 속하지 않는 당대 작가들의 작품도 고전의 반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호메로스, 소포클레스, 베르길리우스, 오비디우스와 같이 유럽 어느 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읽힐 수 있는 작가들의 작품들만이, 즉 시대, 국경, 언어를 뛰어넘는 따라서 검증된 작가들의 작품만이 고전이라는 주장이 서로 맞섰는데 이것이 논쟁의 핵심 쟁점이었다. 따라서 고전 논쟁의 배경에는 오늘날 우리 학계에서도 심심치 않게 목도되는 소위 보편주의와 국가주의 논쟁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었던 셈이다. 어쨌든 이 논쟁은 서양 고전문헌학자들에게도 나름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요컨대 영국의 벤틀리 같은 고전학자는 서양고전학을 지칭하는 용어로 ‘classical scholarship’을 사용하는 반면, 독일의 프리드리히 볼프(1759-1824)같은 고전학자는 ‘문헌학(Philologia)’을 선호한다. 옛날 책에 대한 명칭을 두고 이렇게 생각이 갈리게 된 데는 옛날 책이라고 해서 모두 고전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배경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볼프가 ‘classic’ 혹은 독일어로 ‘Klassisch’라는 말을 전용할 수 없었던 이유는 볼프 자신도 당시 독일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낭만주의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고전은 이와 같은 논쟁 과정에서 탄생한 개념이었다. 그런데 고전이라는 명칭 문제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은 다름 아닌, 유교의 경전인 『논어』, 『대학』, 『중용』에 대한 라틴어 번역서를 편집한 17세기 예수회 신부 쿠플레가 번역한 『중국어 철학자 공자』의 서문에

서 동양 고전인 사서오경(四書五經)을 ‘classici’라고 규정한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책들은 오경(五經)과 사서(四書)로 이루어져 있다. (...) 단적으로 우리의 ‘classici’(고전)라는 환칭(換稱)에 해당할 것이다.”⁶⁴⁾ 동양 고전과 서양 고전은 이와 같은 개념의 비교를 통해서 서로 조우하게 된다. 지금은 ‘Humanitas’와 ‘人文’이 교섭하고 융합 중이다.

○ 르네상스 인문학은 돌고 돈다. 16세기 말부터 중국에서는 동양 고전과 서양 고전의 번역이 체계적으로 이뤄졌다. 예컨대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 『천체론』,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일부, 유클리드의 『기하학』, 키케로, 세네카, 아우렐리우스의 문헌이 각기 『명리탐(名理探)』, 『환유전(實有詮)』, 『교우론(交友論)』, 『구우론(逖友論)』, 『기하원본(幾何原本)』의 서명으로 한역되었고, 사서오경(四書五經) 중의 일부가 ‘Confucius Sinarum Philosophus sive Scientia Sinensis’란 제목으로 라역(羅譯)되었다. 다음은 16-18세기에 예수회 선교사들이 번역하거나 저술한 것들이다.

■ 수학 분야 : 리치의 『기하원본(幾何原本)』 1607년, 『환용교의(圖容較義)』 1608.

■ 지리학 분야 : 알레니의 『직방외기(職方外紀)』 1623, 불리오의 『서방요기(西方要紀)』 1669.

■ 물리학 분야 : 우르시스의 『태서수법(泰西水法)』 1612년, 테렌츠의 『기기도설(奇器圖說)』 1627년.

■ 의학 분야 : 테렌츠의 『인신설개(人身說概)』 1627년, 로의 『인신도설(人身圖說)』 1650년

■ 어문학 분야 : 루지에리의 『포르투갈-중국어 사전』, 리치의 『서자기적(西字奇蹟)』 1605년, 트리고의 『서유이목자(西儒耳目資)』 1625년.

■ 철학과 종교 : 루지에리의 『천주실록(天主實錄)』 1593, 리치의 『천주실의(天主實義)』 1603년, 『교우론(交友論)』 1595년, 『서국기법(西國記法)』 1594년, 바뇨니의 『서학수신(西學修身)』 1605년, 『서학제가(西學齊家)』 1605년, 『서학치평(西學治平)』 1605년, 알레니의 『서학범(西學凡)』 1623, 푸르타도의 『명리탐(名理探)』 1631, 『환유전(實有詮)』 1628년

○ 예수회 신부들이 하고 많은 책 중에서 하필 이 책들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는 전 세계의 학계가 현재 활발하게 연구 중인 미지의 신대륙(terra incognita)이다. 수많은 문헌들 가운데에서 몇몇 저술들은 당시 유럽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당대의 담론과 논쟁을 직접 수용하거나 반영되어 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저술되거나 번역된 저술도 있다. 이쯤 되면 르네상스는 서양에서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동양에서도 동시에 진행되었음이 분명하다. 르네

64) 『중국인 철학자 공자』 서문 제6장.

상스는 돌고 돈다. 사실 르네상스는 실은 돌고 도는 학술 운동이다. 15세기에 르네상스 운동을 주도한 곳은 이탈리아 북부 도시들이었다. 16세기 초반의 르네상스 운동이 꽃피었던 지역은 알프스 이북의 바젤, 프라이부르크, 스트라스부르크와 같은 대학 도시들이었다. 그러다가 17세기 초반에 르네상스 운동을 주도한 곳은 네덜란드의 도시들이었다. 이는 르네상스가 상업의 번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17세기 중반의 르네상스 운동의 중심지는 프랑스였다. 학술 운동이 국가 통치의 기반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18세기와 19세기 초반까지 르네상스 운동을 주도한 나라는 영국이었다. 이는 대영제국의 확장과 맞물려 있다. 그러다가 19세기 중반과 20세기 초반의 르네상스 운동의 주도권은 독일로 넘어간다. 하지만 제1, 2차 세계대전은 르네상스 운동의 중심지를 구대륙에서 신대륙으로 이동시켜버린다. 르네상스 운동은 따라서 시간과 더불어 공간적으로도 도는 것은 분명하다. 서양의 르네상스 운동과 함께 거의 동시에 동양에서도 르네상스의 운동은 동시에 진행되었다. 예수회가 작업한 한문 번역이든 라틴어 번역이든, 실은 그 어떤 것이든 서양문명의 바탕 노릇을 해 온 라틴어 개념들과 한자 문화권을 기축으로 하는 동양문명이 각기 자체의 역사와 논리를 속에 품은 채 혹은 등 뒤에 감춘 채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유컨대 어느 단어 하나, 어느 문장 하나, 그냥은 자신의 속내를 쉽게 열어 보여 주지 않는 새로운 미지의 신대륙이 우리의 앞에 있기 때문이다.

4.4. 독일과 프랑스의 인문진흥정책

4.4.1. 서언

□ 독일과 프랑스는 영국과 이탈리아와 더불어 유럽 인문학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며, 미국이 세계 학문시장의 중심으로 부상한 이후에도 그 중요성을 여전히 인정받고 있다.

○ 이 두 나라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흔히 말하는 인문학의 위기라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학교육이 매우 저렴한 것이 큰 역할을 한다. 프랑스의 경우 대학 학비가 학부기준 한화로 한 학기 당 약 30만원 미만이며 석사나 박사과정의 경우에도 최대 50만원을 넘지 않는 수준이다. 독일 역시 마찬가지로 대학 학비가 매우 저렴하며, 일단 대학에 등록금을 지불하여 학생의 지위를 인정받을 경우 교통 등에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학비가 주는 부담이 매우 적다. 이런 상황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과를 결정할 때에도 상대적으로 경제적 코스트를 덜 생각하고 인문학 관련 학위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에

비해 미국이나 영국, 한국처럼 대학 학비가 비싼 경우 학생들은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고 심지어 부채를 안게 되어 학과 선택에서도 투자 대비 코스트라는 요인을 더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 이외에도 인문학에 좀 더 관심을 갖는 사회 분위기와 관련 문화산업이 크게 발달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비슷한 사정의 영국이나 이탈리아에 비해 인문학의 위기가 훨씬 적게 느껴진다는 사실은 정부의 투자가 인문학 진흥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 준다.⁶⁵⁾ 미국의 인문학 위기는 독일의 전국 단위 라디오 방송인 Deutschlandfunk에서도 거듭 보도되었다.⁶⁶⁾ 이들 기사에서는 인문학의 위기를 다소 의아하게 여기는 톤이 느껴진다. 같은 방송에서 기획한 다른 기사에서는 독일의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위기에서 벗어나 있다는 일종의 자신감이 드러난다.⁶⁷⁾ 대학교육에 인문학을 통해 소양을 닦은 사람들은 이후 양질의 문화산업의 소비자로서 자리 잡는다. 프랑스와 독일에서 발전한 출판이나 고급 언론, 기타 문화 산업은 이러한 기반 위에서 성장한 것이다.

□ 프랑스와 독일의 인문학 교육을 지탱하는 또 다른 축은 양질의 연구자를 길러내는 것이다. 좋은 연구자들은 프랑스와 독일 사회에 지적 자양분을 공급할 뿐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프랑스와 독일의 정치, 사회, 경제적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 이러한 양질의 연구자를 공급하기 위해 프랑스와 독일은 오래 전부터 국가가 직접 나서 인문학 교육을 지원해왔다. 그러한 노력은 지속적인 개선을 거쳐서 다양한 연구 지원 모델로 이어졌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 지원 모델은 연구비 자체의 규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좋은 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실제로 각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문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연구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선해왔다.

○ 대학을 중심으로 한 학문연구의 후발주자로서 한국의 경우 현재 정체되어 있는 인문사회 연구비를 늘려야 함도 물론이지만 한국의 실정에 맞는 지원 모델을 더 발굴하여 국가와 사회에

65) 영미권의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최근 토론은 Nathan M Greenfield가 University World News에 게재한 'The crisis in arts and humanities: Rhetoric or reality?' (<https://www.universityworldnews.com/post.php?story=20230331111300644>.) 이외에 Paul Jay, The Humanities "Crisis" and the Future of Literary Studies, Palgrave Macmillan: New York, 2014.

66) 'US-Universitäten: Geisteswissenschaften in der Krise.' (<https://www.deutschlandfunk.de/us-universitaeten-geisteswissenschaften-in-der-krise-100.html>) ; 'US-Universitäten: Krise der Geisteswissenschaften stoppen.' (<https://www.deutschlandfunk.de/us-universitaeten-krise-der-geisteswissenschaften-stoppen-100.html>).

67) 'Geisteswissenschaften: Es muss nicht immer mit dem Taxischein enden.' (<https://www.deutschlandfunk.de/geisteswissenschaften-es-muss-nicht-immer-mit-dem-100.html>).

서 요구되는 다양한 연구수요를 흡수하고 나아가 한국의 인문 연구가 글로벌한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해외 각 국가가 사회과학을 포함한 포괄적인 인문학 지원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연구 모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서구 학문의 중심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의 모델은 뒤에서 살펴볼 것처럼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 이하에서는 이를 국가중심, 대학 중심, 연구네트워크 중심의 세 가지 모델로 나누어 살펴본다. 한 가지 부기해 둘 것은 이들 나라에서의 지원 프로그램, 특히 이하에서 살펴볼 세 사례의 경우에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엄격히 구분하기 보다는 이들 간의 통합적 연구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관리구조나 예산편성구조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따라서 아래에서 제시되는 지원금의 규모나 관련 인력과 관련한 통계에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구분되어 제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하 고찰의 목표가 인문학의 연구를 진흥할 수 있는 지원모델을 살펴보는 데 있는 만큼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4.4.2. 국가 중심의 연구소 조직을 통한 포괄적 인문학 연구 지원

- 사례 : 프랑스 CNRS(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 소개

○ 나중에 보게 될 독일과 더불어 프랑스의 인문학(Les lettres; humanités) 연구를 이야기할 때 기억해야 할 사실은 프랑스의 인문학 연구가 개별 학문 분야에서 깊이 못지않게 학제간 연구에서도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프랑스의 사회과학은 오래전부터 인문학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것과 관련이 깊다. 사회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에밀 뒤르카임(Émile Durkheim)은 원래 철학도였고, 현대 구조주의의 거장이며 인류학자인 클로드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는 소르본 대학에서 법학과 철학을 전공했다. 최근 프랑스에서도 미국에서 발달한 사회과학이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면서 고유한 인문학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밀려나고 학생들의 선택지에서도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주 전통적인 인문학 연구와 최첨단의 사회과학 연구를 함께 아우르는 전통이 강한 만큼 궁극적으로 인문학이 도산에 이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은 프랑스 사회에는 아직 없다. 오히려 현재 이러한 미국식 사회과학을 자극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하려는 노력이 매우 강하다.

○ 프랑스 정부의 연구 지원 정책에서 염두에 둘 사실은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인문학 분야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이와 같은 융복합적 연구에 특히 관심을 갖고 후원해왔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첨단에는 CNRS가 존재한다.

■ CNRS는 1939년 설립된 범국가적 연구조직으로서 자체고용연구원(종신직 연구원 포함)

과 연구부서를 두고 내부에 자체 발주된 프로젝트 및 대학과 연계된 프로젝트를 수행해오고 있다. 총 10개의 연구소를 두고 운영해오고 있으며 그 안에 인문학 및 사회과학연구소 (Institut des sciences humaines et sociales (INSHS))가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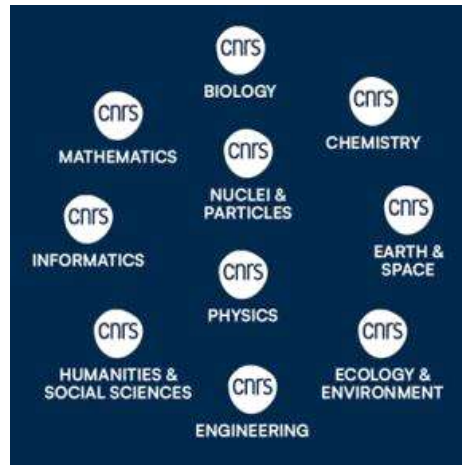


그림 4. CNRS 연구소(출처: CNRS 홈페이지)

■ 2022년 1월 현재 자체 연구원은 1,679명에 달하며 CNRS와 공동 작업을 벌이고 있는 연구자들을 포함하면 총 9,799명의 연구자가 CNRS와 관련을 맺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된 박사과정생이나 박사후 연구생은 11,700명에 달한다.⁶⁸⁾ 전체 CNRS 예산, 약 4억 5천만 유로⁶⁹⁾ 가운데 IINSHS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천 8백만 유로이며 이는 전체 CNRS 예산의 약 4퍼센트에 해당된다.⁷⁰⁾

■ CNRS가 후술하게 될 유럽의 국가 후원 연구소 네트워크와 비교할 때 두드러지는 점은 연구지원의 계획부터 집행까지, 즉 연구기획, 행정, 재원 분배의 전 과정에서 중앙 집중성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 활동방식

○ CNRS의 연구 진행 방법을 이해하는 핵심은 연구단(UMR: Unités mixtes de recherche)을 이해하는 것이다. 연구단은 정해진 주제를 중심으로 CNRS 소속의 연구원과 대

68) https://www.inshs.cnrs.fr/sites/institut_inshs/files/pdf/index%20card%20of%20the%20institute-%20SHS-january2022.pdf

69) https://www.iledefrance-gif.cnrs.fr/sites/delegation_dr4/files/pdf/CNRS_RA_2022_VWEB.pdf.

70) <https://www.inshs.cnrs.fr/fr/cnrs-sciences-humaines-sociales-en-chiffres>.

학 혹은 기타 연구기관의 연구자들(경우에 따라서는 산업 분야 관련자들)을 하나로 묶어 놓은 것으로서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초단위가 된다. CNRS에는 약 11,000개의 연구소가 존재하는데 이들 대다수는 연구단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연구단의 지위를 인정받는다는 것은 해당 연구소가 연구 기획과 재정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가질 뿐 아니라 박사과정학생, 박사후 연구원, 나아가 다양한 연구자들을 자체적으로 고용하거나 관련을 맺고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연구단이 누리는 자율성이 전체적 틀에서 CNRS가 갖는 국가단위의 중앙 집중성을 저해하지는 않는다.

○ 기초연구 단위는 그 안에서 다시 연구그룹(équipes)으로 세분되는데 각 연구그룹은 주제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구성되며 그 때문에 인원 구성면에서 상당한 유동성을 보이기도 한다. 연구 단위는 4년마다 성과를 평가받게 되어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지위유지 여부 뿐 아니라 예산확보에도 영향을 받는다. 또 대학과 CNRS의 협의에 따라 새로운 연구단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학 연구를 중점으로 하는 연구단 8173번 연구소를 예로 들어보자. 이 연구단은 프랑스에서 동아시아학으로서는 최대 단위의 연구 집단이며 2006년 1월 1일에 설립되었다. 이 연구단은 다시 세 개의 연구센터로 나뉘지는데 한국학 연구센터(CRC: Centre de Recherches sur la Corée)를 비롯하여, 근현대 중국 연구소(CECMC: Centre d'études sur la Chine moderne et contemporaine)와 일본학 연구소(CRJ: Centre de recherches sur le Japon)가 여기에 속한다. 이 연구소에는 CNRS 연구원들과 더불어 파리고등사회과학원(EHESS: École des hautes études en sciences sociales)의 한국학, 중국학, 일본학 관련 학과 교수들이 함께 소속되어 있다. CNRS의 연구자와 인터뷰한 결과에 따르면 연구단 내에서도 연구비를 확보하기 위한 각 센터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이는 지나치게 연구단 내부 정치를 조장하는 면도 있지만 각 센터들이 자율적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새로운 연구 아젠다를 개발하도록 뛰어드는 동력이 된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 시사점

○ CNRS에서 특기할 사항은 한 연구자가 다양한 연구단과 연관을 맺고 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 연구자가 특정 연구단에 속해서 일을 하면서 자신의 관심에 따라 다른 UMR의 업무에도 연관되어 함께 일할 수 있다. 물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래의 소속은 유지되며 이후에 결합한 UMR과는 associate의 지위를 갖는다. 이는 CNRS의 연구가 일종의 나무와 같은 형식으로 계속 확장하며 새로운 연구 주제와 필요에 대응하여 성장하는 유연성의 동력이 된

다.

○ CNRS가 가지고 있는 다학제적, 초학제적 연구의 특성을 실용성 위주의 연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단 8173의 한국학 연구센터의 경우 조선시대 한국 문학을 포함하여 다양한 문헌 자료를 번역 발간하고 있으며 현대 한국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아래는 한국연구센터의 고등사회과학원 쪽 웹사이트에 한국어로 게시된 소개문이다. “‘CRC-EHESS’ 또는 ‘Centre Corée’라고 불리는 프랑스 사회과학 고등연구원 한국연구센터는 한국에 관한 학술연구와 연구자 양성을 소명으로 한다. 주된 연구 활동 범위는 지리적으로 남한을 비롯하여 한반도전체를 아우를 뿐 아니라 해외각지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디아스포라까지 포함하며, 시기적으로는 폭넓은 의미의 근대, 즉 17세기-21세기에 해당한다. 초기에 정치학과 경제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던 연구 활동들이 점진적인 변화를 거쳐 현재의 연구 활동들은 주로 1) 역사학과 역사학사 2) 문화인류학 3) 지리학과 도시학들의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991년부터는 프랑스 사회과학 고등연구원 한국연구 센터의 연구 활동의 규모가 더욱 커지면서 프랑스 국립과학원(CNRS)에 소속되었다. 2006년부터 프랑스 사회과학 고등연구원의 중국 연구 센터, 일본 연구 센터 와 함께 공동연구팀 « 중국, 한국, 일본 » UMR 8173 CNRS-EHESS를 구성하여 동북아시아지역의 비교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또 한편 유럽차원의 한국학 활성화를 위해 교환 교수 방식을 실시하고 있어 매년 유럽 각지에서 강사들을 초대하여 컨퍼런스를 운영하고, 박사과정 학생들의 학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⁷¹⁾

○ 여기서 우리는 CNRS가 후원하는 연구단이 어떤 모습을 띠고 대학과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최초 대학의 학과나 연구소가 CNRS와 연구협력관계를 맺고 이어 연구단을 구성하는 식이다. 원래 학과가 가지고 있는 연구의 지향성을 크게 바꾸지 않고 동시에 국가가 진행하는 펀딩에 장기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깊이와 확장성 모두를 잡을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점은 특히 한국이 참고할 만하다. 한국의 인문학 분야 지원정책, 예를 들어 인문한국 사업(HK)은 최초 정해진 기간만을 지원한다. 이러한 모델이 현재 각 대학에서 인문학에 대한 투자가 낮은 상황에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되었다. 즉 국가의 후원이 끝나면 대부분의 연구소들이 축소되거나 아예 해체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국가주도 프로젝트적 성격이 강조되어 연구단들이 장기적인 학문 성과 축적보다는 정해진 기간 내에 단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면서 해당시기 정부가 내건 국가 발전 아젠다에 부합하는 쪽으로 주제를 트는 경향이 있다. 즉 연구자들이 원래 진행하던 연구와 별도의 특별 연구

71) <https://ccj.ehess.fr/node/1334>.

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당 사업의 연구 아젠다와 연구자들이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 아젠다가 분리되다보니 평가를 통과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연구 성과가 양산되기 십상이다.

■ 동시에 CNRS모델은 재원의 분배라는 면에서도 효율성이 있다. 기존 한국에서 인문학 관련 연구소를 지원하는 경우 특정 주제에 지나치게 몰리는 경향이 있다.(예: 디지털 인문학, AI인문학 등) 물론 한국에서도 크게 칸막이를 두기는 하지만 이러한 쏠림 현상을 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에 비해 CNRS모델은 아젠다를 보다 세분화하여, 일정한 수준을 담보하는 한 지속적인 연구를 보장하는 한편으로 각 아젠다에 대한 지원 여부를 CNRS의 전반적인 방향 설정에 맞춰 전문가들이 결정함으로써 지나치게 한 주제에 쏠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 CNRS 모델의 또 한 가지 장점은 평가가 용이하고 책임이 분명하다는 것에 있다. CNRS 소속 연구원과 여기에 결합한 외부 연구기관이 지속적으로 한 연구단에 속해 있는 만큼 연구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하고 책임을 묻기도 용이하기 때문에 한탕주의 식으로 걸만 번 지르르 한 연구 주제를 제시하고 부실한 연구 결과를 제출하는 식의 관행, 소위 ‘먹튀’는 상대적으로 자리 잡기 어렵다. 부실한 연구를 진행했을 경우 관련 외부연구기관은 CNRS의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되며, 내부 연구원의 경우 재계약에서 직접적인 불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 총평

○ 한국에도 인문사회분야의 다양한 주제들과 관련한 다양한 국가직속 연구기관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러한 국가지원 연구기관들은 특정한 주제와 관련하여서 연구를 진행하며 펀딩에 있어서 타 연구기관과 경쟁 관계에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국가에서 요구하는 연구 아젠다만을 수행할 뿐 민간 타 연구기관과 공동의 연구를 통해 시너지를 내는 일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학 중앙연구원처럼 자체 연구 인력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동시에 일정한 예산을 받아 외부기관에게 연구 프로젝트 공모의 형식으로 배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도 국가지원과 대학이나 타 연구기관의 연구 활동을 유기적으로 결합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 이런 점에서 CNRS 모델은 국가가 지원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인력과 외부연구기관이 함께 결합할 장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시의성과 학문적 깊이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CNRS 모델은 1,700명에 가까운 인문학 관련 연구 인력을 연구원으로서 상시고용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연구자들이 안정적 재정 기반을 가지고 연구를 지속할 수 있게 지원하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우리나라 역시 대학에서 인문학 관련

연구 인력을 대학이 흡수하는 데에는 뚜렷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CNRS 모델은 적극적으로 참고할 연구 지원 유형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4.4.3.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집단 연구 사업 지원

- 사례 : 독일 학술재단(DFG)의 특별연구센터(Sonderforschungsbereich)

□ 소개

○ 독일 학술재단은 수시로 집단 연구를 지원받고 면밀한 심사를 거쳐 3년에서 일반적으로 최장 12년까지 연구를 지원한다. 연구에는 한 학교에서 인문학과 사회과학에서 자연과학과 공학까지 다양한 학과들이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참여한다.⁷²⁾

○ 독일의 학문 전통은 학과 간의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고 각 학과의 설정이 광역화되어 있는 점에서도 드러나듯 전반적으로 학제간 통합의 성격이 강하다. 더욱이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볼로냐 프로세스에 의한 변화에 의해 학제에 개편이 있기 전까지는 복수전공이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제간 연구전통은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있었으면 이는 현재까지도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다.

○ 여기에 덧붙여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인문학에 대규모의 지원을 해왔으며 이러한 전통은 아래에서 살펴볼 특별연구센터에서 잘 나타난다. 특별연구센터는 한국의 인문한국사업(HK)과 유사한 점이 있다. 연구소 중심이며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다년간의 지원을 통해 새로운 아젠다를 구축하거나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의 중심 주제들을 발굴하여 연구한다. 현재는 자연과학, 의학, 나아가 공학을 아우르는 대형프로젝트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위기를 대주제로 국가의 위기(정치학, 행정학), 시민사회의 위기(행정학), 위기로서의 세대갈등(가족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역사의 변화와 위기(역사학), 위기로서의 신체 노화(의학), 가짜뉴스에 의한 공공장의 위기(신문방송학), 통계물리학에서 바라보는 위기(통계물리학)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다수 학과들이 참여하는 식이다.

□ 활동방식

○ 독일의 특별연구센터는 한 학교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간의 컨소시엄 구성을 자유롭게 하여 보다 광역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베를린 훔볼트 대학의 6개

72) <https://www.dfg.de/de/foerderung/foerdermoeglichkeiten/programme/koordinierte-programme/sfb>.

학과와 자유대학의 5개학과의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쾰른 대학의 5개 학과와 본 대학의 5개학과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식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특별연구센터를 각 학교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 운영하기 때문이다. 한 학교의 인프라를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인문한국사업과는 달리 독일의 특별연구센터는 일단 선정이 되면 별도의 연구공간을 학교 캠퍼스 밖에 확보하고 전문 행정 인력, 조교와 연구원을 고용하며 심지어 외부 홍보를 담당하는 대변인까지 선정한다. 또한 특정 출판사와 계약을 맺어 특별연구센터의 이름으로 공동학술지나 학술서 시리즈 발간, 강의시리즈 기획 등을 진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연구센터는 회계에서부터 인프라까지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게 되며 외부의 변화에 관계없이 다년간 자체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한편 특별연구센터는 교수뿐 아니라 그 아래에 석사와 박사급의 연구원들을 고용하며, 석사급 연구원들은 단지 하부의 행정이나 연구의 말단을 맡는 것이 아니라 자체 박사학위 프로젝트를 가지고 연구센터의 인프라를 십분 활용하면서 성장한다. 예를 들어 A라는 교수에게 고용된 석사급 연구원의 B경우 전체 프로젝트에서 A교수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의 틀에 상응하는 주제로 박사논문을 작성한다. 만일 전체 프로젝트의 주제가 앞서 말한 위기이고 A라는 교수가 담당하는 프로젝트가 현대 국가의 위기라면 박사논문을 작성하는 연구원 B는 제3세계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논문을 쓰는 식이다. 이 경우 박사학위논문은 A교수 원 소속 학교 학과에서 부여된다. 한편 B는 다른 석박사급 연구원들과 자체 연구 모임 및 발표회 등의 기회를 갖고 나아가 다른 석박사급 연구원들 중 뜻이 맞는 일부와 함께 중소 규모의 컨퍼런스를 조직할 수도 있다. 석박사급 연구원들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협의회의 대표는 전체 프로젝트 및 각 부분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교수들과 함께 전체적인 연구소의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한다. 이는 우수한 학문후속세대를 발굴하여 성장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확장하여 내부적으로 박사학위 논문 준비자를 위한 연구 집단(Graduiertenkolleg)을 구성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특별연구센터를 유치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 각 대학의 연구 인프라를 강화하는 중요한 통로로 여겨지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유치를 지원한다. 각 대학이 어떤 지원을 준비하고 약속하는가 역시 나중에 살펴보게 될 평가의 중요한 요소이다. 2023년 10월 현재 독일 학술재단은 총 268개의 특별연구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약 8억 5천만 유로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는 독일 학술재단 전체 예산의 24퍼센트에 달한다. 이 중에서 89개는 지역 간 대학들의 연계를 통한 연구소이며, 한 개는 세 개의 대학이 연합한 것이다. 이중 인문학 및 사회과학 프로젝트의 비중은 33개로서 이는 12.3% 예산에 해당된다.

○ 특별연구센터는 지원기간을 4년으로 하여 연장을 거쳐 최장 12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초 신청과 평가 및 연장을 위한 평가는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평가는 1박 2일의 현장 방문 평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평가팀은 독일 내부만이 아니라 해외의 연구자를 포함한다. 평가 기간 동안 평가팀은 직접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물을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면담을 진행하기도 한다. 평가의 단계는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연구자는 지원하고 재단은 평가하는 시 스템이 아니라 지원단계부터 학술재단이 개입한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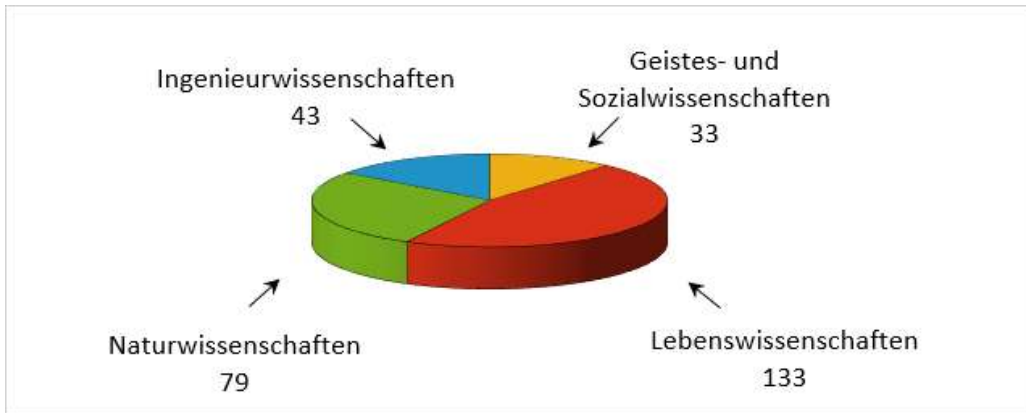


그림 5. 독일학술재단 특별연구센터 예산 분배 현황
(붉은 색이 생명과학, 초록색이 자연과학, 파란색은 공학, 나머지 주황색이 인문 및 사회과학)

■ 우선 연구자가 지원의사를 밝히고 전반적인 개요를 작성한 후 이를 약 1/2일에 걸쳐 재단과 협의한다. 이후 특별연구센터 심의위원회(Senatsausschuss)가 과제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협의한 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연구자가 지원하게 되면 (신청 자격은 대학(들)임) 이를 이틀간의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심사위원회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대학차원에서 지원이 포기되는 경우도 있다.

■ 이러한 다층적 심사체계를 통해 신청자의 준비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신청서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향후 연구가 좀 더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통해 심사와 관련된 행정수요를 적정한 선에서 관리하며, 신청된 과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6. 특별연구센터 신청 및 심사 체계

○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독일학술재단은 다음을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수준 높고 독창적인 연구; 면밀하게 장기적으로 설계된 연구 프로그램; 부분 프로젝트 간 일관성과 연결성; 학자들의 우수성; 충분한 인력, 재정 및 기본 인프라 장비; 지원 대학에서의 연구주제 및 연구 인프라에 대한 충분한 지원; 학문 초기 경력 단계의 연구자 지원 및 남녀평등 기회 제공; 전문적인 관리.(Hohe wissenschaftliche Qualität und Originalität auf international kompetitivem Niveau; anspruchsvolles und langfristig konzipiertes Forschungsprogramm; kohärente Vernetzung der Teilprojekte; hervorragend ausgewiesene Wissenschaftler*innen; angemessene personelle, finanzielle und infrastrukturelle Grundausstattung; überzeugende Beiträge zur Schwerpunkt- und Strukturbildung an den antragstellenden Hochschulen; Förderung von Forscher*innen in frühen Karrierephasen und der Gleichstellung von Wissenschaftlerinnen und Wissenschaftlern; professionelles Management.)

□ 시사점

○ 독일학술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특별연구센터는 학문후속세대 지원의 내실화라는 점과 선정 관리 체계의 내실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실정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우선 학문 후속세대의 지원의 경우 우수한 박사과정생들이 단지 개별연구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국내외적인 네트워크 형성에 적극 관여하고 나아가 타 분야의 학자들과 교류를 통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감으로써 연구역량을 혁신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 또한 준비 단계부터 학술연구재단이 적극적으로 대화의 파트너로서 기능함으로써 연구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 역시 한국의 입장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현재 한국연구재단이 주로 선정과 관리의 기계적 측면에서 기능하고 있으며, 연구의 질을 제고하고 외연을 넓히는 것을 주로 연구자들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독일의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총평

통합 학제적 특성이 두드러지는 특별연구센터의 경우 독일의 인문학이 고립된 학문 분야로서가 아니라 타 분야와 적극 교류하는 가운데 아이디어를 얻고 또 타 연구 분야의 발전을 추동하도록 하는 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에서도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일반공동연구나 HK, SSK사업 및 기타 연구소 사업의 내용 및 인적구성을 살펴보면 학제간 연구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특별연구센터 모델을 면밀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4.4. 연구의 국제적 네트워킹을 목표로 한 중장기 집단연구체계사업 지원

- 사례 : 케테-함부르거 콜렉(Käte Hamburger Kolleg)

□ 소개

○ 독일이 자랑하는 연구진흥 제도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나 프라우엔호퍼 연구소 그룹처럼 완전히 독립된 재정과 행정조직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는 복수의 연구소들을 하나의 연결망 안에 통합시킨 것이다. 독일은 이렇게 잘 알려진 연구소 네트워크 이외에도 수요에 따라 계속 새로운 기획을 통해 연구소 네트워크들을 성장시키고 있다. 그 가운데 2008년 만들어진 케테 함부르거 콜렉은 인문사회를 중심으로 국제화를 목표로 성장하는 연구소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끌고 있다. 케테 함부르거 콜렉은 자신의 미션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⁷³⁾ “정치 문화, 미디어 철학, 종교, 법, 노동 및 환경 - 이러한 주제들은 국제적이고 비교적인 연구적 시각을 필요로 합니다. 케테 함부르크 콜레그를 통해 독일 연방교육 및 연구부(BMBF)는 2008년 이후 우수한 연구자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인문과학 연구를 위한 자유로운 연구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Politische Kulturen, Medienphilosophie,

73) https://www.bmbf.de/bmbf/de/forschung/geistes-und-sozialwissenschaften/kaete-hamburger-kollegs/kaete-hamburger-kollegs_node.html.

Religion, Recht, Arbeit und Umwelt – all diese Themen erfordern internationale und vergleichende Forschungsperspektiven. Mit den Käte Hamburger Kollegs eröffnet das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BMBF) seit 2008 herausragenden Forscherpersönlichkeiten Freiräume für geisteswissenschaftliche Forschung auf Weltniveau.)

○ 여기서도 밝히고 있는 바처럼 케테 함부르거 콜렉은 전적으로 인문사회분야의 창의적 주제들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독일이 추진하고 있는 독일 인문사회과학의 세계화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현재 케테 함부르거 콜렉에 포함되어 있거나 콜렉을 거쳐나간 연구소들의 프로젝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특징이 더욱 두드러진다.

- KHK Duisburg-Essen : Centre for Global Cooperation Research
- 두이스부르크- 에센 대학 : 글로벌 협력
- KHK Jena : Imre Kertész Kolleg: Europas Osten im 20. Jahrhundert
- 예나 대학 : 20세기 동유럽
- KHK Bonn : Recht als Kultur
- 본 대학 : 문화로서의 법률
- KHK HU Berlin : Arbeit und Lebenslauf in globalgeschichtlicher Perspektive
- 베를린 훔볼트 대학 : 세계사적 관점에서 살펴본 노동과 삶의 사이클
- KHK München : Rachel Carson Center Umwelt und Gesellschaft
- 뮌헨 대학교 : 환경과 사회
- KHK Erlangen-Nürnberg : Schicksal, Freiheit und Prognose.

Bewältigungsstrategien in Ostasien / Europa

- 에를랑엔-뉘른베르크 대학 : 운명, 자유, 전망. 동아시아와 유럽의 시각
- KHK Bochum : Dynamiken der Religionsgeschichte
- 보쿰 대학: 종교사의 다이나미즘
- KHK Weimar : Internationales Kolleg für Kulturtechnikforschung und Medienphilosophie
- 바이마르 대학 : 문화기술연구와 매체철학
- KHK FU Berlin : Verflechtungen von Theaterkulturen
- 베를린 대학 : 극장문화의 혼용 발전
- KHK Köln : Morphomata. Genese, Dynamik und Medialität kultureller

Figurationen (Förderung beendet)

■ 쾰른 대학 : 문화형성의 생성, 발전동학과 미디어리티

□ 활동방식

○ 케테 함부르거 콜렉의 연구소들은 앞서 특별연구센터와 마찬가지로 각 연구자들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대학을 통로로 하여 케테 함부르거 콜렉 본부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 케테 함부르거 콜렉의 연구소들은 일반적으로 박사과정 및 박사 급의 정규직 연구원들과 행정인력이 골간을 이루며,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국내 국외의 학자들을 초청하여 펠로우로 임명, 생활과 연구 공간을 제공(비정규직 연구자일 경우 체류비와 주거비 및 인건비 지원. 정기적 수입이 있는 연구자일 경우 체류비와 주거비 지원)하는 한편 공동의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향후 협력 네트워크의 성장을 도모한다. 각 연구소들은 위에서도 알 수 있듯 대학에 부설되며, 최장 12년간 최대 연간 30억 지원을 받는다.

○ 위의 주제들에서도 드러나듯 주로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창의적 주제들에 집중하여 지원한다. 예를 들어 에를랑엔-뉘른베르크 대학에 부설된 연구소의 경우 서양 중세사의 연구와 중국학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학의 연구자들을 결합하고 있으며, 분야의 경우 역사학, 철학부터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종교학 등 각 분야를 널리 아우른다.⁷⁴⁾

○ 케테 함부르거 콜렉에 소속된 연구소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학문후속세대 및 독일 내부 학자들을 반드시 일정비율로 펠로우 선정한다는 것이다. 케테 함부르거 콜렉은 이를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케테 함부르거 콜렉은 각각의 분야에서 자유롭고 수월성 있는 연구를 위한 매력적이고 강력한 연구 커뮤니티의 장으로 국내외에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펠로우십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으며, 해당 분야에서 우수한 학자들에게 수여됩니다. 이러한 콜렉은 인문학 및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 구조의 발전과 네트워킹에 중요한 있습니다. 특히 유럽 및 전 세계의 연구 센터, 대학 및 아카데미와 독일 사이의 네트워크를 강화합니다.(Die Käte Hamburger Kollegs haben sich in ihren Themengebieten als überaus attraktive Orte freier und exzellenter Forschung mit einer starken Anziehungskraft auf die nationale wie internationale Forschergemeinschaft etabliert. Die Fellowships sind sehr begehrt und werden an herausragende Wissenschaftlerinnen und Wissenschaftler im Themengebiet vergeben. Die Kollegs tragen maßgeblich zur Weiterentwicklung der internationalen Strukturen für geistes- und

74) <https://www.ikgf.uni-erlangen.de/>.

sozialwissenschaftliche Forschung sowie zu deren Vernetzung bei. Insbesondere vertiefen sie die für Deutschland wichtigen Beziehungen zu Forschungszentren, Universitäten und Akademien in Europa und weltweit.)”

○ 이렇게 선정된 학자들은 세계적인 수준에 오른 해외의 학자들과 일상생활과 연구를 통해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면 학문후속세대에 속하는 학자들의 경우 6개월가량 머무르며 국제적 안목을 지닌 학자로서 성장하게 된다. 또한 이를 통해 형성한 네트워크는 이후 해외 활동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 저명학자들과 독일 학문후속세대들을 잇는 멘토링 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 시사점

○ 케테 함부르거 콜렉은 한국연구수준의 글로벌화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자원을 투자해 온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까지 한국은 우수학자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일정기간 강연하고 교류하게 하는 프로그램, 해외 학자들과 한국학자들의 공동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주로 이루어졌으나 전자의 경우 일회성 교류에 그치고 후자의 경우 이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룹의 성장을 돕는 이상으로 진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왔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듯 안정적인 협력은 장기적 인적관계가 뒷받침될 때 더욱 효율적이 되는 만큼 레지던스 펠로우십을 위주로 하는 케테 함부르거 콜렉 모델은 향후 한국의 인문학 지원모델로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또한 한국의 학문후속세대의 연구 수준 글로벌화라는 면에서도 케테 함부르거 콜렉 모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우리는 주로 학생들의 연수를 일정기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정책을 펴왔지만, 이는 학생들의 적극성에 성과가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다는 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에 비해 국내에 해외의 저명학자들을 고정적으로 10-20인가량 일정기간 체류하게 하고 이를 통해 국내 학문후속세대가 성장하게 하는 모델은 교류의 안정성 면에서나 나아가 투자대비 아웃풋의 면에서도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모델이다.

○ 케네 함부르거 콜렉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주제의 과감성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주제들은 앞서의 특별연구센터보다도 더 포괄적이고 도전적으로 설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국제적 교류를 통해 이러한 주제들을 개척하고 연구하는 허브로서 자리 매김한다. 이를 통해 세계적인 인문학 연구의 선도주자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 총평

○ 케테 함부르거 콜렉은 인문학 연구의 글로벌 화를 추진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비용대비 성

과 면에서나 안정성 면에서 충분히 적실성이 있다. 특히 국내 인문학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 관련 학문을 중심으로 관련분야의 해외 연구자들과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기도 하다. 단지 동아시아학과 동아시아학 차원의 교류가 아니라 앞서 본 에를링겐-뉘른베르크 대학의 서양중세학-중국학 결합처럼 창의적인 연구주제의 개발도 가능하다. 앞으로도 계속 벤치마킹이 필요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4.5. 전문가그룹 인터뷰에 제시된 사례

□ “모든 국가사회정책이 인문학적 역량을 바탕으로 했다”는 관점 아래 국가 차원에서 인문사회학술 교육이 중심이었던 대학 등 고등교육 기관을 설치하고 장려한 것은 모두 사회의 문제를 포착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한 사례이며, 인문학 관련 각종 국가고시를 실시해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인문학 기반 인재 양성 정책 수행을 통한 문제 해결의 사례로 들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인문사회학술은 국가 내지 문명 차원에서 다양한 문제 해결에 기여해온 점도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고 보았다.

□ 인터뷰 답변 중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례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 우리의 역사에서는 고려 왕건이 지식인들을 적극 포섭하여 새로운 나라를 운영할 정치사상을 다졌던 예,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와 세종 대의 수준 높은 과학 발전 등이 제시되었다. 서구의 역사에서는 문예부흥운동이었던 르네상스, 인문학술운동이기도 한 종교개혁 등이 꼽혔다. 또한 빌헬름 3세 대학 설립, 미국 시카고대학이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게 된 계기 등과 같이 대학의 설립과 성장, 성숙을 예로 들기로 하였다.

○ 인문학이 태생적으로 기억과 기록, 문자의 발명과 연관을 가진다는 점에서 인류의 역사상 집단의 기억을 의식적으로 보전하고자 다음 사례가 제시되었다.

■ 헬레니즘 시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소아시아의 페르가몬 도서관

■ 7-8세기에 이르는 짧은 문예 부흥기를 통해 카롤루스 대제의 프랑크 왕국(Francia)은 고전-고대 문명이 온전히 소실되는 것을 막아낸 역할을 해냈다.

■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근대에 설립된 왕립학회는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데 이바지한 역사적 과오도 있지만, 국가 단위로 지원받은 덕분에 각급 국가에서 인문사회 학술 전반이 사회 근간을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 그 성과를 온전히 평가하기 조심스럽지만, 제국주의 일본이 설립한 일군의 제국대학 역시도 전후 일본의 학문이 부흥할 수 있었던 산실 역할을 했다.

○ 문명의 전환 과정에서의 사례로, 곧 세계 주요 문명의 탄생시기와 대변혁기에 각 문명의 주체들은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통합하며, 여러 갈등 상황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문학적 자원을 활용하였다. 각 시대의 인문학의 주요 역할은 자신의 언어로 타 문명을 번역하고 그 결과를 사전으로 출판하는 것이었다.

- 8-12세기 이슬람 제국과 아랍어 번역의 시대
- 13-14세기 몽골제국
- 14-16세기 중세 르네상스와 인문주의 운동
- 유럽 종교개혁
- 14-18세기 명청대와 유럽(예수회)
- 일본의 난학과 메이지 시대
-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시대

○ 시대 과제의 해결이라는 차원에서는 영국에서 상품의 등가교환을 원칙으로 하는 경제체제를 수립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사상적 기초를 구축한 예, 미국의 남북전쟁을 거친 노예 해방과 이후 1960년대에 이루어진 흑인의 시민권 운동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였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례도 제시되었다.

- 한국의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된 2010년대 후반, 2020년대 초반의 법제도 개정
- 영국 국가 차원(내무성)에서 연구책임자 테드 캔틀(Ted Cantle)의 주도하에 발간된 ‘캔틀 보고서(Cantle Report)’가 발행되었으며, 이 보고서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보다 깊은 지식, 다양한 문화들 사이의 상호 접촉,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커뮤니티 결속”의 증진과 “교차 문화적 접촉(cross-cultural contact)”의 필요성 강조.
- 2008년 유럽의회가 다문화주의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상호 문화 대화를 제안한 예.
- 호주의 지역 신문 공동체가 호주의 현재 기후 위기 상황을 지역 이슈로 다루기 위해 시민과 함께 하는 공공 토론의 장을 마련하면서, 기후 위기 문제가 당면한 주제임을 설득하기 위한 시민 포럼을 운영한 사례.
- 현재 대표적인 국제기구인 UN과 그 산하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은 그 기반이 인문사회학술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가령 세계은행(The World Bank)이 많은 개발도상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수행하는 수많은 프로젝트의 기반은 인문사회학술 기반이라고 볼

수 있음. 대표적으로 빈곤의 퇴치를 위한 지원, 문맹 퇴치를 위한 교육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함. 또한 교육과 관련한 UNESCO의 활동 역시 이에 해당함.

○ 인문학 진흥 사례로 미국에서 1965년에 대통령 직속 독립 연방 기관(independent federal agency)으로 설립된 국립인문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NEH)을 들기도 하였다.



5

결론



5. 결론

□ 우리 연구진은 국가가 인문진흥의 책무를 인지하고 이의 명실상부한 실천을 위해서는 인문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인문정책 거버넌스의 이론적 근거를 구축하는 과업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우리 연구진은 국가가 인문진흥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이념적·역사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문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의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양과 서양 공히 인문·인문학은 제반 삶과 삶, 사회의 기초이자 기본 역할을 담당해왔고, 그들은 고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천하 경영, 국가 통치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인문이 순수 지향형 인문학과 경제를, 또 인문정책 거버넌스가 인문학과 경제를 유기적으로 매개해주는 장(場)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 연구진은 경제적 인문을 인문정책 거버넌스 구축의 이론적 근거로 제시하였다.

□ 우리 연구진은 인문학은 인문과 분명하게 다름을 전제하였다. 인문은 ‘인간다움의 무늬’라는 뜻이고, 인문학은 이러한 인간다움과 그 제반 소산이 공부 대상이자 실천 자체인 학술이라고 규정하였다. 물론 한국사회에서는 인문학이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과 같은 분과학문의 하나로 축소되면서, 이러한 인간다움과 그 제반 소산 및 연관된 실천을 부차화하면서 ‘순수학문’으로서 인식되어왔다. 이러한 ‘순수학문으로서의 인문학’은 인문을 다루고 실천하는 인문학과 사뭇 다르다. 인간다움에는 순수학문의 공부 대상, 이를테면 권력이나 금력(金力), 장수 등으로 대변되는 세속적 가치와는 거리를 둔 지향도 들어 있지만, 실은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 공학 등 이른바 이과 계열의 학문도 엄연히 인간다움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그 소산 또한 인문에 속한다. 인문학이 이러한 인문을 다루는 학술이라면 이런 점에서 인문은 ‘기초학술로서의 인문학’에 가깝거나 일치한다. 인간다움을 다룬다는 것은 인간을 삶과 사회, 자연에 위치시켜 놓고 사유하고 느끼며 상상한다는 것이고, 이는 사람과 사회, 삶과 삶의 기초를 이루기 때문이다. 바로 이점으로 인해 인문학은 본성적으로 경제를 지향한다. 인문학이 다루는 대상이 사람과 사회, 삶과 삶이기 때문이다. 곧 사람을 삶과 사회에 위치해놓은 상태에서 삶을 추구하고 실천하기 때문이다. 인문정책은 이러한 인문학이 경제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매개자이자 장이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 인문정책 거버넌스이다.

□ 이러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 연구진은 다음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주요 내용, 추진 방법을 제시한 후 우리 연구에 필요한 주요 용어에 대한 전제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전근대시기 중국과 서구에서의 인문과 인문학, 인문주의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고, 경제와 경제적 인문의 개념에 대하여도 고찰하였다. 또한 인문정책과 인문정책 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하여도 기본적 사항을 점검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 연구진이 수행한 전문가그룹 인터뷰 답변 가운데 이러한 전제적 고찰과 연결된 의견도 함께 활용하였다.

○ 2장에서는 인문 개념의 재구축 필요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우리 연구진은 이를 인문을 둘러싼 외부환경으로서의 문명 차원과 한국사회 차원, 인문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는 학술생태계의 세 측면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곧 “인문을 둘러싼 문명조건의 근원적 변이”, “선진성을 구현하지 못한 선진국, 한국”, “학문의 위기 확산 및 심화”라는 차원에서 인문 개념의 재구축 필요성을 고찰하였고, 그 결과를 각각 “문명조건의 심층적·근본적 변이”와 “고전적 인문과 디지털문명 사이의 불화”, “초갈등사회, 소모사회 한국”, “‘인문복지’의 미비, 높지 않은 인문적 성숙도”, “선도국가, 보편문명국가라고 할 수 없는 한국”, “인문학의 대학에서의 퇴출, 대학의 위기 심화”, “학문의 위기, 인문의 위기, 인간의 위기”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 3장에서는 인문의 재구성 작업을 ‘기초학술’ 개념의 재정립과 ‘경제적 인문’ 이념의 복원을 토대로 수행하였다. 기초학술 개념의 재정립을 위하여 ‘학술’과 ‘학술 기초’ 및 ‘기초학술’ 개념을 검토하였고, 경제적 인문 이념의 복원을 위하여 이론적 근거와 역사적 근거를 고찰하였다. 이론적 근거로서는 고대 중국에서 ‘동태적(動態的) 인문’, ‘동사적 앎’,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의 되먹임구조’라는 전통에 주목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고찰하였으며, 서양에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 르네상스시대의 인문과 인문학에 대한 관념을 살펴보고, 역사적 근거로는 전근대시기 중국에서는 ‘고대 중국의 학정일체(學政一體) 전통’, ‘역대 중국의 황실 주도 도서사업과 출판사업’을, 서구에서는 ‘인문학이 만든 로마 국가와 로마문명’, ‘그리스·로마의 인문진흥과 르네상스시대의 인문부흥’, ‘서구 근대를 빛낸 인문학’ 전통에 주목하여 고찰하였다. 한편 경제적 인문 이념의 복원을 위한 근거를 이론적, 역사적 차원 외에 우리 연구진이 수행한 전문가그룹 인터뷰 답변 가운데서 추출하여 함께 제시하였다.

○ 4장에서는 전근대시기 중국과 고대 그리스로부터 현재까지의 서구의 역사에서 인문이 일국 차원 내지 제국 차원, 나아가 문명 차원에서 세상 경영의 토대이자 원천으로, 또 방법으로 활용된 사례를 추출하여 고찰하였다. 한자권에서는 중국 전국시대의 직하학궁과 조선시대의 규장각에 대하여 살펴보고, 서구에서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르네상스시대의 인문진흥의 사례, 오늘날 프랑스와 독일의 인문진흥 정책 등을 고찰하였다. 또한 우리 연구진이 수행한 전문

가그룹 인터뷰 답변에 제시되어 있는 국가사회 차원에서 수행된 인문사회학술 기반 정책적 대응의 사례를 정리하였다.

○ 한편 우리 연구진은 연구 수행에 참조하기 위하여 전문가그룹 서면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전문가그룹은 인문사회학술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정책 연구에 참여했거나 전문학술지 논문 발표 등의 연구 활동을 수행해온 전문가 및 학문후속세대, 언론계의 학술전문기자, 출판계의 학술저서 전문 출판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하였고, ‘시작-도입-전환-핵심-마무리’ 단계에 따라 구성된 9개의 질문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에 응답한 23인의 답변 내용을 분석하여 <부록>으로 달았다.

□ 우리 연구진은 전근대시기 한자권의 인문과 경제의 개념과 전통에 대한 고찰을 통해, 또 서양의 인문과 인문학, 인문주의 개념과 전통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인문이 본성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 모두에서 천하 경영과 국가 통치와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문명의 요람이자 그것의 기틀을 빚어내는 차원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도 확인하였다.

○ 단지 이념적 차원에서만 이러한 것이 아니라 동양과 서양 모두 실제 역사에서도 그러했음도 확인하였다. 예컨대 중국 전국시대의 직하학궁과 역대 통일왕조의 대규모 도서 정비와 간행 사업 및 조선시대 규장각의 사례를 통해, 고대 그리스부터 로마와 르네상스 및 근대에 걸쳐 인문학이 국가 형성부터 운영과 유지 및 갱신의 토대가 되었음을 통해, 인문이 경제의 근간이자 원천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곧 인문을 요체로 하는 인문학이 동양과 서양 모두에서 경제의 근간이자 원천으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인문은 본성적으로 ‘쓸모없음의 쓸모[無用의 用]’, ‘이익 없음의 이익[無益의 益]’ 등의 표현으로 대변되는, 이를테면 ‘순수’만을 지향한다거나 그것만이 인문의 참된 본령이라고 간주함은 비역사적인 판단임을 알 수 있었다.

○ 단적으로 인문은 경제와 순수를 양대 기축으로 삼아왔던 것이며, 이 둘은 서로가 서로에게 되먹임되는 회로를 구성하며 동전 하나의 양면과도 같은 양태를 이루어왔다. 이러한 점에서 인문정책 거버넌스 구축의 이론적 근거로 경제형 인문을 제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와 인문정책이 한 몸처럼 연동되어 있던 역사의 복원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국가가 인문정책을 수립, 집행, 갱신해야 함은 물질적 차원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사회가 문화적 차원에서도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와 인문정책의 결합은 선진국만의 특징이 아니라, 국가가 국가로서의 기본을 수행하고자 하는 한 항상 실현되어 왔다. 우리 연구는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이러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한국이 국가로서 당연히 이행했어야 할 인문정책의 수립과 집행, 갱신과 같은 국가 책무를 그동안 방기해왔음을 확인하였다.

□ 이념적, 역사적 차원 모두에서 인문이 경제와 밀접하게 연동되었음은 경제적 인문이 21세기 한국 상황에서 새롭게 빚어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해준다. 다시 말해 과거로부터 순수한 지향을 지닌 인문만이 존재해왔는데, 이제 선진국 진입이나 디지털문명으로의 대전환 같은 근본적 변이를 겪는 한국사회의 필요에 의해 경제라는 새로운 지향을 기존 인문에 더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곧 동양이나 서양 모두 고대로부터 인문은 순수 지향적 경향성과 경제 지향적 경향성이 늘 함께 있어왔음에도 한국사회에서는 전자만이 참된 인문이라는 관념이 지배적이었을 따름이다. 우리 연구진은 이러한 한쪽에 치우친 인문 개념만을 인문정책과 그 거버넌스의 이론적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 순수 지향적 인문은 ‘입세(入世)’보다는 그 반대쪽에 놓인 ‘출세(出世)’의 경향성이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 지향적 인문이 인문정책과 그 거버넌스의 이론적 근거가 되어야 하며, 이는 수기와 치인의 되먹임 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순수 지향적 인문의 진흥과 생래적으로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순수와 경제를 양 날개로 형성되고 작동되었던 인문의 역사와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 동양과 서양의 역사를 통한 경제적 인문의 복원 작업을 토대로 우리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전근대시기, 한자권의 경제학(經世學) 전통에서 여실히 확인할 수 있듯이, 또 국가나 제국, 문명을 빚어내고 이를 유지, 갱신하여 갔던 고대 그리스와 로마, 르네상스의 인문진흥과 근대 서구의 전 지구적 확장 과정에서 분명하게 목도할 수 있듯이, 인문은 국가와 사회의 ‘미래 설계자’이다. 또한 국가와 사회 경영의 기반이자 동반자로서 ‘지속 가능’한 국력 창출의 새로운 원천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여 왔다.

○ 특히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선 지금, 인문을 기반으로 우리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구체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실현해야 할 소명이다. 이는 인문이 순수 지향적 인문학만을 고수해서는 안 됨을 밝히 말해준다. 또한 ‘선진국-선진국다움’의 창출과 지속 가능한 갱신을 위해서는 순수 지향적 인문 하나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함도 분명하게 일러준다. 한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구동되기 위해서는 ‘과학흥국’과 ‘인문경국’의 양 날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청에 명실상부하게 부응하기 위해서는 순수 지향형 인문과 경제 지향형 인문의 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

□ 우리 연구진은 전문가그룹 서면 인터뷰를 통하여 향후 구축하여 갈 인문정책 거버넌스를 기

반으로 수행하여 갈 타당한 인문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들었다. 그 내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 인문정책 수립의 방향성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 기본 원칙 차원 : 학문의 성격상 당장 가시적 성과를 산출하는 데 비중을 두기보다 중장기적 비전을 두고, 한국사회의 기초학문의 방향성을 차근차근 다져나갈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정비하여야 한다. 여기서 연구 환경이라고 함은 가령 ‘필요한 전문 인력 대거 확충’, ‘전문 인력의 안정된 기반 구축’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의 안정성 마련 같은 것이다.

■ 인문정책의 법적 기반 확보 차원 : 학술 진흥을 위해서 전문 연구자들의 생계와 연구 여건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국가 단위의 지원 정책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 인문정책 예산의 안정적·구조적 확보 : 국가 R&D예산 편성에서 인문사회 분야 예산 배정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령 정부의 국책연구 사업에서 최소 5% 정도 인문사회 분야의 참여 의무화 같은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 지역 균형 발전에의 기여 : 지자체 중심으로 개별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 중심의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

■ 학문 분야 간 균형 발전 : 모든 학문 분야가 적절한 수준의 연구와 교육역량을 상시적으로 유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학문의 다양성을 위한 연구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틀인 기초과학과 공학 분야, 인문사회 연구비 지원 비율의 형평성이 실현되어야 한다.

■ 여성 연구자 지원 강화 : 여성 연구자의 학술 커리어 관련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이공계 열에서는 200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젠더와 커리어 관련 정책을 개발해왔으며, 국내 이공계 열 여성 연구자 지원은 정책의 근거 법률과 기본 계획, 구체적 제도가 모두 마련되어 있음에도 인문사회 분야 여성 연구자의 경우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 학문후속세대 연구 여건 개선 : 신진 연구자와 독립 연구자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육’과는 별개로 오롯이 학술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는 전문 연구자 양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가령 BK 혹은 HK 등의 국책사업들은 실질적인 연구 지원과 거리가 있어, 신진학자 및 학문후속세대들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 지원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인문정책 수립의 목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 국가의 정책 수립 및 지원은 목적 : ① 학문적 성과를 진작시키는 것, ② 대학원과 학부에서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것, ③ 대학에서 전임으로 일하지 않는 박사급 학자들이 연구할 환경을 조성하는 것, ④ 인문학 및 사회과학 성과를 사회에 확산하는 것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안정적인 연구 기반의 조성과 실질적 지원 : 연구자들이 개인연구 및 집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 및 연구 환경 조성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령 학문후속세대, 신진 연구자, 중견 연구자에 맞춤형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대학별·지역별로 인문사회연구자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인문사회연구의 인프라 및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안정적 지원

■ 한국 인문학의 경세 역량 제고 : 우리 사회에 필요한 주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정책 과제나 산업의 필요에 해당하지 않는, 그리고 현재의 정책 방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다른 관점을 드러낼 수 있는 연구 과제를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 또한 국가의 책임이다.

■ 한국 인문학의 국제적 발신 : 인문사회학술 성과의 국제적 발신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향후 인문사회학 지원 사업은 한국 인문사회학이 글로벌 선도 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인문사회 분야 산학협력 모델의 구축 : 인문사회학술의 장과 사회 사이의 가교를 놓고 그 가교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산학 협력 모델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데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학술 연구와 출판 분야 간 유기적 체제 구축 : 인문사회학술과 밀접한 출판 정책이나 도서관 정책 등도 규모가 영세할 뿐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채 분절되어 있다. 인문사회학술 서적 출판에 대한 인식 전환과 체계적 지원을 통해 학계와 출판계가 상생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 인문정책의 구체 방안

■ 연구자 기본 소득제 도입

■ 인문사회계열 박사과정생들의 집단 연구대학 구축

■ 연구 활동의 노동 인정

■ 기존 대학원 지원 사업의 확대 강화

■ 인문사회 박사과정생에 대한 생활장학금 도입

■ 인문사회학술 지원의 법적 토대 구축

■ 전문 학술기구의 설립 : 인문정책 중추기구(control tower), 독립적·자율적 조직과 기구, 국가고등교육원, 정부의 학술정책 전담부서(교육부 학술정책국 등), 한국 인문학 기반 융

합 연구 센터 등.

- 국가 교수제도 도입
- 현행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 사업의 확대, 강화
- 대학과 대학 밖의 인문학에 대한 투 트랙 지원
- 대학의 인문사회학술 지원 방안 : 전략 인문학과 선정, 지역대학 네트워크 육성, 국가 보호 단과대학·학과 제도 도입(등록금 감면 내지 폐지, 생활장학금 지급 등)
- 대학 학부교육의 보통 교육화 실현

참고문헌

- 강순애(1986), “正祖朝 奎章閣의 圖書編纂 및 刊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 9.
- 강혜선(1999), “정조의 문예진흥과 시문선집의 편찬”,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창간호.
- 고병권(2001), 『니체, 천 개의 길 천 개의 눈』, 서울: 소명출판사.
- 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학술진흥장기비전위원회(2010), 『2030 인문사회 학술진흥 장기비전』.
- 권기석(2021), “正祖 御定·命撰書의 간행과 국가적 역량의 효과적 활용”,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제45집.
- 김귀옥·주윤정·최윤·홍덕구(2022), 『새로운 인문사회 학술정책 거버넌스 구축과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남두·김영식 편(1996), 『대학 개혁의 과제와 방향』, 서울: 민음사.
- 김문식(2009), “규장각: 정조대(正祖代) 인문정책의 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 포럼』 1호.
- 김석수 등(2008), 『한국 인문학의 자기 성찰과 혁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월희(2009), “동태적 인문으로서의 통합적 학문”, 『탈경계 인문학』 제3집.
- 김월희(2011), “배타적으로 빛나는 중화—인문, 예 그리고 ‘문명한 상태’의 표지”, 김민정 등, 『문명 안으로』, 파주: 한길사.
- 김월희(2011), “직하학궁과 전국시대의 글쓰기”, 『중국의 지식장과 글쓰기』, 서울: 소명출판.
- 김월희(2013), “인문의 토대 변이와 중국어문학자의 향방”, 『중국문학』 제77집.
- 김월희(2017), “포스트휴먼과 죽음—공자, 장자, 도잠, 노신이 죽음을 대했던 태도와 현재적 쓸모”, 『중국문학』, 제92집.
- 김준혁(2008), “정조대 정치체제운영과 개혁정책”,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동양정치사상사』 제7권 제2호.
- 김현(2011), “역사적 상상력으로 재구성한 문명의 기원”, 김민정 등, 『문명 안으로』, 파주: 한길사.
- 다치바나 다카시, 이정환 옮김(2005), 『도쿄대생은 바보가 되었는데가』, 서울: 청어람미디어.
- 데이비드 B. 허니, 안재원·최정섭 번역(2018), 『위대한 중국학자: 중국의 전통을 탐구한 서양 고전 문헌학의 역사』, 서울: 글항아리.
- 도승연(2016), “현대 과학기술에 내재된 다중 인격의 강화 가능성과 정보윤리학의 역할”, 한국여성철학회, 『한국여성철학』 Vol. 25.

- 도승연(2020), “미래 학문으로서의 교양교육의 형식과 주제에 대한 제언”, 한국교양교육학회,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 2020 No. 6.
- 도승연(2022), “메타버스 시대, 디지털 공동체의 지향적 가치와 실천의 과제들”, 한국인터넷윤리학회, 『The Digital Ethics(디지털 윤리)』 Vol. 6 No.1.
- 도승연(2023), “메타버스의 기술적 특징과 디지털 시민교육 : 가상-물리 세계의 연결성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다문화사회연구』 제16권 제1호.
- 박성수 · 이득재 · 김정인 · 노명우(2004), 『21세기 인문지식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식공유체계의 재정립 및 활성화 방안-인문과학의 개방』, 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총서 2004-01.
- 박준 · 정동재(2018), 『사회갈등지수와 갈등비용 추정』,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8권.
- 박성원 등(2023), “청년세대의 부정적 미래인식과 개선 방안”, 『Futures Brief』 제23-05호, 국회미래연구원.
- 벤자민 슈월츠, 나성 역(1996), 『중국고대사상의 세계』, 서울 : 살림.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2010), 『서울대학교 교양교육과정 운영에서 인문대학의 역할에 대한 연구』.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2010),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의 교육이념 및 정체성 문제 연구』.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1994), 『현대의 학문체제와 대학교육—연구중심대학의 교육 및 연구 편제』.
- 손동현(2006), “인문교양교육의 의미와 과제”,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편, 『인문과학』 제37집
- 손동현(2009), “인문학과 인문교육의 동원성 회복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포럼』 제4호.
- 손동현(2009), “교양교육의 새로운 위상과 그 강화 방책”, 『교양교육연구』 제4권 제2호.
- 신상규(2017), “하이퍼히스토리과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학”, 일송기념사업회 편, 『디지털 시대 인문학의 미래』, 서울: 푸른역사
- 심경호(2000), “문헌고증과 해석, 그리고 현실에의 매개적 참여”, 『중국어문학지』 제7집.
- 안재원(2014), 『인문의 재발견』, 서울 : 논형.
- 안재원(2019), 『원천으로 가는 길 : 서양 고전 문헌학 입문』, 서울 : 논형.
- 안재원 · 김월희(2016), 『동양과 서양을 만들어진 고전의 힘, 그 역사를 읽다』, 서울: 현암사.
- 안재원 · 김월희(2021), 『인문정신이란 무엇인가—동서양 고전과 문명의 본질』, 서울: 도서출판 길.
- 에리히 얀치, 홍동선 역(1989), 『자기조직하는 우주』, 서울 : 범양사.
- 우윤석(2008), “감성지능적 정부의 개념화와 구현을 위한 모색: 미학적 아나로기와 도구적 활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46권 2호.
- 윤비(2018), “중세 제국, 보편권력, 인민주권”, 한국서양중세사학회, 『서양중세사연구』 통권 제41호.
- 윤비(2019), “발터 폰 데어 포겔바이데(Walther von der Vogelweide)의 제국관-13세기 제국론,

- 독일 민족의식, 로마교회 비판”,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연구』 통권 제114호.
- 윤비(2019), “중세학과 동아시아학의 만남 : 행복한 결합일 수 있는가?”, 한국서양중세사학회, 『서양중세사연구』 통권 제43호.
- 윤영수·채승병(2005), 『복잡계 개론』,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 위행복 등(2022), 『인문사회 학술의 종합적 분석을 통한 문명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인문사회 학술의 역할과 방향 재정립』, 한국연구재단.
- 이매뉴얼 윌러스턴 외, 이수훈 역(1996), 『사회과학의 개방』, 서울 : 당대.
- 이대희(2005), “감성 정부와 이성 정부의 비교론적 고찰”,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6권 제1호.
- 이명석(2022), “거버넌스 이론화: 기각된 또 하나의 대안?”,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 이부형·박용정(2016), “사회적 갈등의 경제적 효과 추정과 시사점-사회적 갈등 개선으로 3%대 성장 가능하다!”, 『한국경제주평』 718권, 현대경제연구원.
- 이석우(1998), 『대학의 역사』, 파주: 한길사.
- 이승환(2007), “동양의 학문과 인문정신”, 한국학술협회의 편, 『인문정신과 인문학』, 아카넷.
- 이영호 외(2003), 『대학 인문교양교육의 현황 진단 및 정책 대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이재두(2020), “정조대의 전국읍지 편찬 사업 재검토”,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 제189집.
- 이종선(2014), “수기이안인(修己以安人) 체계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가을호 제37권 제3호(통권 136호).
- 이중원(2017), “다가올 로보 사피엔스의 철학적 문제들”, 일송기념사업회 편, 『디지털 시대 인문학의 미래』, 서울: 푸른역사.
- 이진경(2007), “자본주의의 미래, 미래의 자본주의”, 이진경 편, 『모더니티의 지층들』, 서울: 그린비.
- 이태수(2006), “한국 학부교육의 과제—현실, 위기 및 혁신”,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제2회 기초교육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 이태수(1996), “대학 교양교육의 이념”, 김남두·김영식 편, 『대학 개혁의 과제와 방향』, 서울: 민음사.
- 이-푸 투안, 구동희·심승희 역(1995), 『공간과 장소』, 서울: 대운.
- 이현주 등(2022),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45~64세 집단의 사회적 불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인토르체타, 안재원 편역주(2020), 『위대한 중국학자 인토르체타의 라틴어 증용』, 서울 : 논형.
- 임의영(2004), “행정의 새로운 개념으로서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사회정치학적 관점의 변화를 중심으로”, 강원행정학회,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통권 제2권 제2호.

- 임형택(2009), 『문명의식과 실학 : 한국 지성사를 읽다』, 파주 : 돌베개.
- 임형택(2011), “다산 정약용의 교육사상과 공부법 : 전통적인 인문 개념과 정약용의 공부법”, 다산학술문화재단, 『다산학』 18호.
- 정옥자(2006), “奎章閣의 지식기반사회적 의의와 동아시아문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 29.
- 제레미 리프킨, 이경남 역(2010), 『공감의 시대』, 서울 : 민음사.
- 제레미 리프킨, 안진환 역(2012), 『3차 산업혁명』, 서울 : 민음사.
- 조미원(2011), “중국 실학 담론의 지형 검토—사회인문학의 전망 모색과 관련하여”, 중국근현대사학회, 『중국근현대사연구』 제50집.
- 존 어리(2014), 강현수 · 이희상 옮김, 『모빌리티』, 서울 : 아카넷.
- 조지 리처(2017), 김종덕 · 김보영 · 허남혁 옮김,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 서울 : 풀빛.
- 최봉규(2019), “모바일 읽기가 이해력을 퇴보시킨다!”, 《KISTI의 과학향기》 제3295호.
- 최성우(2022), 『대통령을 위한 과학기술, 시대를 통찰하는 안목을 위하여-10가지 키워드로 보는 정책 과제의 발자취와 전망』, 서울 : 지노.
- 최성욱(2004),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한국행정학계의 거버넌스 연구경향 분석”,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10권 1호
- 최태현(2014),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의 재고찰 : 설계와 창발 개념의 통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52권 2호.
- 키케로, 안재원 주해(2006), 『수사학 : 말하기의 규칙과 세계』, 서울 : 길출판사.
- 홍상훈(1999), “전통시기 중국의 서사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P. B. 에브레이(2000), 배숙희 역, 『중국 여성의 결혼과 생활 : 송대 여성을 중심으로』, 서울 : 삼지원.

부록

전문가그룹 서면 인터뷰

가. 서면 인터뷰 대상자

○ 인문사회학술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정책연구에 참여했거나 전문학술지 논문 발표 등의 연구 활동을 수행해온 전문가 및 학문후속세대, 언론계의 학술전문기자, 출판계의 학술저서 전문출판인 등을 대상으로 30인 선정하였음.

○ 전문 영역별 응답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인문학계 : 교수-15명, 대학원생-1명
- 인문사회학계 : 교수-3명, 대학원생-1명
- 언론계 : 2명
- 출판계 : 1명

○ 미응답자 전문영역 : 과학사(1), 과학철학(1), 미학(1), 고고학(1), 사회학(1), 학술서전문출판사(1), 언론인(1)

나. 인터뷰 문항

○ 시작 질문

- 질문1 : 선생님의 소속과 전공분야를 말씀해주십시오.

○ 도입 질문

- 질문2 : 인문학, 사회과학 관련 정책연구 수행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어떠한 연구를 수행하셨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연구 결과를 발표하셨다면 서지사항도 알려 주십시오.)

○ 전환 질문

- 질문3 : 우리나라에서 인문사회학술이 처한 현실에 대하여 말씀해주십시오.
- 질문4 : 인문학의 본령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 핵심 질문

- 질문5 : 인문사회학술에 대한 국가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해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지원 내용과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십시오.
- 질문6 : 국가사회 경영, 사회문제 해결 등에 필요한 인문학적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인문학적 역량을 국가사회 차원에서 함양하기 위한 방도에 대하여 말씀해주십시오.
- 질문7 : 인문사회학술을 기반으로 국가 내지 문명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수행한 사례를 알고 계신다면 그에 대하여 말씀해주십시오.
- 질문8 : 국가 차원의 인문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한다고 할 때, 그 기본단위는 다음 중 어느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도 함께 기술하여 주십시오.
 - ① 기초학문(인문사회학술+이론과학+예술학+체육학 등)
 - ② 인문사회학술(인문학+사회과학)
 - ③ 인문학

○ 마무리 질문

- 질문9 : 인문정책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하여 제안이나 조언 등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십시오.

다. 문항별 답변 분석 및 정리 : 전환 질문, 핵심 질문, 마무리 질문

- 질문3 : 우리나라에서 인문사회학술이 처한 현실에 대하여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분석】

○ 우리나라에서 인문사회학술이 대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매우 열악하고 말 그대로 위기 상황이며 서구 유럽이나 이웃한 일본 등 선진국들에 비해, 또한 중국에 비해서도 우리의 매우 척박한 토양 위에 있다. 그동안 이에 대한 크고 작은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렇다 할 근본적이고 획기적이면서 실제적인 해결책이 모색되고 있지 못했다.

○ 이러한 진단 아래 답변에서 제기된 우리나라 인문사회학술의 제반 문제는 다음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① 인문사회학술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문제
- ② 인문사회학술 기반 문제
- ③ 인문사회학술 풍토 문제

- ④ 인문사회학술 역량 문제
- ⑤ 인문사회학술 정책과 지원 문제
- ⑥ 대학에서의 인문사회학술 재생산 문제
- ⑦ 학문후속세대 문제

【답변 발췌】

① 인문사회학술을 둘러싼 외부 환경의 문제

○ 타율적 근대의 역사의 도정에서 특히 근대전환기 무렵 서구 열강을 비롯한 일본 제국의 식민주의 지배와 해방 공간,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분단체제 아래 주체적 근대의 움직임과 가시적 성취가 대단히 미약했다.

○ 오랫동안 군사독재의 반민주화와 국가발전주의 전략에 따른 경제성장주의와 물신주의는 인문사회학술 전반에 대한 국가적 몰이해가 덧붙여지면서 인문사회학술 자체에 대한 가치 폄하와 미숙한 사회적 인식 등이 확산되어 왔다. 그 결과 인문사회학술 관련 ‘전문가 문화’가 사회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 한국사회에서는 인문사회학술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부재하고, 인문사회학술이 지닌 공공성 및 공익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다. 그 결과 인문사회학술은 우리 사회에서 적절한 사회적 위상을 획득하는 데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 역량의 성장보다는 시대적 조류에 편승하는 사고의 가벼움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따라서 인문학이 추구해야 하는 창의성이 존중되지 못하고 있다.

○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의 지위로 올라 선 한국은 추격형 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나아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4차 산업혁명·디지털 대전환 등 기술경쟁시대의 현실에서, 저출산 고령화·초양극화·불평등 심화 등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새로운 국가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인문사회학술은 이러한 시대 변화와 패러다임 전환의 요구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단계이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인식 전환의 과제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주요 의제이다.

○ 다변화, 다양성, 글로벌이라는 용어로 집약될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 단지 경제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 이에 인문학의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이 부각되어 있으며, 이에 도구적 합리성을 중시하고 경제적 합리주의와 과학 기술의 발달이 초래하는 인간존재와 삶의 변화에 주목하게 되었다.

○ 융복합 학문 분야에 대한 학계 안팎의 관심, 정부 부처의 최첨단 학문 분야 지원 계획 등 최

근 우리나라 고등교육, 연구 기관에서는 단일한 기초 학문 분야보다는 학제 간 협업, 나아가 R&D에 치중하고 있다.

○ 인문사회학술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학문이지만, 최근에는 연구의 실용성이 강조되고 경제적 측면에서 대학을 평가하는 풍토가 심화되면서 인문사회학술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과 경제에 대한 연구가 우대되면서, 인문사회학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 인문사회학술 평가에 대한 사회의 왜곡된 인식과 더불어 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이라는 개념이 교육에서 강조된 결과 대학 교육의 핵심 교과목들이 배제되는 등 인문사회 교육에 대한 포기가 심화되고 있다.

○ 대학 입시제도조차 문과를 경시하는 풍조가 팽배해 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입시생들이 이과를 선택함에 따라 우수한 학술 연구 인력이 부족해져 가고 있다. 특히 ‘의대 몰입’은 순망치한처럼 모든 인문사회과학의 존재에 위협적이다.

○ 최근 정부에서 대학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글로벌대학 30’ 사업은 향후 지역대학에서의 기초 학문 분야의 성패, 나아가 존속 여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지식 소비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대중인문학 시장은 확장되었고 다층화, 다양화, 다변화 되었다. 이에 비해 인문지식 생산은 위축 일로에 처해 있다. 한마디로 인문지식 생산과 인문 소비의 불일치 현상이 장기화, 고착화되고 있다.

② 인문사회학술 기반 문제

○ 우리나라에서 인문사회 분야(인문, 사회, 예술, 체육 분야 포함) 연구교육의 생태계는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인문사회학술의 제도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칭)인문사회학술기본법과 (가칭)인문사회정책연구원이 부재한다.

○ 인문사회 분야는 여성 연구자 비율이 상당히 높은 분야임에도 여성 연구자가 연구자로서의 자기 경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기 쉽지가 않다.

○ “대학원이 대학원생들이 좋은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제공하는가?”라는 질문에 결코 “그렇다”고 답할 수 없다.

○ 우리나라 인문사회학술 정책에서 ‘출판’이 갖고 있는 위상은 전혀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학술 출판에 대한 인식 수준은 그저 ‘하청’ 수준일 뿐이다.

○ 한국의 대학 시스템의 단편적 구조를 뛰어 넘는 인문 연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다양

성도 통합성도 확보할 수 없다. 이러한 한국 대학의 학제 시스템 아래에서, 인문학의 원천자료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진행되기 어렵다.

○ 근본적으로 개별 연구가 아닌 통합된 공동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국가의 예산이 투입된 연구 성과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축적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매년 시작되고 한편으로 종료되는 개별 연구 과제의 결과물이 인문 시스템 안에서 축적되지 못하고,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을 투입하여 구축한 아카이브나 DB는 물론, 수년간 꾸준히 출판되었던 국제저널도 개별 연구단에 대한 연구재단 등의 지원이 끊기는 즉시 사라지고 만다.

○ 개별 대학의 이해관계에 따라 연구 주제는 물론이고, 연구책임자도 수시로 교체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연구자가 중심이 되어 연구 아젠다 중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수시로 변화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각 대학 당국과 관련 기관에 휘둘리지 않는 ‘연구자 중심’, ‘아젠다 중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랬을 때 연구의 독립성, 자율성 부족이라는 현상을 타파해갈 수 있다.

○ 연구업적평가는 교수에 대한 통제수단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평가제도에 의한 교수의 속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학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평가의 획일성이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 다양한 고전어 전문가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③ 인문사회학술 풍토 문제

○ 현재 인류가 처한 절실한 당면과제, 즉 기후위기와 전 지구적인 사회적 양극화(둘은 긴밀하게 서로 얽혀 있다)를 극복할 현실적 대안을 내놓으려면 인문학과 사회과학만이 아니라 자연과학과 공학을 포함하여 모든 학문의 협업이 필요함에도 인문학은 이러한 협업에 적극적이지 않다.

○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의 재정 악화로 인해, 학생들의 지원율이 낮아지면서 인문학 분야가 지속적으로 위기 상황에 방치되면서 연구자들의 자존감이 낮아졌고, 그 결과 지적 자부심과 사명감까지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학 거버넌스와 연구자 및 연구 문화(연구윤리 등)의 타락이 상존한다.

○ 한국의 인문학이 내부의 분과학문별 “전문화”와 “폐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연구자의 창의적인 주제 설정이나 자유로운 지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 현대 한국의 인문학은 이전 세기에 한반도에서 축적된 인문학적 자산을 수용하지 않았다. 번역된 문헌과 그 결과물인 사전 등의 원천 자료를 낡은 유산으로 치부하였으며, 데이터로 축적하지도 않았고, 참고하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현대어로 국가적 차원에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번역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인문사회학술 연구에서 종종 정부의 정책 연구가 요청하는 특정한 이념적, 정책적 기능 수행이 강조된다면 자율적 연구가 축소되거나, 혹은 정부 정책 기조에 맞는 연구가 늘어나기에 상대적으로 비판적 관심사가 주변화 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학술 연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물론 많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 정책에의 조응 여부가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연구 자체의 양이나 연구 방향에 영향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다.

○ 고등학문 영역에서 번역은 학문적 깊이가 없는 작업으로 인식되었다. 지금도 교수 임용에서도 교원 평가에서도 번역은 학문적 업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 영어를 제외한 주요 학술어를 구사하는 연구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 임용 또는 임용 연장 필수 요건으로 부과되는 등재학술지 또는 외국 학술지에의 논문 일정 수 기고는 교수 및 전임 연구원들의 연구 역량을 일정 수준 유지하고 제고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지만, 연구 성과 도출에 대한 기한 부과는 국제적 수준의 심층연구나 수준 향상에 질곡이 되기도 한다. 여기에는 국제적 기준의 논문으로 인문사회학술을 평가하는 풍토도 한몫하고 있다.

○ 인문사회학술 분야의 연구자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연구자는 해외 유학과 연구경력을 바탕으로 국제적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연구자는 학계 내부의 경쟁이 치열하고, 연구비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연구에서 지나친 전문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인문사회학자들이 사회가 요구하는 과도한 평가 잣대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 전체보다는 스스로 분야를 좁혀 전문화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중요한 인문학의 본령을 놓치는 경향이 있다.

④ 인문사회학술 역량 문제

○ 우리나라에서 인문사회학술은 ‘패스트 팔로워(추격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왔다. 서구 산업 사회가 축적해 놓은 자산을 모방하고 수용하며, 이미 성공한 길을 따라가며 실패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즉 미지의 새로운 분야를 창조해내고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산업을 선도하는 ‘퍼스트무버(선도자)’로서의 역할을 해보지 않았다.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다.

○ 한국 인문학계는 여전히 원천 자료에 근거한 인문학적 원천 기술을 축적하지 못했다. 인문

학적 기준과 표준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인문학,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연구에 매진해 왔으나, 많은 분야에서 아직 독자적인 연구 방법과 이론을 생산해내거나, 세계 학문의 주류에 포함되어 논의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답론의 학습자, 소개자, 유통자의 위치를 넘어서, 새로운 답론의 생산자인 학자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

○ 학자들이 강의실과 연구실에서 생산해낸 연구들이 우리 국민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를 더 풍성하게 하는 데에도 미흡한 상황이다.

○ 인문학에 대한 협소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소위 ‘인문학자’들의 고루함을 극복하지 않고는 그 어떤 처방도 효과를 낼 수 없다. 무슨 연구를 하더라도 인문학자 나름의 총체적 사회인식과 비판적 시각이 필요함에도, 또한 인문학자의 작업은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인접 학문의 최상의 성과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도 인문학 고유의 상상력과 실천성, 총체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줘야 하는 것임에도 현재 대학 안의 인문학은 거의 그러하지 못하다. 이런 점에서 인문학은 고사 직전이라고 봐야 하며 그 책임의 큰 부분은 바로 인문학자 자신들에게 있다.

○ 인문정신 없는 인문학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한국 인문학이 처한 현실 중의 하나이다. 가령 인문학에 종사하는 학자들의 자가 진단 및 자기반성의 필요성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인문학 본래의 사명과 기능은 인간의 마음을 정화하고 인격을 함양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에도 다수의 인문학자는 문헌을 분석하고 논문을 작성하는 작업만을 인문 교육과 연구의 주요 핵심 영역으로 인정하고 활동하고 있다.

○ 그동안 인문학, 사회과학의 위기를 외친 많은 인문사회영역 교수들은 말로는 위기를 운위했지만 실제로 얼마나 위기를 느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알기 어렵다. 인문학도 사회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적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고 무엇일 수 있는지 충분히 증명하지 않으면, 사회의 지원은 기대하기 힘들다. 그리하면 한국 인문학은 조만간 자연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학계의 재생산이 위기에 빠졌기에, 학문의 생산도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그전까지 학문이 얼마나 존재 의미를 내보였는지는 알기 어렵다. 답론장에서 ‘잡지’ 혹은 ‘문예지’를 중심으로 20세기 후반에 진행되었던 활발한 대사회적 논의는 사라진 지 오래고, 필자와 심사위원밖에 읽지 않는다고 자조하는 ‘논문’이 학술 활동의 거의 전부가 된 상황에서, 과연 사회에 손을 뻗쳐 인문학을 구원해달라고 말할 염치가 있는지 궁금하다.

○ 근본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그리고 생명공학 및 정보기술의 발달, 본격적인 AI의 도입 등으로 자본과 기술에 의해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발생하여 우리 삶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한국의 인문사회학술은 여기에 효과적이고 밀도 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생산되는 답론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일반성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편협하지 않은 포용적 관점과 더불어 이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 우리나라는 국가와 사회의 각종 생활 및 활동 영역에서 급변하는 경제상황과 생산력 발전 그리고 취업의 기회와 질의 측면에서 특히 '자기계발'에 대한 욕구와 수요는 항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방면에서 요구되는 '자기'에 대한 제안과 권고에는 '각자의 스펙을 높이는 인문적 소양'과 '특히 시장과 정치변동과 관련된 사회정세에 대한 정보와 독해능력'에서 우러난 통찰과 판단들이 다채롭게 스며들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대학들의 인문학 교육 및 연구 체계는 현재의 이런 다양한 수요와 다채로운 욕구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데는 여전히 미흡하다.

⑤ 인문사회학술 정책과 지원 문제

○ 우리나라의 인문사회과학은 선진국의 '선도형' 모델 구축에 기여하기는커녕 한국 대학 전반의 위기와 함께 생존의 위협에 처해 있으며 육성정책도 부재하다.

○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이래 한 번도 제대로 된 인문사회학술정책이 없었으며, 압축적 경제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입국'의 구호 아래 과학기술 분야에만 집중 투자가 이루어져 왔다. 이는 진정한 선진국을 만드는 일에 가장 큰 장애물의 하나이다.

○ 학술에 대한 장기적, 계획적 안목 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른 정책 입안과 학술 연구가 실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 결과 학술 연구 및 학술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때에 따라 급속히 변화함으로써 장기적인 안목이 절대적으로 취약하다.

○ 철저하게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학술 연구 및 학술정책이 입안되고 그에 따라 실행됨에 따라 시스템화된, 그리고 규격화된 연구 성과물이 쌓여가고 있다. 또한 견고한 '학진 시스템'에 갇혀 연구자들이 움짱달짝할 수 없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 인문사회학술에 대한 지원들이 서로 연결되어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파편화되어 단편적으로 시행되다 보니 투입되는 재원에 비해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루어지는 지원이라도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기업-시민사회로 이어지는 일종의 인문사회학술 지원의 생태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정 작업이 시급히 필요하다.

○ 정부의 편중된 학술 지원 정책과 인문사회 학술정책 부재에 따른 예산의 부족과 불안정성 문제가 상존한다. 인문사회분야는 이공계 분야와 비교할 때 너무나 적은 연구비가 책정되어 있으며, 국가 R&D 예산 비율이 심각하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인문사회 연구자들은 학술연구비 수주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연구비의 왜소성은 인문사회계 연구자들이 장기지속적인 학술연구를 하지 못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

다.

○ 인문학자로서의 열정과 정제성을 뒷받침할 정책적 지원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대학이 인문학 영역과 인력을 축소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정책도 이를 방조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는 더 가속화되고 있다.

○ 국가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인문학 연구의 방향을 수립하고, 인문학 분야 집단연구 지원 사업 새로운 모델 설계의 기초 자료 제공하며, 인문학 분야 집단연구 지원 사업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신규사업모델 개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문학 사업에 참여 경험자, 인문·사회과학의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신진·중진 연구진들과 신규 모델 개발을 위한 학제 간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전문성과 현장성을 기반으로 한 분석을 토대로 새로운 인문학 지원 사업 정책에 활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⑥ 대학에서의 인문사회학술 재생산 문제

○ 대학에서의 인문사회학술 재생산 구조는 생산성을 현저하게 잃어가고 있다. 대학에서 인문학, 사회과학의 위치가 매우 위축되었다. 졸업 후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비인기 학문으로 여겨지게 되면서, 근본과 뿌리를 다루는 학문인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토양이 약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문적 성과를 생산해내는 능력도 지속적으로 퇴보하고 있다. 대학원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줄어들면서 학문의 흐름을 이어가고 발전시킬 다음 세대의 학자들을 산출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 인문사회학술의 토대라 할 수 있는 문·사·철의 경우 지속적인 출생률 저하, 학령인구 감소의 여파로 각급 대학에서도 그 입지가 날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수가 양적으로는 포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만, 고등교육 개혁 관련 논의에서 지표화 된 수치 이면으로 밀려나 존폐 위기에 이른 것이 인문사회학술 분야이다.

○ 인문사회학술 관련 학과 수뿐만 아니라, 전임교원, 입학 정원도 모두 감소했다. 이는 인문사회 분야의 학문 붕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학문 공동체의 와해를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된다.

○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닌 학문공동체인 대학이란 체제가 신자유주의화로 붕괴되고 변질되며 연구자들의 발밑을 받쳐줬던 전통적인 생존 기반이 무너지고 있으나, 국가와 사회는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인구 위기는 그나마 남아 있는 대학 체제를 빠르게 형해화하여 새로운 연구자의 학문 공동체 진입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선순환도 기대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 대학의 위기는 인문학으로 전가되고 있다. 대학의 구조조정이라는 위기는 사태를 더욱 악화

시키고 있다. 취업과 연계되지 않은 인문학 관련 학과는 통폐합되고 있으며, 이에 인문학계는 학과와 전공의 존속을 위해 궁여지책으로 응용, 실용 학문과 제휴하거나 통폐합되어 낯설기 그지없는 학과, 전공 명칭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기도 한다.

○ 대학의 인문학 내에서도 전공별 불균형이 심하다고 판단된다.

⑦ 학문후속세대 문제

○ 오랫동안 ‘인문학의 위기’를 말해왔는데, 실제 위기의 핵심에는 ‘학문후속세대’의 대가 끊기고 있다는 점이 있다. 인문학의 위기는 ‘대학 내 인문학자’의 위기이며 ‘학문후속세대의 재생산’의 위기로 진단 가능하다.

○ 실제 인문사회학술의 주체가 되어야 할 “학문후속세대”가 연구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도 위기 상황의 중요한 한 측면이다. 특히 인문학 전공자들은, 예를 들면 사회과학 전공자들에 비해 학자로서의 정체성과 생존 측면에서 실제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인문학자로서의 열정과 정체성을 뒷받침할 정책적 지원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 대학원에서 인문학 연구를 전업으로 삼고자 하는 학생들은 날로 줄어들고 있으며, 그나마도 대학원생들의 학업 중단율이 상당히 높다.

○ 박사급 연구자들은 생존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 질문4 : 인문학의 본령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분석】

○ 인문학의 본령에 대한 답변은 다음 다섯 가지로 나누어 정리해볼 수 있다.

- ① 인문학 본령에 대한 고전적 이해와 확장된 이해
- ② 인문학의 역할
- ③ 인문학의 위상
- ④ 인문학이 기르고자 하는 역량
- ⑤ 인문학의 방법론 등으로

【답변 발췌】

① 인문학 본령에 대한 고전적 이해와 확장된 이해

○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문학(人文學, humanities)은 인간에 대한 탐구와 그를 기반으로 한

문화적 산물을 망라하는 폭넓은 용어이다. 실존체로서의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연구, 즉물적 존재이자 자연이라는 보다 넓은 차원의 일부로서의 인간에 대한 탐구, 나아가 소위 문화(文化)와 문명(文明)을 만들어 낸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천착, 이 모든 것들이 인문학이라는 대범주에 아울러지는 것이다.

○ 인문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위한 학문으로서, 인간 자체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하는 학문이다. 가령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곧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가?(곧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나)과 세상은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가?(곧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학문이다. 이를 토대로 삶의 의미(meaning of life)를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역사적으로 축적되어온 인류의 지식 경험과 사유의 본질적 측면을 넓게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인문학은 인류 사회가 축적해온 지적, 학술적 문화유산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 인문학(人文學, studia humanitatis, les lettres ou humanités, humanities, Geisteswissenschaften)은 학문으로서 '종(種)으로서의 인간 또는 인간종human species'을 염두에 둔 '(個)인격체a person'를 반성적reflexive 성찰 대상 또는 보편화적universalizing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가운데 그 감각, 지성, 추론, 상상의 정신세계의 구조와 사변적 작동 방식을 핵심으로 하여, 그 통(通) 시간적·역사적 체험, 예술적·문화적 표현, 종교적·미학적 상상 그리고 공(共) 시간적·사회적인 도덕규범의 실험과 기획을 학문적 과제로 한다.

○ 인문학의 본령은 인문학의 기본 바탕을 이루는 문사철의 튼실한 토양을 바탕으로 한 우주의 못 존재에 대한 가치와 그것들의 관계를 넓고 깊게, 웅숭깊게 탐구하는 것이며, 아울러 이론적 실천과 실천적 이론을 함께 천착하는 것이다.

○ 인문학의 학문적 탐구분야로는, 철학(논리학, 비판적·창의적 사고, 변증론 및 의사소통론, 형이상학 및 존재론, 인식론, 윤리학, 가치론 나아가 각종 분과철학들과 각 철학사), 고전학 및 문헌학(전前현대 및 현대의 동·서양 고전들), 문학 및 문예창작학, 역사학, 언어학(자연언어들 및 일반언어학), 종교학, 예술학(음악(사)학, 미술(사)학, 영화, 연극 및 무용 소재의 공연예술학 등), 문화연구, 문화기획 등을 들 수 있다.

○ 오늘날에는 각종 학문이 분화되고 또 더 정교하게 나뉘거나 어울려 인문학이 간여할 수 있는 대상과 소재도 훨씬 더 다양해졌다. 가령 AI나 XR이라는 영역도 첨단 기술이 가능케 한, 그래서 자연과학이나 공학이 중심이 되는 연구 분야이기는 하지만, 인간 활동 전반의 외연이 확장된 것이기에 인문학 역시도 그 적용 분야를 넓혀가고 있다. 아울러 인간의 의미 내포도 한결 더 분화하여 인간의 정체성 문제는 생식과 성애의 영역에서도 그 논의가 한층 더 복잡해지고 있다. 그만

큼 여전히 인문학 역시도 역동적으로 그 탐구 대상을 다각화, 다양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인문학의 본령은 더욱더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인문학은 문해 활동 전반을 가리킨다.

○ 인문학은 학문 연구 단위가 아니라 교육 단위이다. 인문학을 연구 혹은 학술의 집합으로 보는 현재의 관행이 적절한지부터 먼저 묻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인문학은 ‘핵심 공통 역량’의 교육 활동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요컨대 인문학은 ‘학문 연구’ 분류 단위가 아니라 ‘교육’ 단위로 이해되어야 한다.

② 인문학의 위상

○ 인문학은 전통적으로 인간의 사유와 감정, 욕구, 선택 및 결단 등 인간의 사회생활과 정신 활동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학문이다. 이러한 학문은 인간의 삶의 방법과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사유 방법 등에 관여한다.

○ 인문학은 인간과 사회, 우주자연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고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는 데 인문학은 없어서는 안 될 학문적 영역이다.

○ 모든 학술 활동, 학문적 노력은 분야를 막론하고 인문학적 차원을 지니고 있게 마련이다. 곧 인문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이자 본령이다.

○ 인문학은 가장 실용적인 학문이다. 나와 나를 둘러싼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행복한 나의 삶을 추구하고 나의 삶을 해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그러하다.

○ 인문학을 인문과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인문학 본령이 논제화 될 때 한국의 인문학 관련 종사자들 머릿속의 ‘인문학’에 ‘예술’이 없다. 진과 선은 머릿속에 있는데 ‘미’가 없다. 실천적 차원에서 관찰을 해도 학력 자본은 있는데 예술-문화자본을 가진 인문학자 보기가 어렵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종사자들의 위와 같은 특수성으로 인해 인문학의 본령 자체가 왜소화, 파편화, 특수화로 구현된다는 점이다. 예술 행위, 예술을 아는데 인문학은 모르고, 인문학 기술자인데 예술자본은 전무한 인문종사자들이 대부분이다.

○ 매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른바 통합(섭)학으로서 인문학의 자리를 찾아야 할 때이다.

③ 인문학의 역할

○ 인문학은 인간의 근본을 강화하는 학문이고 동시에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강화하는 학문이다. 이를 토대로 ‘교양 있는 인간’과 ‘성숙한 세상’을 만드는 일이 인문학의 본령이다.

○ 인문학의 본령은 전통적인 자유학예교육(liberal arts education)에서 찾을 수 있다. 자유학예교육은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학문적 탐구 성과를 두루 습득함으로써 인간의 현실적인 삶의 기반과 여건, 그리고 이를 토대로 구현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세계에 관한 총괄적인 지적 조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자연을 토대로 하는 삶의 세계 전체에 관한 안목(세계관),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인간의 본성과 조건, 위상과 존재 의의에 대한 안목(인간관), 그리고 인간의 삶이 지향하는 이상·의미·가치에 대한 안목(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일이 자유학예교육의 과제이다.

○ 인문학을 통해 우리는 인간으로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조명하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개개인의 삶이 더욱더 불안정해지는 오늘날에는 특히 자기 삶의 방향을 적절히 설정하고 이를 성찰하며 지켜나갈 수 있는 자기성찰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인문학의 본령이다.

○ 인문학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분석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복잡한 현대사회와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 인문학은 의사소통 능력과 문화적 문해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상이한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인류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 인문학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기능을 한다. 인류의 발전이 상상력과 창의력의 소산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인문학은 인간의 미래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핵심적이다. 인문학은 무궁한 상상력과 아이디어의 보고이다.

○ 오늘날 한반도의 거주자들과 또 더 큰 범위의 인류·인간이 처한 복합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존 학문의 격벽과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의고적이거나 훈고학적인 인문학과 ‘연구를 위한 연구’, 보편성을 상실한 연구가 외면 받는 것은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인 면도 있다. 인문학적 지식으로 생태계 위기, 현금의 전쟁과 재난, 양극화와 인구 위기 등을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가능한가? 구체적으로 물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주제나 소재, 현실적 필요 그리고 매체·소통 방법 등에서 유용성과 본질성을 가진 인문학은 외면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언제나 온고지신, 범고창신은 중요하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융합과 협응, 통섭도 인문학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 인문학이 없는 미래사회는 과학과 기술이 일방적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과학기술 중심사회(science and technology centered society)에서 인간의 가치는 외면 받고 윤리는 방향성을 잃게 된다. 고로 미래사회가 인간 중심사회(human-centered

society)가 되기 위해서는 인문학의 육성과 부흥이 필요하다.

■ 인문학은 본질적으로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는 영역들을 계속 사고하고 재확정해 나가는 활동이다. 그리고 이 영역에서 만들어진 인간의 역량은 다시금 사회 속에서 ‘과학을 재조직화’하는 구성적 역량이다.

■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강제된 기존 인간관과 인문학적 지식체계의 해체 이후에 새로운 조건에 걸맞은 인간관을 구축하는 인문학적 지식 생산이라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 과학은 각 과학이 설명하고자 하는 논리가 작동하는 분야를 한정적으로 다루어야만 하는데 반해, 인문학은 여러 과학이 중첩되어 작동하는 사회 속에서 인간 집단이 형성하고 있는 인간관과 인식론, 도덕률과 사회의 작동 법칙에 의견을 더하고 개입하는 작업이다.

○ 확장된 문해력과 핵심 공통 역량 : 오늘날 누구나 갖춰야 할 핵심 공통 역량은 확장된 언어 능력이다. 핵심 공통 역량이란 무엇을 지칭하는가? 과거에 인문학이 담당했던 언어 능력, 즉 문해력(literacy)이 핵심이다. 문해력은 삶과 인간과 사회와 자연을 이해하고 다루는 능력이다. 과거에는 언어가 그런 활동의 핵심에 있었다. 문제는 시대가 변해 자연어가 다가 아니게 되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자연어 안에 모든 지식과 기술이 오롯이 담겨 있었지만, 오늘날의 언어는 자연어 외에도 수학, 자연과학, 기술, 예술, 디지털 등으로 확장했다. 따라서 데이터를 읽고 쓰는 능력, 확장된 언어를 다루는 능력, 즉 확장된 문해력이 필요해졌다. 인문학은 언어를 다시 붙잡아야 한다. 단 이때의 언어는 확장된 언어여야 한다. 확장된 언어, 확장된 문해력, 확장된 인문학이다.

○ 인문학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회를 구성해 가는 과정 속에서 타인들과 관계 맺음의 관계를 어떻게 더 ‘인간적으로’ 만들어 가느냐에 있다.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을 단순히 축적해 가는 것은 결국 ‘기능적 지식인’일 뿐, 인간을 둘러싼 거대한 사회 구조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간적으로 삶을 꾸려나가고 관계를 맺을 것인가는 실천적인 덕성을 기반으로 한 행동 양식에 있기에, 이를 함양하는 핵심 키워드가 ‘인문학’이다.

○ 21세기는 과학기술이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물질문화 혹은 기술문화가 주도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인간성 상실이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 인간은 역사의 산물이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이 형성되고 삶의 의미와 행복을 추구하게 된다. 인간, 사회, 국가 및 세상에 대한 이해와 성찰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문학이라고 생각한다.

④ 인문학이 기르고자 하는 역량

○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힘’을 기른다.

○ 인문학의 본령은 비판의식, 상상력, 공감능력과 실천성, 다시 말해 진선미의 일체화에 있다. 다른 말로 바꾸자면 인간의 자기의식, 자기성찰, 자기비판에 있다. 곧 이와 관련된 역량을 기르게 데 있다.

○ 자유학예교육을 본령으로 하는 인문학은 각 분과 학문의 교육에서 얻는 특정 영역의 지식을 조망하고 연계시키는 폭넓은 시야와 이를 종합·통합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주는 교육일 때 제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복잡한 사안을 섬세하게 세분하여 명료화할 수 있는 분석적 사고 능력, 그리고 분석된 내용을 다시 종합·통합할 수 있는 종합적 사고 능력, 논증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 능력, 오류를 식별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 시각의 전환을 통해 문제를 새롭게 보고 새롭게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 능력 등을 함양하는 교육이 기초로서 필요하다.

○ 인문학의 본령 구현에는 다음과 연관된 역량의 증진이 필요하다.

■ 인간에 대한 관심과 사랑 : 인문학은 인간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인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다면 인문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없다.

■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 : 인문학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대한 통찰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학문이다. 인문학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 다양한 시각의 수용 : 인문학은 인간의 삶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학문이다. 자신의 시각에만 갇히지 않고, 다양한 시각을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⑤ 인문학의 방법론

○ 인문학의 연구방법 : 자연현상들을 대상으로 하여 관찰, 실험, 통계화 및 수학적화 등 주로 경험발견적·양적일반화적 접근(empirical-heuristic & quantitatively generalizing approach)을 연구방법으로 하는 ‘자연과학’이나, 인간관계들의 공시시간적 총체인 사회적 생활세계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연과학과 같은 앞의 경험적·양적 접근(empirical-quantitative approach)뿐만 아니라 참여 관찰이나 대화 등의 상호주관적 의사소통과 같은 공(共) 주관적 접근(co-subjective approach)을 연구방법으로 하는 ‘사회과학’과는 다소간 다르게,

■ 이 학문들의 접근법을 총괄적으로(overall) 염두에 두는 가운데,

■ 명제, 진술, 문장들 등 언어적 표현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리적 분석(logical

analysis).

■ 언어적 표현체들 및 감각적·조형적 작품들과 같은 상징물들에 대한 의미이해와 소통을 기하는 해석학적 이해(hermeneutic understanding)

■ 자기 또는 타아에 대해 상호작용하는 문화적 의사소통의 창출(creation of cultural communication)

등 주로 의미 이론적 접근(meaning-theoretical approach)을 연구방법으로 함.

□ 질문5 : 인문사회학술에 대한 국가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해주십시오. 필요하다고 보신다면, 지원 내용과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십시오.

【답변 분석】

○ 인문사회학술에 대한 국가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는 응답자 전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 인문사회학술에 대한 국가 지원과 관련한 의견은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① 국가 지원의 필요성
- ② 국가 지원의 타당한 방향
- ③ 국가 지원 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국가 지원 방안은 다시 학술연구 지원 방안과 대학의 인문사회학술 지원 방안으로

【답변 발췌】

① 국가 지원의 필요성

○ 인문사회학술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꼭 필요하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현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우리 개인과 사회의 바탕과 뿌리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일수록 당장 경제적인 이윤이 산출되는 분야뿐 아니라, 근본을 탐구하는 학문 분야가 존중된다. 우리나라의 개인과 이익단체가 인문학과 (경제학을 제외한) 사회과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국가가 정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인문사회학술은 모든 학문의 생태계에서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못 존재가 생존하고 그것의 존재 가치를 누리기 위한 기초(물, 공기와 같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 인프라)의 역할을 수행한다.

○ 인문학 연구는 문화의 축척이며 문화의 보고를 유지하여 미래 세대에게 전승해주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고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 국가의 책무이다.

○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의 분야의 연구와 교육은 공학 분야의 연구나 교육보다는 ‘공적 자원’으로서의 성격이 훨씬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공적지원이 우선적으로 제공돼야 한다.

○ 인문사회 학술은 결국 이 사회와 국가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가장 궁극적이고도 본질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인문사회 학술 풍토가 풍부해지면 풍부해질수록 국가/사회의 문화유산이 풍부해지고 문제 해결력이 상승할뿐더러 실질적인 부가가치도 상승한다.

○ 현실적으로 인문사회학술은 자생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 여전히 대다수의 인문학 연구자들, 학문후속세대들은 여타 어느 학문 분야보다도 큰 어려움 속에서 학업과 연구를 계속해 가고 있다. 일부 사회과학 분야를 제외하고 인문학 연구자들은 연구자로서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형편이다.

○ 문헌 해독과 해석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문·사·철 연구 종사자들은 실력 있는 전문 연구자를 양성하는 데 상대적으로 더 큰 노력과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다.

○ 양극화 사회를 극복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는 선진국다운 성숙한 사회의 기반일 뿐 아니라 현실적인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묻지마 범죄’의 증가도 한 예다.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인문사회학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이다.

○ 인문사회학술에 대한 국가 지원은 단순히 분과학문으로서 인문학, 인문학자, 인문학 졸업생의 일자리 지원만을 뜻하지 않는다. 양극화·갈등 해소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

○ 기초학문 중심의 인문사회학술은 즉각적 효용성을 가지진 않지만, 그때그때의 첨단 지식이 기초학문의 오랜 연구가 밑바탕이 되지 않고선 창출될 수 없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려면 공적지원을 통해 인문사회 분야를 중흥시켜야 한다.

○ 세계 여러 문명권의 주요 고전 문헌들을 번역하고 주해하는 작업은 국가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② 국가 지원의 타당한 방향

○ 가치 지향적이며 올바른 방향을 고민하는 인문사회학술은 효율적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올바른 문제 해결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토대로 작용한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는 인문사회학술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첨단지식의 생산구조를 확보해야 하며,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 기초학문 분야의 경우 학문의 성격상 당장 가시적 성과를 산출하는 데 비중을 두기보다 중장기적 비전을 두고, 한국사회의 기초 학문의 방향성을 차근차근 다져나갈 수 있도록 연구 환경(필요한 전문 인력 대거 확충, 전문 인력의 안정된 기반 구축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의 안정성 마련)을 정비하여야 한다.

○ 안정적인 연구 기반의 조성 및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곧 학문후속세대, 신진 연구자, 중견 연구자에 맞춤형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BK 혹은 HK 등의 국책사업들은 실질적인 연구 지원과 거리가 있어, 신진학자 및 학문후속세대들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 지원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연구자들이 개인연구 및 집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 및 연구 환경 조성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별, 지역별로 인문사회연구자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인문사회연구의 인프라 및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기초과학과 공학 분야, 인문사회 연구비 지원 비율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 국가의 정책 수립 및 지원은 목적은 ① 학문적 성과를 진작시키는 것, ② 대학원과 학부에서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것, ③ 대학에서 전임으로 일하지 않는 박사급 학자들이 연구할 환경을 조성하는 것, ④ 인문학 및 사회과학 성과를 사회에 확산하는 것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학술 진흥을 위해서 전문 연구자들의 생계와 연구 여건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국가 단위의 지원 정책이 법제화되어, 생계형 대중 인문학, 연구비 지원 수급을 목적으로 한 일회성 단기 연구 등 현행 제도권 인문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 국가 R&D예산 편성에서 인문사회 분야 예산 배정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정부의 국책연구 사업에서 최소 5% 정도 인문사회 분야의 참여 의무화

■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통해 국가의 장기발전 동력 마련

■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수행에서 인문·사회과학의 역할 강화

○ 지자체 중심으로 개별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 중심의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곧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에서도 필요한 사안이므로 지방분권 시대에 상응하는 아래로부터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 학술지원으로서 국가가 가져야 할 책임은 무엇보다 정책 과제나 산업의 필요에 해당하지 않는, 그리고 현재의 정책 방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다른 관점을 드러낼 수 있는 연구 과제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 모든 학문 분야가 적절한 수준의 연구와 교육역량을 상시적으로 유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학문의 다양성을 위한 연구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우리 사회에 필요한 주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 사회 정의, 돌봄의 윤리, 기후 위기와 공존, 차별과 혐오 해소 등의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차별 해소를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역시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영역이다.

■ 글로벌 아젠다 연계 인문학(기후, 에너지, 환경, 전쟁, 국경), 지역사회 아젠다 연계 인문학(인구, 노동과 분배, 세대갈등, 소수자의 인권, 다문화, 젠더갈등, 노령화 등 사회문제), 미래 사회 연계 인문학, 융복합 인문학 등의 영역에서, 인문학적 시각을 통하여 미래사회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미래학’으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 정부가 구체적 차별 해소 방안에 대한 연구 과제를 개발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다양한 차별 문제를 제시하고 또 개선안을 창의적으로 제시하는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상호 연결하여 좋은 대안을 구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초기 신진연구자에게는 연구 실적 중심이 아닌 주제 중심의 지원으로 심사를 좀 더 촘촘하게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선호되는 다양한 주제들을 적극 독려하고 신진연구자와 독립연구자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교육’과는 별개로 오롯이 학술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는 전문 연구자 양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 인문사회학술 성과의 국제적 발신을 도모해야 한다.

■ 향후 인문사회학 지원 사업은 한국 인문사회학이 글로벌 선도 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해외 유명 내지 중견 출판사에서의 학술서 단독 출간 지원이 필요하다.

■ 국내 출판 우수 학술저서의 해외 주요 대학 도서관에 보급하는 것도 지원해야 한다.

○ 인문사회학술 서적 출판에 대한 인식 전환과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 인문사회 분야 산학협력 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

■ 인문사회학술의 장과 사회 사이의 가교를 놓고 그 가교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산학 협력 모델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데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여성 연구자의 학술 커리어 관련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 이공계열에서는 200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젠더와 커리어 관련 정책을 개발해왔으며, 국

내 이공계열 여성 연구자 지원은 정책의 근거 법률과 기본 계획, 구체적 제도가 모두 마련되어 있다.

■ 국가 차원에서 인문사회 분야 여성 연구자의 학술 커리어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해야 할 시점이다.

○ 현행 대학 평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③ 국가 지원 방안

□ 학술 연구 지원 방안

○ 연구자 기본 소득제 도입

■ 지원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는 큰 틀에서 베르나르 스티글러의 ‘기여의 경제’라는 틀, 곧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가 사회 혁신과 연관된 지식을 생산하도록 추동하면서, 그 기여에 따른 보상을 받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 베르나르 스티글러는 기여의 경제의 모델을 상상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모델로 프랑스의 공연예술 비정규직을 위한 실업급여인 잉페르미땅(Intermittent du Spectacle)을 언급한다.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예술인 기본소득과 유사하다. 학술의 영역에서도 안정적인 학술활동이 가능한 최소 생계비와 연구 조건을 제공하고, 그 이상의 소득 창출은 연구 성과가 인정받는 것에 비례해서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 연구자가 우리 사회의 시대소명에 필요한 혁신에 기여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적 틀을 갖추고, 특정한 틀 안으로 들어오면, 생계와 관련된 소득을 제공하고, 그 연구 성과물들이 많이 사용되고 실제 적용됨에 따라 그 연구자에게 더 큰 연구기회 혹은 큰 지위가 돌아가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 인문사회계열 박사과정생들의 집단 연구대학 구축

■ 지금 대학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당수의 유휴 건물과 공간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유휴 건물들을 국가가 전략적으로 인수해서 여러 학교에 소속은 남겨두고 있지만, 통합된 전국의 인문사회계열 박사과정생들의 집단 연구대학을 구축하는 것이다.

■ 그 곳에서는 대학원 과정생뿐만 아니라, 이들을 개방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신진연구자들이 연구교수로서 자리를 둔다.

■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여유 있는 연구 공간, 고도의 자료 접근성을 제공하고 다른 연구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의 기회를 구축한다.

○ 연구 활동의 노동 인정

■ 국가가 결국 지원해야 하는 것은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을 하는 것 자체를 노동으로서 인정하면서 그것의 급여를 주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대학에서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노동을 수행하는 다수의 인력인 대학원생들의 노동은 아직 법적으로 노동이 되지 않고 있다.

■ 대학원생들이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자신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제도와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 대학원생 노조의 법적 인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대학원생들은 자신들의 연구노동/교육노동에 입각해서 대학과 정확하게 협상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 기존 대학원 지원 사업의 확대 강화

■ 학업에 열정이 있는 학부생에게 미리 대학원을 체험하게 해 주고 약간의 장학금을 제공하여 대학원으로 유치할 수 있는 CORE 사업, 대학원에서 각종 내실 있는 교육 연구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BK21플러스 사업, 각 지역의 로컬리티를 반영하여 대학원 프로그램을 계획/실천할 수 있는 신사업 등이 새로 생기거나 확장될 필요가 있다.

○ 인문사회 박사과정생에 대한 생활장학금 도입

■ 인문사회(혹은 일단 인문학만) 박사과정 정원을 정하고 이를 적절하게 자격을 갖춘 대학들에 배정하고 해당 정원에 대해서만큼은 월 180-200만 원의 생활장학금을 5년 이상 지급해야 한다.

■ 선진국답게 제대로 인재 양성을 하려면 복미나 서유럽처럼 박사과정을 등록금 면제와 생활장학금의 혜택으로 비용 없이 다닐 수 있어야 한다.

■ 기존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의 확대 적용과 병행해야 한다.

○ 학부생 지원의 ‘인문100년장학금’은 한층 내실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인문사회학술 지원의 법적 토대 구축

■ ‘기초학술기본법(또는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의 제정이 절박하다.

○ 전문 학술기구의 설립

■ 학술 연구 진흥과 지원,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중추 기구(control tower) 설립과 운영이 절실하다.

■ 교육부 산하 기관의 위상을 넘어 현실 정치 논리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조직과 기구 설립이 시급하다.

○ 기존 연구재단과 교육부(혹은 과기부)와의 관계와 다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 교육부를 주축으로 하는 연구지원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곧 인문사회 학술 연구와 관련된 (준)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 국가고등교육원의 신설 등 한국연구재단을 넘어서는 거버넌스의 실행 기구가 필요하다.

■ 인문사회를 담당하는 정부의 학술정책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현재 교육부의 학술정책과(과정급) 정도가 있는데, 이보다 상위의 직급에서 인문사회에 학술정책을 담당하는 부서, 즉 최소한의 학술정책국(국장급 이상)이 필요하다.

○ 인문학 기반 융합 연구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국가 센터 설립 및 운영

○ 국가 교수제도 도입

○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 사업의 확대, 강화

■ 지원 기간의 장기화가 필요

○ 대학과 대학 밖의 인문학에 대한 투 트랙 지원

■ 연구재단의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제도를 충분히 늘려 대학 밖에서도 연구를 할 수 있게 한다.

■ 제도권 바깥의 연구소나 학술지에 대한 적절한 지원도 생각해야 한다.

○ 학계/언론/출판/정책 분야의 단절을 메우는 전략이 요청된다.

■ 인문사회학술과 밀접한 출판 정책이나 도서관 정책 등도 규모가 영세할 뿐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채 분절되어 있다.

■ 학술지 등 평가제도 개혁 : 질적 평가의 강화와 심화, 학회 자율성의 증대. 형식적 양적인 지표의 개선

■ 오픈 액세스 지원을 통한 연구자문화의 개선과 학술 사회의 재생산의 제도적 개혁 : 인문 사회 분야 유사 학회의 공동운영, 학회 지원 체계의 개편을 통한 공공화

■ 인문사회 학술지 지원 제도의 획기적 개편

□ 대학의 인문사회학술 지원 방안

○ 전략 인문학과 선정 방안

■ 광역시 소재 사립대 마다 하나의 전략 인문학과를 선정한다.

■ 근본 문제가 없는 이상 신청한 대학에 대해 국가에서 교수 5인의 인건비, 기타 학과 운영 자금 전액을 지원한다.

■ 지원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 대학 입학 정원은 크게 줄여야 하고 대학의 수도 어느 정도 줄여야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탄탄하게 운영될 수 있는 지역대학의 네트워크를 육성하고, 그 안에서 (전공과목은 아니더라도) 교양과목을 훌륭하게 가르치는 교수/연구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지역 발전

과 지역 특색을 지닌 인문학의 융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 학생 등록금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지원 학생 수와 상관없이 단과대학과 학과를 유지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제공하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 가장 급선무인 국가 지원은 ‘전국적 범위에서 대학 간 학별구조의 격차를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정책’이다.

■ 학부에서 대학원에 이르는 일반 대학 교육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있어서 학비 부담을 경감하거나(ex. ‘반값등록금’) 아니면 아예 (유럽에서처럼) 대학 등록금을 철폐하고 대학생들의 일상 생활비 부담을 대폭 낮추는 정책(원룸급 기숙사 확충 및 학교 식당 활성화 등)을 실행해야 한다.

■ 실용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문역량의 함양이 주로 철학에 집중되어 있음에 주목하여, 프랑스의 바칼로레아Baccalauréat나 독일의 아비투어Abitur와 같이,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을 철학적으로 수렴하여 대학 교양교육과정과 자연스럽게 접속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대학 학부교육의 보통 교육화를 지향하도록 국민 교육 전체를 탄력적으로 혁신해 갈 필요가 있다.

□ 질문6 : 국가사회 경영, 사회문제 해결 등에 필요한 인문학적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인문학적 역량을 국가사회 차원에서 함양하기 위한 방도에 대하여 말씀해주세요.

【답변 분석】

○ 국가사회 경영, 사회문제 해결 등에 필요한 인문학적 역량에 대한 답변은 크게 개인 차원에서 갖추어야 할 역량과 사회문제 해결 등 경세(經世) 차원에서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나뉘었다. 한편 경세 차원에서 갖추어야 할 역량은 “국가사회 경영, 사회문제 해결 등에 필요한”이라는 전제를 달았음에도 응답자 중 4명만이 답하였다. 응답자 중 1명은 사회문제 해결 등의 경세는 사회과학의 몫이라고 보았다. 이는 ‘인문학적 역량’을 주로 개인의 성장, 성숙과 연관된 역량으로 사유하는 경향이 지배적임을 시사해준다. 곧 경세 역량을 인문학적 역량의 중요한 구성 인자로 보는 시각이 빈약함을 입증해준다.

【답변 발췌】

① 경세 역량

○ 인문사회학술은 사회 혁신이 가능하게 하는 기초가 되는 정치, 사회적 역량

■ 기존의 관성을 되짚어보고, 그것의 연원을 추적하여 현재 우리에게 적합한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역량.

■ 새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법안의 형성, 정치적 협상, 정치세력의 변동, 대중의 지지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국민들의 지적 역량

■ 공동체의 문제해결능력

○ 국가 사회 경영, 사회 문제 해결 등에 필요한 인문학적 역량이란 곧 우리가 마주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들의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발 딛고 있는 이 사회와 그 역사에 관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식과 판단력이 필요하다.

○ 국가사회 차원의 인문학적 역량 구축은 선도국가의 지속가능한 '사회 인프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 자연과학기술의 활용과 재조직화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낼 수 있는 역량

② 개인 차원의 역량

○ 문자 그대로 사람됨, 인간다움을 추체험(追體驗, Nacherleben)해봄으로써 homo humanus (homo humanitatis, 인간다운 인간)로서 성숙, 성장하게 하는 것이 인문학의 힘.

○ 인간 이해력 : 인문학의 가장 큰 힘은 인간을 이해하는 안목을 키워주는 데 있음.

○ 인간 내면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 인문학적 역량은 '특화된 능력'이 아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눈, 의미와 가치를 문제 삼고 탐구하려는 일관된 지성적 태도가 인문학적 능력, 목적과 방향을 검토하는 지적 태도

○ 자기 성찰 능력

■ 인문학적 역량은 문제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집요하게 탐문하는 것

■ 기술 발전의 파급 효과에 대응하여 자기 성찰 능력을 배양해야 함.

○ 주체적 의사결정 능력

○ 의사소통행위능력competence of communicative action¹⁾

■ 선도국가의 인문학적 역량은 나와 상대방, 세상을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

■ 자신과 타자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서로

1) 이상의 능력에 대해서는 홍윤기(공동연구원), 『통(通)학문적 기초능력으로서 '비판적 사고와 글쓰기'에 입각한 '의사소통형' 교수법 개발』, 연구책임자: 동국대학교 양문홍(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학교교육과정 개발연구 지원사업 제4유형 연구결과보고서 과제번호A00003. 2004. 1. 31.) 참조.

를 이해하도록 하는 역량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상호대화, 상호이해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상호존중을 모습을 보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문학적 역량

○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고 융합할 수 있는 역량

■ 문화상호간 이해와 소통능력(inter-cultural understanding & communication)

○ 타자의 경험을 상상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동참하는 사회학적 상상력, 구조적 차별에 대한 연대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역량

■ 이러한 역량은 종종 돌봄 윤리(페미니즘 관점)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철학에서는 타자와의 연대, 공감, 환대 등의 개념으로 표현된다.

■ 이러한 역량은 사실 시민성 역량의 일부분이다.

○ 문해력

■ 핵심 공통역량으로서의 확장된 문해력

■ 다양한 문해력의 배양

○ 비판적 사고력

■ 비판적 사고와 글쓰기 능력(ability of critical thinking & writing)

○ 창의적 사고 능력(competence of creative thinking)²⁾

○ 민주시민 역량(democratic-civic competence)³⁾

○ 도덕적 판단과 규범 정립 능력(ability of moral judgement & positing norms)

○ 신(新)매체 활용 능력(ability of mobilizing new media)

○ 국민들의 문화적 역량

○ 기초지력

○ 시민들의 높은 도덕적 역량

□ 질문7 : 인문사회학술을 기반으로 국가 내지 문명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수행한 사례를 알고 계신다면 그에 대하여 말씀해주시오.

【답변 분석】

2) 홍윤기(책임연구원), 『지식정보화 시대의 창의적 능력 및 인력 양성 정책 개발』(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7.12.) 참조

3) 홍윤기(책임연구원), 『민주청서21. 2008년도 민주시민교육종합보고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과제번호 2008-0307)

○ 답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다. 첫째는 모든 국가사회정책이 인문학적 역량을 바탕으로 했다는 관점이고, 둘째는 국가사회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인문학적 역량이 악용, 오용된 사례를 제시한 것이며, 셋째는 인문사회학술을 기반으로 국가 내지 문명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수행한 사례의 제시이다.

○ 한편 인문학(적 역량)이 국가사회정책의 기반 내지 지향 등으로 활용되지는 않았지만, 이를 테면 시민운동 등을 통하여 사회문제 해결의 원천으로 활용된 사례에 대한 답변도 있었다. 또한 인문학의 소산 그 자체가 국가 내지 문명 차원에서 유의미한 진전을 일구어낸 사례에 대한 답변도 있었다.

【답변 발췌】

① 모든 국가사회정책이 인문학적 역량을 바탕으로 했다

○ 국가 차원에서 인문사회학술 교육이 중심이었던 대학 등 고등교육 기관을 설치하고 장려한 것은 모두 사회의 문제를 포착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한 사례이다.

○ 인재가 부족하니 인문학 관련 각종 국가고시를 실시해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인문학 기반 인재 양성 정책수행을 통한 문제 해결의 사례로 본다면, 나라별 사례를 찾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 인문사회학술은 국가 내지 문명 차원에서 다양한 문제 해결에 기여해 왔다. 예를 들어 인문사회학은 빈곤, 불평등, 환경 문제, 교육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② 인문학적 역량이 악용, 오용된 사례

○ 일제 말기 제국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전쟁의 전세가 일본에 불리하게 되자, 국민총동원체제를 선포하면서 국책 사업에 몰두하게 되는데, 이것은 교토 중심의 이른바 교토학파의 인문사회학술이 중심이 되면서 파시즘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활용한 국책 사업을 펼침.

○ 실패 사례를 들자면, 메이지 유신 이후의 일본과 우리의 동학/천도교를 들고 싶다.

○ 인문학이나 학문이 지배이데올로기에 무비판적으로 봉사할 경우 많은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음. 예를 들어,

■ 문학에 있어 친일문학

■ 역사학에 있어서도 식민사관은 아직도 국사학계에서 그 폐해의 잔재가 단속적으로 쟁점화되기도 함.

○ 종교를 비롯한 모든 정신적 형성물이 그렇듯이 성실한 진리성과 선의에서 나온 학문적 성과라 하더라도 현실사의 실천 맥락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왜곡되면 인간 삶에 악마적 영향과 피해를 끼치게 되는데, 현대 사회에서 이런 이중적 작용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는 마르크스의 학문이다.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비판과 사적 유물론은 현대 인문사회과학 특히 철학적 비판 운동의 가장 높은 성과였지만, 사회정치적 운동 과정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Marxism-Leninism)로 응집되어 일당 독재의 이데올로기로 고착화되었을 때 곧바로 스탈린주의(Stalinism)로 변질되어 일당 독재에 봉사하는 반동사상으로 타락하였음.

③ 인문학적 역량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

○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와 세종 대의 수준 높은 과학 발전

○ 고려 왕건이 지식인들을 적극 포섭하여 새로운 나라를 운영할 정치사상을 다졌던 예

○ 세계 주요 문명의 탄생시기와 대변혁기에 각 문명의 주체들은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통합하며, 여러 갈등 상황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문학적 자원을 활용하였다. 각 시대의 인문학의 주요 역할은 자신의 언어로 타 문명을 번역하고 그 결과를 사전으로 출판하는 것이었다.

■ 8-12세기 이슬람 제국과 아랍어 번역의 시대

■ 13-14세기 몽골제국

■ 14-16세기 중세 르네상스와 인문주의 운동

■ 유럽 종교개혁

■ 14-18세기 명청대와 유럽(예수회)

■ 일본의 난학과 메이지 시대

■ 조선말기와 대한제국시대

○ 인문학이 태생적으로 기억과 기록, 문자의 발명과 연관을 가진다는 점에서 인류의 역사상 집단의 기억을 의식적으로 보전하고자 한 역사의 몇몇 장면을 우선 사례로 제시할 수 있을 듯하다.

■ 헬레니즘 시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소아시아의 페르가몬 도서관

■ 7-8세기에 이르는 짧은 문예 부흥기를 통해 카롤루스 대제의 프랑크 왕국(Francia)은 고전-고대 문명이 온전히 소실되는 것을 막아낸 역할을 해냈다.

■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근대에 설립된 왕립학회는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데 이바지한 역사적 과오도 있지만, 국가 단위로 지원받은 덕분에 각급 국가에서 인문사회 학술 전반이 사회 근간을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 그 성과를 온전히 평가하기 조심스럽지만, 제국주의 일본이 설립한 일군의 제국대학 역시도 전후 일본의 학문이 부흥할 수 있었던 산실 역할을 했다.

○ 빌헬름 3세 대학 설립을 들 수 있다. 이 대학은 오늘날 연구중심대학의 원형을 제공한 대학이었다.

○ 문예부흥운동이었던 르네상스

○ 종교개혁은 인문학술운동이기도 하였음.

○ 영국에서 상품의 등가교환을 원칙으로 하는 경제체제를 수립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사상적 기초를 구축한 예.

○ 미국의 남북전쟁을 거친 노예 해방과 이후 1960년대에 이루어진 흑인의 시민권 운동 역시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 미국에서 1965년에 대통령 직속 독립 연방 기관(independent federal agency)으로 설립된 국립인문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NEH)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 한국의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된 2010년대 후반, 2020년대 초반의 법제도 개정

○ 영국 국가 차원(내무성)에서 연구책임자 테드 캔틀(Ted Cantle)의 주도하에 발간된 ‘캔틀 보고서(Cantle Report)’가 발행되었으며, 이 보고서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보다 깊은 지식, 다양한 문화들 사이의 상호 접촉,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커뮤니티 결속”의 증진과 “교차 문화적 접촉(cross-cultural contact)”의 필요성 강조.

○ 2008년 유럽의회는 “상호문화에 대한 백서(White Paper on Intercultural Dialogue)”에서 다문화주의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상호 문화 대화를 제안

■ 이러한 성격을 완성하기 위하여 유럽회의와 유럽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상호 문화도시 프로젝트(Intercultural Cities Project) 운영.

○ 호주의 지역 신문 공동체가 호주의 현재 기후 위기 상황을 지역 이슈로 다루기 위해 시민과 함께 하는 공공 토론의 장을 마련하면서, 기후 위기 문제가 당면한 주제임을 설득하기 위한 시민 포럼을 운영한 사례의 예를 들어볼 수 있다.

○ 현재 대표적인 국제기구인 UN과 그 산하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은 그 기반이 인문사회학술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 세계은행(The World Bank)이 많은 개발도상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수행하는 수많은 프로젝트의 기반은 인문사회학술 기반이라고 볼 수 있음. 대표적으로 빈곤의 퇴치를 위한 지원, 문맹 퇴치를 위한 교육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함.

■ 교육과 관련한 UNESCO의 활동 역시 이에 해당함.

○ 미국 시카고대학이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게 된 계기

□ 질문8 : 국가 차원의 인문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한다고 할 때, 그 기본단위는 다음 중 어느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도 함께 기술하여 주십시오.

① 기초학문(인문사회학술+이론과학+예술학+체육학 등)

② 인문사회학술(인문학+사회과학)

③ 인문학

【답변 분석】

○ 응답자 중 20명이 기초학문, 인문사회학술, 인문학 중의 하나를 선택하였다. 나머지 4명은 선택지 중에서 고르지 않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였다. 19명의 선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기초학문 : 6명

■ 인문사회학술 : 9명

■ 인문학 : 4명

○ 다른 대안은 ‘기초학문+공학’과 인문학-인문사회학술-기초학문 같은 학술적 기반이 아닌 연구개발의 주체와 협력체계 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학문과 인문학을 동시에 기반으로 하는 ‘투 트랙’ 방안도 제시되었고, 고전적 인문학 개념이 아니라 “확장된 문해력의 교육 단위”로서의 인문학이라는 새로운 인문학도 제시되었다.

○ 기초학문을 선택한 6명 중 1명은 기초학문을 기반으로 하되 체육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다. 인문사회학술을 선택한 9명 중 3명이 이를테면 경제학 등 이른바 ‘융용사회과학’ 분야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한 1명은 ‘인문사회학술+예술학’이어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 소수의 견해였지만 인문학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면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나누는 기준의 ‘순수학문’을 제시하였다.

【답변 발췌】

① 기초학문이어야 하는 이유

○ 인문학의 본령과 현재의 임무가 새로운 사회를 건축하기 위한 지식과 개념, 그리고 인간관을 생산해내는 것이라 한다면, 이론과학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과학의 재조직화라는 것

이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과학을 이해하고 그 지식의 논리와 조응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술학과 체육학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 역시 위의 논리와 조응한다. 예술과 체육 역시 인간이 표현하는 의미와 상징의 범위 안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 인문학은 원래의 학문에서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이 떨어져 나가고 남은 것이며, 모든 학문에는 그 기초 분야가 있게 마련이고 당연히 인문학적 차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인문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이유가 단순히 분과학문으로서의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의 지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사회를 위한 것이라면 인문정책의 방향 또한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추진되기 때문이다. 나와 상대방, 사회를 이해하는 인식의 기반은 인문사회는 물론 과학, 문화예술, 체육까지 포괄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융복합의 관점에서 기초학문의 위상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갈수록 학문 간의 융합이 필요한 시점에서 전통적인 문사철 위주의 인문학보다는 인접 학문의 요소까지 접목함으로써 인문학적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는 전 세계 학계의 공통된 흐름이며, 이를 통해 ‘인간’을 이해하는 다양한 학문적 방편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특히나 기초과학이나 공학 분야의 발전 속도가 너무나 급속하기 때문에 이를 인간 사회에서 올바르게 적용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윤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전통적인 인문학 위주의 학문 분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넓은 의미에서 인문학이라는 것이 ‘인간의 이해’라고 본다면, 사회과학을 비롯해 예술학, 체육학 등 인접 학문의 포용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 무엇보다 디지털 중심 사회에서 학제 간 연구가 필요성이 대두되어 있기 때문. 전통적으로 인문학의 매체는 책이었으나 인문학은 음악과 그림과 같은 영역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었음. 이러한 관계를 이해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타 학문과의 학제적 작업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인문학은 더욱더 통합(섭)적 성격을 취함. 현재 인문학, 공학, 예술의 영역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의 영역과도 교류가 성사되고 있음. 인터페이스 구축 방법, 가상공간 디자인 설정 등을 통한 지식의 전달 방법의 활성화 및 소통 방법의 다양성 등을 고려한다면 어떠한 특정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함. 인문학적 기반이 없는 사회과학은 공허한 담론으로 치부될 수 있으며, 과학 기술의 발달로 축적되어있는 많은 정보와 이들 정보를 다루고 체계화하는 작업은 컴퓨터 관련 기술 공학의 결합은 당연함.

② 인문사회학술이어야 하는 이유

○ 학문적 목표와 성격은 물론 국내 현황 면에서도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공통점이 많으므로, 국가 차원의 인문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할 때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하나의 단위로 묶일 필요가 있

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인간뿐 아니라, 사회와 문화라는 인간의 집단 및 집단적 행위의 산물과 함께 탐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 인문학적 입론과 사회과학적 해결 방안이 연계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있다면 좋을 것 같다.

○ 기초학문 전체를 관장하면서 균형 잡힌 인문정책을 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나 한국 현실을 고려할 때 어려운 점이 있다. 이론과학은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을 바탕으로 이미 다른 방식으로 정책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으며, 예술, 체육 등도 정책 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하는 관련 국가 기관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인문학은 정책 거버넌스가 없으므로 인문학에 특화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성을 따질 때에는 인문학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문사회학술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인문학 진흥법에서도 인문학의 영역을 인문학적 방법을 채용한 사회과학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회과학까지 포괄하여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단 여기서 사회과학은 기초사회과학에 국한해야 할 것이다. 응용사회과학에 해당하는 영역들은 대부분 관련 정책기관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 사회학의 분야는 순수분야의 차원을 넘어서 대부분이 과학을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구분하여야 한다.

○ 인문사회학술은 역사학, 철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문화학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학문적 체계이다. 이러한 다양한 학문 분야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인문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문사회학술이라는 학문적 체계를 기본 단위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초학문(인문사회학술+이론과학+예술학+체육학 등)이라는 단위는 지나치게 크지만 소위 ‘의대 물입’ 상황과 관련해서 새로운 모색이 가능한지 타진해봐야 한다. 인문학 관련 단체의 내적 역량을 강화하되, ③처럼 인문학만으로는 좁다.

○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비록 연구 방법론은 차이가 나지만,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점은 공통적임. 더구나 어떤 학문 분야는 상당히 경계에 있는 분야 역시 존재함.(예를 들어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과, 문화인류학과, 심리학과 등은 과거에 문과대학에 소속되어 있다가 현재는 사회과학대학 소속으로 변경되었음). 따라서 기본단위를 인문사회학술(인문학+사회과학)로 정하면 인문학적 접근과 자연과학적 접근이 상호 보완이 되면서 상호보완 될 것으로 보임.

○ 기초과학이나 공학 분야와는 상대적으로 독립된 위상을 가진 거버넌스 속에서 인문사회과학의 도전, 미래 및 유망을 진솔하게 논의할 수 있고 이를 학술 지원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 굳이 하나를 선택한다면 ‘인문사회학술(인문학+사회과학)’의 범주인데, 그 이유는 이 같은 구획이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직관적이어서 복잡한 일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인문학이어야 하는 이유

○ 학문의 동심원을 여러 개 그릴 수 있다면, 인문학이 가장 가운데 자리해 있으리라는 데에는 아마도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리라 생각한다. 그만큼 또 인문학이 다른 제반 기초 학문들의 공통 분모 역할을 맡고 있다.

○ 경제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 등을 비롯한 기존 사회과학 학문 분야는 물론 최근 급성장한 첨단 미디어계열 사회과학은 학문의 시장 지배력이 기초 인문학보다 강함.

○ 인문학자이며 고전문헌학자의 입장에서, 인문정책 거버넌스는 인문사회학술의 근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원문으로 돌아가는 것, 즉 ‘아드 폰테스’(Ad Fontes) 운동이어야 한다. 이 운동을 통해서 산출된 인문학적 기준과 표준이 이론과 실천의 학문 분야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④ 다른 방안

○ 인문학을 학문 연구 단위보다 확장된 문해력의 교육 단위로 구성하고, 그 중심에 전통 인문학이 관제탑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위에서 제시한 선택항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응답자로서는 ‘기초학문 나아가 공학까지 아우르는, 인문학 기반의 주제 연구 및 교육 단위(Unit of Humanities-based Thematic Research and Education including Basic Studies and Technologies)’라는 콘셉트를 제시하고 싶음.

○ 국가 차원의 인문정책 거버넌스는 제시된 학술적 기반(기초)인문사회(인문학)의 구분이 아닌 연구개발의 주체의 다원화, 참여 유인책, 그리고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임.

○ 국가 차원의 인문정책 거버넌스의 기본 단위는 ① 기초학문 차원과 ③ 인문학 차원에서 병행되어야 한다.

□ 질문9 : 인문정책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하여 제안이나 조언 등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오.

【답변 분석】

○ 인문정책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하여 제시된 제안, 조언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① 학문후속세대 지원 관련
- ② 인문정책 거버넌스 수립 과정 관련
- ③ 인문정책 거버넌스 방향성 관련
- ④ 인문정책 거버넌스 구축의 법적, 제도적 기반 관련
- ⑤ 대학의 역할 관련
- ⑥ 인문사회학술 연구 생태계 관련
- ⑦ 기타

【답변 발췌】

① 학문후속세대 지원 관련

○ 인문정책 거버넌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문사회 연구자들의 생활 보장을 하되, 이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자립해서 자신의 연구를 해나갈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일자리를 확보해주어서 인문사회 석박사 전공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 학문후속세대가 연구와 교육을 기반으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

■ 가령 한국 대학의 외국 유학생 교육 지원이 수준 이하임. 학문후속세대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책 프로그램을 운영.

○ 비SKY/비유학과/여성 연구자로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제반 어려움의 극복 내지 해소할 수 있는 방책이 필요하다.

② 인문정책 거버넌스 수립 과정 관련

○ 인문정책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당위성 이전에 인문정책에 대한 방향성 확립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해 보인다. 인문학 위기 선언과 같은 ‘인문학’ 지원 확대의 요구로 받아들인다면, 논의 진전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거버넌스’, ‘인문정책 거버넌스’ 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이 필요하다.

■ 인문정책 거버넌스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정책을 세우고 할당하고 집행하는 체제”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음. 이의 극복 내지 해소가 필요함.

○ 인문정책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하여 인문사회학술 생태계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 인문사회 전공분야별 정규직/비정규직 교수, 강사, 연구자, 공공/민간 연구소, 학술단체, 학술 활동, 연구 활동 등 지역별/전국적 학술 생태계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 현황 및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인문사회과학자에게 실질적인 생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 때에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면서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정부와의 관계에서 도구적으로 정부 의도를 수용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역할보다는 거버넌스 참여 주체들의 목소리에 협업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길이 더 많이 열려 있는 것이 중요하다.

■ 참여 주체들의 다양성이 중요하다. 독립연구자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소수자(여성, 인종, 성 정체성, 계층, 지역 등)의 참여가 핵심적일 것 같다.

○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인문학자들의 단체와 자발적 거버넌스의 구축도 필수적이다.

○ 입법부와 정책 당국에 대한 계도가 필요하다.

■ 향후 국회에서 국가의 인문사회분야의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입법적 차원에서 지원 체계를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계속 시도하여야 한다.

■ 국회의원들에게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지속적으로 계도시켜야 한다.

○ 인문정책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서 핵심은 인문정책의 개발과 실현에 ‘국가’가 의지를 갖고 간여한다는 확실한 신호를 국민과 인문학 학습자 및 연구자에게 보낸다는 것임.

③ 인문정책 거버넌스 방향성 관련

○ 정권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인문정책의 수립 및 지속적 수행

■ 관련 분야의 정치인 또는 관료의 특수목적에 부합하는 인문정책과 과감하게 절연해야 함.

○ 폭넓은 의미의 사회권을 포함하는 인권 의식,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극복하려는 참된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시장만능주의(신자유주의)에 인문학의 대한 대결의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인문정책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 구축된 인문정책 거버넌스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섬세하게 디자인되면 좋겠다.

- 인문학이 내적으로는 21세기의 변화된 지평에서 새롭게 등장한 의제들에 스스로를 개방하고, 타 학문과 융합하도록 지원함
- 외적으로는 사회적 요청에 대응하여 인문정책과 여타 정책 사이의 절합—예를 들면, ‘인문-경제’, ‘인문-과학기술’, ‘인문-노동/사회통합’ 등과—을 비롯하여,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소외 인문학 집단 지원, 정부-기업-민간을 잇는 인문학 생태계 실현을 정책적으로 추진
- 정부정책과 사회정책의 수립에 ‘인문학’적 관점과 방향을 확산함으로써 경제 중심 관점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기여
- 중등 교육 및 대학 교양교육에서 인문학이 중심을 차지하는 자유학예교육의 강화

④ 인문정책 거버넌스 구축의 법적, 제도적 기반 관련

○ 인문사회학술 전담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 법제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 혹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등의 위상을 갖춘 국가 인문학술정책 전담 기구의 설립이 절실하다.
- 소위 ‘학술청’과 같은 학술, 연구 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 설립이 시급하다.
- 학술기본법을 통해 인문사회를 총괄 수 있는 교육부 혹은 총리실 산하에 ‘학술정책국’ 등을 두어서 장기지속으로 인문사회분야의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인문학 전공 전문학자가 국가 정책 담당 부서에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행정 관료의 입김과 정책 결정 권한이 더 높다 보니, 학계와 지식인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나 학술 기획들이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 궁극적으로는 행정 관료와 전문 관료의 조화로운 정책 협조를 통해 학술정책이 보다 더 현실적이고 합목적적일 수 있게 해야 한다.

○ 국회 제출된 ‘인문사회학술기본법’의 조속한 통과이다.

○ 인문사회 분야가 스스로의 독자성과 자율성 특수성을 유지하면서 수월성을 확보해 나가려면 과기정통부의 관리 체제를 벗어나고, 독자적인 기구와 관련 법령들을 정비해가야 한다. 과학기술 분야에 연구 개발을 지원할 법령이 25개에 달하는데,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 연구를 지원할 법령이 전무한 불균형은 하루 속히 해결해야 한다.

⑤ 대학의 역할 관련

○ 대학의 재생산 구조의 확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

○ 인문학적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최적의 현장은 대학이라 할 수 있음.

■ 전공강좌 및 무엇보다 교양강좌를 통하여 유럽의 상호문화 이해, 교류 및 상호 존중의 정신을 교육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 생성 : 교육과 더불어 실질적인 성적 평가 역시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함.

■ 단편적인 방법이지는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순위가 없는 성적 평가의 도입이 필요함.

■ 대학 교육 현장에서는 대학생들을 줄 세우기 식으로 지급되는 성적 장학금을 지양하거나 축소.

○ 대학 체제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그에 대한 대응, 그러니까 ‘대학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대학은 국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면서도, 갈수록 학문과 관련한 나름의 발전 방향이나 정책은 내놓지 못한 채 국가와 시장에 끌려 다니고 있다.

■ 비정규직 연구자, 교육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그들 사이에서도 공통의 기반이 사라져, ‘학문공동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해졌다.

⑥ 기타

○ AI 시대에서의 한국 인문학의 시급한 과제

■ ChatGPT로 대변되는 AI시대가 도래했다. 이 시대에 인문학의 위치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 이제부터라도 인문학의 원천기술, 표준을 세워나가야 할 때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AI시대에 필요한 인문정책의 핵심은 번역과 사전 작업이 되어야 한다.

○ 인문사회학술 생태계의 확대 재구성이 필요하다.

■ 연구 독존, 학계 독존 등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관성, 전통, 체제 등의 일신이 필요하다.

■ 교육과 연구의 유기적 연계 도모 : 인문정책 거버넌스의 구축에 있어 지나치게 연구 중심 체제만으로는 갈 경우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 교육의 영역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임.

■ 교육 단위로서의 인문학 : 인문학을 학술 연구의 눈으로 보기에 앞서 교육 단위로 보면서 확장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자와 연구자를 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연구(학계)-출간(출판계)-보급(도서관) 간 유기적 연계의 구축 : 정부나 시민사회 차원에

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책의 중요성과 올바른 책 문화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인문정책 거버넌스가 단지 학술정책이 아닌 이상은 독서-도서관 정책전문가나 수행자의 전문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

○ 인문학 단체들은 더 확대, 확장되어야 한다.

■ 인문사회 연구자 단체의 분야, 학교 등을 넘는 힘 있는 연구자·학술 단체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 ‘인문총’ 등의 단체가 (정규직·비정규직을 넘어) 재편되고, ‘과총’만큼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민교협, 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 등 연구자·교수 단체와 근래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 신진·독립 연구자단체들과의 상시적인 연대 테이블과 연대 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 인문사회과학 학계의 ‘대변인’ 같은 단체가 만들어져야 한다.

○ ‘고전독서사(classic readership)’ 제도의 도입

■ 기초적이면서 필수적인 인문역량(humanities competence)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된 이들에 대하여 대학이 발행하고 국가가 보증하는 일종의 능력증표를 부여하는 제도.

■ 한국과 세계의 문명사에서 고전으로 인정된 언어적·상징적 표현물들을 개체별로 ‘인류 고전성과물(human classical achievemants)’로 선정하여 그 하나하나를 텍스트 삼아 독해와 연구 성과를 인증하는 제도 : 예) ‘논어(論語)’ 독서사, ‘울곡(栗谷) 격몽요결(擊蒙要訣)’ 독서사, ‘퇴계(退溪) 성학십도(聖學十圖)’ 독서사, ‘칸트 순수이성비판’ 독서사 등등.

■ ‘고전독서사’는 초·중·고등학교 독서 및 글쓰기 지도, 대학교 교양강의, 대학원 준거텍스트 독해 세미나, 그리고 특히 각 지자체의 평생교육원에서 강의하고 세미나 모임을 꾸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소요경비를 지원하도록 함.

연구보고서 2023-01

인문정책 거버넌스 구축의 이론적 근거 연구

발행 2023년 12월 31일
발행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909호
전화 044) 211-1000
홈페이지 www.nrc.re.kr
ISBN 979-11-5567-705-6

* 연구회의 허락 없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총서 2023-01

인문정책 거버넌스 구축의 이론적 근거 연구

Researching the Theoretical Basis for Governance of
Academic Policies 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9층
www.nrc.re.kr



비매품/무류

ISBN 979-11-5567-705-6
ISBN 979-11-5567-692-9 (세탁)